202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 -

2024. 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2023~2024년 시행계획 개요 ····· 1

Ⅱ. 2024년 시행계획 ····· 6

1. 2024년 시행계획 총론 ····· 7

2. 체류주기/체류자격별 사업현황(2024년) ····· 28

3. 주요과제 추진일정(2024년) ····· 29

Ⅲ. 중앙행정기관별 2024년 시행계획 ····· 31

1) 교육부 ····· 3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3
3) 외교통상부 ····· 82
4) 법무부 ····· 94
5) 행정안전부 ····· 362
6) 문화체육관광부 ····· 375
7) 농림축산식품부 ····· 409
8) 산업통상자원부 ····· 432
9) 보건복지부 ····· 444
10) 고용노동부 ····· 456
11) 여성가족부 ····· 489
12) 국토교통부 ····· 507
13) 해양수산부 ····· 519
14) 중소벤처기업부 ····· 537
15) 방송통신위원회 ····· 550
16) 통계청 ····· 566
17) 경찰청 ····· 581
18) 해양경찰청 ····· 600
19) 국세청 ····· 610
20) 질병청 ····· 621
21) 재외동포청 ····· 630

Ⅰ. 2023~2024년 시행계획 개요

1. 수립배경

2. 추진경과

3. 수립 대상 기관 및 정책

4. 2024년 외국인정책 관련 주요 통계

참고.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1. 수립배경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 확정

○ '23.12.27.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 확정

☑ **비전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 **5대 정책목표**

❶ **【경 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❷ **【안 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❸ **【통 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❹ **【인 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❺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안을 토대로 「2023~202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추진경과

□ ’23.12.27.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 수립

□ ’24.5.7.~5.10. 제28회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서면 회의)

3. 수립 대상 기관 및 정책

□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 22개 기관(15부·1위원회·6청)*

* 해양경찰청, 국세청, 질병청, 재외동포청은 추진과제가 있는 기관으로 시행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 : 17개 시・도

□ 대상 정책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에 따른 외국인정책*

* 국경·출입국 및 체류관리, 사회통합과 국적 부여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 국민의 해외 이주 제외)을 의미

□ 주요 정책 대상[1)]

○ **체류외국인(약 251만 명)**

- (단기체류) 친지 방문, 관광, 투자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 (장기체류) 취업, 유학 등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거주하거나 결혼이민, 영주 등 국내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등록외국인'이라고 함

○ **국적취득자(약 30만 명)**

- 외국인 중 귀화, 국적회복 등의 절차에 의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국민

1) ‘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기준

4. 2023년 외국인정책 관련 주요 통계

❖ **(체류외국인)** ’23년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51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5,132만 명) 대비 약 4.9%에 해당 (출처: 법무부·행안부)

※ ('21년) 196만 명(3.8%) → ('22년) 225만 명(4.4%) → ('23년) 251만 명(4.9%)

-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는 423,675명, 체류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율 16.9%

- **(난민)** ’94년~’23년 12월 말까지 난민신청 103,760건 중 58,483건 심사 결정

※ 난민인정 1,439명, 인도적 체류 2,613명 등 4,052명에게 국내체류 허용

❖ **(국적취득자)** ’23년 12월 말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는 14,431명 (출처: 법무부)

※ 정부수립 이후 총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는 약 30만 명

❖ **(외래관광객)** ’23년 12월 말 외래관광객은 1,103만 명이며, ’22년 동기 320만 명 대비 약 245% 증가 (출처: 한국관광공사)

❖ **(외국인 투자액)** ’23년 12월 말 외국인 투자액은 327억 달러이며, ’22년 동기 304억 달러 대비 약 7.6% 증가 (출처: 산업부)

참고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 비전 및 정책목표

비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정책목표	중점과제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①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②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③ 지역 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④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①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②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③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①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②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③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④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①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②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③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①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②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 기반 확충 ③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④ 국제사회와 공동 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Ⅱ. 2024년 시행계획

1. 2024년 시행계획 총론

2. 체류주기/체류자격별 사업현황(2024년)

3. 주요과제 추진일정(2024년)

1. 2024년 시행계획 총론

□ 과제 및 예산규모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24년 정책목표	합 계		중앙부처		지자체	
	과제수	예 산	과제수	예 산	과제수	예 산
합 계	**1,438**	**685,709**	**167**	**374,764**	**1,271**	**310,946**
1.【경 제】	222	249,808	56	195,622	166	54,186
2.【안 전】	52	12,239	31	10,022	21	2,217
3.【통 합】	981	356,961	37	141,267	944	215,694
4.【인 권】	124	52,886	20	17,712	104	35,175
5.【협력/인프라】	59	13,815	23	10,141	36	3,674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추진방향>

- **인구위기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 추진**
- **우수인재·전문인력·투자자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

가.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 정책 수요자 예측 가능성 제고 및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내년도 주요 취업비자 분야별 발급 규모 사전 공표 (법무부)

<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

▪ **도입 규모(총량) 산출 절차**

❶ 공급 부족 규모 분석 ▸ ❷ 외국인 유입 영향 분석 ▸ ❸ 도입 규모(총량) 일차적 산정 ▸ ❹ 의견 수렴 (관계부처·전문가) ▸ ❺ 도입 규모 최종 산정

▪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운영(안) 발표**('24.1)

구 분		세부 사항(요약)
전문인력 비자	신규 도입 분야(E-7)	요양보호사, 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3만 5천 명 한도 내 발급
비전문인력 비자	계절근로(E-8)	상반기 배정 인원 49,286명 한도 내 발급
	비전문취업(E-9)	연간 고용허가 상한 165,000명 한도 내 발급
	선원취업(E-10)	국내 총 체류 인원 22,000명 한도 내 발급

○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시범운영 개시 및 분석 지원,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 공개,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표준화 근거 마련 및 부처별 연계 확대 (법무부)

○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종의 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송출국 현지에서 일정 기간 훈련을 통해 외국인력 선발 지속 (고용부)

○ 한국어와 한국 사회 이해도가 높은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 및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단계적 비자제도 마련 (법무부)

○ 숙련기능인력을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단순 노무에 장기간 종사한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확대 (법무부)

나.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 우수·전문인력 유치 확대 및 육성

○ 국내 연구기관의 박사 또는 해외 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장기(3년, 10년) 초청・유치 지원 (과기정통부)

※ 해외 우수 연구자 183명 신규 선발, SCI(E)급 논문 636건, 등록특허 15건('23년)

○ 분야별(산업계, 벤처・창업계, 연구계) 첨단산업 글로벌 최상위 인재(Top-Tier급) 유치 및 정주 지원책 마련 (법무부, 산업부, 중기부)

○ 현지 대학생 대상 스타트업 취업을 위한 소프트웨어(SW)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국내 및 현지 진출 스타트업으로 취업 매칭 지원 (중기부)

□ 숙련기능인력 공급 확대로 산업계 구인난 해소

○ 구인난이 심한 산업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E-7-4) 공급 지원을 위해 산업별 별도 쿼터 신설 및 점진적 확대 지속 추진 (법무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 도입 인원 300명('17년) → 1,000명('19년) → 2,000명('22년) → 35,000명('23년)

○ 유학생이 졸업 후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업(E-7) 및 거주(F-2)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취업 연계 방안 마련 (법무부)

○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선정·운영 및 졸업(예정)자 대상 기량검증을 통해 기술인력 선발 (산업부)

□ 분야별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

○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취업 허용방안 마련 및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안착을 위한 지원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

○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한 현장 실태조사 등 인력난 심화 업종의 외국인력(E-9) 활용방안 지속 검토·추진 (고용부, 농식품부, 법무부)

※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 신규 허용업종 대상 관계부처(농식품부, 문체부, 법무부)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평가 예정

○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 해외 선발요건 강화, 외국인력 필요 분야 발굴 등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법무부, 고용부)

□ 유학생 유치 다변화 및 성장 지원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기반 박람회 운영 및 시스템 유지·관리,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3차년도) 구축 (교육부)

○ 국내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채용 수요 대응 및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기업 채용 연계를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교육부, 산업부)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실태조사 및 개편방안 마련, 지자체 주도 대학지원체계(RISE) 내 지역맞춤형 해외인재 유치전략 수립 지원 컨설팅 (교육부, 법무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수립('23.8.)

○ '24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확대·개편 계획 수립, 추가 수학 대학 선정 학부 장학생 선발 및 우수교환학생 선발 (교육부)

☐ 창업·투자이민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 외국인 창업자의 발굴부터 국내 안착까지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K-스카우터) 지속 (중기부)

○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투자이민 기준금액 상향, 투자금 도입기준 수립 등 제도 개선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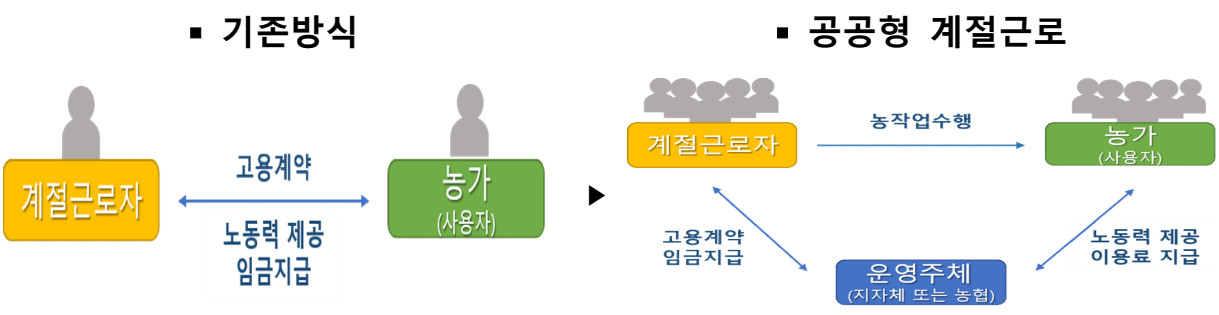
다.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하는 지역 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 대상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 실시 (법무부)

※ 66개 광역·기초지자체, 총 3,291명 배정('24.1.~'24.12.)

○ 농촌지역 단기인력 수요에 대응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19개소→70개소) 운영 (농식품부)

<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요 >



○ 지역기반 이민정책 참여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인 공단 등 전담기관 설치 추진 (법무부)

※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공적지원 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예정

○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관련 안건 발굴 및 정책 논의를 위해 지자체 참여 「중앙·지방협력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법무부)

○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간 교류·협업 강화 및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인정책 실무담당자 교육(워크숍) 실시 (법무부, 행안부)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위탁 운영업체 선정 후 개최('24년)

○ 국내 인구·이민자 현황, 지자체별 거주 외국인 현황 등 기초 데이터 제공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예측 모델 개발 (법무부)

라.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 K-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K-Pop 콘서트, 한류 테마 대표관광코스, 관광 이벤트 100선,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등) 개발 지속 (문체부)

○ 크루즈 관광산업 기반 조성 및 크루즈 상품개발,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크루즈 체험단 운영 등 크루즈 관광 활성화 (문체부, 해수부)

○ 국내 장기 체류하며 K-컬처(K-Pop, 안무, 모델 등) 분야에서 전문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체류자격 신설 추진 (법무부)

○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관광하며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법무부)

<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 >

구 분	내 용
발급대상	•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소득요건	•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2022년 기준 연 8,496만원)
체류기간	• 외국인등록 시 입국일로부터 1년 부여, 1년 추가 연장 가능(최장 2년)
취업활동	• 취업 및 영리활동 제한
기타	• 해외범죄경력 증명 및 병원치료 및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 원 이상 의료보험 필요

○ 외국 의료인 국내 연수를 통한 환자 유치 채널 발굴·확대, 의료 통역 지원 강화, 우수 웰니스 관광지 발굴 및 선정,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 등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복지부, 문체부)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추진방향>

- **다부처 협력을 통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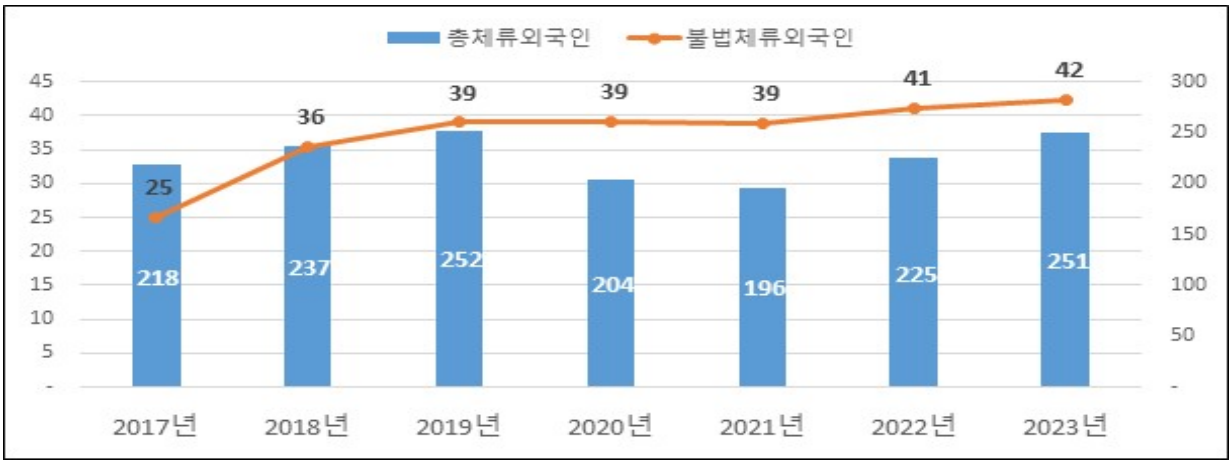
가.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 불법체류 관리체계 고도화

○ 정부합동단속 정례화 등 상시 단속체계 가동 및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법무부)

▪ 연도별 총 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 만명)



※ 정부합동단속 3회('23.3.~'23.12.) 실시 총 39,038명 적발, 특별 자진출국제도 운영('23.9.~'24.2.) 총 24,957명 출국

☐ 다부처 분야별 차별화된 책임 강화

○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고용부)

*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인권침해 여부 등) 조사 지속 추진,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발굴 및 고충상담 지원 등(해수부)

○ 외국인 밀집지역 중점관리,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 및 대응, '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외국인 문제 해결 (경찰청)

○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 설명회를 통해 합법 외국인력 고용 유도 및 건설 현장 인력난 해소 지원 (국토부)

□ 불법체류 단속 역량 강화 및 제도 정비

○ 효과적인 불법체류 단속업무를 위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조사권 신설 근거 마련 (법무부)

○ 대규모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외국인 밀집지역 등 특별단속지역 지정, 불법고용 분위기 억제 및 국민 치안 불안감 해소 (법무부)

나.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 질서있는 체류환경 구현

○ 기간 제한 없이 국내 체류가 가능한 영주권자에게 국내 영주 의사가 없는 경우 영주권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 추진 (법무부)

○ 외국인 체납자의 출국규제 제도 강화를 통해 징수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국세청)

○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요건에 최소거주 기간(6개월) 추가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 (복지부)

○ 복수국적 확대 등 국적법 개정 여론 수렴을 위한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연구용역 실시 (법무부)

□ 체류질서 위반 예방조치

○ 외국인 불법성·투기성 거래 조사 계획 수립 및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非주택(오피스텔 등)·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실시 (국토부)

○ 체류 외국인·유학생·이주여성 등 대상 범죄예방교육 실시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협업 지속 (경찰청)

다.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전자입국신고서 온라인 서비스 구축 및 시범운영 (법무부)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 등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기간을 현행 기준보다 상향하는 입국규제 강화 추진 (법무부)

○ 법 위반자 적발 가능성이 높은 우범선박 선정을 위해 사전 정보 분석을 통한 실질적 승선 검색 활동 지속 및 감시정 도입·운영 (법무부)

○ 밀입국 방지를 위한 항만 보안시설·장비 확충,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선박 출입허가(금지)제도 정착 등 추진 (해수부, 해경청)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추진방향>

- **사회통합지표를 통한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으로 이민자 유입·통합정책 체계화**
- **국민과 이민자 간 소통 증진, 문화 다양성 확대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민자 역량 강화**

가.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환류시스템 구축

○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하여 정기적인 사회통합지수 측정(3년 주기) 및 정책컨설팅 실시 (법무부)

<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

- **(개념) 이민자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으로 핵심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
-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구성**

차원	영 역						
통합상태	노동	소득빈곤	교육	주거생활	보건복지	권리	한국 사회 기여
통합촉진	내국인 수용성	의사소통	디지털 역량	한국 사회와의 연계	안전		
통합기반	법·제도 / 행정 인프라 / 중앙정부 정책 / 지방자치단체 정책						

□ 유입과 통합을 연계한 사회통합교육 체계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법무부 장관 고시 제정 후 유료화 시행 추진 (법무부)

※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등)와 사회통합정책 핵심 대상이 소외되지 않도록 감면 대상 설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CBT(Computer Based Test) 평가장 확대 및 평가 종류와 일정 다양화, 비대면 화상교육 과정 확대 추진 (법무부)

※ 현재 2곳(광명·대전)에서 운영 중인 CBT 평가장을 경상·전라권에 추가 설치 검토

○ 기업이 원하는 장소로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 현대중공업 등 5사, 총 2,664명 참여('23년)

나.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 · 소통 증진

○ 이민정책 이해과정 등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시스템(다누리배움터) 운영 (법무부, 여가부)

○ '세계인의 날(5.20.)' 기념식 및 지역사회 중심의 세계인의 날 기념 문화행사 개최 등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 (법무부)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운영 및 사회공헌활동 정례화, 이민자 네트워크, 자원봉사위원 등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법무부)

○ '문화다양성의 날(5.21.)', '문화다양성 주간(5.21.~5.27.)' 운영 및 기념행사 개최 등 문화다양성 정책 지속 추진 (문체부)

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 이민자 자립을 위한 성장기반 확충

○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능력 향상 및 직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속 실시 (고용부)

○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고려한 한국어 교재 개발 추진 (문체부)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구성(안) >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단계</th></tr>
<tr><td colspan="2">입문</td><td colspan="2">입국 준비 단계</td></tr>
<tr><td rowspan="2">기초(초급)</td><td>기초 1</td><td rowspan="2">입국 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단계</td><td>생활 한국어 학습 단계</td></tr>
<tr><td>기초 2</td><td>근로 현장 한국어 학습 단계</td></tr>
<tr><td rowspan="2">심화(중급)</td><td>심화 1</td><td rowspan="2">정착 이후 장기 체류를 위한 단계</td><td>직군별 의사소통 능력 함양 단계</td></tr>
<tr><td>심화 2</td><td>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 단계</td></tr>
</table>

○ 전국 가족센터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초기 적응과 안정적 가족생활, 자립 지원 등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가부)

○ 결혼이민여성 대상 농업교육으로 후계 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가족 농촌 정착지원을 위한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농식품부)

□ 이민자 기초생활 적응 지원

○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내방, 전화상담 및 3자 통역 등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강화 (고용부)

○ 주한 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 예방교육 실시, FM 라디오 방송을 통한 한국문화·생활·재난정보 등 제공 (방통위)

○ 복지 유형에 따른 외국인 체류자격별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공공부조 분야별 기준 정리 및 관계부처 협의 (법무부)

□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 성장 지원

○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지원(언어발달, 기초학습, 진로설계 지원, 이중언어 교실 등) 지속 확대 추진 (여가부)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초·중등) 확대,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등 이주배경 학생 성장 지원 (교육부)

라.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 경제적 자립과 기여를 위한 동포 체류제도 개선

○ 재외동포 자격통합 필요성 및 체류자격별 취업 범위 재설계를 위한 동포 관련 단체 등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법무부)

○ 방문취업(H-2)·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범위 확대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에 따른 국민 일자리 보호 방안 마련 (법무부)

□ 동포의 사회적응 및 국민과의 유대감 증진

○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주요 동포 정책 현안 설명 등 동포체류지원센터 간담회 개최 (법무부)

○ 재외동포 관련 내용 국내 교과서 수록 및 국내 대학 및 초·중·고 재학생 대상 재외동포 관련 주제 강의 시행 (재외동포청)

○ 영주귀국 정착 안내서 제작 및 배포 등 모국 귀환 동포들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토탈 케어시스템 마련 (재외동포청)

○ 한국어 능력 등 기본소양을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과 연계하여 한국어 학습 촉진 및 4세대 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 유도 (법무부)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추진방향>

-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 **이민자 차별방지 및 대상별 체계적 인권보호 제도 마련**

가.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 이민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고용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준수 여부 점검 및 숙소 실태조사 실시 (고용부)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도 및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홍보 지속 (고용부)

○ 외국인 대상 국민재난안전포털 영문 홈페이지(eng.safekorea.go.kr) 운영, 재난 안전 정보 제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Emergency Ready App) 다국어 재난 문자 서비스 확대 (행안부)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를 통해 차별적 방송 관련 심의 규정 안내 및 위반사례 공유 (방통위)

□ 인도적 차원의 법 집행 인프라 확대

○ 공항 밖 출국대기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22.12. 의원입법)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 (법무부)

○ 보호외국인의 이동권과 소통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확대 (법무부)

※ 화성, 청주보호소,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중

나. 여성 · 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 지원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무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23.6. 의원 발의) 법사위 심사 중

○ 다문화가족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및 위기 청소년 지원, 학교전담 경찰관(SPO)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대응 활동 전개 (경찰청)

○ 폭력피해 보호시설(33개소) 및 상담소(9개소) 운영을 통한 보호·상담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여가부)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번역, 인신매매 방지 직원교육 지속 실시,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대상 인신매매 방지 동영상 강의 제공 (법무부)

다.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 균형 잡힌 난민정책 추진

○ 난민심사 거점기관 간담회를 통한 출입국항 난민심사 절차 개선 및 출입국항 난민전담공무원 역량 강화 (법무부)

○ 이의신청인 의견진술 기회 제공 확대, 이의신청 절차 다국어 안내 확대 시행, 주제별 난민심사 매뉴얼 제정,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 국가정황정보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해외 국가정황 보고서 번역·감수 사업 지속 추진 (법무부)

○ 국내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체류 실태, 사회통합도, 정착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항목 및 지표 개발 (법무부)

※ '난민 체류현황 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정책연구용역 예정

□ 글로벌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

○ 재정착 난민 수용사업 다각화 방안 마련, 성장 가능성 높은 난민 발굴을 위한 대안적 난민수용 방안 검토 (법무부)

○ 난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 관련 논의, 재정착 난민에 관한 실무회의(WGR), 글로벌난민포럼(GRF) 등 난민 관련 국제 협의체 참여 및 난민 관련 국제기구 교류 지속 (법무부, 외교부)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추진방향>

- **범정부적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이민관련 민간협력 및 국제사회 협력 강화**

가.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관련 입법 논의 지원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개정 추진 (법무부)

※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24.2. 의원 발의)

○ 정부부처·지자체 간 외국인정책 관련 협의를 위한 외국인정책실무(분과)위원회 실질적 운영 활성화 (법무부)

○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공급을 위한 관계부처 참여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협의체 구성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나.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추진을 통한 소수언어 통역인 확보를 위해 인증제 홍보 강화 및 체류 우대 혜택 검토 (법무부)

○ 「이민법(학)」을 경력경쟁 채용시험 과목에 포함,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반영하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 및 인사혁신처 협의 (법무부)

○ 지역소멸, 인력 수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포럼·간담회 개최 및 연구 결과 정책화 추진 (법무부)

*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행정학회 및 광역지자체(12개), 지역연구원(31개) 등 총 46개 기관 참여

○ 이민정책연구원의 다년도 중점연구과제(이민과 경제, 국내 거주외국인 종단조사 구축 등) 수행 및 지역 단위 이민정책 연구·교육·협력 강화 지속 (법무부)

○ 출입국·이민정책 현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정책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법무부)

다.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 전자민원 통합신청 및 제출 서류 전자화, 모바일 기술 기반 서비스 제공, 사회통합 온라인 교육·평가 등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사업 추진 (법무부)

○ 실물 신분증의 신뢰성, 보안성, 정보보호 취약성 등 보완,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외국인의 디지털 불평등 해소 및 정보 전달 강화를 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추진 (법무부)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데이터 분석자료 제공 (법무부)

○ 「인구총조사」,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시·도 장래인구추계」 등 외국인 관련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 (통계청)

라. 국제사회와 공동 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 GCM 목표의 자발적 이행력 확보, 이행점검 대비 내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법무부)

< GCM(이주 글로벌컴팩트) 개요 >

- **(명칭)**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GCM: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 **(성격)** 세계 각국이 이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제이주기구(IOM)가 주도한 첫 합의문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협력체계
- **(목표)** 국경·체류 관리, 밀입국·인신매매, 구금(외국인보호) 및 대안, 이주자 인권보호, 사회통합, 본국 귀환 및 재정착 지원, 이주데이터 관리 등 23개 항목

❍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산하 이주작업반(Working Party on Migration) 회의 참석 등 국제이주 관련 연구 및 각국의 국제이주 정책에 대한 자료 공유 및 협력체계 유지 (법무부)

❍ ICAO, UNHCR, IOM 등 이민 관련 다자 국제회의 및 지역 안보 워크숍 참여로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 체제 구축, 해외 이민정책 담당자 교류 확대 (법무부, 외교부)

❍ 이민과 개발 정책화 관련 협력국을 대상으로 숙련·전문인력 양성 및 귀환 자원 관련 연구용역* 실시 (외교부)

* '개발도상국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KOICA 발주)

❍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선정 심사 통과 시 현지 상세 조사 실시 및 사업 성과 분석 후 ODA 대상 국가 확대 논의 (법무부, 외교부)

【참고1】

중앙행정기관 사업규모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관 \ 연도	2024년	
	과 제 수	예 산
합 계	**167**	**374,764**
기획재정부	0	0
교육부	10	133,0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31,817
외교부	1	0
법무부	95	16,478
행정안전부	3	34
문화체육관광부	8	28,530
농림축산식품부	6	4,147
산업통상자원부	2	190
보건복지부	2	4,354
고용노동부	10	1,971
여성가족부	4	130,850
국토교통부	2	0
해양수산부	3	7,816
중소벤처기업부	2	9,700
방송통신위원회	3	1,775
통계청	1	2,589
경찰청	4	1,220
해양경찰청	1	0
국세청	2	0
질병청	1	0
재외동포청	6	207

【참고2】

지방자치단체 사업규모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관 \ 연도	2024년	
	과 제 수	예 산
합 계	**1,271**	**310,946**
서 울 특 별 시	94	42,407
부 산 광 역 시	46	10,680
대 구 광 역 시	82	9,149
인 천 광 역 시	23	17,942
광 주 광 역 시	68	12,163
대 전 광 역 시	59	17,852
울 산 광 역 시	59	6,986
세 종 특 별 자 치 시	14	342
경 기 도	227	74,359
강 원 도	56	8,419
충 청 북 도	93	7,342
충 청 남 도	112	12,349
전 라 북 도	84	40,275
전 라 남 도	96	22,347
경 상 북 도	63	7,875
경 상 남 도	69	17,557
제 주 도	26	2,902

2. 체류주기/체류자격별 사업현황(2024년)

체류주기	사 업 현 황
단기체류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전자입국신고서 도입 추진,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K-컬처 융합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속,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데이터 분석 제공 등
장기체류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점진적 유료화 추진,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시스템 구축,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국적법 개정 여론 수렴 등

체류자격		사 업 현 황
D계열	유학생 (D-2, D-4)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방안 마련,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실태조사 실시,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지역맞춤형 해외인재 유치전략 수립 지원, K-컬처 비자 신설 등
	투자자 (D-7~D-9)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등 국내 기술창업 지원
E계열	전문인력 (E-1~E-6)	첨단산업 글로벌 최상위 인재 유치,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등
	숙련기능인력 (E-7)	해외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과 국내 스타트업 취업 연계, 숙련기능인력 공급 확대 지속 등
	단순노무인력 (E-8~E-10)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운영, 돌봄분야(요양보호사, 가사관리사) 외국인력 도입, 계절근로자 정부협의체 구성, 외국인력상담센터 강화, 외국인 고용사업장 점검,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등
F계열	결혼이민자 등 (F-2, F-6)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속, 결혼이민자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대상 농업교육,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다문화 가족 (F-1, F-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 지원,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등
	외국국적동포 (F-4)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 실시, 재외동포 자격 단계적 통합 추진, 취업활동 범위 확대, 동포체류지원센터 활성화 등
	영주자격자 (F-5)	최소 거주요건 등 영주제도 개편방안 검토
G계열	난민 (G-1)	출국대기소 설치 추진, 난민심사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국가정황 보고서 번역·감수 사업 지속, 난민 체류현황 등 실태조사 분석, 재정착 난민 수용사업 다각화 방안 마련, 난민관련 국제기구 참여 등

3. 주요과제 추진일정(2024년)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1.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외국인 인적정보 표준화 시범운영	직종별 기능훈련 및 평가요소를 추가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선발(연중)		취업비자총량 사전공표제 실태조사·계량 분석 연구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 '24년 GKS 사업확대 개편 계획 수립		해외우수과학 자유치사업 현장점검	유학생 채용박람회 결과 분석
1-3. 지역기반의 이민 정책 체계 구축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참여 지자체 대상 데이터 분석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현장점검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사회통합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1-4. 이민정책과 국가 브랜드를 연계한 경제성장	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의료관광 지침 개정안 마련	크루즈관광 상품개발 및 기항지 홍보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외국인 다수 고용업종 근로감독	정부합동단속 실시	특별단속지역 순찰·단속	정부합동단속 실시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외국인 불법성, 투기성 거래 조사 계획		귀화면접심사 개선	국적·병역 설명회 개최
2-3.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승선검색 활동	전자여행허가 시스템 고도화 사업 발주 전자여행허가 시스템 고도화 사업자 선정 및 착수		국제범죄 집중단속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1.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방안 마련	CBT 사전평가 주말평가 운영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정기조사 실시	
3-2.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 및 연수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실시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3.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재 개발(연중)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실적 점검
3-4.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재외동포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일정 수립	동포체류지원 센터 간담회	국내 체류동포 인식개선 홍보 및 콘텐츠 개발	복수국적 제도 개선 관련 관계기관 협의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 보호 강화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 등 지속실시 및 홍보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방송사 심의 책임자 회의 개최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4-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운영지원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 운영	인신매매 등 방지 업무처리 지침 등 개정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실태 점검
4-3.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난민위원회 회의 개최	재정착 실무협의체 개최	난민전담 공무원 교육 실시	글로벌난민 포럼 참석
5.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5-1.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 체계 구축	외국인정책 위원회 계획 수립	외국인정책 위원회 개최	출입국·이민 관리청 신설 관련 관계부처 협의	출입국·이민 관리청 신설 방안 마련
5-2.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다문화사회 전문가 신규양성 교육 실시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연구용역 수행	이민정책연구원 중점연구과제 수행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간담회
5-3.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사업계획서 작성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5-4.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협력 강화	ODA 사업 계획 발표	OECD 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GCM 이행점검 대비 협의체 구성	국가보고서 제출

Ⅲ. 중앙행정기관별 2024년 시행계획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교 육 부

목 차

Ⅰ. 2024년 시행계획 총괄 ····· 35

Ⅱ. 2024년 시행계획 개요 ····· 36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41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44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 44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47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 49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 54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 ····· 58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2.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 · 소통 증진

3-2-2-4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 62

3-3.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3-3-3-1 이주 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 64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66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68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 70

교 육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10	100%	110,837	133,086	20.1%
1. 경 제	5	50%	94,094	116,556	23.9%
2. 안 전					
3. 통 합	4	40%	15,891	15,600	△1.8%
4. 인 권	1	10%	852	930	9.2%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정착지원**
-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강화,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주요 사업내용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 및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3차년도)을 통한 한국 유학 홍보 활성화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24년 예산 1,384백만원 → 1,034백만원

- 국제장학프로그램(GKS) 확대를 통한 해외 우수인재 유치기반 마련

  - 24년도 GKS 사업 확대 및 개편 계획 수립, 추가 수학 대학 선정, 학부 장학생 선발 및 상반기 우수 교환학생 선발 등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학생 지원체제 구축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실시,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연중 운영,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 및 담당자 연수,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 지원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수 및 활동,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 운영

Ⅰ. 2024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0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5)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4)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합계	10개	110,837	133,086	20.1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5)	94,094	116,556	23.9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1,620	1,384	△14.6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75	80	6.7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241	241	-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92,061	114,726	24.6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강화	97	125	28.9	
소계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4)	15,891	15,600	△1.8	
3-2-2-4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9,141	'24년부터 유·초·중·고 다문화 교육 지원예산(특별교부금)은 총액지원(25,358백만원)으로 과제별 운영예산 별도 산정 어려움		
3-3-3-1	이주 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6,750	15,600	131.1	
소계	4.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1)	852	930	9.2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852	930	9.2	

Ⅱ.'24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유학생 수가 '19~'21년 소폭 감소했으나 '22년 회복추세 전환, 해외 각국의 유학생 유치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유학생 수 : ('20)153,695명 → ('21)152,281명 → ('22)166,892명 → ('23)181,842명

○ 초·중·고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라 맞춤형 교육지원을 내실화하고, 전체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

2. '23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3년 주요과제 성과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유학박람회 운영 및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운영

-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국가별 박람회, 테마형 박람회 운영, 유학생 네트워크,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 온라인 박람회 운영(4회), 국가별 온오프라인 연계 박람회 운영(7회)

○ 국립국제교육원-산업부(KOTRA)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23.8)

- 우수 해외 인력수요가 있는 국내기업과 외국인 유학생 간 채용연계 기회 제공

※ 면접 진행건수 3,953건 / 참가규모: 97개 기업, 외국인 유학생 2,377명

○ '23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실시

- '23년도 인증제 및 실태조사 결과 인증대학 학위과정 134교, 어학연수 90교 및 비자발급제한대학 학위과정 20교, 어학연수 20교 지정

- 4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23.9~12.)

○ 국제장학프로그램(GKS) 확대·개편를 통한 해외 우수인재 적극 유치

- (확대) R&D과정 선발인원 확대를 통한 첨단·신산업 분야 이공계 인재 유치 강화

- (개편) 기존의 지방대 과정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연계성을 강화한 R-GKS과정으로 개편하고, 선발 인원 대폭 확대

- (신설) 글로벌 협력 제고 및 인도주의적 ODA 구현 강화를 위한 과정 신설*

*'글로벌네트워크' 과정, '국제재건인재'과정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국립국제교육원 내)을 통한 유학생 고충 상담(4,171건) 한국 유학생활 적응 지원 및 국내 취업기회 제공

○ RISE 기본계획 內 '지역특화 해외인재 유치전략' 수립, 협의체 구성 등 지원

○ 권역별 한국어 센터 지정 운영, 온라인 교육콘텐츠(K-MOOC 등) 보급하여 유학생의 한국어 및 문화 이해 교육 지원

○ 국내외 세계시민교육 확산 및 역량강화 지원

-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문*' 개정(제42차 유네스코 총회)에 '세계시민교육' 포함

* 1974년 제1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이해교육·평화교육·인권교육 증진 관련 권고문

- 고등교육기관(대학) 세계시민교육 강좌 개설 지원 및 사례 확산

※ 학부과정 7개교 및 대학원과정 4개교 등 총 11개교 강좌지원(281명 수강)

○ 학교 전체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우수 교육모델 확산을 위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확대('22년 287교→'23년 317교)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확대 운영(('22) 198교 →('23) 212교)을 통해 이주배경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제공

○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어학급 확대(('22) 444학급 → ('23) 527학급) 및 온라인 한국어교육프로그램 개발·시범 운영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확대를 위해 참여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가족센터 등 신규 활동기관 발굴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가 유학생 유치단계 입학장벽으로 작용하거나 대학의 평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음

- 학업단계 유학생의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육 기회 제공 필요

- GKS 장학생 선발 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장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안정적 유학 지원 및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 비중이 확대되고, 특히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의 지속적인 증가함에 따라 공교육 진입 및 학교생활 조기 적응 노력 필요

- 2022개정 교육과정 '세계시민과 지리' 교과목 도입('25년)에 따른 교수·학습 지원 자료의 학교 현장 보급 요청 발생

○ 개선방안

- 유학생 유치단계에서 평가 부담은 낮추되, 질관리 차원에서 졸업요건 유지 및 컨설팅 강화 등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검토

- 대학 내 우수한 한국어교육 시설이나 지자체 평생학습 시설을 한국어 센터로 지정·운영, K-MOOC 유학생 대상 한국어 강좌 확대 등 폭넓은 학습기회 제공

- GKS 장학생의 성공적인 학위취득을 위한 한국어 능력향상 지원 및 동문회 지원 확대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관리 강화

-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을 통하여 공교육 진입 및 학교생활 조기 적응을 위해 다문화 정책학교 및 한국어 교육과정 내실화

-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개념을 반영한 '세계시민과 지리'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배포 추진

3. ‘24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정착 지원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 및 차세대 한국유학종합 시스템 구축(3차년도)을 통한 한국유학홍보 활성화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기반 박람회 운영

- 온라인 원스톱 한국유학서비스 실현을 위한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추진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24년 예산 1,384-> 1,034백만원

○ ’24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한 국내기업과 유학생 간 채용 연계 제공

○ ’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실시, 4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관련 의견 수렴

○ 지자체 특화산업 및 여건 고려, 유학생 유치·양성 전략 수립 시 정책과제 참고자료 개발·제공

○ 국제장학프로그램(GKS) 확대를 통한 해외 우수인재 유치기반 마련

- 지역대학 장학생 선발 확대, 첨단산업 관련 학위과정 별도 운영 통한 우수 이공인재 유치 강화, 정부초청장학생 선발 규모 확대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학생 지원체제 구축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를 통한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유학생 지원체제 등 교육의 질 관리 강화 유도(법무부 협업)

* 우수대학에 인증을 부여하고 해당 대학에 대해 국내·외 홍보 지원

- 유학생의 고충을 상담하고,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적응·정착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국립국제교육원 소재)* 전문성 제고

* 상담언어(8개) : 한국어·영어·중국어·인도네시아어·스페인어·베트남어·몽골어·러시아어

□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강화**

○ 모든 학생이 이주배경 등 여건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

□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교원 대상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연수 실시 및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 개설 지원

-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및 지역선도교사 활동 지원

- 학부 및 대학원 과정 內 세계시민교육 강좌 운영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9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연중)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 및 비자심사강화대학 선정 ▪ 지자체별 유학생 유치·양성 전략 수립 지원(연중)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해외인재유치지원팀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 '24년도 GKS 사업확대 및 개편 계획 수립 ▪ 추가 수학대학 선정 학부 장학생 선발 및 상반기 우수교환학생 선발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연중) ▪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가이드' 마련 및 K-MOOC 강좌 제공(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팀
3-2-2-4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 및 담당자 연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3-3-1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지정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시도교육청별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지원 계획 수립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2024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추진계획 수립 ▪ 멘토링 주관대학 선정 및 간담회 실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 세계시민교육 중앙 선도교사 역량강화 연수(1차) 실시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연중)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2024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 제4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실태조사 및 개편방안 마련 ▪ 지자체별 유학생 유치·양성 전략 수립 지원(연중)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해외인재유치지원팀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 GKS 수학대학 운영 점검 및 워크숍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연중) ▪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가이드' 마련 및 K-MOOC 강좌 제공(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팀
3-2-2-4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원격연수 콘텐츠 보급 및 워크숍 개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3-3-1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추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한국어학급 등 현장방문 및 컨설팅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멘토링 주관대학 선정 및 간담회 실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 운영 지원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연중)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2024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공고 ▪ 지자체별 유학생 유치·양성 전략 수립 지원(연중)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해외인재유치지원팀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 '24년도 대학원 장학생 선발 및 하반기 우수교환학생 선발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연중) ▪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가이드' 마련 및 K-MOOC 강좌 제공(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팀
3-2-2-4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다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현장방문	교육부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문화 수용도 제고	및 성과 보고회	교육복지정책과
3-3-3-1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추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한국어학급 등 현장방문 및 컨설팅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멘토링 주관대학 선정 및 간담회 실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 개최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연중)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2024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결과 분석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 2024년 인증(서면·현장) 심사 ▪ 지자체별 유학생 유치·양성 전략 수립 지원(연중)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해외인재유치지원팀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 GKS 수학대학 워크숍, 동문 멘토링 추진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연중) ▪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가이드' 마련 및 K-MOOC 강좌 제공(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팀
3-2-2-4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현장방문 및 성과 보고회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3-3-1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추진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성과 보고회 개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한국어학급 등 현장방문 및 컨설팅 ▪ 한국어 교육지원 성과보고회 개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멘토링 주관대학 선정 및 간담회 실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자료 발간 및 배포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교육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한국유학 수요층 확대를 위해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한국유학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 및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 과제 내용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한국 유학박람회 운영*

* 국가별 박람회(온·오프 연계), 테마형 박람회(온라인)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박람회 운영, 온라인 입학 신청 서비스 제공, 한국 유학 정보 제공 등), 미래사회 변화를 반영한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한국유학정보시스템 >

○ 온라인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운영('11)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 한국유학박람회 개최('15)

○ 온라인 기반 한국유학박람회 확대 · 개편 운영('20)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ISP 수립('21)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1차년도 사업추진('22)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2차년도 사업추진('23)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23.8.)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립국제교육원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국립국제교육원) → 사업 시행(국립국제교육원)

2. '23년도 추진 실적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한국 유학박람회 운영

- 온라인 박람회 운영(4회), 국가별 온·오프라인 연계 박람회 운영(7회)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 및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신규 구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온라인 입학신청 서비스 제공, 한국유학 정보 제공 등)

- 미래 신기술 기반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2차년도** 운영

※ 한국유학정보서비스 혁신, 유학생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온라인 박람회 플랫폼 구축 등

3. '24년도 추진계획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운영(연중)

○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기반 박람회* 운영 및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다양한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온라인 박람회, 국가별 온·오프라인 연계 박람회 개최를 통한 유학생 유치 확대 도모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3차년도 운영(연중)

※ AI 기반 상담 챗봇, 영어 기반 자동번역 기능 구축 등을 통한 맞춤형 한국 유학 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총 1,384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1,620	1,384	△14.6	‘23년도 집행액에 이월액 포함
-국 비	▪ 일반회계	1,620	1,384	△14.6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350백만원),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1,034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입학신청자수	신청자 수	7,749	8,109	온라인 자동집계
’24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입학신청자수	신청자 수	8,524		온라인 자동집계

5. 담당자

소관부서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한국유학지원팀	전화번호	02-3668-1380
담 당 자	8급 김지나	이 메 일	jnkim20@korea.kr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법무부, 산업부, 교육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기업 채용 연계를 통한 우수인력 유출 방지 및 글로벌 인재 활용도 제고

○ 글로벌 인재 채용수요 지원을 통한 국내기업의 글로벌기업 발전전략 실현

□ 과제 내용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 졸업 후 국내취업 연계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0년 글로벌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동주관, 10.4.~10.5.)

○ '11년~'22년 국립국제교육원-산업부(KOTRA) 공동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 '23년 국립국제교육원-산업부(KOTRA) 공동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8.21.~8.22.)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립국제교육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공동주관)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국립국제교육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사업 시행(국립국제교육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23년도 추진 실적

□ **2023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8.21.~8.22./COEX)

○ 글로벌 인재 구인을 희망하는 국내기업과 국내 유망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간 채용 연계 기회 제공

※ 면접 진행 건수: 3,953건 / 참가 규모: 97개 기업, 외국인 유학생 2,377명

○ 취업 선배 멘토링 및 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전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역량 강화 지원

3. '24년도 추진계획

□ 2024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 (2~3분기) 기본계획 수립, 행사 홍보 및 준비

○ (3~4분기) 채용박람회 개최 및 결과 분석

□ 소요예산 : **총 8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75	80	6.7	
-국 비	▪ 일반회계	75	80	6.7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등 행사 개최(2회×40백만원)

※ 유학생의 날 행사 등 유학생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포함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채용박람회 참가 유학생수 및 업체수	참가 유학생 수	1,000명	2,377	결과보고
			참가 업체 수	100개사	97	
'24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채용박람회 참가 유학생수 및 업체수	참가 유학생 수	1,000명		
			참가 업체 수	100개사		

5. 담당자

소관부서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한국유학지원팀	전화번호	02-3668-1380
담 당 자	8급 김지나	이 메 일	jnkim20@korea.kr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교육부,법무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대학의 유학생 교육의 질 관리 강화를 통해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수준 및 국제적 신뢰도 제고 도모

○ 다양한 방식의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위상 강화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지역의 인구감소 및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학업, 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지역 정착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양성 활동 지원

□ 과제 내용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을 평가하고,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인증을 부여

- 인증대학에는 외국인학생 입국 시 출입국심사 완화,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수학대학 선정 시 우대 등 지원

○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실시) 인증과는 별개로 매년 전국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부실한 대학 지정

- 부실한 정도에 따라 컨설팅, 모집제한 권고*로 단계별 제재조치

* 해당 대학의 신·편입생에 대한 비자발급 시 제한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업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RISE 체계 내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 협의체'를 구성, 지역 산업수요에 적합한 정주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양성 전략 수립

※ 당초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 신설을 통해 추진하려던 지역의 해외인재 유치 전략 수립 계획을 → RISE 체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수립('11.5.)

○ '11년도 인증제 시범도입 및 결과 발표('11.5~12)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1주기 시행('12~'15)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2주기 시행('16~'19)

※ 1주기 평가대상은 학부에 한정되었던 반면, 2주기 평가대상은 학부 외에 어학연수, 대학원 과정까지 확대

○ 3주기('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20.2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 유학생 감소 등을 반영, 코로나19 영향 지표(불법체류율, 어학 요건 등)를 조정하여 평가 시행('20년, '21년)

- 대학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단년도 계획이 아닌 안정적인 3주기 보완방안('22~'24)* 마련('22.9월)

* 코로나19 영향 지표 재검토(예 : 불법체류율 산식 조정, 대학 자체 언어능력 검증 인정 등)

○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결과 발표('24.2월)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Study Korea 300K Project 수립('23.8.16.)

○ RISE 체계 내 지역맞춤형 해외인재 유치전략 수립 지원 컨설팅('24.1월)

☐ 추진체계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추진주체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제한여부 검토 → 정량지표 검토	⇒	국제화지원지표 심의(자체점검보고서)	⇒	현장 확인 (필요시)	⇒	위원회 최종심의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추진주체 : 자치단체

○ 추진절차 : 유학생 유치전략 수립(지자체)

2. '23년도 추진 실적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4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23.9~12월)

○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실시

※ (인증대학) 학위과정 134교·어학연수 90교, (비자발급 제한대학) 학위과정 20교·어학연수 20교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지역맞춤형 해외인재 유치전략 수립 지원

○ 현장컨설팅, 워크숍 등을 통해 RISE 기본계획 內 '지역특화 해외인재 유치 전략' 수립, 관련 협의체 구성 등을 지원

※ RISE 시범지역 교육개혁지원관 간담회(3회)를 통해 정책방향 공유, 찾아가는 컨설팅(2회) 및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유학생 유치 전략 수립 방안 안내·설명

3. ‘24년도 추진계획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 (1분기)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 및 비자심사강화대학 선정

○ (2분기) 제4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실태조사 및 개편방안 마련

○ (3분기)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공고

○ (4분기) 2024년 인증(서면, 현장) 심사

☐ 소요예산 : **총 241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41	241	0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41	241	0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241백만원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지역맞춤형 해외인재 유치전략 수립 지원

○ 지자체별 특화산업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학생 유치·양성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메뉴판‘ 개발·제공

○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함께 협의체 구성, RISE 및 ’교육발전 특구‘ 연계 ’시·도 맞춤형 해외인재 유치전략“ 수립하도록 컨설팅 등 지원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19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운영	인증 기준 값을 만족할 만큼 역량이 강화된 대학 증가	인증대학(원) 수	80개교	117교	인증평가 결과
'20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운영	인증 기준 값을 만족할 만큼 역량이 강화된 대학 증가	인증대학(원) 수	80개교	143교	인증평가 결과
'21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운영	인증 기준 값을 만족할 만큼 역량이 강화된 대학 증가	인증대학(원) 수	90개교	132교	인증평가 결과
'22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운영	인증 기준 값을 만족할 만큼 역량이 강화된 대학 증가	인증대학(원) 수	90개교	120교	인증평가 결과
'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운영	인증 기준 값을 만족할 만큼 역량이 강화된 대학 증가	인증대학(원) 수	100개교	134교	인증평가 결과
'24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운영	인증 기준 값을 만족할 만큼 역량이 강화된 대학 증가	인증대학(원) 수	100개교	-	인증평가 결과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	-	
'24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해외인재유치전략 협의체 구축	협의체 구축 수(개)	3개		RISE 시범지역(7개)

5. 담당자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소관부서	교육부 기획조정실 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766
담 당 자	5급 남하린	이 메 일	zdsn54@korea.kr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소관부서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해외인재유치지원팀	전화번호	044-203-6797
담 당 자	5급 김영삼	이 메 일	blueyou03@korea.kr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교육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해외 우수 인재를 선발·초청하여 국내 학위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친한·지한 인재 양성

□ 과제 내용

구분	세부프로그램	장학기간	지원내역
장기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위과정 지원	한국어연수 1년 + 학위과정 2~6년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어학연수비, 등록금, 항공료, 학업장려금 등
단기	우수 교환학생 지원	4개월~10개월	항공료, 학업장려금
	우수 자비학생 지원		
	초청연수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67년 한국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시작

○ '05년'Study Korea Project'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역점사업 지정

○ '09년 한-아세안 정상회담(6.1~2)시 Global Korea Scholarship 추진 발표

○ '10년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프로그램 재정비 및 신규 사업 신설 등 "Global Korea Scholarship"으로 국가 브랜드화(化)

○ '12년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

○ '14년'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수립·발표

○ '18년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

○ '23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

○ '24년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사업 확대 및 개편 계획 수립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 장학생 추천(재외공관, 대학) → 장학생 선발(국립국제교육원) → 장학생 수학(대학)

2. '23년도 추진 실적

□ GKS 신규 선발인원 확대 : ('22년) 2,310명 → ('23년) 2,456명 (+146명 증)

※ ('22년) 장기 1,410명, 단기 900명 → ('23년) 장기 1,334명, 단기 1,122명

□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GKS 장학생 전략적 선발

○ 지역대학 장학생 선발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기여

- 전체 선발인원의 과반 이상(50.3%)*을 지방 소재 대학 학생으로 선발(총 671명)

* 지방대 전형 도입('16년~) 이후 최초로 지방 소재 대학이 수도권 소재 대학 비율을 넘음

○ 첨단산업 관련 학위과정 별도 운영을 통한 우수 이공인재 유치 강화

- 대학원 연구개발(R&D) 60명, 학부 산학협력(UIC) 과정 59명 선발

○ 대학원 과정 장학생 선발 비중 확대를 통한 석박사 고급인력 지원 확대

- 대학원 장학생 선발 비중을 82.4%로 확대('22년 77.6%)

3. '24년도 추진계획

□ GKS 장학생 선발·관리

○ (1분기) '24년도 GKS 사업 확대 및 개편 계획 수립* 및 추가 수학대학 선정
학부 장학생 선발 및 상반기 우수교환학생 선발

* 선발규모(장기+단기) ('23) 2,456명 → ('24년) 2,980명 (+524명 증)

* 장기과정 개편 및 다변화 : 확대·개편지방대, R&D과정, 신설글로벌네트워크, 국제재건인재

○ (2분기) GKS 수학대학 운영 점검 및 워크숍

*학위 취득률, 중도 탈락률 등 학생 관리현황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3분기) '24년도 대학원 장학생* 및 하반기 우수교환학생 선발

* 1분기 장학생 선발 공고 시작하여 3분기 선발 완료

○ (4분기) GKS 수학대학 워크숍, 동문 멘토링 추진

□ 소요예산 : **총 114,726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92,061	114,726	24.6	
-국 비	▪ 일반회계	92,061	114,726	24.6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장기) 학위과정 지원 112,163백만원 / (단기) 교환학생 지원 2,563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GKS의 전략적 추진	GKS 외국인 장학생 수학 성공율	중도포기 인원을 제외한 학위과정 관리인원 비율	97.4%	97.2%	중도 포기자 관련 공문
'23	GKS의 전략적 추진	GKS 외국인 장학생 수학 성공율	중도포기 인원을 제외한 학위과정 관리인원 비율	98.3%	98.4%	중도 포기자 관련 공문
'24	GKS의 전략적 추진	GKS 외국인 장학생 수학 성공율	중도포기 인원을 제외한 학위과정 관리인원 비율*	98.4%	-	중도 포기자 관련 공문

* (학위과정 관리인원-학위과정 중도포기 인원) / 학위과정 관리인원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기획조정실 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전화번호	044-203-6772 (02-3668-1368)
담 당 자	행정사무관 제유진 (행정사무관 신은정)	이 메 일	cheerupje@korea.kr (sej0616@korea.kr)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 · 적응지원 강화(교육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국내 다국적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유학에 대한 만족도 및 한국 유학 성공률 제고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학업과 생활 적응을 지원

□ 과제 내용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상담센터(국립국제교육원 내) 연중 운영

- 한국생활, 국내대학 학업 등 각종 고충에 대한 다국어 상담 진행

※ 상담언어(8개) : 한국어· 영어·중국어·인도네시아어·스페인어·러시아어·프랑스어·몽골어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권역별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온라인 교육 콘텐츠(K-MOOC 등) 보급, 입학 초기 이중언어 교육 병행, 국내학생과의 교류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유학생의 한국어 및 문화이해 교육 지원

* 대학 한국어교육 시설 또는 지자체 평생학습시설 등을 한국어센터로 지정·운영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 「Study Korea Project」('04.11) 및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 수립('08)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개설('10)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23.8.)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Study Korea 300K Project 수립('23.8.16.)

□ 추진체계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 추진주체 : 국립국제교육원

○ 추진절차 : 기본 계획수립(국립국제교육원) → 사업 시행(국립국제교육원)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추진주체 : 대학, 자치단체

○ 추진절차 :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가이드 마련(교육부) → 시도별 한국어 센터 지정·운영지원(대학·지자체)

2. '23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고충 등 상담

※ 상담 실적 : 4,171건*

- 국가별 상담 비율 : 인도(11.22%), 중국(7.77%), 파키스탄(4.29%), 베트남(3.74%), 우즈베키스탄(2.93%), 몽골(2.85%), 인도네시아(2.25%), 일본(1.66%), 기타(63.29%) 순(총 128개국)

○ 장학금 정보, 국내대학 학사 운영, 취업 및 비자 등 상담 추진

※ 상담언어(8개)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인도네시아어 · 스페인어 · 베트남어 · 몽골어 · 러시아어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정착 및 대학생활 지원을 위한 K-MOOC 강좌 신규 선정

※ (주요 강좌) '유학생 한국내 논문작성 지원', '한국생활 이거 하나면 완전정복' 등

3. '24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 장학금, 학사, 한국 생활, 취업 등 다양한 주제의 유학생 상담 제공

○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재한 유학생회 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한국 유학생활 정보 제공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취업 희망자 증가에 따라 취업 정보제공 확대

□ 소요예산 : **총 125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97	125	28.9	
-국 비	▪ 일반회계	97	125	28.9	상담원 인건비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지자체·대학 간 협업을 통해 지역내 우수 한국어 교육기관을 한국어 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가이드' 마련

※ 운영 주관기관 선정, 예산지원, 교육 프로그램 편성, 수강인원, 강사선발 등

○ 유학생의 한국이해 및 한국어·한국학 분야 강좌 수요에 대응하여 K-MOOC를 통해 강좌* 제공

* 유학생 한국생활 지원 강좌 운영('24.6~), 강좌 패키지 제공('24. 하)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학습, 적응지원 강화	다국어 상담 제공 언어	개수(개)	7	7	결과보고
'24	학습, 적응지원 강화	상담 건수	개수(건)	4,200		결과보고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지원	-	-	-	-	-
'24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지원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가인드 마련	1건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가이드 배포(3월)

5. 담당자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소관부서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한국유학지원팀	전화번호	02-3668-1380
담 당 자	8급 김지나	이 메 일	jnkim20@korea.kr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소관부서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해외인재유치지원팀	전화번호	044-203-6797
담 당 자	5급 김영삼	이 메 일	blueyou03@korea.kr

3-2-2-4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도를 높여 학교 내 상호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이주배경학생이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

□ 과제 내용

○ 문화 다양성 존중 교육의 확산 및 실생활 중심의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교원 연수 실시

○ 교육과정 등에 다양한 다문화교육 요소*를 반영하여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 평등성, 반편견, 정체성, 다양성 존중, 협력성, 세계시민의식 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다문화교육 중점학교('14~'18년) 및 정책학교('19년~) 운영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수 : ('19) 287교 → ('20) 267교 → ('21) 277교 → ('22) 287교

○ 다문화교육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운영('15년~)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다양한 다문화교육 요소* 반영('15년)

* 평등성, 반편견, 정체성, 다양성 존중, 협력성, 세계시민의식 등

○ 다문화, 다양성 존중 등을 포함한 교수학습자료 개발('16~'18년)

○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수립('23.9월)

□ **추진체계**

<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

○ 추진주체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KERIS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계획 수립 → 교원 연수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

○ 추진주체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 결과보고

2. '23년도 추진실적

○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개발된 원격연수 콘텐츠(3개 과정)를 보급하고 교원 대상 이수 권고

○ 학교 전체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우수 교육모델 확산을 위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확대('22년 287교→'23년 317교)

3. '24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1분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 및 담당자 연수

○ (2분기)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원격연수 콘텐츠 보급 및 워크숍 개최

○ (3~4분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현장방문 및 성과 보고회

□ 소요예산 : '24년부터 유·초·중·고 다문화교육 지원 예산(특별교부금)은 총액(25,358백만원) 지원으로 정책학교 운영 예산을 별도 산정하기 어려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학교 구성원 다문화 수용도 제고	다문화 수용도 제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수	300	317	시·도교육청 운영결과 보고서
'24	학교 구성원 다문화 수용도 제고	다문화 수용도 제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수	350	-	시·도교육청 운영결과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교육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522
담 당 자	5급 황혜경, 5급 양준혁	이 메 일	truebird94@korea.kr yang385@korea.kr

3-3-3-1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이주배경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 및 기초학습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통합적 성장 지원

□ 과제 내용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을 확대하여 다문화유아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 자료 개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도입·운영('15년~)

○ 누리과정 연계 다문화유아 한국어능력 평가도구 보급('20.8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 결과보고

2. '23년도 추진 실적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확대 운영(('22) 198교 →('23) 212교)을 통해 이주배경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제공

○ 모든 유아에게 다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배포('23.3월)

3. ’24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1분기)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지정

○ (2~4분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추진

○ (4분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성과 보고회 개최

□ 소요예산 : ’24년부터 유·초·중·고 다문화교육 지원 예산(특별교부금)은 총액(25,358백만원) 지원으로 정책학교 운영 예산을 별도 산정하기 어려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맞춤형 다문화 유아 교육 지원	다문화유아 발달지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수	200	212	시·도교육청 운영결과 보고서
’24	맞춤형 다문화 유아 교육 지원	다문화유아 발달지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수	220	-	시·도교육청 운영결과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교육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522
담 당 자	5급 황혜경 5급 양준혁	이 메 일	truebird94@korea.kr yang385@korea.kr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중도입국·외국인학생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공교육 진입 및 학교생활 조기 적응 지원

□ 과제 내용

○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한국어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해 한국어 역량을 측정하고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예비학교 도입('12~'19년) 후 한국어학급으로 확대('19년~) 운영

○ 한국어(KSL) 교육과정 도입('12년) 및 개정('17.9월)

○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를 연계하여 중도입국·외국인자녀에게 학교 편·입학 등 자료 안내('17년~)

○ 한국어 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개발·운영('19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교육부(법무부 협업), 시·도교육청, 학교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한국어학급 설치·운영 → 결과보고

2. '23년도 추진 실적

○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어학급 확대(('22) 444학급 → ('23) 527학급) 및 온라인 한국어교육프로그램 개발·시범 운영

○ 학교급 전환기(유→초, 초→중) 및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초기 학교 적응을 위한 징검다리과정 운영 및 학부모 안내 수첩(14개 언어) 제작·보급

3. ’23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1분기) 시도교육청별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지원 계획 수립

○ (2~4분기) 한국어학급 등 현장방문 및 컨설팅

○ (4분기) 한국어 교육지원 성과보고회 개최

□ 소요예산 : ’24년부터 유·초·중·고 다문화교육 지원 예산(특별교부금)은 총액(25,358백만원) 지원으로 한국어학급 등 운영 예산을 별도 산정하기 어려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입국초기 적응지원	한국어교육 지원	한국어학급 운영 수	450	520	시도교육청 결과보고서
’23	학교생활 적응 지원	한국어교육 지원	한국어학급 운영 수	530	-	시도교육청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교육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522
담 당 자	5급 황혜경 5급 양준혁	이 메 일	truebird94@korea.kr yang385@korea.kr

3-3-3-3	학업 · 진로 · 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대학생을 멘토로 활용해 다문화·탈북학생의 기초학습 및 언어교육, 학교생활 적응 등 지원

□ 과제 내용

○ 국내 대학(원)생과 다문화·탈북학생을 매칭하여 기초·한국어 학습, 이중언어 역량 강화, 진로·진학 상담 등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교·사대생 멘토링 사업 도입('09년) 후 참여대학('11년, +모든 대학) 및 지원대상('12년, +탈북학생) 확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멘토·멘티 모집 및 매칭 → 결과보고

2. '23년도 추진 실적

○ 대학 참여 유도를 위해 멘토링 참여 대학에 대해 '24년 국가근로장학금 예산 배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

○ 다문화·탈북학생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가족센터 등 18개 기관이 활동기관으로 참여

3. '24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1분기) 2024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추진계획 수립

○ (1~4분기) 멘토링 주관대학 선정 및 간담회 실시

□ 소요예산 : 총 15,600백만 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6,750	15,600	131.1	
-국 비	▪ 일반회계	6,750	15,600	131.1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멘토링 확대	멘토링 참여대학 수	73	74	멘토링 결과 보고서
'24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멘토링 확대	멘토링 참여대학 수	80	-	멘토링 결과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교육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522
담 당 자	5급 황혜경 5급 양준혁	이 메 일	truebird94@korea.kr yang385@korea.kr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교육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 및 지속적 확산

*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평화, 자유,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 양성 교육

□ 과제 내용

○ 유네스코 등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공유,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연수 등을 지속 실시하여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 기반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및「인천선언문*」채택('15.5월)

* 2030년까지「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기회 증진」을 글로벌 교육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세계시민교육(GCED) 확산 반영

○ 유엔 개발정상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15.9월)

* 세부목표 4.7에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증진' 반영

○ 세계시민교육 확산 사업 지원('15년~계속)

○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문' 개정(제42차 유네스코 총회)에 '세계시민교육' 포함 ('23.11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교육부 →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 시·도 교육청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교육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 시도교육청)

2. ‘23년도 추진 실적

□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및 국내외 확산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수 실시 및 교사연구회(중앙 및 시도) 운영·지원(675명, 연중)

○ 세계시민 교육 강좌 개설 지원(총 11개교, 11개 강좌)

○ 세계시민교육 한-일 교사 네트워크 연수(33명, 한국) 및 네트워크 운영(연중)

○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문*’ 개정(제42차 유네스코 총회)에 ‘세계시민교육’ 포함

3. ‘24년도 추진계획

□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수 및 활동(연중)

※ 중앙선도교사 1차연수(1분기) → 시도선도교사 전달연수(2분기) → 중앙선도교사 2차연수(3분기) → 성과공유 워크숍(4분기)

○ 세계시민교육 중앙연구회 조직·운영 및 시도연구회 지원(연중)

○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 운영 지원(2분기)

○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라운드테이블(2분기)

○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 개최(3분기)

○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체험 지원(연중)

○ ‘세계시민과 지리’ 교수학습자료 개발(4분기)

☐ 소요예산 : **총 93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852	930	9.1	
-국 비	▪ 일반회계	852	930	9.1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세계시민교육 확산 사업 93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	세계시민교육 확산 및 전파	강좌 개설 고등교육기관 수	10교	11교	지난 3년(2020-2022) 개설 지원교 평균(9.33)의 올림 값
’24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	세계시민교육 확산 및 전파	강좌 개설 고등교육기관 수	10교	-	지난 3년(2021-2023) 개설 지원교 평균(10.00)의 올림 값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기획조정실 글로벌교육기획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760
담 당 자	교육연구관 전성원	이 메 일	rail0880@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 차

Ⅰ. 2024년 시행계획 총괄 ····· 76

Ⅱ. 2024년 시행계획 개요 ····· 77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78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79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1-2-①-②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7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1	100%	38,329	31,817	△17.0%
1. 경 제	1	100%	38,329	31,817	△17.0%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과학기술 분야 전략적 해외 인재 유치

주요 사업내용

- 국내 연구기관의 박사 또는 해외 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장기(3년, 10년) 초청·유치를 지원

  - (Brain Pool) 연간 인건비 최대 3억 원까지 장기(3년) 지원
  - (Brain Pool^{+}) 인건비·체재비·연구비 등 연간 최대 6억 원까지 10년간 지원하여 국내 연구기관의 인공지능 등 핵심분야 연구자 정규직 영입 지원

※ '23년 성과 : 해외 우수 연구자 183명 신규 선발, SCI(E)급 논문 636건, 등록 특허 15건 등

Ⅰ.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합계	1개	38,329	31,817	△17.0	
I-2-①-②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활용	38,329	31,817	△17	

Ⅱ.'24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급격히 기술이 발전되는 국제환경에서 우수 과학기술 연구자 확보는 신산업 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소이며, 세계 주요국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 중

○ 中, 日 등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높은 연구역량을 갖춘 세계적인 과학 인재 영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경쟁적으로 추진

2. '23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3년 주요과제 성과

○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해외 우수 연구자 183명을 유치 수요가 있는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으로 신규 초빙·유치하여 논문 우수한 성과 도출

· '23년 성과 : SCI(E)급 논문 636건, 등록특허 15건 등 ('24.2월 집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략적 우수 해외 연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사이언스 카드* 우대혜택 확대(장기 체류기간 부여, 가족 체류지원 확대) 필요

* 과기정통부 추천시 이공계 해외 우수 연구자에게 비자 발급 및 체류 등 혜택 부여

3. '24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전략적인 유치 기반 마련

□ 유입·정착 지원 체계화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①-②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과제 공고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①-②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신규과제 선발 및 입국지원 (총 2차, ~’23.5월)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①-②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현장점검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①-②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2-1-2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으로 해외 우수 연구자 초청·유치를 지원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 과제 내용

○ 국내 연구기관의 박사 또는 해외 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단기(3~12개월) 또는 장기(3년, 10년) 초청·유치를 지원

- (Brain Pool) 연간 인건비 최대 3억원까지 단기(3∼12개월)·장기(3년) 지원
- (Brain Pool+) 인건비·체재비·연구비 등 연간 최대 6억원까지 10년 간 지원하여 국내 연구기관의 인공지능 등 핵심분야 연구자 정규직 영입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994. 2. 해외고급과학자초빙(Brain Pool) 사업 착수

○ 2015. 3.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KRF)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2020. 1.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Plus(Brain Pool+) 사업 신설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 주관연구기관

○ 추진절차 : 과제공모 → 선정 → 협약체결 → 사업운영 및 관리

2. ‘23년도 추진 실적

☐ 해외 우수 연구자 183명 신규선발(외국인·재외한인)

○ 2023년 성과

- SCI(E)급 논문 636건, 등록특허 15건 등 (‘24.2월 집계)

3. ‘24년도 추진계획

☐ 분기별 사업 추진 계획

구 분	계 획
1/4분기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과제 공고
2/4분기	▪ 신규과제 선정 및 입국 지원
3/4분기	▪ 현장점검
4/4분기	▪ 성과교류회 개최

☐ 소요예산 : **총 31,817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38,329	31,817	△17	
-국 비	▪ 일반회계	38,329	31,817	△17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 : 31,817만원

- 계속과제 지원을 위한 24.799백만원, 신규과제 88개 선발을 위한 7,018백만원

■ (계속, BP) 204과제 × 평균 90.68백만원 = 18,499백만원

■ (계속, BP+) 12과제 × 평균 525백만원 = 6,300백만원

■ (신규, BP) 86과제 × 100백만원 × 9/12개월 = 6,448백만원

■ (신규, BP+) 2과제× 570백만원 × 6/12개월 = 57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해외연구자 신규 유치 명 수	88명	-	매년 유치인원 산출

5. 담당자

소관부서	과학기술정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	전화번호	044-202-4831
담 당 자	5급 안효정	이 메 일	ahyoj@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외교부

목 차

Ⅰ. 2024년 시행계획 총괄 ····· 85

Ⅱ. 2024년 시행계획 개요 ····· 86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88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90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3. 글로벌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

4-3-2-2 난민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90

외 교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1	100%	비예산	비예산	
1. 경 제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1	100%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국가 간 외교관계를 고려한 외국인정책 추진과제 협조**

주요 사업내용

- UNHCR과의 협력 강화 및 글로벌 난민 문제 관련 국제회의 참여

  - UNHCR 상임위원회·집행이사회 참여, 한-UNHCR 인적 교류 확대, 제2차 글로벌 난민포럼(GRF) 공약 이행 등

- 외국인정책 관련 협조과제 지원

  - '비자신청센터 확대를 통한 재외공관 사증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무부의 재외공관 사증 정밀 심사 강화 등 지원
  -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및 '불법체류 다발 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법무부의 주한 공관 및 재외공관과의 소통 강화 지원
  - '이민정책 분야에서의 국제개발 협력 활용' 관련해서는 외교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Ⅰ. 2024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2년	'23년	증감(%)	
합계	1개			00.0	
소계	1.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실현(1)			00.0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0.0	비예산

Ⅱ.'24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난민관련 국제협력 강화 관련) △한-UNHCR간 인적 교류 확대, 협의 개최 등을 통한 양자협력 강화, △유엔 난민 글로벌 컴팩트(GCR: Global Compact on Refugees) 이행 관련 국제협력 동참

2. '23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3년 주요과제 성과

○ UNHCR과의 협력 강화

- 한-UNHCR 고위급 교류

  · UNHCR 최고대표보 방한(4월), UNHCR 부최고대표 면담(4월, 6월, 11월) 및 협의(수시), UNHCR 한국대표 면담 및 협의(수시)

- 로힝야 난민 캠프 현장 시찰 및 지원 방안 협의(6월)

- UNHCR 회의 참여

  · 제86~89차 상임위원회(3, 6, 9월), 제74차 집행이사회(10월), 아프간 난민해법전략(SSAR) 지원플랫폼 핵심그룹 회의(7월), 로힝야 난민 고위급 회의(10월) 등

○ 글로벌 난민 문제 관련 국제회의 참여

- 제2차 글로벌난민포럼(GRF) 참여 및 공약 발표(12월)

- 유엔총회 3위 및 인권이사회 난민 관련 회의 및 결의안 논의 참여

3. ‘24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UNHCR과의 협력 강화 및 글로벌 난민 문제 관련 국제회의 참여

○ UNHCR 상임위원회·집행이사회 참여

○ 한-UNHCR 인적 교류 확대

○ 난민 관련 결의안 논의 및 제2차 GRF 공약 이행

□ **(협조 과제)** 외국인 정책 관련 사안 발생시 양국 외교관계에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정책 추진

○ ‘비자신청센터 확대를 통한 재외공관 사증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무부의 ▲재외공관 사증정밀심사 강화 등 측면 지원

○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및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법무부의 주한 공관 및 재외공관과의 소통 강화 지원

○ ‘이민정책 분야에서의 국제개발 협력 활용’ 관련해서는 여타 부처 추진 사업과 함께 외교부 소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체계 참여	■ UNHCR 상임위원회 참여 ■ 한-UNHCR 고위급 교류(수시) ■ 아프간 난민 해법 전략 지원 플랫폼 핵심그룹 회의(수시)	외교부 인권사회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체계 참여	■ UNHCR 상임위원회 참여 ■ 한-UNHCR 고위급 교류(수시) ■ 아프간 난민 해법 전략 지원 플랫폼 핵심그룹 회의(수시) ■ 난민 관련 결의안 논의 적극 참여(수시)	외교부 인권사회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체계 참여	■ UNHCR 상임위원회 ■ 한-UNHCR 고위급 교류(수시) ■ 아프간 난민 해법 전략 지원 플랫폼 핵심그룹 회의(수시) ■ 난민 관련 결의안 논의 적극 참여(수시)	외교부 인권사회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체계 참여	■ UNHCR 제74차 집행이사회 ■ 한-UNHCR 고위급 교류(수시) ■ 제2차 GRF 참여 및 공약 발표 ■ 아프간 난민 해법 전략 지원 플랫폼 핵심그룹 회의(수시)	외교부 인권사회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 난민 관련 결의안 논의 적극 참여(수시) ■ 제4차 한-UNHCR 정책협의회 협의(시기 미정) ■ 제2차 글로벌난민포럼(GRF) 공약 이행 및 실적 제출(시기 미정)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협력 강화, 유엔 차원의 난민 관련 국제 논의 및 규범 형성 과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과제 내용

○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이사회, 글로벌난민포럼(GRF) 등 난민 관련 주요 국제 논의 적극 참여

○ 난민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공약 발굴 및 이행

* GCR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난민수용국가 부담 경감, 난민의 경제적 자립 증진, 제3국 정착 방안에 대한 접근 확대 등이 핵심 목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8.1월 신규 과제 추진

○ (2018년) △유엔난민최고대표 방한(10월) △제71~73차 UNHCR 상임위원회 (3, 6, 9월) △제69차 UNHCR 집행이사회(10월) △유엔 난민 글로벌 컴팩트 채택(12월) 등

○ (2019년) △유엔난민최고부대표 방한(1월) △제74~76차 UNHCR 상임위원회 (3, 6, 10월) △제2차 한-UNHCR 정책협의회(5월) △유엔난민기구 보호국장 방한(9월) △제70차 UNHCR 집행이사회(10월) △제1차 글로벌난민포럼(12월) 등

○ (2020년) △'파키스탄의 아프간 난민 수용에 관한 국제회의'(2월) △제77-79차 UNHCR 상임위원회(3, 7, 9월) △외교장관-유엔난민최고대표 유선협의(4월), △아프간 난민 해법 전략(SSAR*) 지원 플랫폼 핵심그룹 참여(SSAR 고위급 회의(7월), 핵심그룹 출범 회의(10월) 등), △제71차 UNHCR 집행이사회(10월) , △제3차 한-UNHCR 정책협의회(12월) 등

* SSAR: Solutions Strategy for Afghan Refugees

○ (2021년) △아프간 난민 해법 전략(SSAR) 지원 플랫폼 핵심그룹 현장회의(2, 5월), △제80~82차 UNHCR 상임위원회(3, 7, 9월), △제72차 UNHCR 집행이사회(10월), △글로벌난민포럼(GRF) 고위급 점검회의(12월) 등

○ (2022년) △제83~85차 UNHCR 상임위원회(3, 6, 9월), △아프간난민 해법전략(SSAR) 지원플랫폼 핵심그룹 회의(3, 9월), △제73차 UNHCR 집행이사회(10월), △한-UNHCR 기본협력협정 서명(11월), △유엔 난민최고대표 방한(11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외교부, 법무부 등

○ 추진절차 : 사안별로 별도 또는 협력 추진

2. '23년도 추진 실적

□ UNHCR과의 협력 강화

○ 한-UNHCR 고위급 교류

- UNHCR 최고대표보 방한(4월)

- UNHCR 부최고대표 면담(4월, 6월, 11월) 및 협의(수시)

- UNHCR 한국대표 면담 및 협의(수시)

○ 로힝야 난민 캠프 현장 시찰 및 지원 방안 협의(6월)

○ UNHCR 회의 참여

- 제86~89차 상임위원회(3, 6, 9월)
- 제74차 집행이사회(10월)
- 아프간난민해법전략(SSAR) 지원플랫폼 핵심그룹 회의(7월)
- 로힝야 난민 고위급 회의(10월) 등

□ 글로벌 난민 문제 관련 국제회의 참여

○ 제2차 글로벌난민포럼(GRF) 참여 및 공약 발표(12월)

○ 유엔총회 3위 및 인권이사회 난민 관련 회의 및 결의안 논의 참여

3. '24년도 추진계획

□ UNHCR과의 협력 강화

○ (수시) 한-UNHCR 고위급 교류

○ (1분기 등) 제90~92차 상임위원회(3, 6, 9월)

○ (4분기) 제74차 집행이사회(10월)

○ (미정) 제4차 한-UNHCR 정책협의회 협의

□ 글로벌 난민 문제 관련 국제회의 참여 및 후속조치

○ (수시, 3 · 6 · 9월 인권이사회 등) 난민 관련 결의안 논의 적극 참여

○ (미정) 제2차 글로벌난민포럼(GRF) 공약 이행 및 실적 제출

□ 소요예산 : 비예산

□ 산출내역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협력 강화, 유엔 차원의 난민 관련 규범 형성 과정 참여 등을 통한 난민 관련 국제협력 강화	UNHCR 및 난민 관련 회의 참여	4	8	정량/횟수
			한-UNHCR 인적교류	1	8	정량/횟수
'24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협력 강화, 유엔 차원의 난민 관련 규범 형성 과정 참여 등을 통한 난민 관련 국제협력 강화	UNHCR 및 난민 관련 회의 참여	4		정량/횟수
			한-UNHCR 인적교류	1		정량/횟수

5. 담당자

소관부서	외교부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	전화번호	02-2100-7263
담 당 자	외교통상5등급 김용기	이 메 일	yogkim18@mofa.go.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법 무 부

목 차

Ⅰ. 2024년 시행계획 총괄 ····· 100

Ⅱ. 2024년 시행계획 개요 ····· 103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113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121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1.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1-1-1-①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 121

1-1-1-② 수요자 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 125

1-1-1-③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 128

1-1-1-④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 131

1-1-2-① 비자신청센터 확대를 통한 재외공관 사증심사 전문성 강화 ····· 134

1-1-3-① 해외기술인재트랙 구축 ····· 136

1-1-3-② 국내유학인재트랙 구축 ····· 138

1-1-3-③ 숙련기능인재트랙 구축 ····· 140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1-2-1-③ [글로벌최상위인재]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 142

1-2-1-④ [글로벌인재]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개선 ····· 144

1-2-2-①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및 제도 개선 ····· 146

1-2-2-②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 148

1-2-2-③ 유학 후 취업연계 강화 ····· 150

1-2-3-①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 152

1-2-3-②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 155

1-2-3-④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 157

1-2-4-②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160

1-2-5-② 외국인 투자이민 정책의 합리적 조정 ····· 162

1-3.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1-3-1-①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 ····· 164

1-3-1-②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지원 전담기관 설치 ····· 167

1-3-2-①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 169

1-3-2-②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 172

1-3-2-③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 174

1-3-2-④ 중앙-지방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 177
1-3-3-②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 179
1-3-3-③ 지방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 181
1-3-3-④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 183

1-4.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1-4-1-③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 185
1-4-1-④ 단체 전자비자제도 확대 ····· 188
1-4-2-① (가칭) K-컬처 비자 신설 추진 ····· 190
1-4-2-② 워케이션(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 ····· 192
1-4-2-③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194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1-①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 197
2-1-1-②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 199
2-1-2-①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 201
2-1-2-⑥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203
2-1-3-① 외국인의 불법취업 정보수집 체계화 ····· 205
2-1-3-② 브로커 적발을 위한 이민특수조사 역량 강화 ····· 207
2-1-3-③ 사업장 출입 조사권 신설 ····· 209
2-1-3-④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211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2-2-1-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영주제도 개편 ····· 213
2-2-1-④ 귀화 면접시험 개선 ····· 215
2-2-1-⑤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 218

2-3.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2-3-1-①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 221
2-3-1-②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시스템 고도화 · 224
2-3-1-③ 안전 위해(危害)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 227
2-3-2-①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 229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1. 객관적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3-1-1-①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적 효과성 측정 ····· 232
3-1-1-②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 234
3-1-2-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 236

3-1-2-②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 238
3-1-2-③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 인식 제고 ····· 240
3-1-2-④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 242
3-2.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3-2-1-①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 245
3-2-1-②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 ····· 247
3-2-1-③ 이민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 251
3-3.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3-3-2-④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 254
3-3-3-② 중도입국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256
3-4.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3-4-1-① 동포의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 258
3-4-1-②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 260
3-4-1-③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 ····· 263
3-4-2-①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커뮤니티 강화 ····· 265
3-4-2-② 재외동포 대상 통합형 국내체류 안내 강화 ····· 268
3-4-2-③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 ····· 270
3-4-3-① 4세대 동포를 위한 한국어능력 강화 ····· 272
3-4-3-② 차세대 동포의 국내 체류지원 강화 ····· 274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4-1-2-① 출입국항 밖의 출국대기소 신설 추진 ····· 276
4-1-2-②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 278
4-2. 여성·아동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4-2-1-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 280
4-2-2-②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 282
4-3.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4-3-1-①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285
4-3-1-② 출입국항 난민심사 절차 개선 및 인프라 확충 ····· 289
4-3-1-③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291
4-3-1-④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 294
4-3-2-① 실태조사를 통한 증거기반의 난민정책 추진 ····· 297
4-3-2-② 난민의 처우 개선 ····· 299
4-3-3-①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 301

4-3-3-②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305

5.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5-1.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5-1-1-①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 307
5-1-1-②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 309
5-1-2-①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 312
5-1-2-②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 314

5-2.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5-2-1-① 사회통합 전문인력 역량 내실화 ····· 316
5-2-1-② 소수언어 통역인 양성 ····· 319
5-2-1-③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 321
5-2-2-①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 324
5-2-2-②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 326
5-2-2-③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 329
5-2-2-④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 332

5-3.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5-3-1-①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 334
5-3-1-② 사회통합교육 종합플랫폼 구축 ····· 337
5-3-1-③ 모바일 외국인증록증 발급 ····· 339
5-3-1-④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342
5-3-2-①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 344

5-4.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5-4-1-①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 346
5-4-1-②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 348
5-4-1-③ 유엔대테러실(UNOCT) 업무 공조 ····· 351
5-4-1-④ 다자간 국제협력 체제 유지 ····· 353
5-4-2-① 이민과 개발(Migration & Development)의 정책화 ····· 358
5-4-2-② 출입국분야 우수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 360

법 무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95	100%	33,522	16,478	△50.8%
1. 경 제	29	30.5%	8,502	1,387	△83.7%
2. 안 전	15	15.8%	761	2,917	283.3%
3. 통 합	18	18.9%	1,460	1,936	32.6%
4. 인 권	12	12.6%	19,614	2,686	△86.3%
5. 협 력 / 인프라	21	22.1%	3,185	7,552	137.1%

추진 방향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숙련·전문인력 유치 강화 및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수립·시행**
- **사회통합 지표를 통한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으로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 체계화**
-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및 엄정한 체류관리 체계 유지**
-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이민행정 선진화**

주요 사업내용

- 외국인력 도입체계 혁신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추진

  -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행,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 돌봄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관한 관계부처 협력,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신설,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 등

-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이민자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인식 개선 방안 다변화

  -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지자체와 함께하는 상호문화 이해 교육, 이민자 사회참여(자원봉사, 재능기부) 활성화 등

- 정부합동단속 정례화, 자진 출국 적극 유도를 통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

-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이민행정 선진화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 논의 지원,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전자입국신고서 도입 등

Ⅰ. 2024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95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29)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15)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18)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2)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21)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합계	102개	33,521.9	16,477.9	△50.8	'-'의 경우 '△'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34)	8,502.3	1,387.3	△83.7	
1-1-1-1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80	351	338.8	
1-1-1-2	수요자 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1-1-1-3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8,079	492	△93.9	
1-1-1-4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1-1-2-1	비자신청센터 확대를 통한 재외공관 사증심사 전문성 강화				
1-1-3-1	해외기술인재트랙 구축				
1-1-3-2	국내유학인재트랙 구축				
1-1-3-3	숙련기능인재트랙 구축				
1-2-1-1	[국내체류]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50		△100	종료('23)
1-2-1-3	[글로벌최상위인재]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신규
1-2-1-4	[글로벌인재]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개선				종료('23)
1-2-2-1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및 제도 개선				종료('23)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1-2-2-3	유학 후 취업연계 강화				
1-2-3-1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1-2-3-4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1-2-5-2	외국인 투자이민 정책의 합리적 조정				
1-3-1-1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				
1-3-1-2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지원 전담기관 설치				신규

1-3-2-1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1-3-2-2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1-3-2-3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48.3	48.3	0.0	
1-3-2-4	중앙-지방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110	100	
1-3-3-2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1-3-3-3	지방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1-4-1-3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245	386	57.5	
1-4-1-4	단체 전자비자제도 확대				종료('23)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종료('23)
1-4-2-1	(가칭) K-컬처 비자 신설 추진				
1-4-2-2	워케이션(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설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15)	**761**	**2,917**	283.3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2-1-1-2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2-1-2-1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2-1-3-1	외국인의 불법취업 정보수집 체계화				
2-1-3-2	브로커 적발을 위한 이민특수조사 역량 강화				
2-1-3-3	사업장 출입 조사권 신설				
2-1-3-4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2-2-1-1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영주제도 개편				신규
2-2-1-4	귀화 면접시험 개선	596	596	0.0	
2-2-1-5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2.97		△100	
2-3-1-1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2-3-1-2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 시스템 고도화	162	2,093	1,192	
2-3-1-3	안전 위해(危害)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신규
2-3-2-1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228		신규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19)	**1,460**	**1,936**	32.6	
3-1-1-1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적 효과성 측정				(3-1-1-2)동일
3-1-1-2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90	662	635.6	
3-1-2-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3-1-2-2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3-1-2-3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 인식 제고				
3-1-2-4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1,059	964	△9.0	
3-2-1-1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3-2-1-2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	311	310	△0.3	
3-2-1-3	이민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3-3-2-4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3-4-1-1	동포의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3-4-1-2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3-4-1-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				
3-4-2-1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커뮤니티 강화				
3-4-2-2	재외동포 대상 통합형 국내 체류 안내 강화				종료('23)
3-4-2-3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				
3-4-3-1	4세대 동포를 위한 한국어능력 강화				신규

3-4-3-2	차세대 동포의 국내 체류지원 강화				신규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12)	**19,613.6**	**2,685.6**	△86.3	
4-1-2-1	출입국항 밖의 출국대기소 신설 추진				비예산
4-1-2-2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18,707	1,764	△90.6	
4-2-1-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213.6	213.6	0.0	
4-3-1-2	출입국항 난민심사 절차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신규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38	38	0.0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192	210	9.4	
4-3-2-1	실태조사를 통한 증거기반의 난민정책 추진		40	100	신규
4-3-2-2	난민의 처우 개선				
4-3-3-1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463	420	△9.3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5.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22)	**3,185**	**7,552**	137.1	
5-1-1-1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5-1-1-2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91		△100	
5-1-2-1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5-2-1-1	사회통합 전문인력 역량 내실화	113	113	0.0	
5-2-1-2	소수언어 통역인 양성				신규
5-2-1-3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5-2-2-1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40	100	
5-2-2-2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1	3	200	
5-2-2-3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2,268	2,562	13.0	
5-2-2-4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5-3-1-1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예산미확보
5-3-1-2	사회통합교육 종합플랫폼 구축				(5-3-1-1)동일
5-3-1-3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4,602	100	
5-3-1-4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481		△100	종료('23)
5-3-2-1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25년추진
5-4-1-1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5-4-1-2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13	13	0.0	
5-4-1-3	유엔대테러실(UNOCT) 업무 공조				
5-4-1-4	다자간 국제협력 체제 유지	218	219	0.5	
5-4-2-1	이민과 개발(M&D)의 정책화				
5-4-2-2	출입국분야 우수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Ⅱ. 2024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2042년 총 인구는 4,963만 명으로 감소,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2,573만 명으로 감소,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36만 명으로 증가 전망(통계청, 2024)

○ 지역 이민정책 수요 증가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역비자 도입 등 이민정책에 대한 지자체 요구* 증가

* 국가 사무인 비자발급 권한의 지자체(전북·경북) 위임·이양 요구 등

☐ 국내 출입국자 수 및 체류 외국인 증가

○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관광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23년 국내 출입국자는 전년 대비 약 25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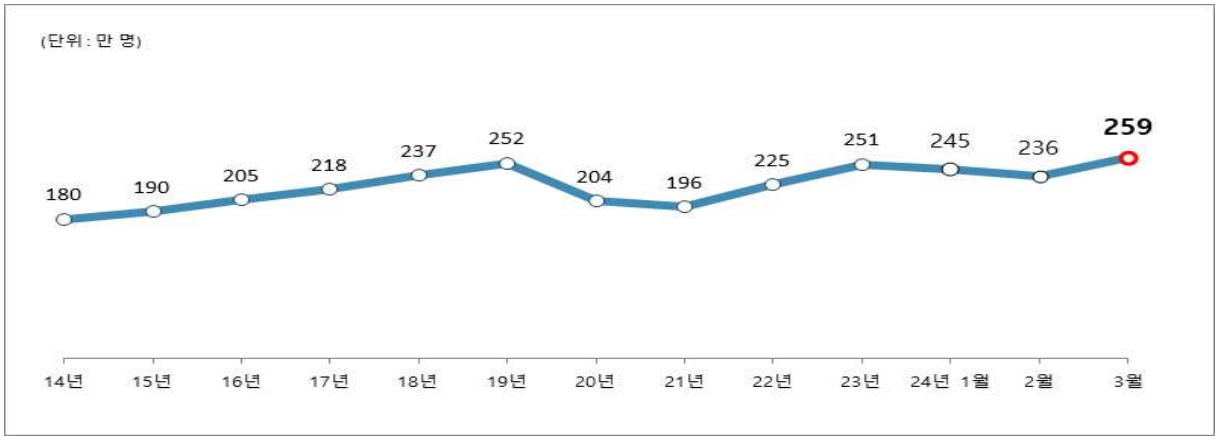
【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입국자	44,544,745	46,770,129	7,529,423	2,242,365	9,699,030	34,168,188
출국자	44,363,675	46,777,964	7,172,408	2,317,328	9,715,198	33,953,470
총 계	88,908,420	93,548,093	14,701,831	4,559,693	19,414,228	68,121,658

○ 국내 체류 외국인이 '23년 25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였으며, '30년 300만 명 초과 예상

【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



☐ 산업별 외국인력 확대 요구 증가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계 구인난 지속

- 조선업 등 산업현장 노동력 부족으로 산업계에서 비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요구

※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추가 필요인력은 '32년까지 89.4만 명 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4)

○ 돌봄분야 외국인력 수요 증가

- 저출생·고령화로 가사·간병 서비스 수요 급증, 낮은 급여 수준 및 관련 법제 미비 등 인력공급 제약으로 외국인근로자 활용 요구

※ 요양보호사 부족 전망 ('25년) 8백명 → ('26년) 4만명 → ('27년) 7만6천명 (건보연구원,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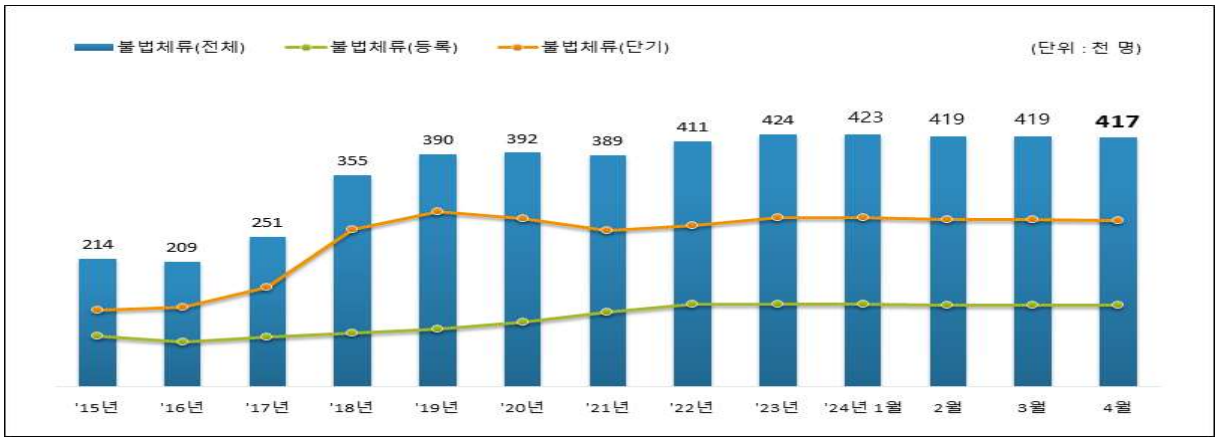
☐ 체류질서 강화 요구 증대

○ 불법체류 외국인 수 감소 추세로 전환

- '18년 35만 명을 넘어서고, '23년 말 기준 42만 명을 정점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감소 추세로 전환

※ ('23.12.) 423,675명 → ('24.2.) 419,174명 → ('24.4.) 417,211명

【 연도별 불법체류자 현황 】



○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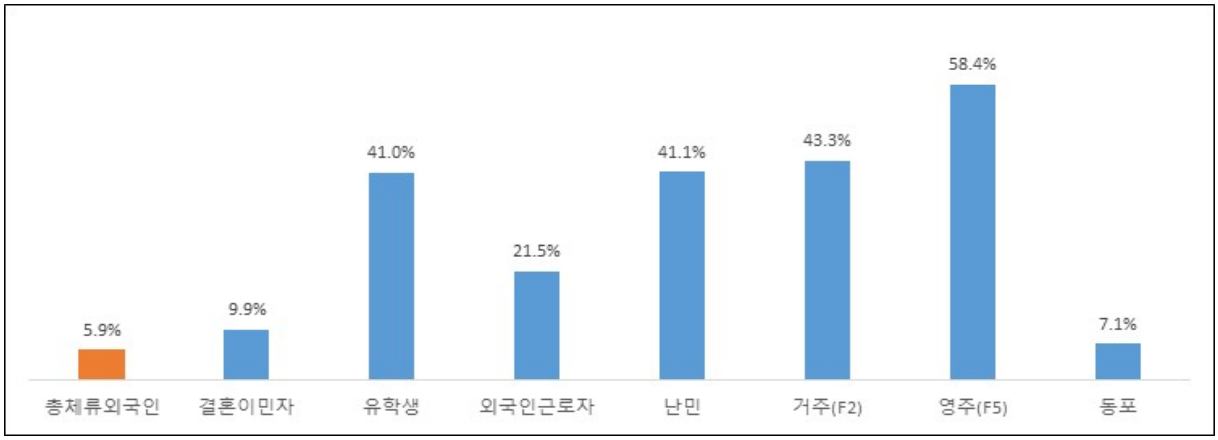
- 저임금 노동력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잠식, 마약 등 외국인 관련 범죄 증가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체류질서 강화를 요청

□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확대

○ 체류외국인 다양화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수요 급증

- 체류외국인의 체류유형이 결혼이민자 중심에서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 다양화되어 정책대상 변화에 맞는 사회통합정책 확대 필요

【 2018년 대비 체류유형별 증감율 】



※ '18년 대비 유학생 41%(16만명→22.6만명), 외국인근로자 21.5%(34.4만명→41.8만명), 난민 41.1%(2.7만명→3.8만명) 증가

○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문화 이해 증진 필요

- 이민자들의 문화적 특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면서도 이들과 국민 간의 상호작용과 이해를 촉진하는 방법 모색

□ 난민, 보호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요구

○ 국익을 고려한 난민정책 추진 필요

- 강제이주민 급증에 따라 난민지원 및 수용 책임분담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증대하나, 경제적 부담 등을 사유로 난민에 대한 국경 통제 강화

※ '23년 난민인정 신청 18,838건(누계 103,760건)으로 난민제도 시행 이래 최다 건수를 넘어서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인권 친화적 외국인 보호제도 마련

-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 헌법불합치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 강제퇴거대상자를 기간의 상한 없이 보호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규정

** 공항 밖에 별도의 대기 시설을 설치하고 처우 보장이 포함된 운영 규정 마련

□ 데이터 기반의 이민행정으로 전환

○ 과학적・미래지향적 이민행정 추진

- 디지털・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 흐름에 맞춰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정보의 대・내외 기관 간 공유 기능을 강화

○ 외국인 데이터 분석자료에 대한 수요 대응

- 지자체 보유 데이터, 민간 데이터, 출입국 보유 데이터를 결합·분석하여 신(新) 고부가가치 경제 활성화 분야 데이터 창출 필요

2. ’23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3년 주요과제 성과

○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E-7-S) 신설 및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운영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등 5개 기관 총 122명 거주자격(F-2-7S) 부여

- 산업계 인력난 해소와 숙련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시행

  * 2,000명(’22년) → 35,000명(’23년) 쿼터 확대, 총 12,035명 전환(’23.12. 기준)

- 비자발급 요건 완화 특례를 통해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 일반기능인력(E-7-3) 6,966명, 비전문취업(E-9) 5,373명 등 총 12,339명 충원

○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우수인재 및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확대 실시

  * 28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22.10.~’23.10.) 실시, 배정 인원 1,500명 중 지자체 추천 1,467명 등 총 1,493명 허가

- 지역특성에 맞는 이민행정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학계-연구계 협력 플랫폼인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성

  *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행정학회 및 광역지자체(12개), 지역연구원(31개) 등 총 46개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를 반영, 배정 인원* 확대(전년 대비 2배)

  *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 19,718명('22년) → 40,647명('23년)

- 지자체 역량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지자체 실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 권역별, 주제별 총 5회 개최,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실무담당자 457명 참석

❍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 불법 체류외국인 상시 단속체계 가동 및 특별자진출국제도 운영

※ 정부합동단속 3회 실시 등 총 47,445명(불법체류 외국인 39,038명, 고용주 8,407명) 적발, 특별 자진출국제도 운영('23.9.~'24.2.) 총 24,957명 자진 출국

❍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제도 및 시스템 개선

※ △다국어서비스 지원 확대(2개→8개) △단체 신청 가능 인원 확대(30명→50명) △공통항목 자동입력 기능 제공 △청소년(17세 이하), 고령자(65세 이상)를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유효기간 확대(2년→3년)

❍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 지자체가 시행하는 이주민 관련 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 총 9개 지자체(경기도 등 광역 4개, 김포시 등 기초 5개) 대상

❍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 적응 프로그램 확대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 조선 5사(현대중공업 등) 외국인 근로자 2,664명, 계절근로자 489명 참여

- 국민과 이민자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세계인의 날」 기념식(5월) 개최, 이민자·다문화 이해증진 홍보영상 제작·홍보

- 한국어 요건 충족 기회 확대 및 평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컴퓨터 기반 평가(CBT)센터* 추가 개소

* 경기도 광명('22.3.), 대전('23.11.) 등 총 2개 CBT 평가센터 운영

○ 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보호외국인의 이동권과 소통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외국인 보호시설을 인권 친화적인 개방형* 보호시설로 전환

  * 화성보호소('22.4.), 울산출입국사무소('23.6.), 청주보호소('23.11.)

- 난민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난민신청자 등 가이드북 개정·발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및 생계비 리플릿 제작·배포

- '국가안보' 관련 「난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3.12.), 난민인정 심사에 화상면접 방식 시범 도입('23.12.)

○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 다부처 협업형* 이민정책 전담조직인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 수립 및 발표('23.12.)

  * 각 기능별 소관 부처 인력 파견(별도 정원),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통일된 관점에서 중장기 계획수립

○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 외국인등록증 활용성・편의성 증진 및 기계판독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 사진(흑백→컬러) 및 크기 확대, 인적사항 QR코드 인쇄, 등록증 뒷면 풀네임(39자) 기재 등

-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무부-금융회사 간 등록증 인적정보와 사진정보를 실시간 조회・회신하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제1금융권 10개 은행 44,996건 조회 서비스 제공('23.12. 기준)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표준화하고,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불법체류·국민 일자리 침해 등 이민정책의 부작용 우려

➡ 엄정한 국경관리 및 체류질서에 기반을 둔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 지속 홍보

○ (문제점) 중앙 및 지자체 간 협력 미흡

➡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등 지자체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연구 결과를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

○ (문제점) 엄정한 국경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입국심사를 강화하였으나, 입국불허에 대한 민원제기 지속

➡ 시스템 기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한 국경관리와 편리한 출입국심사가 조화될 수 있는 정책 추진

○ (문제점) 불법체류 감축을 위한 단속강화에 따른 인권침해 발생

➡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불법체류 유발 환경 사전 차단을 위한 기획조사 강화

○ (문제점) 외국인 유학생, 숙련기능인력 등 정주 여건 미비

➡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 방안 마련 및 한국어 능력 우수 유학생 고용 지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운영

○ (문제점)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에 따라 문화·제도 등 차이로 각종 사회문제 발생 우려

➡ 한국어 및 기초법 질서 등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하여 국내 안정적 정주 유도 및 미래성장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해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추진*

*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교육 확대, △동반가족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등

3. ‘24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인력공급 부족 규모 및 외국인 유입 영향 등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구축을 위한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운영

-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첨단산업 우수 인재 유치 확대 및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정식사업 시행

-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취업 허용방안 마련,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고용부) 지원 등 돌봄분야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검토 및 관계부처 협력

- 이민행정 분야에서의 중앙-지방-학계-연구계 협력을 위한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포럼 개최 및 연구 결과물 정책화 추진

※ 이민행정 분야에서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 범정부 차원의 정부합동단속 정례화 등 출입국사범 단속강화를 통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입국자 사후분석 강화, 전자입국신고서 운영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구축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정책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확대,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추진

* 외국인력(기능인력, 계절근로자, 재정착난민 등) 대상으로 현장 방문형 교육 확대

- 고용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하는 상호문화 이해 교육’ 실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 이민자 사회참여(자원봉사, 재능기부) 활성화

❍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면접 심사 개선 등 심사 인프라 고도화 및 귀화 심사 진행상황 조회 시스템 구축 등 민원 편의 제고

- 개방형 보호시설 점진적 확대 운영 및 출입국 항 밖의 출국대기소 신설 추진 등 인권 친화적 보호제도 마련

- 재정착 사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재정착난민 수용사업 다각화 방안 마련, 성장 가능성 높은 난민 발굴을 위한 대안적 난민수용 방안 검토

※ 난민인정자 등에 대해 맞춤형 지원대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정부조직법」개정안 입법 논의 지원

- 실물 신분증의 신뢰성, 보안성 등을 보완하고, 디지털 불평등 해소 및 정보 전달 강화를 위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현행 방문중심 민원시스템을 온라인 기반으로 통합하는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 시스템」 구축 추진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39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1-3	외국인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 시스템 운영개시, 외국인 주무부처 데이터 분석 제공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1-1-4	범정부 외국인 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 표준화 시범운영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1-3-3	숙련기능인재 트랙 구축	■ '24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법무부 체류관리과
1-3-2-3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계획 수립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3-3-2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 지역특화비자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데이터 분석 제공(상시)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4-1-3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 전자여행허가제(K-ETA) 편의성 제고 방안 검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1-4-2-2	워케이션(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	■ 워케이션(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범운영 실시	법무부 체류관리과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 불체감축계획 수립	법무부 이민조사과
2-1-1-2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 국경·체류·안전실무분과위원회 개최	법무부 이민조사과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특별단속지역 지정	법무부 이민조사과
2-2-1-4	귀화 면접심사 개선	■ 면접대비 학습교재 개정사항 발굴	법무부 국적과
2-2-2-5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 국적과 병역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법무부 국적과
2-3-1-1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 전자입국신고서 구축 사업 검토 ■ 빅데이터 분석자료 출입국심사관 공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1-2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 계획 수립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2-1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 승선 검색 활동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3-1-2-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 운영지침 개정	법무부 이민통합과
3-1-2-2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방안	법무부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책임성 확보	마련	이민통합과
3-1-2-4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 재정착난민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이민통합과
4-1-2-1	출입국항 밖의 출국대기소 설치 추진	■ 출국대기소 설치 관련 관계기관 협의 추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난민전문통역인 위촉	법무부 난민정책과
4-3-1-2	출입국항 난민심사 절차 개선 및 인프라 확충	■ 난민심사 거점기관 간담회	법무부 난민정책과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난민위원회 회의 개최 ■ 난민조사관 연구모임 개최	법무부 난민심의과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법무부 난민심의과
4-3-3-1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 재정착난민 수용 계획 수립	법무부 난민정책과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일본 재류관리청과 업무협력	법무부 난민정책과
5-1-1-1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 해외 이민당국과의 정책 협의	법무부 개선추진단
5-1-2-1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 외국인정책위원회 계획 수립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1-1	사회통합 전문인력 역량 내실화	■ 다문화사회 전문가 신규 양성교육 실시	법무부 이민통합과
5-2-1-2	소수언어 통역인 양성	■ 난민전문통역인 위촉	법무부 난민정책과
5-2-1-3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이민법」 세부과목 구성(안) 마련 협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3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발표회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3-1-1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 시스템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 부처 사업설명회(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법무부 이민정보과
5-3-1-3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 사업계획서 작성	법무부 이민정보과
5-3-1-4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시스템 구축	법무부 이민정보과
5-3-2-1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 우리동네 일일방문객 일일 현황 분석 제공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5-4-1-1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 GCM 이행점검 대비 협의체 구성·운영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5-4-2-2	출입국분야 우수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 ODA 사업계획 발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4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1-3	외국인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 종합플랫폼 분석자료 중 일부 자료 대외 공개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3-2-1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 지자체 전담부서 현황 파악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3-2-2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 외국인정책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검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3-2-3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4-1-3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 다국어 지원 서비스 강화 ■ 단체 신청 가능 인원 확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 정부합동단속 실시	법무부 이민조사과
2-1-2-1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 주한공관원 간담회 면담	법무부 이민조사과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특별단속지역 순찰·단속	법무부 이민조사과
2-2-1-4	귀화 면접심사 개선	■ 학습교재 개정사항에 대한 소속기관 및 귀화 민간면접관 의견 수렴 ■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법무부 국적과
2-2-2-5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법무부 국적과
2-3-1-1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 전자입국신고서 구축 사업 발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1-2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 발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1-3	안전 위해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2-1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 신조 법무부 감시정 기본 설계 착수 ■ 승선 검색 활동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3-1-2-3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 인식 제고	■ CBT 사전평가 주말 평가 운영	법무부 이민통합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2-1-2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	■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 이민통합과
3-2-1-3	이민자 사회참여 활성화	■ 멘토교육 강사 활동	법무부 이민통합과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정보제공	법무부 이민통합과
3-4-2-1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커뮤니티 지원	■ 동포체류지원센터 간담회	법무부 체류관리과
4-2-1-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 법적 기반 마련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번역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화상면접시스템 정식 운영 ■ 전문임기제 대상 교육실시	법무부 난민정책과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난민위원회 회의 개최 ■ 주제별 난민심사 매뉴얼 제정	법무부 난민심의과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 국가정황정보 현행화	법무부 난민심의과
4-3-2-1	실태조사를 통한 증거기반의 난민정책 추진	■ 정책 연구용역 착수	법무부 난민정책과
4-3-2-2	난민의 처우개선	■ 재정착실무협의체 개최	법무부 난민정책과
5-1-1-1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관련 공론화	법무부 개선추진단
5-1-1-2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 위원회 통합논의 회의 참석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1-2-1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1-3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이민법」 세부과목 구성(안) 마련 협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1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 연구용역 수행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2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포럼/간담회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3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 중점연구과제 수행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4	이민정책위원회 활성화	■ 이민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법무부
5-3-1-1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 시스템	■ 기획재정부 주관 1차 보고회의 참석(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법무부 이민정보과
5-3-1-3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수행	법무부 이민정보과
5-3-1-4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시스템 구축	법무부 이민정보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5-4-1-1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 GCM 이행점검 대비 협의체 구성·운영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4-2-1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 OECD 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3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1-4	범정부 외국인 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3-2-1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 관계부처 및 지자체 업무 협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3-2-2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 지역수요 안건 발굴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3-2-3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3-3-2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 지자체와 데이터 분석 협력 체결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4-1-3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 K-ETA 허가서 유효기간 연장 ■ 청소년 및 고령자 의무 적용 제외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의료관광 지침 개정	법무부 체류관리과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 조사과장회의 개최	법무부 이민조사과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특별단속지역 순찰·단속	법무부 이민조사과
2-1-3-3	사업장 출입 조사권 신설	■ 사업장 출입 조사권 신설 관련 입안 보고	법무부 이민조사과
2-2-1-4	귀화 면접심사 개선	■ 학습교재 개정사항 전문기관 감수	법무부 국적과
2-3-1-1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 전자입국신고서 구축 사업자 선정 및 본사업 착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1-2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 고도화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착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2-1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 승선 검색 활동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1-1-1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적 효과성 측정	■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정기조사 실시	법무부 이민통합과
3-1-1-2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 정책컨설팅 실시	법무부 이민통합과
3-2-1-1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 개설	법무부 이민통합과
3-3-2-4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 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인신매매 등 방지 업무처리 지침」 개정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법무부 난민정책과
4-3-1-2	출입국항 난민심사 절차 개선 및 인프라 확충	■ 출입국항 회부심사 참고자료 마련	법무부 난민정책과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난민위원회 회의 개최 ■ 난민조사관 교육 개최	법무부 난민심의과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 국가정황 정보 현행화	법무부 난민심의과
4-3-2-2	난민의 처우개선	■ 난민처우협의회 개최	법무부 난민정책과
5-1-1-1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관련 관계부처 협의	법무부 개선추진단
5-1-1-2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 위원회 통합논의 회의 참석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1-2-1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 외국인정책위원회 안건 발굴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1-3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이민법」 세부과목 구성(안) 마련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3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 중점연구과제 수행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3-1-1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 시스템	■ 기획재정부 주관 2차 보고회의 참석(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법무부 이민정보과
5-3-1-3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 시스템 구축 중간점검	법무부 이민정보과
5-3-1-4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서비스 시행	법무부 이민정보과
5-4-1-1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 GCM 이행점검 대비 협의체 구성·운영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39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1-1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위한 실태조사·계량분석 연구	법무부 체류관리과
1-1-1-3	외국인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 플랫폼 구축 완수 및 설명회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1-1-4	범정부 외국인 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 출입국관리법령 개정 추진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3-1-1	지역특화형비자 제도운영	■ 지역특화형비자 지자체 대상 워크숍 개최	법무부 체류관리과
1-3-2-1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 관계부처 및 지자체 참여 회의 개최 추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3-2-2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3-2-3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3-3-2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예측 모델 고도화 ■ 지자체별 202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현황 분석 시각화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3-3-3	지방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 사회통합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법무부 이민통합과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 정부합동단속 실시	법무부 이민조사과
2-1-2-1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 주한공관원 간담회	법무부 이민조사과
2-2-1-4	귀화 면접심사 개선	■ 학습교재 제작 및 배포 ■ 귀화 민간면접관 선발(’24. 12월)	법무부 국적과
2-3-1-1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 전자입국신고서 구축 사업 완료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1-2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를 사업 완료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2-1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 승선 검색 활동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4-1-2-2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법무부 이민조사과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 식별지표 활용 실태 점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 및 보수교육 실시	법무부 난민정책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3-2-2	난민의 처우개선	■ 재정착난민 멘토 간담회	법무부 난민정책과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난민위원회 회의 개최 ■ 난민조사관 교육 개최	법무부 난민심의과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 국가정황정보 순회교육	법무부 난민심의과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제2회 글로벌난민포럼 참석	법무부 난민정책과
5-1-1-1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 마련	법무부 개선추진단
5-1-1-2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 관계부처 업무 협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1-2-1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 외국인정책위원회 안건 발굴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1-1	사회통합 전문인력 역량 내실화	■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실시	법무부 이민통합과
5-2-1-3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 관계부처(부서) 업무협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1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 연구용역 최종보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2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간담회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3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 및 교육 실적 보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4	이민정책위원회 활성화	■ 이민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법무부 개선추진단
5-3-1-1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 시스템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법무부 이민정보과
5-3-1-3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 사업 완료	법무부 이민정보과
5-4-1-1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 GCM 이행점검 대비 협의체 구성·운영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4-1-2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 국가보고서 제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4-2-1	이민과 개발의 정책화	■ 연구용역 최종보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1-1-1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노동시장 수급 전망과 외국인력 유입의 영향 등을 고려한 과학적 총량 관리체계 구축

□ 과제 내용

○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내년도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

- (인력공급 부족 규모)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업종·직종별 인력부족 규모 분석·추정

- (외국인 유입 영향 분석)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영향, 불법체류·이민정책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도입 규모 예비 산출) 연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소관 부처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총량 산출

- (결정·공표) 관계부처 협의·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량 최종 결정·공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4~9월) 도입 규모 산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

※ 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이철희 교수)

○ ('23. 8. 11.) 연구용역 관련 학술 포럼 개최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관

○ ('23. 10.~11.) 취업비자 총량제 운영계획 관련 관계부처 의견수렴

※ △ 외국인력 신규 도입분야 발굴 △숙련기능점수제 연간 쿼터 △우선도입 분야 지정 등

○ ('23. 12월) 전문가 자문 및 최종 산정

※ 인구·경제 등 주요 분야 전문가 및 이민정책연구원 자문을 거쳐 신규 도입 분야 및 E74 취업비자 총량 산정

○ ('24. 1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운영(안) 발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연구용역 실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 추진절차

❶ 공급 부족 규모 분석 ▸ ❷ 외국인 유입 영향 분석 ▸ ❸ 도입 규모(총량) 일차적 산정 ▸ ❹ 의견 수렴 (관계부처·전문가) ▸ ❺ 도입 규모 최종 산정

2. '23년도 추진 실적

□ '24년 취업비자별 발급 총량 발표

○ 전문인력 취업비자

비자	비자에 해당하는 사람·활동범위	현 체류인원 ('23. 11.)	'24년 비자 발급 총량
교수 (E1)	고등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1,911명	**총량 제한 없음**
회화지도 (E2)	외국어전문학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사람	13,973명	
연구 (E3)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사람	3,937명	
기술지도 (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기술 제공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207명	

비자	비자에 해당하는 사람·활동범위	현 체류인원 ('23. 11.)	'24년 비자 발급 총량
전문직업 (E5)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으로서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24명	
예술흥행 (E6)	수익을 목적으로 예술활동, 연예, 운동경기 등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4,653명	
특정활동 (E7)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 : 전문(E71), 준전문(E72), 일반기능(E73),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로 세분류	40,934명	**신규 도입 분야, 숙련기능인력에 한해 비자 발급 총량 설정 (그 외 총량 제한 없음)** **< 신규 도입 분야 >** □ 요양보호사(E72): **추후 확정** □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E73), 송전 전기원(E73): **연간 300명**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 □ 비자 전환 상한: **연간 35,000명**

○ 비전문인력 취업비자

비자	비자에 해당하는 사람·활동범위	현 체류인원 ('23. 11.)	'24년 비자 발급 총량
계절근로 (E8)	농작물 재배·수확,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16,341명	상반기 배정인원 **49,286**명 한도 내 발급
비전문취업 (E9)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 농·어업 단순노무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	303,093명	연간 고용허가 상한 **165,000**명 한도 내 발급
선원취업 (E10)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부원·어선원 등으로 종사하는 사람	21,163명	국내 총 체류 인원 **22,000**명 한도 내 발급

※ 계절근로(E8)는 최대 체류기간이 8개월로, 상반기 입국자는 올해 내 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출국 예정

3. '24년도 추진계획

□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위한 실태조사·계량분석 연구

○ ('24. 상반기) 연구용역 발주, 제안서 심의·평가 및 연구수행기관 선정·계약

○ ('24. 하반기) 중간보고회,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

○ ('24. 4분기) 관계부처 협의·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량 최종 결정·공표

☐ 소요예산 : 총 351백만원

구 분		’23년도	’24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80	351	338.8%	신규
-국 비	▪ 일반회계	80	351	338.8%	신규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외국인 취업비자 총량제 수립·공표 : 351백만원

- 실태조사(246백만원) + 총량산출(105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24년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	’24년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	1회	1회	대외 발표
’24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25년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	’25년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	1회		대외 발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 당 자	5급 황민하	이 메 일	hminha26@korea.kr

1-1-1-2	수요자 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외 이민정책 환경변화와 이민자 유입 영향 등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민자의 유입관리, 사회통합, 정착 및 정주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비자 체계 정비 추진

□ 과제 내용

○ 이민자 유입 및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비자 신규 도입

○ 산업 현장, 지역 수요 기반, 관광·문화 산업 활성화 등 맞춤형 비자 신설로 국익 및 지역 경제 발전 제고

○ 수요자 중심의 선별적·체계적 비자제도 운영으로 국익창출에 도움이 되는 외국 인력 확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3년~'17년)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조항을 일반체류자격(단기, 장기)와 영주자격으로 분류체계 정비

○ ('21. 10.) K-컬처 연수 비자 신설 입안

○ ('22. 9, / '22. 1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총 28개 지자체)

○ ('22. 10, / '23. 10.)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

○ ('23. 1.~10.) 워케이션(디지털 노마드) 비자 해외사례수집 및 지침 제정

○ ('23. 3. 10.) K-컬처 연습생 대상 생활환경 현장 점검 실시, 문체부 실무자 협의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체류자격 지침 등 정비

2. ’23년도 추진 실적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시범사업)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에게 체류 특례 부여

- (지역우수인재)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거주(F-2-R) 비자 발급

- (외국국적동포)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게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재외동포(F-4-R) 비자 발급

3. ’24년도 추진계획

□ 지역특화형 비자 정식 사업 추진

- (지역우수인재)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거주(F-2-R) 비자 발급

- (외국국적동포)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게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재외동포(F-4-R) 비자 발급

□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24. 1. 시범운영)

○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 마련

□ K-컬처 연수비자 신설을 위한 업무협의('24.)

○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K-컬처(K-pop, 안무, 모델 등) 분야에 대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체류자격 신설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 종전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만 국내 연수가 허용되던 외국인 청소년이 일정 요건을 갖춘 K-컬처 전문 연수기관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수요자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비자제도 신설	관련지침 개정	1건	1건	관련공문
'24	수요자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비자신설 추진	관계부처 업무협의	1건		관련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 당 자	5급 황민하	이 메 일	hminha26@korea.kr

1-1-1-3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부처 간 상이한 외국인 성명, 생년월일 등 기본인적정보 표기 방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외국인행정체계 구축

□ 과제 내용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각 부처가 소관 업무수행을 위해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생성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에 요청하면 표준화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

○ (외국인정보 연계) 부처별로 외국인행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

○ (데이터 분석체계 구축) 표준화된 기본인적정보 확보 및 다양한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을 위한 분석체계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7.)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신설

○ ('22.5.)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3.11.)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완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구축 사업 완수

○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23.3.)

○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23.5.)

○ 외부 데이터 선별 플랫폼 이관 (’23.8.)

○ 구축 사업완수 및 관계기관 설명회 개최 (’23.11.)

3. ’24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시범운영 개시 및 분석 지원**-(1/4)분기

☐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 · 시각화 서비스 대민 공개-(2/4)분기

○ ① 전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② 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③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④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현황, 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시각화 등 총 5종

☐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인프라 보강**-(4/4)분기

○ 서버 보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SW), 스토리지(HW) 구입 등

☐ 소요예산 : **총 492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8,079	492	△93.9	
-국 비	▪ 일반회계	8,079	492	△93.9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구분		금액	비고
자산취득비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구입	360,804,250	
	서버 보안 등 소프트웨어 구입	132,095,750	
합 계		492,900,000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정보종합 플랫폼 구축	종합플랫폼 사업 완수	사업완수율 (%)	100%	100%	공문
'24	외국인정보종합 플랫폼 구축	인프라 보강	사업완수율 (%)	100%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전화번호	02-2110-4474
담 당 자	5급 김창규	이 메 일	keguri99@korea.kr

1-1-1-4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된 반면, 외국인은 부처별 다른 표기 방식으로 정확한 행정업무 수행 곤란한 문제 개선

○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의 혜택 제공 시, 표준화된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 과제 내용

○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 정보를 기준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화된 기본인적정보를 요청기관에 종합플랫폼을 통해 제공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확하고 안전한 외국인 동일인 확인 체계 구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협의체 기관 실무담당자 대상 1·2차 실무협의회 개최('22.9.20., 9.22.)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23.3.) 및 국회 제출('23.8.)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형사사법기관, 주요외국인정책 관련 기관, 법무부 (협업)

○ 추진절차 : 표준화 협의체 구성 → 출입국관리법상 법적 근거 마련→ 표준화 시범운영(종합플랫폼 활용) → 표준화 연계 확대 추진

2. ’23년도 추진 실적

☐ 기본인적정보 표준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개정안 보고 (’23.3.)

○ 입법예고 (’23.4.~5.)

○ 국무회의 (’23.8.)

○ 국회제출 (’23.8.)

○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및 1소위 회부 (’23.12.)

3. ’24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관련 부처 연계 및 시범운영

○ 시범운영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 분석 및 시스템 개선 (’24. 상.)

○ 경찰청, 질병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시스템 연계 추진 (’24. 상.)

○ 중앙부처 등 연계기관 확대 (’24. 하.)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추진 및 법률 개정 시 후속 법무부령(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제21대 국회 회기 중 개정안 국회 설명 등 개정 추진 (1/4) 분기

※ 제21대 국회 법안 폐기 시 정부입법 신속 재추진 (’24. 하.)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 하위 법령 개정안 마련 (3/4) 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출입국관리법상 근거 마련 및 국회제출	완수율(%)	100%	100%	공문
’24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관계부처와 외국인기본인적 정보 제공 시스템 연계	연계율(%)	100%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전화번호	02-2110-4472
담 당 자	5급 송병희	이 메 일	izntbad1@korea.kr

1-1-2-1	비자신청센터 확대를 통한 재외공관 사증심사 전문성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증 심사를 제외한 신청 접수 및 교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재외공관의 업무적체 해소 및 민원인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

□ 과제 내용

○ 사증 접수량 대비 심사인력이 부족한 공관 또는 주재국 여건 상 민원인 대기가 곤란한 공관 등을 중심으로 비자신청센터 설치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5. 9.) 비자신청센터 시범운영 개시 (광저우, 칭다오)

○ ('18. 9 ~ '19. 7.) 중국(3개소), 베트남(2개소), 인니(1개소) 비자신청센터 개소

○ ('19. 9.) 유럽·몽골지역 비자신청센터 운영을 위한 법무부-IOM 간 MOU 체결

○ ('20. 3 ~ '21. 1.) 유럽·몽골지역 비자신청센터 운영 개시

○ ('22. 9.) 유럽·몽골지역 비자신청센터 운영을 위한 법무부-IOM 간 MOU 갱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외교부(협조)

○ 추진절차 : 개소 지역 선정 → 센터 운영기관 선정 → 비자신청센터 개소

2. '23년도 추진 실적

□ 비자신청센터 신규 개소

○ 비자신청센터 7개소 신규 개소('23. 7월 ~ 9월)

- 네덜란드, 중국(북경, 선양), 필리핀, 인도(뉴델리, 첸나이), 나이지리아

3. ’24년도 추진계획

□ 비자신청센터 신규 수요 검토

○ 비자신청센터 신규 수요 검토 및 조사(’24년 4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비자신청센터 확대	비자 신청자 편의 제고	비자신청센터 신설	3개	7개	관련 문서
’24	비자신청센터 확대	비자 신청자 편의 제고	비자신청센터 신규수요 검토	1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 당 자	5급 김은호	이 메 일	keh2005v@korea.kr

1-1-3-1	해외기술인재 트랙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이민 희망자의 자격증·경력·학력 등을 점수제로 평가해 산업계에 필요한 해외 우수기술인재(IT, 인공지능(AI), 반도체 등)를 유치하는 트랙 마련

□ 과제 내용

○ 산업계에 필요한 해외 우수기술인재에게 거주(F-2) 비자 부여

- 우수인재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하여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동반체류 지원

※ 첨단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자격증·경력·학력 등 점수제 평가를 통하여 검증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 12. 점수제 우수인재(F-2-7) 관련 지침 등 정비

- 대한민국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IT, 나노, 디지털전자 등 유망산업 분야와 과학기술 연구분야 잠재적 우수인재의 적극 유치 및 국내 정착 유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지침 등 정비

2. ’23년도 추진 실적

□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F-2) 자격 제도개선

○ (관련지침 개정) 준법시민교육* 대상이 되는 경미한 법위반사항의 범위와 위반기간에 관한 규정 명확화

* 거주(F-2), 영주(F-5) 자격 신청자는 국내법 위반사실 있지만, 품행단정요건(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3. ’24년도 추진계획 (’23년 종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해외기술인재 트랙 구축	우수인재 확보 지원	제도개선	1회	1회	관련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1-1-3-2	국내 유학인재 트랙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도가 높은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부족 산업 분야에 취업하고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단계적 비자제도 마련

□ 과제 내용

○ 유학생이 졸업 후 구인난 심각한 산업분야에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는 '유학-취업-정주' 단계적 비자 승급 제도 마련

- 유학생이 졸업 후 법무부장관이 구인난 해소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산업분야에 취업 등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업(E-7) 비자 및 거주(F-2) 비자로 전환 허용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

-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지침 개정

2. '23년도 추진 실적

○ 규제혁신전략회의(국조실)에서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 계획 발표('23. 3분기)

3. '24년도 추진계획

□ 유학-취업 연계방안 마련

○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지침 개정('24. 하반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국내 유학인재 트랙 구축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	추진전략 수립	1건	1건	관련 보도자료
'24	국내 유학인재 트랙 구축	유학-취업 연계트랙 신설	지침 개정	2건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 당 자	5급 김은호	이 메 일	keh2005v@korea.kr

1-1-3-3	숙련기능인재 트랙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숙련기능인력을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비자체계 구축 필요

□ 과제 내용

○ 단순 노무에 장기간 종사한 외국인의 소득·경력·학력·연령·한국어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7. 7.)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입안 보고

○ ('23. 9. 25.)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시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시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과제 내용

○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시행('23. 9. 25.)

- (쿼터 확대) '22년 2,000명이었던 쿼터를 35,000명으로 확대
- (점수제 간소화) 11개 되던 평가항목을 5개로 간소화
- (기업추천 및 한국어능력 의무화)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및 한국어능력을 전환 필수 요건으로 설정
- (일정기간 근무 의무화) 전환 후 현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근무 의무화

3. ’24년도 추진계획

□ 과제 내용

○ K-point E74 운영 개시(’24. 1분기)

○ K-point E74 체류관리 지침 개정(’24. 2~4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숙련기능인재 트랙 구축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	’23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1회	관련 공문
’24	숙련기능인재 트랙 구축	’24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24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 당 자	5급 황민하	이 메 일	hminha26@korea.kr

1-2-1-3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핵심인재 유치 및 정주 지원, 잠재적 우수인재 발굴 등 핵심인재 선점 전력 마련

□ 과제 내용

○ 각 분야별(산업계, 벤처·창업계, 연구계) 집중 유치 대상(Top-Tier급)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요건을 최소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활발한 취·창업, 학업을 전면 허용산업부,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외국인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첨단산업 우수인재를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대상에 추가하고,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 추진절차 : 관련 지침 등 정비

2. '23년도 추진 실적 ('24년 추진과제)

3. '24년도 추진계획

□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첨단산업 글로벌 최상위 인재 대상, 요건 등 설정('24. 하.)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첨단 핵심인재 확보 지원	비자제도개선	1회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1-2-1-4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이 생겨나는 산업 및 직종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폭넓은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 신설

□ 과제 내용

○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E-7-S) 신설

- (활동범위) 비자 발급 요건 충족 시, 기존 허용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폭넓은 취업활동을 허용

※ 단, 단순노무활동 및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경우 등 제외

- (고소득자)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 고소득자

- (첨단산업분야 종사자)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종사 예정인 외국인(점수제를 적용하여 평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참조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1월)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신설 및 보도자료 배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지침 개정 → 보도자료 배포 → 시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신설('23. 1월)

3. '24년도 추진계획 ('23년 종료과제)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개선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비자 신설	특정활동(E-7) 지침 개정	1회	1회	대외 발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 당 자	5급 황민하	이 메 일	hminha26@korea.kr

1-2-2-1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및 제도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산업현장의 만성적인 숙련기능인력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 확대 공급 추진

□ 과제 내용

○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 (쿼터 확대)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확대
- (K-point E74 도입) 기존 점수제의 11개 이상 항목을 5개로 혁신적 간소화
- (한국어능력 강화) 스스로 권익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해 한국어 소통력 강화
- (장기근속 우대) 동일 근무처 장기근속 가점부여로 숙련도 향상 스스로 노력 유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6. 28.) 법무부장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3년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 예정 발표('22년 : 2,000명 → '23년 : 35,000명)

○ ('23. 7.) △관계부처 신속 협의체 △광역지자체 서면 실무 협의 △경제단체·연구기관 간담회를 통해 업종별 인력 부족 상황 및 건의사항 등 청취

○ ('23. 9. 25. ~ 12. 20.)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시행

○ ('24. 2. 1.) '24년도 K-point E74 운영 개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시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과제 내용

○ 쿼터 규모 확대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22년 2천명에서 '23년 3만 5천명으로 대폭 확대('22년 대비 17배 이상)

○ 전환 현황

- 쿼터 35,000명 중 총 12,035명 전환('23. 12. 31.기준)

3. '24년도 추진계획 ('23년 종료과제)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및 제도 개선	'23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23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1회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 당 자	5급 황민하	이 메 일	hminha26@korea.kr

1-2-2-2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숙련근로자 공급부족에 따른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획기적인 공급 방안 필요

☐ 과제 내용

○ 구인난이 심한 산업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E-7-4) 공급 지원을 위해 산업별 별도 쿼터* 신설 및 점진적 확대 추진

* 제조업, 뿌리산업, 건설업, 농어업, 조선업 분야 별도 쿼터 운영 중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1.) '23년도 숙련기능인력(E-7-4)연간 쿼터 확대 발표(2000명→5000명)

○ ('23. 9. 25.) 숙련기능인력(E-7-4)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시행

- (쿼터 확대) '22년 2,000명이었던 쿼터를 35,000명으로 확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시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과제 내용

○ 쿼터 규모 확대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22년 2천명에서 '23년 3만 5천명으로 대폭 확대('22년 대비 17배 이상)

○ 전환 현황

- 쿼터 35,000명 중 총 12,035명 전환('23. 12. 31.기준)

3. '24년도 추진계획

☐ 과제 내용

○ '24년도 K-point E74 운영 개시('24년 1분기)

○ K-point E74 안정적 운영 및 제도개선('24년 3~4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23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23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1회	관련 공문
'24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24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24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1회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 당 자	5급 황민하	이 메 일	hminha26@korea.kr

1-2-2-3	유학 후 취업연계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유학생이 재학 중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

○ 재학 중 학업에 충실하고 한국어에 능숙한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부족 산업분야에 취업하고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비자제도 마련

□ 과제 내용

○ '유치-재학-졸업'의 단계별 유학생 관리 체계 마련

○ 재학 중 학업에 충실한 유학생이 졸업 후 구인난 심각한 산업분야에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는 '유학-취업-정주' 단계적 비자 승급 제도 마련

- 유학생이 졸업 후 법무부장관이 구인난 해소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산업분야에 취업 등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업(E-7) 비자 및 거주(F-2) 비자로 전환 허용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

- 유학(D-2), 어학연수(D-4-1, 7) 지침 개정

-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지침 개정

2. '23년도 추진 실적

○ 규제혁신전략회의(국조실)에서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 계획 발표('23. 3분기)

3. ’24년도 추진계획

□ 단계별 유학생 관리 체계 수립(’24. 하반기)

○ 유학(D-2), 어학연수(D-4-1, 7) 지침 개정

□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추진전략 수립(’24. 하반기)

○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지침 개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유학 후 취업연계 강화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	추진전략 수립	1건	1건	관련 보도자료
’24	유학 후 취업연계 강화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	지침 개정	2건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 당 자	5급 김은호	이 메 일	keh2005v@korea.kr

1-2-3-1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저출생·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도 공급에 한계가 있는 간병·가사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 확대 등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 (요양보호사 부족 전망, 건보연구원) '25년: 8백명→ '26년: 4만명→ '27년: 7만6천명

□ 과제 내용

○ 간병돌봄 분야 외국인력 활용 방안 추진

-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졸업 유학생(D-10)에게 요양자격증 취득 및 요양 분야 취업(E-7) 허용

-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요양보호사로 일정기간 근무한 동포에게 재외동포(F-4)로 자격 변경

○ 가사돌봄 분야 외국인력 활용 검토

- 저출산 대응 등을 위한 외국인 가사인력 활용 방안 마련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검토

- '22. 9. 오세훈 서울시장,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 방안' 정부에 건의

- '22. 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표(요양보호 분야)

- '22. 12.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발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등

○ 추진절차 : 관계부처(요양보호 분야 : 복지부, 가사돌봄 분야 : 고용부, 여가부, 복지부 등)와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확대 세부방안(도입 규모·형식 등) 논의 →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확대

2. '23년도 추진 실적

□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확대 추진

○ 관계부처 논의

- '23. 6. 인구정책기획단 외국인정책반(반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회의, 유학생(D-2) 및 졸업생(D-10)에 대한 요양보호사 활용 논의

- '23. 8. 인구정책기획단 외국인정책반 회의, 졸업 유학생(D-10)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허용 및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취업 시 장기 취업비자(E-7) 발급 논의

- '23. 9.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관련 고용부 시범사업(안)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우리부: 원활한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등 협조)

※ '23. 5.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활용 방안 검토 지시

3. '24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확대

○ 1분기

- '24. 1.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행 시, 졸업 유학생(D-10) 대상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관련 방향성 발표

※ 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하고 졸업 유학생(D-10)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허용

○ 2분기

- 졸업 유학생(D-10)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 취업 할 경우 장기 취업비자(E-7)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 마련

○ 3~4 분기

- 가사돌봄 분야에 국내 체류외국인을 활용하는 방안(시범사업) 검토

□ 소요예산 :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관계부처 논의 등	2회	2회	회의실적
'24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돌봄분야 외국인력 확대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 확대를 위한 지침 개정	1회		지침개정 실적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0
담 당 자	6급 김지연	이 메 일	jikim433@korea.kr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농·어업 종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계절근로 성실 참여 및 이탈 방지

□ 과제 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계절근로 참여 횟수, 기간 등 고려하여 성실하게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 대한 장기 체류자격 인센티브 부여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5.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범 시행(단기취업(C-4, 90일))

○ 2019. 12. 계절근로(E-8, 5개월) 체류자격 신설

○ 2022. 9.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심의·확정

○ 2023. 5.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상한(E-8, 5+3개월) 확대 추진 발표

○ 2023. 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농식품부·해수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 장기 체류자격 전환 요건 설정 → 관련 지침 개정 추진

2. '23년도 추진 실적

□ 계절근로 성실 참여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허용('23. 6.)

○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3. ’24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 계절근로자 성실 근로자의 장기 체류자격 전환 인센티브 부여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성실 계절근로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관련 제도개선	1회	1회	관련 공문 등
’24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성실 계절근로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관련 제도개선	1회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5
담 당 자	5급 박정석	이 메 일	sami9034@korea.kr

1-2-3-4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산업계의 내국인 구인난 심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변화된 정책환경에 발맞춰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산업분야별 외국인력 도입의 탄력성 등 제고

□ 과제 내용

○ 외국인력 선발 방식 확대 및 요건 강화

- (국내) 유학생, 기타 연수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 적극 활용

- (해외)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의 해외선발 요건 강화

※ 연령·학력·기능 등의 요건을 적용한 점수제 강화 등

○ 외국인력 도입 필요 분야 지속 발굴

○ 기타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비자 제도개선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 8. 2022년도 비전문취업(E-9) 자격 도입규모 등 확대

○ 2022. 12.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정부 합동)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고용노동부

○ 추진절차 :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의 → 관련 법령, 지침 개정 추진

2. '23년도 추진 실적

□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추진

○ 도입규모 및 업종별 고용 허용인원 확대('23. 9.)

-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23년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 도입규모를 11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확대

- 비전문취업(E-9) 자격 업종별 고용 허용인원 기존보다 약 2배씩 확대

※ (제조업) 9~40명 → 18~80명, (농축산업) 4~25명 → 8~50명 등

○ 허용업종 및 적용기업 확대

- 비전문취업(E-9) 자격 도입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등)의 상·하차 직종('23. 1.) 및 음식점업, 호텔·숙박업, 임업, 광업('23. 12.) 추가

-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 고용 허용 대상에 '제조업(300인 이상) 중 뿌리업종이면서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을 포함('23. 9.)

○ 업종별 제도개선 등 기타 추진사항

- 조선업 쿼터 신설 및 건설업 재입국 특례* 적용('23. 4.)

*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4년 10개월 체류한 자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출국 후 1개월 후에 동일 자격으로의 재입국을 허용(일반적으로 6개월 후 재입국 가능)

- 고용허가제 17번째 송출국으로 타지키스탄 신규 지정('23. 12.)

3. '24년도 추진계획

□ 2024년도 1~4분기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를 통한 제도개선 방향 모색

○ 출입국관리법령, 관련 업무처리 지침 등 개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을 통한 산업계 지원	법령,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1건	1건	관련 공문 등
'24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을 통한 산업계 지원	법령,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1건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5
담 당 자	5급 박정석	이 메 일	sami9034@korea.kr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을 위한 비자정보와 부처별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산업체 구인난 해소 지원

□ 과제 내용

○ 비자 및 부처별 취업지원제도 정보 제공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유학생이 졸업 후 변경 가능한 비자 정보 및 부처별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제도 정보 제공

○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 취업비자 상담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에서 취업과 연계한 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부스 운영 등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교육부, 산업부

○ 추진절차

- 부처별 취업지원제도 현황 파악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기능 개선

-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산업부 KOTRA 주관)' 상담부스 운영

2. '23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 취업비자 상담부스 운영('23. 3분기)

3. ’24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 취업비자 상담부스 운영(‘24. 3분기)

○ 부처별 취업지원제도 현황 파악(‘24. 4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유학생 채용 박람회 비자 상담 지원	비자상담 부스 운영	2개	2개	관련 문서
’24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유학생 채용 박람회 비자 상담 지원	비자상담 부스 운영	2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 당 자	5급 김은호	이 메 일	keh2005v@korea.kr

1-2-5-2	외국인 투자이민 정책의 합리적 조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체류허가 상 혜택에 걸맞게 투자이민 기준 등 조정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촉진을 위해 관련 체류허가 제도 조정

□ 과제 내용

○ 투자이민 기준금액 상향, 투자금 도입기준 수립, 제도명칭 변경

○ 기술창업자에 대한 최초 체류허가 기간 확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0. 2.)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 ('13. 5.)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시행

○ ('21. 2.) 투자이민협의회 개최 및 투자이민제도 개선방향 논의

○ ('23. 5. ~ 6.)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지침 개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투자이민협의회 협의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2. '23년도 추진 실적

□ 투자이민제도 개선

○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투자기준금액 상향(5억 원 → 10억 원) 등('23. 5~6월)

□ 기술창업 이민제도 개선

○ 기술창업(D-8-4) 최초 체류허가 기간 확대('23. 6월)

3. '24년도 추진계획

□ 투자이민제도 조정

○ 투자금 출처 확인을 위한 투자자 직업정보 등 파악 강화('24. 하반기)

□ 기술창업 체류허가 기준 조정

○ 지식재산권 유형별 점수 배정기준 조정('24. 하반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투자이민 정책 제도개선	국익에 부합하는 우수 외국인의 유입 촉진	관련 지침 개선	2회	2회	관련 문서
'24	투자이민 정책 제도개선	국익에 부합하는 우수 외국인의 유입 촉진	관련 지침 개선	2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 당 자	5급 김은호	이 메 일	keh2005v@korea.kr

1-3-1-1	지역특화형비자 제도운영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 과제 내용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하는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에게 장기체류 비자(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

- (지역우수인재)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비자 발급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인원, 필요직군, 기타 우수인재 요건 등을 추천

- (외국국적동포)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하고, 취업활동 제한 완화*

  * 현재 재외동포(F-4)에게 취업이 제한되어있는 단순 노무(53개 직업)를 허용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성과 분석,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후 정규사업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 6. 9.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역특화비자 도입 국정핵심과제 세부과제로 선정

○ '22. 6. 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핵심과제 지역특화비자 신설 포함

○ '22. 7. 26. 대통령 지시사항 지역특화비자 도입 지시

○ '22. 10. 4. 시범사업 실시

○ '23. 12. 8. 2024년 지역특화형비자 정식사업 지자체 공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 희망 지자체 공모 → 사업 지자체 선정 및 인원배정 → 사업 시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실시

○ 기간 : 2022. 10. ~ 2023. 10.

○ 실시결과 : 총 28개 지자체(배정인원 1,500명 중 1,467명 추천(97.8%))

□ 지역기반 비자관련 법무부-지자체 워크숍 개최('23. 8월)

3. '24년도 추진계획

□ 2024년도 참여 지자체 및 배정인원을 확대하여 정식 시행

○ (공개모집) 참여 신청한 인구감소지역 중 사업추진 필요성, 운영계획 적절성, 사회통합계획 등을 기준으로 사업지역 선정('24.1월)

○ (설명회) 선정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추천절차 등 운영계획 설명(연간 2회 이상)

○ (워크숍) 2024년 사업결과 분석,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우수 공무원 표창 등 전국 지자체 담당자와 법무부가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24. 하)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 사업화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외국인 정주인구 확대	2024년 사업 계획 수립	1회	1회	관련 공문
'24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 사업화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외국인 정주인구 확대	2025년 사업 계획 수립	1회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1-3-1-2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지원 전담기관 설치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전담조직, 예산 등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 비자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지원 체제 마련

-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도입·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지역특화형 비자의 선발 및 인력 부족 분야에 대한 수요 분석 등 지원

□ 과제 내용

○ 지역기반 이민정책 참여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인 공단 등 전담기관 설치 추진

○ 전담기관 주요 역할

-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해외 지자체와 MOU 체결 지원

- 지역특화형비자 신청자 모집 지원을 위한 통합온라인 사이트 운영

- 지역별·업종별 외국인 인력 현황 등 실태조사

- 지역 정주 촉진을 위한 체류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설립방안 및 타당성 검토 → 연구용역 수행 → 관련 법령 제정 →예산확보 → 설계용역 발주 및 업체 선정

2. '23년도 추진 실적 ('24년도 신규과제)

3. '24년도 추진계획

□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공적지원 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실시('24. 상)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연구용역 실시	1회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1-3-2-1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방안으로 이민정책 활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지역 단위 이민정책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업무량 증가 대응,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한 정책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담부서 설치 지원

□ 과제 내용

○ 지자체 단위 이민정책 실행력 확보 및 지방 출입국관서와 연계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이민자 거주 지자체에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04.)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전라·경상·충청권)" 시 지자체 담당자 의견 제시

○ ('22.1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로 반영

○ ('23.07.) "법무부-광역지자체 이민정책 협력·추진 세미나"에서 법무부 등 중앙부처의 협력 요청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행정안전부(협업)

○ 추진절차 : 관계기관(지자체, 행안부 등) 의견 청취 →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 개최 및 안건 협의·논의 → 법령 개정 검토 → 관계기관 의견 조회

2. ’23년도 추진 실적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시 안건으로 논의

○ 일시 및 장소 : ’23.9.1. 13:00 ~ 15:20 / 서울글로벌센터 402호

○ 참석 : 출입국정책단장(주재), 중앙부처(법무부, 여가부, 농식품부, 고용부, 경찰청) 및 광역자치단체(14명) 등 총 24명

○ 내용 :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 지원,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안건 논의

□ 국가정책수요 의견 제출(‘23.10.)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을 국가정책수요 의견으로 제출(법무부→행정안전부)

□ 국가정책수요 의견 반영(‘23.12.)

○ 행정안전부의 ‘24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지자체 이민정책 강화” 내용으로 국가정책수요 의견 반영(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3. ’24년도 추진계획

□ 관계기관(지자체, 행안부 등) 실무자 협의 및 회의 개최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분기별)

○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자 협의 지속(연중)

□ 정책연구용역 실시(연중)

○ 「이민행정분야 중앙·지방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확대	전담부서 설치 관련 협의	1회	1회	결과보고서
‘24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확대	연구용역 실적	1건		연구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3
담 당 자	6급 오명수	이 메 일	kyebaeg@korea.kr

1-3-2-2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이민정책에 관한 현안 논의 시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안건 발굴 및 정책 논의 필요

□ 과제 내용

○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시 지자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과제 안건 발굴과 의견을 제시할 기회 확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09.)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시 계절근로자 배정, 지역특화비자 운영 등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신설 논의

* 국무총리 주재, 법무부 등 5개 부처 참석

○ ('22.09.) 운영세칙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조회

○ ('22.11.)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신설 및 구성(법무부, 교육부, 행안부, 고용부, 여가부, 농식품부, 경찰청, 17개 광역지자체 참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 이민정책에 관한 지역 수요 파악 → 협업 및 교류 강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 등 지자체 참여 회의 개최 → 안건 논의 및 정책화 가능성 검토

2. ’23년도 추진 실적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3.9.1. 13:00 ~ 15:20 / 서울글로벌센터 402호

○ 참석 : 출입국정책단장(주재), 중앙부처(법무부, 여가부, 농식품부, 고용부, 경찰청) 및 광역자치단체(14명) 등 총 24명

○ 내용 :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조직 설치 지원,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안건 논의

3. ’24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정책 관련 현안 논의 시 지자체 참여 유도(연중)

○ 지역 수요를 반영한 정책 안건 발굴 및 지자체 참여 실무자 회의 주관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추진

□ 지자체 참여 지역 연구 네트워크 운영(연중)

○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공동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시 논의 사항을 실무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지자체 참여 확대	외정위/실무위/분과위 지자체 참여 횟수	1	1	회의 결과보고서
’24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지자체 참여 확대	외정위/실무위/분과위 지자체 참여 횟수	2		회의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3
담 당 자	6급 오명수	이 메 일	kyebaeg@korea.kr

1-3-2-3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간 교류・협업 강화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방향 등에 대한 중앙부처・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

○ 지자체(기초 포함) 외국인 업무 담당자(실무자)들의 업무 이해도・역량 강화

□ 과제 내용

○ 국내체류외국인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 외국인을 직접 상대하는 지자체(기초포함) 공무원들은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 부족으로 외국인 관리에 어려움 발생

- 전국을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로 나누고 해당 지역 시설을 이용,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사례형 교육 제공 및 중앙・지자체 담당자 간 협업 강화

- 국가 이민정책의 체계적 수립・시행을 위한 중앙-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 및 협의체 등 구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4.09.) 법무부-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워크숍) 최초 개최

- '15년부터 광역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대상으로 연1회 1박2일 교육 실시

○ ('22.05.) 전국 권역별 직접 찾아가는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실시

- 총 4회 실시(1회: 경기・강원권, 2회: 경상권, 3회: 전라권, 4회: 충청권)

○ ('23.05.) 전국 권역별 직접 찾아가는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실시

- 총 5회 실시(1회: 수도권・강원, 2회: 경상권, 3회: 난민정책, 4회: 계절근로・지역특화, 5회: 충청・전라권)

※ 지자체 참석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교육수요가 높은 주제별(계절근로 등) 워크숍을 전국 단위로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지방자치단체

※ '23년부터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와 공동주관하여 개최

○ 추진절차 : 협업・교류 강화를 위한 담당자(실무자) 협의 → 권역별 교육 개최 → 지자체 외국인 관련 업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업무협조, 담당자 간 교류 강화 → 확대 시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 및 주제별(분야별) 2회 개최,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실무담당자 총 457명 참석

회차	개최일자	권역/주제	참석인원	개최장소
1회차	'23. 4.13 ~ 4.14	수도권·강원	72명	강원도 홍천군
2회차	'23. 6.15 ~ 6.16	경상권	109명	부산광역시
3회차	'23. 6.19 ~ 6.20	난민정책	63명	인천광역시
4회차	'23. 8.29	계절근로·지역특화	137명	서울특별시
5회차	'23. 9.21 ~ 9.22.	충청·전라권	71명	전라남도 여수시

3. '24년도 추진계획

□ 권역별 개최 및 지자체 수요(요청)가 많은 계절근로 등 주제별(분야별) 교육과정 별도 개최 추진

○ (컨텐츠 개선) 외국인업무 지침서(이민통합과) 활용 및 중앙・지자체 담당자 간 토론시간 확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자체 외국인정책 우수사례, 지역 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성과 공유 등

☐ 소요예산 : **총 48.3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48.3	48.3	0	
-국 비	▪ 일반회계	48.3	48.3	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48,300천원)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진행 및 교재 발간 5,160,000원 x 5회 = 25,800,000원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회의실 임차 4,500,000원 x 5회 = 22,5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지자체 워크숍 확대	워크숍 참석 인원	270명	457명	참석자 수
’24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지자체 워크숍 확대	워크숍 참석 인원	297명		참석자 수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1
담 당 자	7급 윤동운	이 메 일	headrock999@korea.kr

1-3-2-4	중앙-지방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중앙부처-지자체 간 정보공유를 통한 안정적인 계절근로 제도 운영

□ 과제 내용

○ 중앙부처・지자체・농어가・계절근로자 등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 전담 업무 플랫폼 구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5.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범 시행

○ 2017.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정식 시행

○ 2022. 9.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심의・확정

○ 2023. 12. 계절근로자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 확보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지자체 의견 수렴 → 계절근로자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계절근로자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및 배포

2. '23년도 추진 실적

□ 중앙-지방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 계절근로자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예산 110백만원 확보('23. 12월)

3. ’24년도 추진계획

□ 중앙-지방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 계절근로자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플랫폼 구축 예산 확보

□ 소요예산 : **총 11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110	100	신규
-국 비	▪ 일반회계		110	10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계절근로자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11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중앙-지방 계절근로자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중앙부처-지자체 정보공유 활성화	관련 예산 확보	110백만원	110백만원	관련 공문 등
’24	중앙-지방 계절근로자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중앙부처-지자체 정보공유 활성화	통합인력관리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회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5
담 당 자	5급 박정석	이 메 일	sami9034@korea.kr

1-3-3-2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외국인력 수요산정 및 적시성 있는 제도 마련 등을 위해 외국인행정 데이터를 분석 제공하여 지자체 맞춤형 정책 추진 지원

□ 과제 내용

○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행정 데이터 제공

- △전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국내 인구·이민자 현황, △지자체별 거주 외국인 현황, △지자체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 현황 등 정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중심으로 우선 제공하고,

- 해당 지자체 및 전문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예측 등 전문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상호 공유, 지속 고도화 추진할 예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7.) 법무부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지자체 요청을 받아 데이터 분석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지방자치단체, 본부 주무 부처

○ 추진절차 : 지자체 요청 → 법무부 데이터 제공 → 상호데이터 공유 체계 마련(데이터 협업 등)

2. ’23년도 추진 실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거주 외국인 다차원 분석

○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데이터 분석 지원

- 총 9개 지자체, 32개 지역 분석

○ 지자체별 제3차(’18.~’2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시행현황 분석

3. ‘24년도 추진계획

□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데이터 분석 제공 - 상시

□ 2023~2024년 지자체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시행현황 분석-(2/4)분기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예측 모델 고도화-(4/4)분기

○ ’23년 1차 구축한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농촌경제연구원 등과 협업을 통해 고도화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분석자료 제공	제공률 (%)	100%	100%	공문
’24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분석자료 제공	제공률 (%)	100%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전화번호	02-2110-4474
담 당 자	5급 김창규	이 메 일	keguri99@korea.kr

1-3-3-3	지방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회통합교육·사회통합정책과 관련된 대외기관 및 이민자의 상담창구를 이민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역단위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 기반 마련

□ 과제 내용

○ 사회통합정책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및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역단위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정부기관, 민간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0. 7.)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별 이민통합지원센터 설치

○ ('11. ~ 현재) 사회통합업무 담당자 워크숍(간담회) 매년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관서

2. '23년도 추진 실적

□ 사회통합업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23.11.23. ~11.24.)

3. '24년도 추진계획

□ 사회통합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간담회) 개최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통합지원센터 담당자 워크숍(간담회) 개최	사회통합업무 역량 강화	워크숍개최 횟수	1회	1회	결과보고서
'24	이민통합지원센터 담당자 워크숍(간담회) 개최	사회통합업무 역량 강화	워크숍개최 횟수	2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이은경	이 메 일	kokiry@korea.kr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외국인 업무 지원 가이드북 제작·배포)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자체 외국인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직무전문성 강화

○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간의 상호이해 및 교류 활성화

□ 과제 내용

○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이민정책 수립·시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단계적 실행방안과 우수사례 및 성과 등을 포함한 「외국인 업무 지원 가이드북(외국인 업무 지침서)」 제작 및 배포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3. 6.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 대상 의견조회

○ 2023. 11. 관계부처 대상 의견조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 중앙부처·전국 지방자치단체

2. '23년도 추진 실적

○ 지자체 및 관계부처 대상 의견조회

3. '24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업무 지원 가이드북(외국인 업무 지침서)」 제작 및 배포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외국인업무 지침서 제작·배포	지자체 외국인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지침서 제작·배포	1		보도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이은경	이 메 일	kokiry@korea.kr

1-4-1-3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이용자 편의 개선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 접근성 향상을 통한 방한 관광 활성화 및 내수 활력 제고

□ 과제 내용

○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 편의 제고

○ ('23.연중)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등 개선

○ ('23.5.~ 8.)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3.12.)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부 예산 확정(20억 9천3백만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 전자여행허가제(K-ETA) 편의성 제고 방안 검토 및 고도화 사업 계획 수립(1/4)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2/4~4/4)

※ 조달청 입찰 공고('23. 4.) → 업체선정 및 사업수행 ('23. 5.~12.)

2. ‘23년도 추진 실적

□ 전자여행허가제(K-ETA)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등 개선

○ 다국어 지원 서비스 확대(2개 → 8개)(’23. 4.)

※ 2개 언어(한국어, 영어) → 8개 언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태국어, 중국어(번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어)

○ 단체여행객 이용 편의를 위한 신청 가능 인원 확대(’23. 5.)

○ K-ETA 허가서 유효기간 확대(’23. 7.)

○ 청소년(17세 이하), 고령자(65세 이상)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23. 7.)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3. 5. ~ 8.)

3. ‘24년도 추진계획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2-3-1-2)」과제와 병행 추진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24년)

□ 소요예산 : **총 386 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45	386	57.6	
-국 비	▪ 일반회계	245	386	57.6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사항 이행	1	1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24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	1		전자여행허가제 (K-ETA) 고도화 시스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화번호	02-2110-4073
담 당 자	7급 김은정	이 메 일	zamarin@korea.kr

1-4-1-4	단체전자비자 제도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단체관광 비자제도 개선

□ 과제 내용

○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전자비자 신청 대상 범위 확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6. 3. 중국 단체전자사증 전면 시행

○ ’19. 6.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기업인센티브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대상 단체전자사증 시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지침 개정 →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 전파

2. ’23년도 추진 실적

□ 동남아 단체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전자비자 발급대상 확대 시행(’23. 6.)

- (구성원 기준 완화) 5인 이상 구성되어야 단체비자 신청이 가능하던 조건을 3인 이상 구성으로 완화

- (여행객 범위 확대) 기업인센티브 관광, 수학여행단만 가능하던 단체비자를 일반 여행객까지 확대

3. ’24년도 추진계획 (해당 없음)

□ 해당과제 종료사유 : 성과목표 달성

○ ‘23. 6. 동남아 단체관광객 비자 발급 대상 확대 완료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단체전자비자 제도 확대	단체전자비자 제도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단체비자 지침 개정	1회	1회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59
담 당 자	5급 염기동	이 메 일	peacepa5@korea.kr

1-4-2-1	(가칭) K-컬처 비자 신설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K-컬처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K-컬처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체류자격 신설

☐ 과제 내용

○ (가칭)D-4-K 비자 신설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 10.) K-컬처 연수비자 신설 입안

○ ('22. 12.) 국무총리실 K-컬처 연수비자 신설 지시(국무회의)

○ ('23. 3.) K-컬처 연습생 대상 생활환경 현장 점검 실시

○ ('23. 12.)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내 K-컬처 융합 관광콘텐츠 확충 사업 일환으로 K-컬처 연수비자 지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문체부(협조)

○ 추진절차 : 법무부-문체부 간 세부 초청기준 수립 → 관련 지침 신설

2. '23년도 추진 실적

☐ 협조부처 간 업무협의

○ K-컬처 연습생 대상 생활환경 현장 점검 실시 ('23. 3월)

○ 협조부처(문체부) 실무자 간 간담회 진행 ('23. 10월)

3. ’24년도 추진계획

□ 체류자격 신설 추진

○ K-컬처 체류자격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업무협의(’24년 2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가칭) K-컬처 비자 신설 추진	K-컬처 영향력 확대 및 문화예술산업 발전 도모	협조부처와의 업무협의 등	2건	2건	관련 문서
’24	(가칭) K-컬처 비자 신설 추진	K-컬처 영향력 확대 및 문화예술산업 발전 도모	협조부처와의 업무협의 등	2건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 당 자	5급 김은호	이 메 일	keh2005v@korea.kr

1-4-2-2	워케이션(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관광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워케이션(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설

□ 과제 내용

○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국가 사례 수집 및 분석

○ 디지털노마드 비자 운영을 위한 관련 지침 제정 및 시범운영 실시

○ 민원인 및 관광업계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해당사항 없음(신규 추진 과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지침 신설 → 재외공관 및 소속기관 전달 → 제도 홍보 → 시범운영 실시

2. '23년도 추진 실적

□ 디지털노마드 도입 국가 해외 사례 수집 및 지침 신설

○ '23. 1. ~ 해외 디지털노마드 비자 도입·운영 국가의 비자 신청요건, 소득기준, 취업 가능여부 등 사례 수집

○ '23. 12. 디지털노마드 비자 관련 지침 신설, 재외공관·소속기관 시달

3. ’24년도 추진계획

□ 디지털노마드 비자 시범운영 실시

○ ’24. 1. ~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

○ 시범운영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비자 제도 개선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워케이션(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	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설	디지털노마드 비자 지침 신설	1회	1회	관련 공문 등
’24	워케이션(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	디지털노마드 비자 시범운영실시 및 제도개선	디지털노마드 비자 시범운영 실시	1건	1건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59
담 당 자	5급 염기동	이 메 일	peacepa5@korea.kr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 시장 확대 및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비자제도 및 우수유치기관 지정 기준 등 개선

□ 과제 내용

○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 제출서류 생략 등 의료관광객 비자 신청 절차 간소화

○ 의료관광 간담회 실시 등 관련 부처 및 업계 의견 수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9. 5. 의료관광 지침 제정 및 비자 신설

○ ‘15. 6.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관리기준 신설

○ ’20. 9. 보건복지부 지정 유치기관에 가점 부여 기준 도입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지침 개정 → 재외공관 및 소속기관 전달 → 제도 홍보

2. ’23년도 추진 실적

□ 의료관광 비자제도 및 우수유치기관 제도 개선(‘23. 8.)

○ (우수 유치기관 확대)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 상한(최대 50개) 폐지

-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현 7개소) 및 상급종합병원(현 45개소)의 경우 우수유치기관 신청 시 심사면제. 단, 불법체류율 10% 이상인 경우 심사면제 대상에서 제외 후 일반 절차로 전환

- 중증질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대형종합병원(300병상 이상)이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 시 가점부여

○ (비자쿼터 상향) 일반 유치 의료기관이 동시에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 비자 쿼터 상향(5명→10명)

○ (동반자 제한 완화) 질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 및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면제

○ (외국인환자 체류기간연장 범위 확대) 중환자 등 치료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2년까지 체류기간 연장 가능(기존 1년까지 연장)

3. '24년도 추진계획

□ 의료관광 비자제도 및 우수유치기관 제도 개선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의료기관, 관계부처 등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료관광 비자제도 및 우수유치기관 운영관련 건의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 반영

○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확대

* 외국인환자 초청실적 50건, 진료실적 500건 이상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관광 비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의료관광 지침 개정	1회	1회	관련 공문 등
'24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관광 비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의료관광 지침 개정	1회	1회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59
담 당 자	5급 염기동	이 메 일	peacepa5@korea.kr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22년말 41만 여명대 불법체류 외국인을 향후 5년 내(‘27년) 20만 명 대까지 감축 추진

□ 과제 내용

○ 불법체류 정부합동 단속 정례화 등 상시 단속체계 가동하여 불법체류 단속 강화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으로 자진출국 적극 유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수립(‘23~‘27.)」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출입국외국인기관 및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협업)

2. ‘23년도 추진 실적

□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등 상시 단속체계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39,038명 적발

○ 정부합동단속 3회 실시(1차: 3.2~4.30, 2차: 6.12~7.21, 3차: 10.10.~12.9.)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22.11.7부터 ’23.2.28.까지 운영(‘23.1.1. ~2.) 총 6,893명 자진출국

○ ’23년 특별 자진출국제도(‘23.9.11.~12.31.) 총 17,436명 자진출국

※ ’24. 2월말까지 연장 시행

3. ‘24년도 추진계획

□ 상시 단속체계 유지

○ 자체 광역단속 체계 유지 및 테마별 집중단속 기간 운영으로 엄중하고 일관된 단속 실시

□ 범정부적 대처 차원의 정부합동단속 정례화

○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확고한 단속 기조 표명(상·하반기)

□ 단속과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적극 유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실적	30,000	39,038	불법체류외국인 감축 목표
’24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실적	40,000		불법체류외국인 감축 목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 당 자	5급 전동균	이 메 일	jeondk78@korea.kr

2-1-1-2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불법체류 억제 정책 등에 관계부처와 대응하기 위해 불법체류율 등 위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과제 내용

○ 불법체류율 단계별 대응전략안을 수립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한 부처별 역할 마련

-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 누적 불법체류율, 연도별 불법체류 증가 규모 등 불법체류 현황에 따른 단계별 역할 정립

○ 국가별 불법체류 현황 공개,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국민과 관계부처의 관심 제고 및 해당국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고, 사증면제 일시중지를 위한 사전 예고 기능으로 활용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불법체류 감축을 위한 관계기관 참석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불법체류율 등 위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 마련

2. '23년도 추진 실적

○ '23년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에서 관련 부처와 관련 내용 논의 ('23.1.13.)

3. ‘24년도 추진계획

□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협의 예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2회	3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운영세칙
’24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2회	-	‘23년 유지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 당 자	5급 전동균	이 메 일	jeondk78@korea.kr

2-1-2-1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불법체류 신규발생 주요 원인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로 불법체류 신규 유입 차단

☐ 과제 내용

○ 불법체류 다발국가 대상 국가 대사관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출국 홍보 및 자진출국 적극 유도를 위한 간담회 등 개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불법체류 신규발생 및 자진출국을위한 주한공간원 협조체제 구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불법체류 다발국가 주한공관원 협조체제 구축

2. '23년도 추진 실적

○ 주한 외국 공관원 간담회 개최

- '23.9.26.(화) 태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사 및 노무관 참석

- 시행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등 자국민 불법체류 감소 정책에 대한 홍보 등 각국 공관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3. '24년도 추진계획

☐ 자진출국 홍보 및 자국민 불법체류 감축을 위한 주한 외국 공관원을 통한 홍보 협조 요청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주한공관원 대상 자진출국 홍보를 위한 간담회 또는 협조 요청	1회	1회	특별자진출국 제도 시행 여부
'24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주한공관원 대상 자진출국 홍보를 위한 간담회 또는 협조 요청	1회		특별자진출국 제도 시행 여부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 당 자	5급 전동균	이 메 일	jeondk78@korea.kr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불법체류 증가로 인한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범죄 증대 우려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과제 내용

○ 국민 일자리 잠식 및 안전 위협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및 관계기관 상시 합동 단속 체계 구축

○ 대규모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민원 빈발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특별단속지역 지정, 불법고용 분위기 억제 및 국민 치안 불안감 해소

□ 과제 추진 연혁(경과)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수립('23~'27.)」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관서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

2. '23년도 추진 실적

□ 정부합동단속(3회) 기간 동안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및 마약 등 국민안전 위협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범죄 중점 단속 실시

○ 불법체류 외국인 20,947명, 불법고용주 등 4,687명, 마약사범 28명, 테러 연계 혐의자 6명,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41명 적발

□ '23년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방안 수립·시달

○ 불법체류 3,151명, 불법고용주 등 457명 적발, 특별단속지역 508회 순찰·단속

3. ‘24년도 추진계획

□ 국민 안전 위협 불법체류 외국인 및 민생 침해 및 체류질서 문란 행위자 등에 대한 유관기관과 범정부 단속체계 구축 및 연중 집중단속 실시

□ 특별단속지역 지정 운영 방안 수립·시달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강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특별단속지역 순찰·단속	360회	508회	18개 사무소 월 2회 이상 실시
’24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강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특별단속지역 순찰·단속	360회		18개 사무소 월 2회 이상 실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 당 자	5급 전동균	이 메 일	jeondk78@korea.kr

2-1-3-1	외국인 불법취업 정보수집 체계화

1. 과제의 개요

SNS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취업 알선 홍보·정보 제공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사이버정보수집·조사팀 활용 및 이민특수조사대 전문 사이버 범죄 수사 기능 및 동향조사 활동 강화

□ 목적

○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관련 정보수집 체계화를 통한 단속 역량 강화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과제 내용

○ 인천공항청 사이버정보조사팀, 서울청(이민특수조사대)과 남부권(김해공항, 부산청 이민특수조사대) 사이정보수집·조사팀 활용 SNS 등 사이버상 불법취업 알선 정보수집 강화 및 알선자 적발

○ 각 청(사무소) 관할 온·오프라인 외국인 커뮤니티 현황 파악 및 커뮤니티 대표자, 협조원 등과 협조관계 구축

○ 이민조사관 직위 정보수집 활동을 통한 정보관 역할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연중 사이버정보수집·조사팀 및 이민조사관 등 동향조사요원의 정보수집활동, 커뮤니티 현황 파악 및 협조원 구축 활동 지속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불법취업 알선 정보수집 강화 및 체계화 → 알선자 적발·처벌

2. ‘23년도 추진 실적

□ 불법취업 등에 대한 정첩보 수집

○ 정첩보 3,154건 수집

○ 2,309명 적발(형사입건 201명, 강제퇴거 등 2,108명)

□ 외국인 커뮤니티 및 협조망 구축

3. ‘24년도 추진계획

□ 불법취업 등에 대한 정첩보 수집(연중)

□ 온·오프라인 외국인 커뮤니티 및 협조망 구축 활동(연중)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정보수집 체계화	정첩보수집/ 적발	달성도	2,000건/ 1,000명	3154건/ 2309명	ICRM 정첩보수집 및 기획조사 실적
’24	정보수집 체계화	정첩보수집/ 적발	달성도	2,000건/ 1,000명		ICRM 정첩보수집 및 기획조사 실적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77
담 당 자	6급 빈중찬	이 메 일	jcbin21@korea.kr

2-1-3-2	브로커 적발을 위한 이민특수조사 역량 강화

1. 과제의 개요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및 수사·송치 인력 확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마련

□ 목적

○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불법고용·입국 알선 브로커, 허위초청·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등 외국인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수법 또한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및 수사·송치 인력 확보,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한 불법입국 외국인 사전 차단 및 예방 효과 증대

□ 과제 내용

○ 서울청 특조대 디지털포렌식센터 분석 장비 고도화 예산 확보

- 자동차 번호판 식별을 위한 CCTV 분석 시스템 고도화

- 효율적인 디지털 증거 분석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 법무연수원 등 교육기관에 '사법경찰 수사실무' 사이버 교육 실시

○ 통고처분 불이행 고발 대상 출입국사범 직접 수사·송치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법무연수원 사이버 '사법경찰 수사실무' 교육 실시(연중)

○ 통고처분 불이행 고발 대상 출입국사범 직접 수사·송치(연중)

○ 서울청 특조대 디지털포렌식센터 분석 장비 고도화 사업 시행(6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예산확보→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사업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법무연수원 사이버 ‘사법경찰 수사실무’ 교육과정 마련

□ 서울·부산청 특조대를 지방 소규모 기관 송치 담당 직원 교육 계획 마련

□ 부산청 특조대 디지털포렌식센터 신설

□ 서울청 특조대 디지털포렌식센터 분석 장비 고도화 예산 확보

3. ‘24년도 추진계획

□ 법무연수원 사이버 ‘사법경찰 수사실무’ 교육 실시(연중)

□ 서울·부산청 특조대를 지방 소규모 기관 송치 담당 직원 교육(연중)

□ 서울청 특조대 디지털포렌식센터 분석 장비 고도화 사업 시행(6월)

□ 소요예산 : 비공개(정보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특수조사 역량강화	디지털포렌식 센터 설치	사업시행 여부	1건	1건	사업시행 완료 보고서
’24	이민특수조사 역량강화	포렌식분석 시스템 고도화 사업 시행	사업시행 여부	1건		사업시행 완료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77
담 당 자	6급 빈중찬	이 메 일	jcbin21@korea.kr

2-1-3-3	사업장 출입 조사권 신설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외국인 동향조사 관련 규정에 사업장 등 출입 권한이 불명확하여 실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적 규정 필요

□ 과제 내용

○ 불법체류 단속관련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단속 업무 효율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9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조사 규정 신설 추진

- 출입국관리법 기타 조항 개정 지연을 우려, 논란이 있는 사업장 출입·조사 근거 규정 신설 제외 지시(장관님 주재 실·국장 토론회)

○ '15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사업장 등 출입 및 조사 규정 신설 추진

- ('16.2.) 법사위 소위에서 재검토 의견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제외하기로 결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법규 신설 추진

2. '23년도 추진 실적

□ 사업장 출입·조사 근거 신설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유사 입법사례 검토

3. ‘24년도 추진계획

☐ 사업장 출입·조사권 신설 출입국관리법 개정 검토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사업장 출입 조사권 신설	관련 규정 신설	법령 신설관련 입법사례 검토	100%	100%	신규사업
’24	사업장 출입 조사권 신설	관련 규정 신설	법률입안보고	1건	-	법령개정절차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 당 자	5급 전동균	이 메 일	jeondk78@korea.kr

2-1-3-4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불법체류 증가세에 비하여 사범·보호·퇴거 인력 및 보호시설 수용 규모 부족으로 신속한 불법체류자 퇴거집행 곤란 등 일관되고 지속적인 감소정책 추진을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인력 증원 필요

□ 과제 내용

○ 향후 5년('23~'27.)간 불법체류 단속 인력 총 500명(매년 100명) 사범·보호·퇴거 인력 총 300명(매년 100명) 증원 요청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행정안전부에 인원 증원 지속 요청

2. '23년도 추진 실적

□ 단속 인력(88명) 증원

○ '23. 9. 수시직제 불법체류 단속, 보호, 사범심사 인력 등 총 353명 수시직제 요구(행안부) → 단속인력 88명 증원

3. '24년도 추진계획

□ 단속인력 88명 배치 예정

- 광역단속팀 3곳(인천, 대전, 울산) 신설

☐ (4-1-2-2)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병행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단속·사범·보호·퇴거 인력 증원	단속인력 5% 증원	88명	소속기관 단속전담 인원
'24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개방형 보호시설 전환 및 운영	1건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 당 자	5급 전동균	이 메 일	jeondk78@korea.kr

2-2-1-1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영주제도 개편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에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영주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

☐ 과제 내용

○ 기간제한 없이 국내 체류가 가능한 영주권자에게 국내 영주의사가 없는 경우 영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법령 개정 → 관련 지침 개정 및 시행

2. '23년도 추진 실적 ('24년 추진과제)

3. '24년도 추진계획

☐ 영주의사 없는 영주권자 취소 관련 해외사례 조사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영주제도 개편	국민과 외국인이 신뢰하는 영주제도 마련	해외사례 조사	1회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2-2-1-4	귀화 면접심사 개선

1. 과제 개요

□ 목적

○ 변화하는 환경 및 세계 시민의 가치와 대한민국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소양 등을 귀화 면접심사에 반영 필요

○ 면접심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귀화 민간면접관의 업무 전문성 및 역량 강화 필요

□ 과제 내용

○ (면접심사) 변화된 환경 및 대한민국 정부의 이민정책 방향에 따라 귀화 신청자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변별력 있는 귀화 면접평가 제도 개선

○ (귀화 민간면접관) 민간면접관에게 일정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면접심사의 공정성 및 업무 책임성 제고 노력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1년) 귀화 민간면접관 제도 도입

○ ('14년) 기본소양 학습교재「자랑스러운 한국인」초판 발간

○ ('18년)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 강화 보수교육 정례화

○ ('21년) 귀화 면접심사 심사문항 연구용역 실시

○ ('24.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일반회계 예산

2. ‘23년도 추진 실적

□ 귀화 민간면접관 추가 선발(‘23년 2, 12월)

○ 임기만료 등에 따라 2회, 민간면접관 총 25명 추가 선발

※ 현재 민간면접관 총 49명 (’24. 2월 현재)

□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민간면접관 전원 화상회의 실시(‘23년 5월)

- 자주 발생하는 민원 소개, 면접 운영 의견 청취 등

○ 면접심사 실무, 갑질 예방, 청렴 교육 실시(‘23년 9, 10월)

□ 면접심사 문항 개선

○ 면접심사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23년 3월)

- 면접 문항 개선 의견* 청취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 가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관식 문항 발굴 등

※ 이철우 교수, 귀화 민간면접관 2인, 수도권 사무소 담당자 등 참석

○ 기본소양에 대해 단순 지식측정 문항을 지양하고 단답형이 아닌 주관식 답변 문항 추가(‘23년 11월)

※「귀화 면접심사 제도 연구 및 심사 문항 개발」연구 용역 결과 반영

3. ‘24년도 추진계획

□ 귀화 민간면접관 선발 및 역량 강화 교육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귀화 민간면접관 13명 선발 예정(‘24년 4분기)

○ 전문 역량 및 성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24년 2분기)

☐ 귀화신청자를 위한「기본소양 학습교재」개정('24년 4분기)

○ 변화하는 환경, 사회 현상 및 양성 평등 등 균형감 있는 내용 정비

○ 대한민국 역사, 국민의 자세 등 조화롭게 포함되도록 분야별 전문기관 감수

☐ 소요예산 : **총 596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596	596	0	
-국 비	▪ 일반회계	596	596	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596백만원)

○ 귀화면접관 면접심사비: 면접관 1인당 160,000원 × 3,725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귀화 면접심사 개선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연간 교육 실적	2회 (100%)	2회 (100%)	결과보고서
'24	귀화 면접심사 개선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연간 교육 실적	2회 (100%)	-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전화번호	02-2110-4127
담 당 자	5급 김종승	이 메 일	jongskim@korea.kr

2-2-1-5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복잡하고 어려운 국적법령을 수요자가 알기 쉽게 정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국적제도 이해도 증진 및 신뢰성 있고 예측가능한 국적 제도 시행 도모

□ 과제 내용

○ (국적법령 정비) 국적이탈허가 신청의 제출 서류 근거 규정이 어렵고 신청 서식이 복잡하다는 민원 의견 수렴하여 수요자가 알기 쉽게 정비

○ (국적 제도 홍보 강화) 국내외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국적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병무청, 재외동포청)과 협조하여 홍보 강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국적법령 정비)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국적 제도 홍보 강화) 국적 설명자료 제작 → 관계기관 협업 → 홍보 자료 배포

2. '23년도 추진 실적

□ 국적법령 정비

○ 국적법령 개정 수요를 조사하여 어려운 법령을 수요자가 알기 쉽게 정비

- 국적이탈 허가신청서 서식 기재 사항 간소화를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무부 공고 제2023-438호, ‘23.12.1.)

□ 해외동포대상 온라인 국적설명회 개최를 통한 국적제도 이해 제고

○ 국내·외 거주하는 동포에게 국적제도 등을 제대로 안내하고 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국적제도 홍보 강화

- 재외국민 대상 국적·병무 화상 설명회 실시(‘23. 7. 7.-미국 / ‘23.11. 14.-일본) 및 국적 업무 설명 자료 제공(시드니 총영사관 등 6회)

○ 재외공관 국적 설명자료 제작 배포

- 재외공관에 국적이탈·복수국적 관련 국적 설명자료 배포 (‘23. 2.)

- 해외 거주 동포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공항만·가족관계등록관서 등에 “알기쉬운 국적신고제도(한·영)”리플릿 제작 및 배포 (‘23.9.27.)

3. ‘24년도 추진계획

□ 관계기관(병무청 등) 협업을 통한 국적 홍보 강화

○ 국적제도 관련 홍보물(국적과 병역 안내서) 배포 예정(‘24년 1/4분기)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4년 2/4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홍보강화를 통한 국적제도 이해 제고	국적업무 관련 설명자료 제작·배포	1회(50%)	1	관련 공문
			화상 설명회 실시	2회(50%)	2	
’24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국적 법령 개정 및 홍보물 배포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국적 관련 안내서 배포	각 1회		관련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전화번호	02-2110-4122
담 당 자	5급 강성진	이 메 일	ksjksj01@korea.kr

2-3-1-1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불법체류 우려 외국인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사회안전 확보에 기여

☐ 과제 내용

○ 각종 출입국 정보 등의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국자에 대한 사후 분석 강화를 통한 정밀 심사대상자 선별

○ 입국심사 업무 및 정보 활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자입국신고서를 도입하여 입국자 정보 분석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5.)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

○ 전자입국신고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3.5.~8.) 및 사업 추진 계획 수립('23.12.)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 법무부 → 소속기관

- 조달청 입찰 공고('24.4.) → 업체 선정 및 계약('24.5) → 전자입국신고서 구축사업 수행(24.5. ~ 12.)

2. '23년도 추진 실적

☐ 체계적인 입국 외국인 정보 관리를 위한 전자입국신고서 도입 검토

○ 전자입국신고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3.5. ~ 8.)

※ 전자입국신고서 정보화전략계획(ISP)은「2024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사업에 포함되어 수립

3. '24년도 추진계획

☐ 입국자 사후분석 강화를 위한 출입국 빅데이터 정보 출입국심사 활용

○ 불법체류자 빅데이터 정보를 출입국심사관에게 공유

☐ 체계적인 입국 외국인 정보 관리를 위한 전자입국신고서 도입 검토

○ '24년 전자입국신고서 운영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구축

※ 전자입국신고서 구축은 「2024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사업에 포함되어 개발 예정

- '24. 4. 조달청 사업 발주
- '24. 4. ~ 5.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4. 5. ~ 11.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 개발·구축
- '24. 11. ~ 12.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 시범운영
- '25. 1. 정식 운영

☐ 소요예산 : **총 8천 5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85		
-국 비	▪ 일반회계	0	85	11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전자입국신고서

- 사업비 : 총 8천 5백만원(개발 용역비)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전자입국신고서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산출물 (전자입국신고서 포함)	1	1	ISP 수립 산출보고서
'24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 개발·구축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1	1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전화번호	02-2110-4037
담 당 자	6급 송방혁	이 메 일	oksong12@korea.kr

2-3-1-2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단체관광객 이용 편의 향상 등을 통한 방한 관광 활성화 지원 및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고도화

□ 과제 내용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

- 단체관광객 신청 편의를 위한 전용 시스템 구축

- K-ETA 신청 시 입력 편의를 위한 화면 개선

- 공용어 중심의 다국어 확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12.)외국인 단체관광객 등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

○ ('23.5.~8.)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3.12.)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부 예산 확정(20억 9천3백만원)

○ ('23.12.)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조달청 입찰공고('24.4) → 업체 선정 및 계약('24.5) →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등 고도화 사업 수행('24.5. ~ 12.)

2. ‘23년도 추진 실적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목표 설정 및 대내외 관계기관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사업 방안 검토(‘23.1. ~ 2.)

-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수행 업체 선정 및 고도화 계획 수립 착수(‘23.5.)

- 의견수렴을 통한 고도화 방안 검토 및 ISP 수립 사업 완료(‘23.8.)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본사업 계획 수립(‘23.12.)

3. ‘24년도 추진계획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

○ 조달청 입찰 공고(‘24.4.)

○ 업체 선정 및 계약(‘24.4. ~ 5.)

○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 및 시범운영(‘24.5. ~ 12.)

○ 정식 운영(‘25.1.)

□ 소요예산 : **총 20억 9천3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62	2,093	1,191	
-국 비	▪ 일반회계	162	2,093	1,191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2024년 전자여행허가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 2,093백만원

- (개발 용역비) 640백만원 + (장비구입비)(H/W, S/W) 1,453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 허가제 (K-ETA) 시스템 고도화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산출물	1	1	ISP 수립 산출보고서
'24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 허가제 (K-ETA) 시스템 고도화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	1		전자여행허가제 (K-ETA) 고도화 시스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화번호	02-2110-4073
담 당 자	7급 김은정	이 메 일	zamarin@korea.kr

2-3-1-3	안전 위해(危害)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마약 등 중대범죄를 사유로 입국금지된 외국인 지속 증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사회적 파급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마약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 필요

※ '23. 12월 기준, 입국금지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총 6,124명이며, 유학생·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 유입 증가와 함께 마약사범도 지속 증가

□ 과제 내용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등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기간을 현행 기준보다 상향하여 입국규제 강화 추진

○ 강화된 입국규제로 국민안전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여 마약 등 중대범죄로부터 국민 안전확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해당없음(신규 추진 과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입국규제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해당없음

3. ‘24년도 추진계획

□ 입국규제 강화 추진

○ ’24년 상반기 중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

- 사회적 파급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마약 등 중대범죄에 대해 현행 기준보다 입국금지기간 상향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안전 위해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입국규제 강화 (지침 개정)	마약 등 중대범죄 입국금지기간 상향	1회	-	개정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화번호	02-2110-4038
담 당 자	7급 김태주	이 메 일	ktjooo@korea.kr

2-3-2-1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운수업자가 제출한 입·출항 보고 등에 의존한 간접심사방식에서 접안 선박 및 내·외항 정박 선박의 승선검색 등 직접 심사방식을 확대하여 항만 보안 강화 기여

□ 과제 내용

○ 선박 등의 입·출항시 승선자의 출입국 적격 여부 확인, 법령위반자의 승선 방지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법령상 임무 수행

○ 내·외항 정박 선박까지 승선검색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감시정을 도입·운용하고 노후된 감시정을 대체하기 위해 신조 법무부 감시정 설계 및 건조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접안 선박에 대한 승선검색('21. 4월~)

- 전국 19개 항만출입국관서 중 입출항선박이 많은 주요 5개사무소*에 33명의 신규인력을 배치하용, 승선검색 및 항만순찰 업무 상시화

* 부산·인천출입국·외국인청, 울산·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

○ 내·외항 정박 선박까지 승선검색 대상 선박 확대('22. 4월~)

- 세관으로부터 감시정 2정을 관리전환 받아 부산청과 인천청에 각각 배치하여 내·외항에 정박한 선박까지 승선검색 활동 확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승선검색 업무 이행[출입국관리법 및 「선원상륙허가 및 선박검색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준수

2. ‘23년도 추진 실적

☐ 승선검색 실적

○ 접안 및 내·외항 정박 선박의 승선검색 실적

2023년	전국	부산	인천	울산	여수	광양
승선검색	9,547	3,208	1,517	1,431	1,413	1,508

○ 감시정 운영 실적

- ’22.4 ~ ‘23.12 기간 중 총 362회 운항, 승선검색 499회 실시하여 운수업자의 EDI 전송 불일치 489건* 적발

  * 성명 불일치 83건(40.1%), 여권번호 61건(29.5%), 생년월일 45건(21.7%)

- 위조 선원신분증명서 소지 등 중범죄자 총 23명 적발

3. ‘24년도 추진계획

☐ 승선검색 활동 지속

○ 법위반자 적발 가능성이 높은 우범선박 선정을 위해 철저한 사전 정보분석 등을 통한 실질적 승선검색 적발에 주력

☐ 신조 법무부 감시정 기본 설계 착수

○ 40톤급의 출입국업무에 적합한 친환경선박 기본설계 용역 착수(‘24. 상)

☐ 소요예산 : **총 228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228**	**100**	
-국 비	▪ 일반회계	0	228	100	신규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친환경 출입국감시정 건조 설계

- 4,364백만원*(추정가격) × 5,226%**(설계요율) = 228,000천원

* 최근 40~50톤급 주요 관공선 건조금액 평균가액 (조달청 나라장터)

년도	소속	선종	총톤수	선질	친환경	설계금액	건조금액
2021	목포	조사선	50톤급	알루미늄	하이브리드	232백만	4,700백만
2021	경상남도	어업지도선	46톤급	〃	〃	245백만	4,600백만
2022	전라남도	항만순찰선	43톤급	〃	〃	200백만	4,360백만
2023	충주소방	소방정	50톤급	〃	〃	300백만	5,730백만
평 균						**244백만**	**4,850백만**

** '24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요율 적용(p270, p290)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항만보안 강화	승선검색	8,437	9,003	공문
			항만순찰	2,190	2,320	
'24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항만보안 강화	승선검색	8,437*	-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

* ´21. 4월 항만 신규인력 증원(33명)에 대한 행정안전부 평가(´24년 하)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와 동일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화번호	02-2110-4042
담 당 자	6급 남재혁	이 메 일	namjh123@korea.kr

3-1-1-1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적 효과성 측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회통합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를 활용, 국익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책의 정합성과 예산 효율성 제고

□ 과제 내용

○ 시계열적 변화 추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3년 주기)

○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공표 및 정책컨설팅 전문기관 위탁 등을 위한「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 추진

※ (국내 입법례) 「양성평등기본법」, 「가족친화법」,「상생협력법」 등 다수 법률에 관련 지수의 산정과 공표, 환류에 관한 사항을 명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12.) 국내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도 측정 및 정책 평가를 위한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 완료 및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해당없음

3. ‘24년도 추진계획

□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정기 조사 실시

○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정기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소요예산 : <u>총 662백만원</u> ※ 3-1-1-2 예산과 동일 예산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662	100	
-국 비	▪ 일반회계		662	100	신규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정책연구비 662,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	정기조사 실시	연구용역	1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이은경	이 메 일	kokiry@korea.kr

3-1-1-2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역사회의 이민자 사회통합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사회통합정책 현황 및 성과를 진단하여 개선방향 제시

□ 과제 내용

○ ’21년 개발된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현황 및 성과를 진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정책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정책컨설팅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12.) 국내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도 측정 및 정책 평가를 위한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 완료

○ (’22.12.)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 계획 수립

○ (‘23.5.)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컨설팅 시범사업 수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방안 연구(‘23.5.~ 12.)

○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컨설팅 시범사업 실시(9개 지자체 대상)

3. ‘24년도 추진계획

□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실시

○ 전국 지자체 대상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컨설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소요예산 : 총 662백만원 ※ 3-1-1-1 예산과 동일 예산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90	662	635.5	
-국 비	▪ 일반회계	90	662	635.5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정책연구비 662,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정책컨설팅 시범실시	연구용역실시	연구용역	1회	1회	결과보고서
’24	정책컨설팅 실시	연구용역실시	연구용역	1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이은경	이 메 일	kokiry@korea.kr

3-1-2-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회통합프로그램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는 정주형 체류자격 변경 혜택을 부여하여 이민자와 함께하는 사회통합 정책 구현

□ 과제 내용

○ 외국인력, 동포, 유학생, 결혼이민자, 난민 등 국내 정주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에게 일정단계 이상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추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대상자에 대한 체류 정책적 혜택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0.1.) 점수제 우수인재(F-2-7) 체류자격변경 시 이수자 가점 부여

○ ('12.4.) 장기체류자(F-2-99) 체류자격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혜택 확대

○ ('22.10.)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변경 시 3단계 이상 의무 부과

○ ('23.8.) K-point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변경 시 2단계 이상 의무 부과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이민통합과, 체류관리과, 국적과 협업)

○ 추진절차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 확대 대상 및 혜택 부여 관련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 → 사업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23.8.) K-point E-7-4 체류자격 변경 시 2단계 이상 의무 부과

3. ’24년도 추진 계획

○ (’24.1.) 운영지침 개정(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혜택 대상 및 내용 추가)

○ (’24.1.) 일반기능인력(E-7-3) 국내 입국 후 체류기간연장 시 1단계 이상 이수의무 부과

○ (’24.연중)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혜택 대상 및 내용 발굴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지침 개정	1회	1회	결과 보고
’24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지침 개정	1회		결과 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 당 자	5급 최민수	이 메 일	choims99@korea.kr

3-1-2-2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에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유료화)을 적용함으로써, 참여자에게 자립의식과 책임성을 부과하고, 학습의욕 및 교육품질·효과성을 제고

□ 과제 내용

○ 그간 참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비용 일부 유료화를 통한 비용부담체계 개선

-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비용을 부담

-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등)와 사회통합정책 핵심대상이 소외되지 않도록 감면대상 설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5.1.)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유료화

○ ('19.1.)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수수료 유료화

○ ('22.5.) 사회통합프로그램 비용부담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수행

○ ('22.11.)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유료화 방안 추진 검토

○ ('23.11.) 유료화 법적근거 마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기획)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운영)

○ 추진절차 : 유료화 대상, 시기, 비용 등 방안 마련 → 유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사회통합프로그램 비용부담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신설

3. ’24년도 추진계획

○ ’24. 1분기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 ’24. 2분기 법무부장관 고시 제정 및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 ’24. 3분기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본격 시행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보도자료 배포	1회	1회	보도자료
’24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보도자료 배포	1회		보도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 당 자	5급 최민수	이 메 일	choims99@korea.kr

3-1-2-3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 인식 제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기회 및 비대면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평가와 교육 참여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과제 내용

○ (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CBT 평가장 확대 및 평가 종류 및 일정 다양화

- 현재 운영중인 광명, 대전 CBT센터 외에 평가 장소 추가 설치
- CBT 사전·종합 평가 외에 중간평가 추가, 주말 평가 시행

○ (교육) 참여자의 교육 접근성 및 편의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 화상교육 과정 확대

- 중앙거점운영기관 외 운영기관의 비대면 화상교육 운영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0.5.) 사회통합프로그램 비대면 온라인 화상교육 도입

○ ('19.1.)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민간위탁

○ ('22.3.) 사회통합프로그램 CBT 평가 도입

○ ('23.1.) 중앙거점 외 운영기관의 화상교육 도입(운영지침 개정)

○ ('23.11.) 대전 CBT 센터 추가 개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평가)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수탁기관
- (교육)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 추진절차

- (평가) 법무부, 평가수탁기관 업무협의 → 중부권 CBT 평가장 확보 및 개소

-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 개정·시달(법무부 → 운영기관)

2. '23년도 추진 실적

○ ('23.11.) 사회통합프로그램 대전 CBT 센터 추가 개소

○ ('23.11.) 대전 CBT 센터 개소 관련, 대국민 홍보(보도자료 배포)

3. '24년도 추진계획

○ '24. 1분기 중앙거점외 운영기관의 화상교육 운영

○ '24. 1분기 CBT 사전평가 주말평가 운영

○ '24. 2분기 CBT 중간평가 시행

○ '23. 4분기 남부권 CBT 평가장소 추가 개소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CBT 평가장 추가 개소 및 보도자료 배포	1회	1회	보도자료
'24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CBT 사전평가 주말 시행(시범운영)	4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 당 자	5급 최민수	이 메 일	choims99@korea.kr

3-1-2-4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다양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입국 초기 단계에서 기초 법·질서와 필수 사회적응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

□ 과제 내용

○ 기존 결혼이민자, 동포, 유학생, 연예인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계절근로자와 산업현장에서 근무중인 외국인력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 계절근로자와 산업현장 외국인력의 교육 접근성 제고, 현장 근로자 공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강사가 직접 교육장에 방문하는 맞춤형 조기적응프로그램 추진

- 기초법질서, 필수 생활정보 이외에 안전수칙 및 인권보호 교육 진행

○ 국내 장기 정주 가능성이 높은 재정착 난민에 대해서도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운영

- 출입국·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재정착난민 입국시기에 맞춰 전문강사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교육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9.7.) 결혼이민자 대상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실시

○ ('14.5.)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

※ 기존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외국인 유학생, 예술·흥행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한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확대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조기적응지원단(조기적응지원센터)

○ 추진절차 :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단(지원센터) 선정 → 이민자 교육 신청 → 교육 실시

2. '23년도 추진 실적

□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총 489명 참여

3. ' 24년도 추진계획

□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 재정착난민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위해 맞춤형 교재 개발 및 강사 교육(1~2월)

○ 재정착난민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실시(2월)

○ 지자체 대상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수요 조사(2월)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재 개발 및 강사 교육(3월)

○ 외국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실시(3월)

□ 소요예산 : **총 964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059	964	△9.0	
-국 비	▪ 일반회계	1,059	964	△9.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소요예산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간 전체 예산임

☐ 산출내역 (총 964,216,000원)

내용	소요예산	내용	소요예산
강사료	601,920,000원	운영비	77,760,000원
전담인력	120,768,000원	교재비	78,000,000원
멘토링	42,768,000원	리플렛	17,000,000원
강사양성 위탁비(강사료)	15,200,000원	강사양성 위탁비(운영비)	10,8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이민자 조기적응 지원	조기적응프로그램 연간 참여자수	40,000명	42,374명	결과보고서
'24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이민자 조기적응 지원	조기적응프로그램 연간 참여자수	41,200명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 당 자	5급 최민수	이 메 일	choims99@korea.kr

3-2-1-1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및 고용주·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이민정책 전문성 함양 및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해도 제고

□ 과제 내용

○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 등 각 기관 소속 외국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 개설·운영

○ 고용주, 유관기관 관련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1년)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최초 운영

○ ('12년 ~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매년(2회)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교육 계획 수립 → 수요 조사 → 강의 개설 → 교육 실시

2. '23년도 추진 실적

□ 공무원 대상으로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 실시(2회, 법무연수원)

□ 공무원, 관계기관 담당자, 재한외국인 대상 상호문화이해 교육 실시(1회, 영암군)

3. '24년도 추진계획

□ '이민정책의 이해과정' 교육과정 개설·운영

○ 법무연수원에서 중앙부처・지자체・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연2회 (상・하반기) 실시

□ 고용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상호문화 이해 교육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상호문화이해 교육 강화	상호문화 이해도 제고	교육수료인원	50명	76명	결과보고서
'24	상호문화이해 교육 강화	상호문화 이해도 제고	교육수료인원	50명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이은경	이 메 일	kokiry@korea.kr

3-2-1-2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 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정서적 기반 형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 (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 해외사례 : 호주 'Harmony day'(3.21), 캐나다 'Multiculturalism Day'(6.27), 싱가포르 'Racial Harmony Day'(7.21) 등

□ 과제 내용

○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사회통합 유공자 정부포상 및 '올해의 이민자상' 수여, 공모전 수상자 시상

○ 세계인의 주간 기념행사 개최

-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이민자가 함께 어울리는 기념행사 개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7.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 세계인의 날) 제정

○ ('08.5.) 제1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기념행사 개최

○ (‘14.4.) 올해의 이민자상(대통령표창) 선정

※ ’08년부터 매년 기념식 개최 (단, ‘14년도는 미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대학,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단체 등

○ 추진절차 : 기념식(기념행사) 계획수립 → 기념식(기념행사) 개최 → 결과보고

2. ‘23년도 추진 실적

□ 세계인의 날 관련 행사 실시

○ 제16회 기념식 개최

- 일시·장소 : ‘23. 5. 19.(목), 정부과천청사 대강당

- 참석자 :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주한외교사절, 수상자 및 가족 등

- 주요 내용 : 정부포상, 장관님 등 축사, 미담사례발표, 주제영상 상영 등

○ 세계인의 날 기념 홍보 영상 제작

- 이민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및 외국인 정책 중요성 부각

○ 재한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미담사례집 제작

-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미담사례집 제작

- 재한외국인의 성공적인 정착사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재한외국인 봉사활동 등 미담사례 선정

○ 세계인 주간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별 기념 행사 및 이민정책 포럼 개최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자자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방 특성에 맞는 자체 기념행사 개최

- 법무부,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정책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민법제 및 이민행정 포럼」 및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정책포럼」개최

3. '24년도 추진계획

□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24. 5. 20.)

- 기념일 취지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품격있고 내실있는 중앙 행사 진행 및 최신 이민정책 동향을 반영한 정책메시지 발표

-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유공자 정부포상, '올해의 이민자상' 수여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이민자 사회통합 모범사례 발굴·홍보

- 수기, 사진 등 다양한 공모전 및 미담사례집 제작을 통해 내·외국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국민 인식개선

○ 지역사회 중심의 세계인의 날 기념 문화행사 개최

- 세계인 주간에 맞추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기념행사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외국인 관련 행사·축제를 연계하여 세계인의 날 인지도 확산

-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 소요예산 : **총 31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311	310	△0.3	
-국 비	▪ 일반회계	311	310	△0.3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일반용역비 207백만원, 일반 수용비 80백만원 , 사업추진비 23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세계인의 날 행사	다문화사회 인식제고	개최실적	17건	17건	결과보고
'24	세계인의 날 행사	다문화사회 인식제고	개최실적	17건		결과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9
담 당 자	5급 신하균	이 메 일	immi-pol@korea.kr

3-2-1-3	이민자 사회참여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및 이민자·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하락 추세에 따라, 외국인은 시혜적 정책 수혜 대상이라는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이민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필요

※ 재한외국인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의 비중 감소('14년 41.3% → '20년 28.7%)(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20)

□ 과제 내용

○ 이민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를 통하여 대국민 인식제고, 국민⇔이민자 간 교류·소통 증대

-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 사회공헌활동 정례화
- 이민자 멘토단, 이민자 네트워크,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 그간 구축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 이민자 사회참여 다각화 추진

- 사회통합 지역협의회, 외국인봉사단체(비영리단체), 자원봉사포털(1365)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이민자 사회참여 기반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9.7.) 이민자 대상 멘토교육 시범 운영(16회)

○ ('20.6.)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35명) 위촉

○ ('20.11.)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운영 규정 제정

○ ('22.2.) 제2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14명) 선발

○ ('22.8.)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운영 규정 개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교육부(협업), 행정안전부(협업) →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 사회통합 지역협의회, 법무부 이민자 멘토단

○ 추진절차 : 협업 등 계획 검토 및 수립 → 사업수행 → 결과보고

2. '23년도 추진 실적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사회공헌활동

○ 이민자 멘토단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멘토교육 강사 활동

- 멘토단 총 273회 출강, 수강생 총 8,554명

○ 이민자·다문화 인식개선 홍보 영상 제작

- 외국인 우리 사회 적응 지원 및 이민자·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동영상 제작에 이민자 멘토단이 출연진으로 참여
- 기초 법·질서 및 마약 예방 캠페인 동영상 각 1편 제작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역량 강화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멘토교육 강사로서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멘토교육 품질 제고

3. '24년도 추진계획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구성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사회공헌활동

○ 이민자 멘토단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멘토교육 강사 활동

- (연중)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교육 등 강사활동 연 2회 이상 실시

○ 기타 사회공헌활동

- 이민자 멘토단과 사회통합 중앙협의회·정부초청장학생동문회·자원봉사포털 간의 협업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자 사회참여	이민자 사회기여	강사활동	2회	8.1회	결과보고
'24	이민자 사회참여	이민자 사회기여	강사활동	2회		결과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9
담 당 자	5급 신하균	이 메 일	immi-pol@korea.kr

3-3-2-4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하는 영주권자의 복지기준 불명확 및 체류외국인의 고령화로 인해 체류자격에 따른 복지 기준의 설정 및 지원 방안 마련

□ 과제 내용

○ 체류자격별 복지 기준안 마련

- 복지 유형에 따른 외국인 체류자격별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외국인의 사회보장 기준 연구

- '21.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의 복지수급 등 사회보장 혜택 연구

※ 「체류 자격에 따른 외국인 사회보장 기준 연구」연구용역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복지부, 지자체 등 복지 소관 부처

○ 추진절차 : 외국인에 대한 복지 적용 실태 파악, 복지 유형별 소관부처 논의를 거쳐 체류자격별(국내 생활 기반, 연령층, 기여도 등 고려) 복지 기준안 마련

2. '23년도 추진 실적

□ 기준 마련 관련 관계부처 논의

○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복지 제도 실태 등 파악 필요성 논의 ('23.12. 인구정책기획단 외국인정책반)

※ 글로벌인재 유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족 관련 복지에 대한 공공 지출, 의료서비스 이용 만족도 등이 영향을 미침(OECD 인재매력지표) → 부처별 소관 정책 현황, 실태 파악 필요성 제안(법무부)

3. '24년도 추진계획

☐ 공공부조 분야 기준 정리

○ 공공부조 분야(생계, 의료, 주거, 돌봄서비스 등)별 복지 적용 대상·기준 정리 및 관계부처(복지부, 기재부, 여가부, 지자체 등) 협의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기준 마련	기준 마련 관련 관계부처 논의	1회	1회	회의실적
'24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기준 마련	공공부조 분야 외국인 복지 기준 정리	1회		복지 기준정리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0
담 당 자	6급 김지연	이 메 일	jikim433@korea.kr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중도입국자녀 등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배경 자녀의 공교육 진입 강화 및 안정적 지역사회 적응 지원

□ 과제 내용

○ 공교육 진입 유도를 위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정보 제공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2.7.) 다문화가정 자녀 공교육 진입 협력을 위한 "법무부-교과부 업무협약 체결

○ ('14.7.)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시범 실시

○ ('14.9.) 중도입국 청소년 통합정책 현안 보고(BH 교육문화수석)

○ ('15.9.) 결혼이민자의 전혼(前婚)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외국인 자녀 체류자격 세부 약호(F-1-52)를 신설하여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통계 확보

○ ('16.12.) 중도입국자녀가 만 21세까지 대안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17.1.) 중도입국 청소년(만 7세~만 17세) 공교육 진입 유도를 위한 신상정보 제공('17. 1.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 ('18.7.) 중도입국 청소년(만 6세) 공교육 진입 유도를 위한 신상정보 제공('18. 7.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 ('22.12.)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자녀에 대한 체류관리 지침 제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교육부

○ 추진절차 :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교육부)에 따른 중도입국 자녀 정보제공(법무부) → 정규 교육과정 참여(중도입국 청소년)

2. '23년도 추진 실적

○ 중도입국자녀 등의 공교육 진입 유도를 위한 교육부 협조 요청에 회신('23.6., 11.)

3. '24년도 추진 계획

□ 중도입국 자녀의 공교육 진입 유도 및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 교육부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정보 제공

□ 소요예산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중도입국청소년 정보 제공	1회	2회	결과회신
'24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중도입국청소년 정보 제공	1회		결과회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 당 자	5급 최민수	이 메 일	choims99@korea.kr

3-4-1-1	동포의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적에 따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대상 차이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고려인 동포에 대한 자격부여 확대

□ 과제 내용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 고시국가* 출신 동포 중 국가전문자격 취득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 등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등 대상 확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지정 21개 국가

○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의 단계적 통합

- 중국 및 CIS(구소련) 6개국 출신 동포에게만 부여하는 방문취업(H-2) 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단계적 통합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 11. 재외동포 자격통합 및 동포 취업 범위 재설계 방안 연구용역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법령, 지침 개정 추진

2. '23년도 추진 실적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비자 시범사업 실시

- 인구감소지역인 28개 기초자치단체 거주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게 2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를 조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 변경

3. ’24년도 추진계획

☐ 자격통합 필요성 및 동포 관련 체류자격별 취업범위 재설계를 위한 동포 관련 단체 등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비자 정식사업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동포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동포 체류자격 개편을 통한 형평성 제고	제도개선	1건	1건	보고서 등
‘24	동포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동포 체류자격 개편을 통한 형평성 제고	간담회 실시	1건	-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3-4-1-2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감소에 따른 구인난 해소 및 동포들의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범위 점진 확대

□ 과제 내용

○ 방문취업(H-2) 취업활동 범위 확대

- 산업계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방문취업(H-2) 활동 범위를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 별표 1의2 29. 나. 방문취업 활동범위 적시 추가 및 활동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고시하는 방안 마련

○ 재외동포(F-4) 취업활동 범위 확대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고시를 통해 취업이 제한되는 단순노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하는 직종 점진적 축소

○ 취업활동 범위 확대에 따른 서민일자리 보호 방안 마련

- 재외동포(F-4)에 대한 단순노무 분야 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를 위해 취업허가제 도입, 분담금을 통한 기금 마련 등 보완책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 12. 방문취업(H-2) 서비스업 고용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 2023. 5. 음식점업·숙박업 분야 6개 직종에 재외동포(F-4) 취업허용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고용노동부

○ 추진절차 :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의 → 관련 법령, 지침 개정 추진

2. ’23년도 추진 실적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개정(‘23. 5.)

○ 음식점업·숙박업 분야 6개 직종* 재외동포(F-4) 취업 허용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게 단순노무 등 취업 제한 해제

□ 방문취업(H-2) 활동범위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 고용 허용업종 제외

- 방문취업(H-2) 고용허용 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 시 추가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제외

※ 업종의 공공성과 특수성 고려, 특수 업종에 대한 취업을 제한

3. ’24년도 추진계획

□ 산업계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한 취업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모색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동포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법령,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1건	1건	관련 공문 등
’24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동포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법령,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1건	-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3-4-1-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수도권에 밀집한 동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동포 및 배우자의 취업범위 확대

□ 과제 내용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자격 신설

- 비인구감소지역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가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참여 지자체로 이주할 경우 재외동포(F-4-R) 자격 변경 및 취업 범위 확대

○ 동포 가족에 대한 체류 혜택 부여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자격을 가진 동포의 가족에게 장기체류자격 부여 및 취업 허용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 6.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제 선정

○ ’22. 10.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 법무부, 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 → 지자체, 동포 유입 촉진

2. ’23년도 추진 실적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종료(‘23. 10)

○ 지역특화동포(F-4-R) 70명, 지역동포가족(F-1-9R) 8명, 지역동포영주(F-5-6R) 체류자격 변경

3. ’24년도 추진계획

□ 지역특화형비자 정식사업 시행(‘24. 1분기)

□ 2024년도 사업 결과 분석 후 문제점 보완하여 익년도 사업 추진(‘24. 4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자격 변경자 수	50명	70명	관련 통계 등
’2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자격 변경자 수	100명	-	관련 통계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3-4-2-1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커뮤니티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의 급증과 더불어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 인적·물적 인프라 확대 필요

□ 과제 내용

○ 법적 근거 마련

- 재외동포의 국내정착 및 사회 적응 지원 등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현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 및 제21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법무부 내규인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운영 중이나 동포단체 등은 직접 근거 규정 마련을 요구

○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지정

- 일부 지역에 편중된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접근성 증대를 위해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수 확대

○ 정착 우수사례 발굴

- 국내 성공적으로 정착한 동포 사례를 발굴·홍보하는 한편, 성공 사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1. 7.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지정(7개→ 11개)

○ 2023. 6.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지정(11개→ 16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동포체류지원센터 공모 → 요건 심사 후 지정

2. ’23년도 추진 실적

□ 동포체류지원센터 간담회 실시(’23. 6)

○ 동포정책 주요 현안 설명, 운영사례 공유 및 동포정책 관련 의견 청취

□ 동포체류지원센터 신규지정(‘23. 6)

○ 기존 11곳에서 16곳으로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3. ’24년도 추진계획

□ 동포체류지원센터 간담회 개최(반기별 1회)

○ 동포정책 주요 현안 설명,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사례 공유 및 건의 사항 청취 등 소통을 강화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 동포체류지원센터 간담회 개최(반기별 1회)

○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정안 조속 통과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커뮤니티 지원	우수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동포사회 실질적 지원 촉진	센터 지정 확대	5개	5개	관련 공문 등
‘24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커뮤니티 지원	우수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동포사회 실질적 지원 촉진	간담회 개최	2회	-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3-4-2-2	재외동포 대상 통합형 국내체류 안내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 행정서비스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동포 특성을 반영한 안내서비스 제작

☐ 과제 내용

○ 동포 맞춤형 체류제도 안내서 발간

- 동포 비자 및 체류제도, 출입국관리법령 주요 위반사례, 자주 물어보는 질문 등 동포 맞춤형 체류제도 안내서를 다국어로 제작·배포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 10. 안내서 제작

○ '22. 10.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4개국어 제작·배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례 조사 및 의견조회 → 안내서 제작·배포

2. '23년도 추진 실적

☐ 2023. 1.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업데이트 홈페이지 게시

3. '24년도 추진계획

☐ 종료과제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동포 대상 통합형 국내 체류 안내 강화	출입국서비스 접근성 제고	업데이트 자료 배포 여부	1건	1건	홈페이지 업데이트 횟수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3-4-2-3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특정 국가 동포를 대상으로 형성된 부정적 인식이 사회 갈등 요인으로 기능함에 따라 이해 증진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 통합 추진

□ 과제 내용

○ 재외동포 인식 개선을 위한 성공적 국내 정착 동포 사례 홍보

※ 국내 법조계, 언론사, 기업 등에서 활약 중인 동포 사례 홍보를 통해 변화된 차세대 동포의 모습 홍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2.9. 방문취업(H-2) 동포 대상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 시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동포지원단체, 관계부처

○ 추진절차 : 홍보사례 발굴→언론 대응, 법무부-타부처 협업 교육 추진

2. '23년도 추진 실적

○ '23.1.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 관련 다수 언론 회신

3. '24년도 추진계획

□ 국내 법조계, 언론사, 기업 간부 등 성공적 국내 정착 동포 발굴 및 홍보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국내 체류 동포 인식 개선	사회통합 추진	언론 보도 등 홍보	2건	2건	관련 공문 등
24	국내 체류 동포 인식 개선	사회통합 추진	언론 보도 등 홍보	2건	-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3-4-3-1	4세대 동포를 위한 한국어능력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재외동포 범위 확대 후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동포로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

□ 과제 내용

○ 한국어 능력 수준과 체류자격 연계

- 한국어 등 기본소양을 갖춘 때만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을 허용하여 한국어 학습을 촉진, 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 유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법령, 지침 개정 추진

2. '23년도 추진 실적

□ 24년도 신규과제

3. '24년도 추진계획

□ 지역동포영주(F-5-6R) 자격 변경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로 요건 강화('24. 1분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한국어 능력 강화	사회 통합 촉진	제도개선	1건	-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3-4-3-2	차세대 동포의 국내 체류지원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재외동포 범위 확대 이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 동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미래 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체류 지원

□ 과제 내용

○ 일정 연령 미만 아동 동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 고시국가 미취학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신설

○ 동포 유학생 영주 신청요건 완화

- 국내 유학 중인 외국국적동포가 영주자격 신청 시 인센티브 부여

○ 입양한인 2세대 등 동포 입증방법 확대

- 입양 동포 2세대 등 동포 입증이 곤란한 특수 사정의 외국국적동포들에게 동포입증 방법 관련 대안 제공

※ 호적 기록 미비, 소실, 오기 등으로 동포 입증이 어려운 경우 고시국가와 마찬가지로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별 공적서류로 동포 입증하는 방안 마련

○ 동포 청소년 민족성 제고 프로그램 확대

-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협업하여 동포 청소년의 한국어·한국문화 배움 프로그램 제공 확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4년도 신규과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법령, 지침 개정 추진

2. ’23년도 추진 실적

▢ 24년도 신규과제

3. ’24년도 추진계획

▢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개정하여 동포입증 방안 다각화(연중)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차세대 동포 국내체류지원 강화	차세대 동포 안정적 국내 체류	제도개선	1건	-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4-1-2-1	출입국항 밖의 출국대기소 신설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소송 제기 등으로 장기 출국대기하는 외국인 등에 대한 인도적 처우 향상을 위해 공항 밖에 별도의 시설 필요

※ 공항 내 출국대기실은 단기 출국대기자를 위한 시설로, 장기 대기자나 노약자, 영유아 동반자의 인도적 처우에는 한계

□ 과제 내용

○ 소송제기 등으로 공항 내 장기 대기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 향상을 위해 별도의 출국대기소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12.)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의원입법)

○ ('23.5.16.)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계류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 관계기관

2. '23년도 추진 실적

□ 출국대기소 신설 근거 법안 국회 관련 상임위 회부

3. '24년도 추진 계획

□ 출국대기소 신설 근거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협의

☐ 출국대기소 규모 및 소요예산 관련 관계기관 협의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출입국항 밖의 출국대기소 신설 추진	관계부처 협의	협의 문서	연 1회	1	검토 문서
'24	출입국항 밖의 출국대기소 신설 추진	관계부처 협의	협의 문서	연 1회		검토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화번호	02-2110-4037
담 당 자	6급 송방혁	이 메 일	oksong12@korea.kr

4-1-2-2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보호시설을 개방형으로 전환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의 이동권과 소통권 등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확대

☐ 과제 내용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개방형 시설로 전환·운영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동 개방형 시설로 운영

☐ 청주외국인보호소 개방형 시설로 전환·운영

3. ‘24년도 추진계획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개방형 시설로 전환·운영(4/4분기)

○ 7월 중 전환을 위한 공사 착공, 12월 준공 예정

☐ 소요예산 : 총 1,764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8,707	1,764	△90.6	
-국 비	▪ 일반회계	18,707	1,764	△90.6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개축 총 1,764,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보호시설 개선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개방형 보호시설 전환 및 운영	1건	2건	결과회신
’24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보호시설 개선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개방형 보호시설 전환 및 운영	1건		결과회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79
담 당 자	5급 김준철	이 메 일	kjc5623@korea.kr

4-2-1-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보호을 보장하고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등록제를 도입하여 아동의 출생·사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및 관리

□ 과제 내용

○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출생신고 의무화 제도 도입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관계부처 논의 등

- ('18.1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 ('18.12. ~ '19.7.)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이행추진자문단 구성, 운영
- ('20.6. ~ 8.) 연구용역을 통한 해외사례 수집(태국, 베트남)
- ('21.2.) 법무부 정책위원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안건 논의
- ('21.3.) 제도 도입 관련 실무 회의(법무부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1.4.)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안건 논의
- ('21.4. ~ 10.) 법원행정처, 관련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의견 수렴

○ 법률안 발의

- ('22.6.28.)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권인숙 의원)

- ('23.6.15.)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소병철 의원)

※ 외국인아동의 출생통보제 등 추가

- ('23.8. ~) 각 법안 법사위 제1소위 심사 중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 외국인정책과)

○ 추진절차 : 법률안 통과 → 제도 세부사항 마련 → 시스템 등 구축 → 제도 시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법적 기반 마련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논의 지원

3. '24년도 추진계획

☐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보편적 출생등록제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 지원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제도 도입	제도 도입 관련 국회 논의 지원	1회	1회	검토안(보고서), 회의록 등 논의실적
'24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제도 도입	제도 도입 관련 국회 논의 지원	1회		검토안(보고서), 회의록 등 논의실적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3648, 4110
담 당 자	5급 김도연 5급 박지원	이 메 일	kdy927@korea.kr jikim433@korea.kr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의 활용을 통한 신속·정확한 피해자 발견과 보호

□ 과제 내용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관련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개정

※ 업무처리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한 인신매매 방지 교육, 식별지표 활용 및 교육실적 제출 등을 지침으로 명확하게 규정

○ 식별지표 이해와 적용을 위한 직무 관련 공무원 실무교육 지속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 4.20.)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 ('23. 1. 1.)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 ('23. 4. 4.)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 수립·시행 (여성가족부 주관)

○ ('23.9.27.)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 관련 「2023년도 사업계획」 수립·시행 (여성가족부 주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소속기관)

○ 추진절차 :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요청(여성가족부) → 종합(시행)계획 수립(법무부 본부) → 식별지표 활용(소속기관)

2. ’23년도 추진 실적

□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사업계획 마련·제출 (’23. 4. / ’23. 9.)

○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한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확대’ 등 법무부 소관 사항에 대한 종합계획과 2023년도 사업계획 마련 및 여성가족부 제출

※ 제출시기: 5개년 종합계획 - ’23. 4월 / 2023년도 사업계획 - ’23. 9월

□ 「인신매매 등 방지 업무처리 지침」 제정·시행 (’23. 10.)

○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의 체류 상황에 따른 식별지표 사용 방법 등 적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 마련 및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시행

□ 식별지표 활용 등 인신매매 방지 교육 실시 (연중)

○ 출입국관리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법상 인신매매 정의를 반영한 인신매매 방지 및 인권 감수성 제고 교육 (4회)

○ 인권보호관·고충상담관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중심 접근을 위한 정신적 외상 인식 훈련’ 실시 (1회)

3. ’24년도 추진계획

□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실시 (연중)

○ 「인신매매방지법」에 규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 대상 매년 1시간 이상 의무교육, 법무연수원 교육 및 소속기관 방문교육(간담회) 지속 실시

- 기관 방문교육(간담회) 시에는 식별지표 교육 및 활용현황 분석과 개선안 의견수렴을 병행

□ 여성가족부 고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번역 (2분기)

○ 기존 국문으로 작성된 식별지표를 영어·중국어·태국어로 번역하여 식별지표 활용성 강화

※ 베트남어·몽골어 등 기타 언어 번역은 '영어·중국어·태국어 번역본' 활용 상황 등을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

□ 「인신매매 등 방지 업무처리 지침」 업데이트 (필요시)

○ 식별지표 번역본 추가 및 식별지표 사용방법 개선 등을 통한 식별지표 활용 실효성 확보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직원교육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실적	연 4회 이상	5회	관련 공문
		지침 제정	「인신매매 등 방지 업무처리 지침」 제정	1건	1건	관련 공문
'24.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직원교육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실적	연 4회 이상		관련 공문
		식별지표 번역	번역 외국어 개수	3건		번역 결과물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07
담 당 자	6급 이종현	이 메 일	jhl912@korea.kr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평가 및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등을 통해 난민인정심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인정 심사제도 구축

□ 과제 내용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난민전담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주기적 평가·관리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추진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 및 보수교육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난민전담공무원

- 연간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훈련 계획 및 실시

○ 난민(전문)통역인

- (’20.~현재)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실시(연 1회)

- (’21.~현재)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연 4회)

- (’22.~현재) 난민(전문)통역인 보수교육(연 2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난민정책과

○ 추진절차

- 난민전담공무원 : 교육계획 수립, 사무소별 참석자 취합 → 교육 실시

※ 법무연수원과 협의를 통해 교육 컨텐츠 선정 및 제작(수정)

- 난민(전문)통역인 : (위탁사업)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통역평가) 평가계획 수립 → 평가 실시, (보수교육) 교육계획 수립 → 보수교육 실시

2. '23년도 추진 실적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 연간 6회 이상 국제기구 관계자·대학교수·법률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전문 교육프로그램 주기적으로 운영

○ 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거점기관 난민전담공무원 자체교육 실시(2회)

□ 난민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난민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균형있는 난민정책'개발 및 난민심사 적체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 외부 전문기관의 통역능력 선별시험, 능력별 맞춤형 교육, 최종 인증평가, 보수교육 등 인증 절차를 통과한 민간인 148명(25개 언어)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 및 보수교육 실시

○ 외부전문가를 통해 난민(전문)통역인의 통역능력을 평가하여 소속기관 등과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교육 실시

3. '24년도 추진계획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연중)

○ 연간 6회 이상 국제기구 관계자·대학교수·법률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전문 교육프로그램 주기적으로 운영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연중)

○ 통역인 인력풀(Pool) 확대하기 위해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홍보 강화 및 지속 추진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 및 보수교육 실시(연중)

○ 외부 전문가를 통한 난민전문통역인의 통역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공유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난민통역 품질 제고

○ 난민전문통역인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사례 및 통역 노하우 공유를 위한 워크숍, 보수교육 등 추진

□ 소요예산 : **총 213.6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13.6	213.6	0	
-국 비	▪ 일반회계	213.6	213.6	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 교육 진행 및 교재 발간 등 15,600,000원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 난민통역 인증제 79,600,000원

- 난민통역인 교육 78,440,000원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

- 통역능력 평가 40,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난민심사 역량 강화	교육실적	10건	10건	보고서 등
'24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난민심사 역량 강화	인증제 사업 및 교육실시 등	10건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76
담 당 자	5급 홍정임	이 메 일	hah0718@korea.kr

4-3-1-2	출입국항 난민심사 절차 개선 및 인프라 확충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공정하고 합리적인 출입국항 난민심사 체계를 구축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난민은 적극적으로 난민심사에 회부하는 한편, 남용적 난민신청 등은 방지

□ 과제 내용

○ 출입국항 난민심사 담당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항만 난민심사 거점기관 지정 및 난민신청자 대기장소(시설)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3. 7월, 출입국항 난민심사 제도 도입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 출입국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 '23년도 추진 실적

□ 해당 사항 없음

3. '24년도 추진계획

□ 출입국항 난민심사 절차 개선

○ 난민심사 거점기관 간담회를 통해 출입국항 난민심사 절차 개선사항 도출

□ 출입국항 난민전담공무원 역량 강화

○ 출입국항 난민전담공무원이 난민면담 등 심사 진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참고자료 작성 및 배포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출입국항 난민심사 절차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공정하고 합리적인 출입국항 난민심사 체계 구축	자료 발간 등 제도개선 추진실적	1건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76
담 당 자	5급 홍정임	이 메 일	hah0718@korea.kr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난민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이의신청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신속 대응

□ 과제 내용

○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 제고

- 이의신청 절차 다국어 사업 실시, 이의신청인 의견진술 청취 확대 등

○ 난민 이의신청 심사의 전문성 제고

-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제별 난민심사 매뉴얼 제정 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3.7.) 난민위원회 구성

○ ('20.2.) 난민위원회 심의 지원 전담부서 '난민심의과' 신설

○ ('22.1.) 이의신청인 의견진술 신청제도 도입

○ ('23.2.) 「난민법 시행규칙」 개정

※ 난민위원 제척·회피 근거 신설(제12조의 2), 난민조사관의 직급·경력 및 교육 이수 의무 등 자격 요건 신설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시행계획 수립 → 관계 기관·업체 선정(필요 시) → 과제 이행(교육, 지침 개정, 발간 등) → 결과보고

2. ’23년도 추진 실적

□ 난민위원회 개최

○ 난민위원회(6회), 분과위원회(44회) 등 총 50회 개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 3,143건 심의

□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 제고

○ 이의신청인의 의견진술 청취 확대(‘22년: 127건→’23년: 172건, 약 40%⇑)

○ 난민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난민 위원회 제척·회피 근거 신설(‘23.2.)

□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전문성 제고

○ 주제별 난민심사 매뉴얼(아동편) 제정(‘23.3.)

○ 난민조사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23.7./’23.12.)

○ 해외 난민불복심사 법제도 등 연구용역(‘23.12.)

3. ’24년도 추진계획

□ 난민위원회 개최(연중)

○ 이의신청 심의·의결을 위한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개최

□ 난민 이의신청 절차 다국어 안내 확대 시행(2/4 분기)

○ 이의신청 절차 안내서 다국어 번역본 제공 확대(6개 언어→22개 언어)

□ 이의신청인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 확대(연중)

○ 추가면접, 서면질의 등을 통한 이의신청인 의견진술 기회 제공 확대

□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연중)

○ 난민조사관 필수 교육 이수, 유엔난민기구(한국대표부) 공동 교육 등

□ 주제별 난민심사 매뉴얼 제정(4/4 분기)

○ 군복무·징집 사유, 현지 체재 중 난민 관련 해외 심사사례 등 포함

□ 소요예산 : **총 38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38	38	0	
-국 비	▪ 일반회계	38	38	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난민위원회 운영비 4,000,000원

○ 난민위원회 참석비 33,6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난민위원회 관련 인프라 구축	이의신청 심의·의결 관련 제도개선 추진실적	5건	5건	보고서
'24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난민위원회 관련 인프라 구축	이의신청 심의·의결 관련 제도개선 추진실적	5건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심의과	전화번호	02-2110-4031
담 당 자	5급 박병건	이 메 일	okkev813@korea.kr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난민 유입 가속화 추세에 대응하여 진정한 난민을 신속·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도록 난민심사에 중요한 판단자료인 국가정황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과제 내용

○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역량 강화

- 국가정황정보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국내/국외) 신규 운영

- 해외 주요국 국가정황 자료를 전문 번역기관에 의뢰하여 국문으로 번역한 자료집 발간 지속 추진

○ 국가정황정보 관리·활용 체계 강화

- 국가정황정보 전문 조사 인력 증원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1차 심사기관 난민담당자의 국가정황 조사·활용 능력 강화를 위해 국가정황정보 순회 교육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7.) 국가정황조사 전문 인력 채용(5명)

○ ('23.12.) 국가정황정보조사 전담팀 신설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국가정황조사 전문인력 채용 → 국가정황조사팀 운영

2. ‘23년도 추진 실적

☐ 해외 국가정황정보 보고서 번역·감수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간한 해외 주요국 국가정황정보 보고서 번역·감수

☐ 국가정황정보 순회교육 실시

○ 1차 심사기관 난민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가정황정보 조사·활용 기법 교육

3. ‘24년도 추진계획

☐ 국가정황정보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유엔난민기구(한국대표부)와공동으로 국가정황정보 조사관 교육 과정 운영 및 해외 국가정황정보 전담기관 방문 등

☐ 해외 국가정황보고서 번역·감수 사업 지속 추진

○ 난민심사 및 소송 과정에서 빈번하게 인용하는 해외 주요국 국가정황 자료 번역 자료집 발간(4/4 분기)

☐ 소요예산 : **총 21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92	210	9.4	
-국 비	▪ 일반회계	192	210	9.4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국가정황정보 번역·감수비 192,200,000원

○ 해외 국가정황정보 전담기관 업무 협의 17,368,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국가정황정보 조사 체계 구축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5건	5건	보고서
’2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국가정황정보 조사 체계 구축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5건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심의과	전화번호	02-2110-4031
담 당 자	5급 박병건	이 메 일	okkev813@korea.kr

4-3-2-1	실태조사를 통한 증거기반의 난민정책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국내 정착 현황 조사를 통해 사회통합과 국내 정착에 관한 정책 개발 마련

□ 과제 내용

○ 국내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체류 실태, 사회통합도, 정착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항목 및 지표 개발

○ 거주 지역별 표본 추출한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설문 지표에 따라 실태조사

* 난민인정자 약 300명, 인도적체류자 약 500명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12.)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해당 사항 없음

3. '24년도 추진계획

○ '24. 3월~4월 과제별 입찰공고 및 연구수행기관 선정

○ '24. 7월~12월 최종 연구결과물 산출 및 평가

□ 소요예산 : **총 4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40	100	
-국 비	▪ 일반회계	0	40	100	신규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정책연구용역

- 인건비, 경비, 부가가치세 등 포함 40,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실태조사를 통한 증거기반의 난민정책 추진	국내 정착도 파악	연구 결과물	1건	-	연구 결과물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78
담 당 자	5급 박정원	이 메 일	jwon.park@korea.kr

4-3-2-2	난민 처우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난민의 특수성을 반영한 난민 처우 지원 방안을 통해 국내 체류 난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과제 내용

○ 재정착난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현안 공유, 협업방안 마련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재정착실무협의체를 개최

○ 재정착난민 현장 방문 및 멘토 간담회 개최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민 · 관의 체계적인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4. ~ '22.5.) 매년 재정착실무협의체 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행사계획 수립, 부처별 의견 취합 → 행사 개최

2. '23년도 추진 실적

□ 난민의 처우 등 정보 접근성 향상

○ 난민신청자 등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한 개정 가이드북 배포(온라인 링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및 생계비 리플릿 제작·배포

□ 난민지원 체계 구축

○ 재정착난민 대상 국내 정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협력관계 구축하여 정신건강 심리 상담 서비스 실시

※ 가족 단위 개별 상담 제공(5회~10회), 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사례 관리

○ 난민인정자 처우 개선을 위해 '난민처우협의회' 개최('23.7.25.)

□ 난민영주 요건 개선

○ 난민인정자 중 참전용사 후손 등의 영주 자격 취득요건 일부 완화

3. '24년도 추진 계획

○ 재정착실무협의체 개최(2분기)

○ 재정착난민 멘토 간담회 개최(4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난민처우 개선	난민처우 개선	처우개선 등 추진 실적	2건	2건	보고서 등
'24	난민처우 개선	난민처우 개선	처우개선 등 추진 실적	2건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78
담 당 자	5급 박정원	이 메 일	jwon.park@korea.kr

4-3-3-1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글로벌 난민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착 난민제도 운영

□ 과제 내용

○ (재정착난민 제도)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및 정착지원 제공

- 수용 대상, 규모 등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의결 후, 수용계획 확정
- 서류심사, 현지 면접, 건강검진을 거쳐 수용 대상 선발 및 수용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초기 정착 지원 제공
- 지역사회 정착 후, 정착 지원 지속 및 정착 상황 모니터링

○ (학생난민 프로그램)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 후보자 선정 시 사증 발급 등 입국 절차 진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재정착난민 제도

- ('14.10.) 재정착희망난민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 ('15. 4.)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1차 시범사업('15년~'17년)으로 총 86명 수용
- ('18. 7.)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2차 시범사업('18년~'20년)으로 총 80명 수용
- ('20.7.)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3차 시범사업('22년)으로 총 67명 수용
- ('21.3.)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4차 시범사업('23년)으로 총 12명 수용

○ 학생난민 프로그램

- ('22.6.) 「학생난민 민·관 후원 프로그램」 계획 수립
- ('22.8.) 「학생난민 고등교육 프로그램」 최종 선발 대상자 확정
- ('22.7.)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 ('22.12.) 최종 대상자 입국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2. '23년도 추진 실적

□ '23년 해외난민 수용 사업 추진 계획 마련

○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개최 일정 미정에 따라 '23년 재정착난민 프로그램을 시의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안 마련

□ 재정착난민 국내 정착 지원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수용된 재정착난민 1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등 초기 정착 지원 및 지역사회 정착 후, 생활 멘토링 사례관리 등 정착 지원 지속

○ 지역사회 정착 후 가족별 멘토링 및 사례관리 지속

○ 재정착난민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학생난민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교육기관 방문

○ 학생난민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관련 현황 공유

3. ’24년도 추진 계획

□ 재정착난민 수용 계획 수립 및 추진 (1분기)

○ 수용 대상, 규모, 사업국 등 ’24년도 수용 계획 수립

□ ’24년도 재정착난민 수용 사업 진행 (3~4분기)

○ ‘24년 수용 계획 대상 서류 심사, 신원 조회, 현지 면접, 건강검진 등 수용 절차 진행

□ 재정착난민 국내 정착 지원 (3~4분기)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내 초기 정착 지원

○ 지역사회 정착 후 가족별 멘토링 및 사례관리 지속

□ 소요예산 : **<u>총 420백만원</u>**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463	420	△9.3	
-국 비	▪ 일반회계	463	420	△9.3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재정착난민 주택임차보증 112,000,000원

○ 재정착난민 국내정착교육비 98,892,000원

○ 재정착난민 주택임차 84,000,000원

○ 재정착난민 수용 IOM 위탁 100,000,000원

○ 재정착난민 선발 국외여비 24,673,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난민보호 방식의 다변화	재정착난민 수용	재정착난민 수용 계획 수립	1건	1건	보고서
'24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재정착난민 수용	재정착난민 수용 계획 수립	1건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78
담 당 자	5급 박정원	이 메 일	j.weon.park@korea.kr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제사회 일원으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국가 위상에 걸맞은 역할 수행

□ 과제 내용

○ 난민관련 국제 협의체 참여

- 난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 관련 논의, 재정착 난민에 관한 실무회의(WGR), 재정착·보충적 수용경로에 대한 협의(CRCP), 글로벌난민포럼(GRF) 등 난민 관련 국제회의 및 협의체 등

○ UNHCR, IOM 등 난민관련 국제기구와 교류 및 협력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11.) 과제 추진

○ ('23.12.) 제4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UNHCR, IOM 등 난민관련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

2. '23년도 추진 실적

□ 난민관련 국제회의 등 참석

○ 난민 재정착에 관한 실무회의(WGR) 참석 (2월)

○ 제5차 UN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참석 (10월)

○ 제2차 글로벌난민포럼(GRF) 참석 (12월)

□ UNHCR 등 난민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간담회 개최 (1월)

○ 유엔난민기구와 고위급 회의 개최 (4월)

- 최고대표보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고위급 회의

○ 법무부차관과 유엔난민기구 부대표 간담회 개최 (11월)

- 법무부 차관과 유엔난민기구 부대표 면담

3. ’24년도 추진 계획

□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상시)

○ UNHCR 등 난민 관련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의 교류 지속

- 난민심사관 전문교육 지원, 국가정황정보 수시 제공을 위한 교류

- 난민제도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각국 정부와의 협력 지속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난민관련 국제협력체계 참여	국제회의 및 전문교육 참여	국제회의 등 참여실적(건)	2건	2건	보고서
’24	난민 관련 국제협력체계 참여	국제회의 및 전문교육 참여	국제회의 등 참여실적(건)	2건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78
담 당 자	5급 박정원	이 메 일	j.weon.park@korea.kr

5-1-1-1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위기, 지방소멸 등 변화된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국익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및 추진

□ 과제 내용

○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8.) 국민, 각계 전문가 대상 세미나, 토론회 등 공론화 실시

○ ('22.11.) 법무부 내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설치

○ ('23.12.)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 수립·발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2. '23년도 추진 실적

□ 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 관련 공론화 진행(연중)

○ 국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수렴

※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행정·이민정책포럼('23.5.~6.)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23.7. 매일경제) ▲제2회 이민정책위원회('23.11.) 등

□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 발표('23.12.)

○ 다부처 협업 방식*의 이민정책 전담조직으로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 수립 및 발표

* 각 기능별 소관 부처 인력 파견(별도 정원),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통일된 관점에서 중장기 계획 수립

3. '24년도 추진계획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관련 입법 논의 지원

○ 「정부조직법」 통과 시, 후속 절차 신속 추진을 위한 개청 준비단 운영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청 신설방안 마련	1건	1건	보고서
'24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1건		법안 발의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전화번호	02-2110-4219
담 당 자	5급 김명훈	이 메 일	mhkim2920@korea.kr

5-1-1-2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대비한 새로운 이민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제시

○ 외국인정책 관련 체계적·효율적 관리(중복, 사각의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업 증진 및 정책 조정 기능 마련

□ 과제 내용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가칭)이민정책기본법‘으로 개정

○ 부처별 외국인정책 관련 위원회* 통합 운영 방안 논의 및 연석회의 시행 등 타 위원회와 협력 강화

*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가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고용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외국인정책위원회 통합 논의

- (’15.12.) 경제관계장관회의 시 부처별 외국인정책 관련 위원회 통합 논의
- (’16.05.) 외국인·이민정책 T/F에서 외국인 관련 정부위원회 연계를 통한 통합방안 검토
- (’18.02.) 외국인정책위·다문화가족정책위 연석회의 개최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등 심의·의결

- (’18.05.) 부처 간 견해 차이로 통합 논의 중단, 외국인·이민정책 TF 해체
- (’22.1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로 반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무조정실,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 추진절차 : 국조실 주관 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및 통합(안) 마련 → 관계 부처 의견 조정 → 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및 통합 추진

2. ’23년도 추진 실적

□ 정책연구용역 실시

○ 「이민정책 추진체계 선진화를 위한 이민법제 개편방안」 연구(’23.12.)

- 국내 이민정책 및 이민법제의 특징을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이민정책기본법」(안)을 제시

○ 「이민정책의 범정부적 추진을 위한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 연구(’23.12.)

- 사례 분석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조정·의결기능 강화, 정책조정수단(예시, 사전협의제도) 제도화 등 실행력 제고를 위한 위원회 세부운영 방안 제시

□ 국무조정실 주관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참석(’23.6. ~)

○ 외국인력 도입 분야, 규모 등 외국인력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통합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설치 제안(국조실) 대응

- 부처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 활용 필요

3. ’24년도 추진계획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추진 검토(연중)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포럼 개최 추진(하반기)

□ 외국인정책위원회 개편 방안 검토(연중)

○ 기존 위원회의 유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새로운 추진체계(출입국·이민관리청)에 맞게 3개 위원회의 통합 추진 방안 검토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법령 개정 등 정비	연구용역 실적	2	2	연구보고서
'24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법령 개정 등 정비	관련 회의 및 포럼 개최	2		결과보고서

☐ 소요예산 : 비예산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6 / 4113
담 당 자	6급 이은주	이 메 일	aabir097@korea.kr
담 당 자	6급 오명수	이 메 일	kyebaeg@korea.kr

5-1-2-1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조정

○ 외국인정책 관련 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외국인정책의 기본원칙·방향·과제에 대한 정례적 논의

☐ 과제 내용

○ 이민자 비자, 체류, 쿼터, 인력수급 등에 대한 장·단기 관리방안 논의,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를 통한 지자체와 소통·협력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1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로 반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외국인정책 위원 부처(기재부 등 19개)

○ 추진절차 : 외국인정책 관련 안건 수요조사 → 관계부처 등 실무자 회의 개최 → 관계부처 대상 심의안건 의견 조회 →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개최 →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의결

2. '23년도 추진 실적

☐ 제27회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제32회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개최

○ 일자 : '23.12.22. ~ 12.27.(서면회의) / '23.12.15. ~ 12.20.(서면회의)

○ 내용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1년 및 '2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 3개 심의안건 확정

□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개최일자	분과위원회	주요내용	비고
‘23.1.13.	국경·체류·안전	‘23년도 불법체류 감소정책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등 논의	
‘23.5.17.	국경·체류·안전	제2차 정부합동단속 방향 및 불법체류 감소 방안 등 논의	
‘23.9.01.	중앙·지방협력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 지원, 지역 연구 네트워크 추진 등 논의	
‘23.9.14.	국경·체류·안전	제3차 정부합동단속 방향 및 불법체류 감소 방안 등 논의	

3. ’24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개최

○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연중)

○ 관계부처와 지자체 참여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정례적 추진(연중)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위원회 개최 및 운영 확대	위원회 개최 횟수	6	6	결과보고서
’24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위원회 개최 및 운영 확대	위원회 개최 횟수	7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3
담 당 자	6급 오명수	이 메 일	kyebaeg@korea.kr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 해소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체계 마련

☐ 과제 내용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계절근로자 허용업종 추가 및 배정인원 결정 등 안정적인 계절근로 인력 공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5.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범 시행

○ 2017.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정식 시행

○ 2022. 12.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대상 선정

※ 19개 시·군, 19개소 선정, 계절근로자 도입인원 990명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 간 협의 → 계절근로 인력 선발·도입·관리 등 운영

2. '23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 부처간 협력체계 유지 및 상시 소통창구 운영

3. ’24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 법무부에 관계부처(농식품부・해수부) 인력 파견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관계부처 회의 참석	5회	10회	관련 문서 등
’24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관계부처 회의 참석	5회		관련 문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5
담 당 자	5급 박정석	이 메 일	sami9034@korea.kr

5-2-1-1	사회통합 전문인력 역량 내실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체류 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공신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다문화사회 전문가* 를 양성하여 고품질 이민행정 교육 서비스 인프라 구축

*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학위과정을 취득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

□ 과제 내용

○ 다문화사회 전문가 신규 양성 이수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을 위한 이수교육 실시(연 2회)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에서 활동 중인 다문화사회 전문가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연 1회)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2.1.) 출입국관리법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근거 신설

○ ('13.1.) 같은 법 시행규칙에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교과목 등 조항 신설

○ ('14.11.)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마련

○ (‘20.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 개정

○ (‘21.9.)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기관

○ 추진절차 : 교육수요 파악 → 교육과정 개설 및 실시 → 결과 보고

2. ‘23년도 추진 실적

□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을 위한 이수교육 실시

○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학사 이상) 취득자를 대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23. 3. / ‘23. 9.)

□ 다문화사회 전문가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한국사회 이해 강사로 활동 중인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실시 (‘23. 12.)

3. ‘24년도 추진계획

□ 다문화사회 전문가 신규양성 교육 실시

○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학사 이상)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24. 3 / ‘24. 9.)

□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실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한국사회 이해 강사로 활동 중인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실시 (‘24. 12.)

☐ 소요예산 : 총 113백만 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13	113	0	
-국 비	▪ 일반회계	113	113	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강사료 103백만 원, 운영비 10백만 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실시 횟수	3회	3회	계획 및 결과보고
’24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실시 횟수	3회		계획 및 결과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9
담 당 자	5급 신하균	이 메 일	immi-pol@korea.kr

5-2-1-2	소수언어 통역인 양성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등을 통한 소수언어 구사자 인력풀(Pool)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 과제 내용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추진을 통한 소수언어 통역인 확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난민(전문)통역인

- ’20.~현재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실시(연 1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난민정책과

○ 추진절차

- 난민(전문)통역인 : (위탁사업)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 외부 전문기관의 통역능력 선별시험, 능력별 맞춤형 교육, 최종 인증평가, 보수교육 등 인증 절차를 통과한 민간인 148명(25개 언어)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

※ 스와힐리어, 펀자브어, 타갈로그어 등 소수언어 구사자 10명 위촉

3. ’24년도 추진계획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연중)

○ 통역인 인력풀(Pool) 확대하기 위해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홍보를 강화하고 체류 우대 혜택 등 검토

○ 통역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예산에 포함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소수언어 통역인 양성	통역인 확대	인증제 사업 추진	1건	1건	보고서 등
’24	소수언어 통역인 양성	통역인 확대	인증제 사업 추진	1건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76
담 당 자	5급 홍정임	이 메 일	hah0718@korea.kr

5-2-1-3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임용시험 전문과목 도입을 통한 직무역량 제고 및 정책환경 대응력 강화

□ 과제 내용

○ 출입국관리직 전문 시험과목으로 「이민법(학)」 도입

※ '76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시 「국제법(개론)」이 필수과목으로 선정된 후 상당한 시간 경과 및 정책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8.12. ~ '19.11.)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 협의

○ ('19.12.) 「출입국관리직 전문시험 도입에 관한 연구」 실시

○ ('21.10. ~ '21.12.) 출입국관리직 전문 시험과목 도입에 관한 '국민여론 수렴', 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대국민 공청회'

○ ('22.4. ~ '22.12.)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임용시험 전문과목 도입을 위한 법령·정책 연구」

○ ('23.12.)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경력경쟁 채용시험 과목 변경 권한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부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외국인정책과)

○ 추진절차 : 법무부(외국인정책과) ⇌ 인사혁신처, 관계 기관(전문가)

2. ’23년도 추진 실적

□ 공무원 채용 시험과목 개편 의견 제출 (’23. 7.)

○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의견조사에 따라 ‘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필요성’에 관한 의견 제출

- 직무 관련 전문과목으로의 변경(「국제법(개론)」→「이민법(학)」)을 통한 업무 전문성 강화

※ ’22년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임용시험 전문과목 도입을 위한 법령·정책 연구」 결과 반영

□ 「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관련 인사혁신처 업무협의 (’23. 11.)

○ 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필요성 설명 및 전문과목 도입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논의

3. ’24년도 추진계획

□ 「이민법」 세부과목 구성 등 운영방안 마련 (2분기 ~ 3분기)

○ 경력경쟁 채용시험 과목으로 「이민법」 도입을 위해 2 ~ 3분기 중 법무부 내 협의를 거쳐 ‘과목 구성(안)’ 등 세부 운영방안 마련

□ 관계부처(인사혁신처) 업무협의 (연중)

○ 변경 요청 시험과목(「이민법」)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인 협의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연구용역 결과 활용방안 제출 및 공유	결과 공유 및 활용	1건	1건	정책연구 활용 결과보고서
		인사혁신처 업무협의	업무협의 실적	1건	1건	출장 결과보고서
’24.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경력경쟁 채용시험 과목 반영	「이민법」 과목구성(안) 등 세부 운영방안 마련	1건		관련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07
담 당 자	6급 이종현	이 메 일	jhl912@korea.kr

5-2-2-1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출입국관서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광역단위 이민정책 수요발굴·자문 및 이민 행정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 과제 내용

○ 이민행정 분야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 운영,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지원 등

- 지방 출입국관서와 시·도 단위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가칭)지역 이민 주민위원회' 신설 등 협력 거버넌스 구축

□ 과제 추진 연혁 (경과)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지자체

○ 추진절차 : 이민행정 분야 중앙-지방 협력 연구용역 수행 → '(가칭)지역 이민 주민위원회' 구축(안) 마련 → 지자체 협의 → '(가칭)지역이민 주민위원회' 구성

2. '23년도 추진 실적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23.9.)

○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 지원,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안건 논의

□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 지원

○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에 관한 국가정책수요 의견 제출(법무부 → 행정안전부) ('23.10.)

○ ‘24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지자체 이민정책 강화” 내용으로 국가 정책수요 의견 반영(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23.12.)

3. ‘24년도 추진계획

☐ 중앙-지방 이민정책 협력 방안 연구

- ‘이민행정 분야 중앙-지방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수행

☐ 소요예산 : **총 40백만 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40	100	
-국 비	▪ 일반회계	0	40	10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연구용역비 40,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광역 이민협력 강화	광역단위 이민협력 회의	1회	1회	개최 실적
’24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광역 이민협력 강화 방안 연구	‘이민행정 분야 중앙-지방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수행	1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0
담 당 자	6급 김지연	이 메 일	jikim433@korea.kr

5-2-2-2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소멸,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중앙-지방-학계-연구계 협력을 통한 이민정책 개발

-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 민간전문가, 지역연구원 등 연구계, 광역지방자치단체, 법무부 등이 협력하여 이민정책 연구 저변 확대

□ 과제 내용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역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학계-연구계 협력 플랫폼인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포럼·간담회 개최 등으로 네트워크 연구 결과 정책화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성

- 중앙-지방-연구계 합동 이민정책 협력·발전을 위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성안 마련

- 광역지자체, 지역연구기관 대상 '지역이민행정 연구 네트워크' 참여 접수('23. 8. 9. ~ 18.)

- 광역지자체 12개, 지역연구원 11개, 이민정책연구원, 한국행정학회 등 총 46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성 완료

- 법무부-광역지자체 이민정책 협력·추진 정책세미나 개최('23. 8.~9.)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총 46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성 단체

* 법무부,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 및 광역지자체(12개), 지역연구원(31개)

○ 추진절차 : 네트워크 구성 → 포럼 및 간담회 개최, 연구총서 발간 → 정책화(외국인정책위원회 중앙・지방실무분과위원회 상정)

2. '23년도 추진 실적

□ 이민정책 합동 연구 플랫폼 마련

○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 (출범식 개최, '23. 11.)

3. '24년도 추진계획

□ 이민정책 합동 연구

○ 2분기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포럼·간담회 개최 (1회)

○ 3~4분기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포럼·간담회 개최 (2회)

□ 소요예산 : 3백만원

□ 산출내역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간담회 책자 (1,500,000원 × 2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역이정책 연구 네트워크 운영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출범식 개최	1회	1회	개최 실적
'24	지역이정책 연구 네트워크 운영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포럼, 간담회 등 개최	2회		개최 실적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0
담 당 자	6급 김지연	이 메 일	jikim433@korea.kr

5-2-2-3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이주민 및 이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추진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2조의2(이민정책연구원) 및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제2조(기능)에 따라 이주·이민 관련 조사·연구·자문 및 교육훈련 수행

□ 과제 내용

○ (연구) 저출생·고령화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는 국가·지역 단위 발전전략으로서 이민정책의 수립·활용을 지원하는 종합·체계적 연구 수행

- 주무부처(법무부) 정책현안 및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증거기반의 연구과제 수행

○ (교육) 지방소멸 위기 및 지자체 외국인 주민 수 증가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협정」 이행을 위한 업무 담당자(유관기관 종사자) 대상의 전문가 교육

○ (협력)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외 이민정책 관련 학술활동 및 국제회의 개최·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9.07.)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조약 제1958호)」 발효

○ ('09.12.) IOM이민정책연구원 개원(경기도 고양시)

○ ('14.07.)「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조약 제2196호)」 개정

○ ('23.04.)「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일부개정법률 시행, 연구원 설립 및 국가지원에 관한 국내법적 근거 마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일반회계(민간경상 국고보조금, 단위사업: 국제이민협력-이민정책연구원 운영사업) 예산으로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통계분석센터 신설 및 이민정책연구・교육・협력 사업 강화

○ (연구) 기본연구보고서 12건, 연구총서 1건, 정책보고서 4건, 워킹페이퍼 3건, 통계시리즈 1건, 통계브리프 10건, 이슈브리프 6건

○ (교육)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설명회 등

○ (협력) 2023 UN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난민포럼 등 수행

3. '24년도 추진계획

□ 다년도 중점연구과제 수행 및 지역 단위 이민정책연구・교육・협력 강화

○ (연구인력 증원) 6대 연구영역(이민법・제도, 이민경제, 국제이민협력, 사회통합, 난민・인권, 이민동향분석)을 토대로 정책현안 적시 대응 및 다학제・융합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확충(5명)

- 다년도 중점연구과제(이민과 경제, 국내거주외국인 종단조사 구축 등) 수행 강화

○ (이민자 인식개선 교육센터 신설)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는 지역 단위 발전전략으로써 지역 이민정책 확대 등을 위한 지자체 업무담당자 및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 수요 급증 등에 대응

□ 소요예산 : **총 2,562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268	2,562	13	
-국 비	▪ 일반회계	2,268	2,562	13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24년도 예산증액 294백만원)

○ (연구인력 증원) 다년도 중점연구과제 수행 및 이민정책 현안 적시 대응

○ (이민자 인식개선 교육센터) 온라인 교육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한 전문강사 인력풀 관리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이민정책 연구 강화	이민정책 연구 실적 (정량지표)	183점	228점	(A×10)+(B×7)+(C×5)+(D×3) ※ 연구유형별 A: (기본/수탁)연구보고서 B : 정책보고서/통계시리즈 C : 정책브리프/워킹페이퍼 D : 이슈/통계브리프
			이민정책 연구 실적 (정성지표)	80점	89.3점	$\frac{\sum_{k}^{K}(\sum_{i}^{I}\frac{score_i}{I})}{K}$ score: 외부평가점수(100점 만점) I : 연구성과물 1건당 외부 평가자 수 k : 평가대상 연구성과물의 수 ※ 연구성과물 외부평가점수 기준 평가대상: 연구, 정책보고서, 정책브리프, 워킹페이퍼 ※ 내부지침: 80점 이상 발간승인
'24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이민정책 연구 강화	이민정책 연구 실적 (정량지표)	201점		상동
			이민정책 연구 실적 (정성지표)	80점		상동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1
담 당 자	7급 윤동운	이 메 일	headrock999@korea.kr

5-2-2-4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법무부 이민정책 추진방향 설정, 정책·법령 개선 방향 자문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 설치

※ 2011년부터 운영된「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

□ 과제 내용

○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 출입국·이민정책 현안 및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정책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이민정책위원회 활성화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2.) 이민정책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

※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법무부훈령 제1406호)」

○ ('22.11.) 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 위원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22. 11. 25. ~ '24. 11. 24.)

○ ('23.11.) 제2회 회의 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장관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개최

2. ‘23년도 추진 실적

□ 제2회 위원회 회의 개최(11월)

○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방안 ▲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방안 등 주요 정책 추진 방향 관련 전문가 자문

3. ‘24년도 추진계획

□ 이민정책위원회 회의 개최(연중)

○ 출입국·이민정책 현안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전문가 자문 필요 시,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예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2회	1회	결과보고서
’24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2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전화번호	02-2110-4219
담 당 자	5급 김명훈	이 메 일	mhkim2920@korea.kr

5-3-1-1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개별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출입국 민원시스템을 통합플랫폼으로 재구축함으로써 사증 신청부터 입국 후 국내 체류, 국적취득 등 전반 과정에서 단일 경로를 통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적시 제공이 가능한 비대면 기반으로 실현

□ 과제 내용

○ 전자민원 서비스 혁신

- 이민행정 관련 민원시스템을 연결하는 일원화된 민원 사이트를 통해 민원 통합신청과 접근 편의성 향상, 민원인 대면 방문 최소화

○ 지능형 모바일 대민 서비스

- 혁신적 모바일 기술 기반의 정보서비스를 도입하여 대민 민원업무의 대부분을 모바일 기반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온라인 민원 신청을 활성화

○ 효율적인 업무현장 지원

- 민원 업무 매뉴얼의 전자화 및 관리, 제출 서류의 전자화, 사회통합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온라인 상륙허가 서비스 확대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

○ 지속성장 기반 확보

-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 및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정보 인프라의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 및 전사 통합된 관점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10.) 과제 추진, ('22.7.) 과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사업」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사업」이 포함

○ ('23.12.)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

○ ('24.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예비타당성조사 → 예산확보 → 사업자 선정 → 사업 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예산 신청(1분기)

□ 24년도 예산 심의에서 제외(3분기)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 2023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3분기)

□ 2023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4분기)

3. '24년도 추진계획

□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1분기)

□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사업설명회(1분기)

□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기획재정부 주관 1차 보고회의 참석(2분기)

□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기획재정부 주관 2차 보고회의 참석(3분기)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4분기)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대상사업 여부	선정		관련 문서
‘24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통과 여부	통과		관련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전화번호	02-2110-4099
담 당 자	7급 김순일	이 메 일	soonil52@korea.kr

5-3-1-2	사회통합교육 종합플랫폼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시스템 노후화로 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있는 사회통합정보망을 재구축하여, 신규 사회통합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 과제 내용

○ 학습관리시스템 전면 재구축

- 향후 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온라인 비대면 화상교육,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온라인 평가 시스템, 결제 시스템 등 도입

○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사회통합정보망 개편

- 모바일 사회통합정보망 구축, 다국어 서비스 지원, 오프라인 민원에 대해 전자민원으로의 전환 등 포털 전면 개편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3.)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반영

○ ('22.7.)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사업자

○ 추진절차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예비타당성조사 → 예산확보 → 사업자 선정 → 사업 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23. 3분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신청

3. ’24년도 추진 계획

○ ’24. 4분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과제번호 : 5-3-1-1)에 포함시켜 추진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해당사항 없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 당 자	5급 최민수	이 메 일	choims99@korea.kr

5-3-1-3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실물 신분증의 신뢰성, 내구성, 보안성, 정보보호 취약성 등을 보완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

○ 외국인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증 이용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외국인 신분확인 체계를 확립하고 모바일 간편인증으로 온라인 전자민원 활성화

□ 과제 내용

○ 공통 플랫폼 개선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수용 운영을 위한 기반 증설

○ 발급・카드관리・연계 시스템 구축

-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의 발급 관리, NFC R/W 장비 도입, 공통 플랫폼 공동 이용을 위한 시스템 연계 등 구축

○ 민원 알림 서비스 구축

- 민원 알림 정보의 제공 및 국가 재난 상황의 외국인 대상 알림 강화를 통한 필요 정보 적시 전달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10.) 과제 추진, ('22.7.) 과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사업」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23.12.)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기재부 예산 신청(1분기)

- 시급성에 따라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사업」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도입)사업」으로 분리하여 기재부 예산 신청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관련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3분기)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도입)사업」 예산 수용(3분기)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관련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개정안 시행(4분기)

3. '24년도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완료(1분기)

□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수행(2분기)

□ 시스템 구축 중간점검(3분기)

□ 사업 완료(4분기)

☐ 소요예산 : 총 4,602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4,602	100	
-국 비	▪ 일반회계	0	4,602	10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장비 구입비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 4,602,000,000원

- (H/W, S/W장비 구매 = 2,235백만원) +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2,367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근거 마련	법적 근거 마련	법 개정		관련 문서
‘24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율	100%		사업완료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전화번호	02-2110-4099
담 당 자	7급 김순일	이 메 일	soonil52@korea.kr

5-3-1-4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23년 종료)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비대면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도 국민과 같이 계좌개설 등의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 정보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 제공하여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 과제 내용

○ 법적 근거 마련

- 금융회사 등이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요청 시 이에 대한 결과 회신 근거 마련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12.) 「출입국관리법」 개정, ('23.5.) 시스템 구축 완료, ('23.9.) 서비스 시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23년도 1,2분기)

○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계좌개설 등 비대면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 ①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정보와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정보와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②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시스템 구축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23년도 3분기)

○ 제1금융권 중 시스템 개발 완료 및 서비스 제공을 요청한 은행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행('23.9.18.)

3. '24년도 추진계획(해당사항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해당사항 없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전화번호	02-2110-4097
담 당 자	6급 부승용	이 메 일	bug9795@korea.kr

5-3-2-1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방자치단체, 관광업계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략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데이터 분석자료 제공

□ 과제 내용

○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를 통해 수집된 방한 외국인의 국적·연령대·성별·국내 체류 예정지·여행목적·출발지 공항·도착지 공항 등을 분석

○ 외국인 입국자의 지역별 방문 추이 등을 지도와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하고, 지자체 및 관광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과제 추진연혁(경과)

○ 법무부-한국관광공사 간 데이터 분석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22.4.)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한국관광공사, 법무부(MOU) → 지방자치단체, 주무 부처

○ 추진절차 : 관광공사, 법무부 데이터 공유 → 데이터 분석 → 데이터 제공

2. '23년도 추진 실적

□ 우리동네 방문객 일일현황 시각화 자료 분기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한국관광데이터랩을 통해 제공

-'22년 1분기(4.25.), '22년 2분기(5.23.), '22년 3분기(8.31.), '22년 4분기(10.4.), '23년 1분기(4.20.)

3. ’24년도 추진계획

※ ‘한국 방문의 해’(2023-2024),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한시 면제함에 따라 분석 일시 중단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해당사항 없음)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분석모델 개발 및 공개	공개율 (%)	100%	100%	홈페이지 게시
‘24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분석모델 개발 및 공개	공개율 (%)	100%	100%	홈페이지 게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전화번호	02-2110-4474
담 당 자	5급 김창규	이 메 일	keguri99@korea.kr

5-4-1-1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제이주 관리와 이주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인 GCM 목표의 자발적 이행력 확보

□ 과제 내용

○ 관련법률·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국경 및 체류 관리, 이주자 인권보호 등 23개 GCM 목표의 주기적 점검 등 이행방안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8.9.) 유엔 총회, 「인간 이동의 국제협력을 위한 뉴욕 선언」을 통해 GCM 수립 약속

○ ('18.12.) 유엔 총회, GCM 승인 결의 채택

○ ('21.3.) 제1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이행점검 회의 개최

※ '20년부터 4년 주기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24년 2차 회의 예정)

○ ('22.1. ~ '22. 3.) 「이주 글로벌 컴팩트(GCM) 자발적 이행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외국인정책과)

○ 추진절차 : 유엔 이주네트워크(UNNM)* ⇌ 법무부(외국인정책과) ⇌ 관계기관(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등)

* **UNNM**(**UN** **N**etwork on **M**igration)은 국제기구 등으로 구성된 GCM 이행 지원 기구로, 국제이주기구(IOM)가 **사무국·조정자 역할**을 함

2. ’23년도 추진 실적

□ GCM 이행 점검지표* 개발 관련 1차 설문조사 응답 (’23. 9.)

○ UNNM에서 마련한 이행 점검지표 초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 요청에 따른 설문별 응답(안) 마련 및 회신

* GCM 이행 관련 진전사항에 대한 포용적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지표

3. ’24년도 추진계획

□ 이행점검 대비 내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연중)

○ 그간 GCM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 소관부서 간 협의체 마련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국제기구 요청 대응 및 이행방안 검토	대응(이행) 방안 마련	1건	1건	관련 보고서
’24.	GCM 자발적 이행점검 강화	이행실적 자체 점검 기반 마련	실적점검 협의체 구성·운영	1회 이상		운영실적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07
담 당 자	6급 이종현	이 메 일	jhl912@korea.kr

5-4-1-2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산하 이주작업반(Working Party on Migration) 회의 참석 등을 통해 국제이주 관련 연구 및 각국의 국제이주 정책에 대한 자료 공유 및 협력체계 유지

□ 과제 내용

○ OECD 이주작업반 참여

- 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 국제이주통신원(SOPEMI) 참여국으로 '국제이주전망 보고서' 기초 자료 제공 등 협력

○ OECD 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 ('23.) OECD 이주작업반 하위 전문가그룹인'국제이주통신원(SOPEMI) 참여 의사 사무국에 전달

- ('23.6.) OECD '국제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 대한민국, OECD 이주작업반 집행부로 선출

- ('23.10.) OECD '2023년 OECD 이주 전문가그룹 연례회의' (국제이주통신원(SOPEMI)) 참석

- ('23.11.) OECD 고용노동사회국 국제이주부 전문가 방문, 회의·토론회 등 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추진절차 : △OECD 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매년 국제이주전망 보고서 작성 기초자료 (통계, 주요 정책 현황) 제출

2. ‘23년도 추진 실적

○ OECD 이주작업반 회의 참석(대한민국, 이주작업반 집행부로 선출)

○ 국제이주통신원(SOPEMI) 참여

3. ‘24년도 추진계획

□ OECD 이주작업반 참여

○ 1~4분기

- OECD ‘국제이주작업반’ 이주흐름예측(MAP) TF 회의 및 예측작업 참석

○ 2분기

- OECD ‘국제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 4분기

- ‘2023년 OECD 이주 전문가그룹 연례회의’ 참석

□ 소요예산 : **총 13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3	13	0	
-국 비	▪ 일반회계	13	13	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국외여비

- OECD 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국외출장비(3,692,500 × 2명 = 7,385,000원)

- OECD SOPEMI 참석 국외출장비(2,802,000 × 2명 = 5,604,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OECD 이주작업반 참여	OECD 이주작업반, SOPEMI 참석	2회	2회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등
'24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OECD 이주작업반 참여	OECD 이주작업반, SOPEMI 등 참석	2회		회의 결과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0
담 당 자	6급 김지연	이 메 일	jikim433@korea.kr

5-4-1-3	UN대테러실(UNOCT) 업무 공조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제기구 유엔사무국 대테러실(UNOCT)과의 대테러 등 관련 정보공유 확대, 테러 분자의 입국 사전 차단 등 긴밀한 공조 체계 유지를 통한 대한민국 및 전 세계 테러 방지

☐ 과제 내용

○ 국제기구 유엔사무국 대테러실(UNOCT)과의 업무 공조 확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유엔사무국 대테러실(UNOCT)에 출입국관리공무원 파견 등 협력 방안 논의(연중)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국제기구 유엔사무국 대테러실(UNOCT)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진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24년도 추진계획

☐ UNOCT와의 공조 체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및 협의 지속 추진

* Fellowship(전문연구원) 형태 파견, 자체 고용휴직(국제기구 비용 부담), 인사혁신처 고용휴직(인사혁신처 국제분담금 부담) 재추진 등

○ 해당 과제가 국제기구(UNOCT)와의 업무 공조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다자간 국제협력 체계 유지(5-4-1-4)”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과제에 포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해당사항 없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전화번호	02-2110-4022
담 당 자	6급 전홍근	이 메 일	jeonhg94@korea.kr

5-4-1-4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협력 강화 (다자간 국제협력 체계 유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이민관련 국제기구 회의 및 워크숍 참석을 통해 해외 이민정책 동향 파악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출입국·이민 당국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간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주요 현안 발생 시 국제다자 협력체제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채널 구축

□ 과제 내용

○ UNHCR, IOM 등 국제기구 주관 워크숍·세미나 참석 및 해외 출입국·이민 당국 주관 회의 참여 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ANDEX, APEC 등 글로벌 협력체 워크숍 및 세미나에 지속 참석

○ UNHCR, IOM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출입국·이민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개최 등 교류 지속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국제회의 참가) : 국제회의 일정 사전 조사 또는 국내외 초청장 수신
- 주제에 따른 참석 여부 결정 - 회의 참석 - 결과 보고 - 결과 보고서 내부 공유
- (고위급 회의 개최) 정책수요 및 대상국가 선정 - 회의 의제 선정 - 회의 실시 - 결과 보고 - 보고서 내부 공유

2. ‘23년도 추진 실적

○ 재정착난민에 관한 실무회의(WGR)(2.27.~3.4.)

- 학생 난민 프로그램과 같은 보충적 난민 수용제도와 운영적 측면 논의

○ 아시아문서 감식네트워크 웨비나 참석(5.24.)

- 회원국 간 입출국 심사인 견본 정보 공유 논의

○ 제2차 APT 이민청장 회의(8.8.~8.12.)

- 아세안 국가와 이민정책 분야 기술·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모색

○ 이주전문가 그룹(SOPEMI) 연례회의(10.9.~10.11.)

- 지역특화비자, 총량제 등 중장기 취업이민제도에 대한 우리 정책을 홍보하고, 이민 통계 부분의 문제와 대응 방안 모색 논의

○ 아시아문서 감식네트워크(ANDEX) 제8차 연례회의(11.23.~11.24.)

- 우리나라의 최근 위변조 동향 및 감식기법에 대해 발표하고, 회원국의 국경관리 최신 동향 정보 공유

○ 제2차 글로벌 난민 포럼(GRF)(12.13.~12.15.)

- 난민과 수용국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해결책 모색 및 모범사례 공유

○ 제3회 도쿄 출입국 포럼(12.20~12.21.)

- 아시아 및 주요 선진국 출입국 당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출입국현안 논의

○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장관 및 외국인총국장 면담(3.8.)

- 양국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 및 이민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정보 상호 교환

○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장관, 이민귀화청장 면담(3.9.)

-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성과 등 양국이 축적한 정책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 확보방안 등 논의

○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이민장관 면담(3.10.)

- 이민에 대한 양국의 경험 및 이민청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 독일 연방내무부 차관 면담(3.13.)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문인력 유치 등 외국인력 정책 및 사회통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장 면담(3.14.)

- 이민·이주 관리 전담 조직 신설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포함하여 양국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장 면담(7.20)

- 테러, 난민 등 출입국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 모색

○ 몰타 총리, 외교장관 면담(9.12.)

-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추진 등 인적 교류 확대 방안 논의

○ 안도라 총리(9.14.), 외교장관 면담(9.15.)

-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 논의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정무차관 면담(10.18.)

- 이민자의 유입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와 나아가 이민자로부터 촉발되는 사회적 비용이나 갈등 문제 논의

○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 노동이민부 장·차관 면담(10.19.)

- 우수인력 유치 및 수도권 등 지역 편중화 해소 방안 논의

○ 캄보디아 이민청장 면담(12.13.)

- 양국 출입국 이민분야 상호협력 및 우호 관계 증진

3. ‘24년도 추진계획

○ ICAO, UNHCR, IOM 등 이민관련 다자 국제회의 및 발리 프로세스와 같은 지역적 안보 워크숍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체제 구축

○ 캐나다, 호주, 일본 등 해외 이민정책 담당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국가 간 인구 이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증진 방안 모색

□ 소요예산 : **총 219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18	219	0.5	
-국 비	▪일반회계	218	219	0.5	
	▪특별회계				
	▪기금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외국인본부기본경비-국제회의 참석-여비

○ 국제이민협력-이민정책개발지원-여비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 관련 국제협력 확대	다자간 국제협력 체계 유지	국제회의 참석 및 고위급 회의 개최 수	14	22	결과보고서
’24	이민 관련 국제협력 확대	다자간 국제협력 체계 유지	국제회의 참석 및 고위급 회의 개최 수	14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국제협력팀	전화번호	02-2110-4018
담 당 자	7급 오정음	이 메 일	oje0622@korea.kr

5-4-2-1	이민과 개발(Migration&Develpoment)의 정책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ODA와 이민을 접목하여, ODA 수원국 국민, 한국과 수원국의 상호 발전(개발) 방안을 정책화

□ 과제 내용

○ 법무부와 KOICA가 협력, 한국의 ODA 원조를 받고 있는 국가에서 경제발전과 인력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 발굴

- 국내 이민자 수가 가장 많으면서 ODA 대상국인 동남아 지역에서 우선 시작 후 확대

※ <예> 해외 현지 직업훈련원의 우수 수료자에게 한국으로 취업·진학 기회 제공, 귀국 시 본국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 또는 창업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10.) 4차 외국인 기본계획 「국민참여단 대면 토론회」 당시 시민참여단의 'ODA 활용' 의견 제시

2. '23년도 추진 실적

○ '23. 법무부 - KOICA 이민과 개발 정책화 관련 업무 협의('23. 9.)

3. '24년도 추진계획

○ '24. 관련 연구용역 실시(KOICA)

- 협력국을 대상으로 숙련·전문인력 양성 및 귀환 자원 관련 연구용역

※ 용역명 : 이주-개발 넥서스 프로그램 실행방안 연구 용역(KOICA 발주)

☐ 소요예산 : 비예산(타부처 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과 개발의 정책화	관련부처 논의 개시	부처간 회의 실시	1회	1회	회의 참석
'24	이민과 개발의 정책화	연구용역 시행	KOICA 연구용역 실시	1회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09
담 당 자	5급 박지원	이 메 일	jiwon093@korea.kr

5-4-2-2	출입국분야 우수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현지 공항공사·이민청 등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우수 이민행정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개발도상국 출입국 기관과 우호적 관계 조성

□ 과제 내용

○ 한국의 우수 이민행정 프로그램 해외 현지화 및 이식

- Hi-Korea(외국인온라인민원종합안내), K-ETA(전자여행허가)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의 우수행정 프로그램을 현지화 및 이식, 현지 이민행정의 효율성 제고

○ 현지 출입국 관련 공무원에게 출입국 연수 기회 제공

- 국내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출입국 공무원에게 행정 관련 연수 기회 제공, 각국 출입국공무원과의 교류 확대 및 행정능력 제고

□ 과제 추진 경과

○ ('19.11.) KOICA 요청, 미얀마 출입국 현대화 ODA 사업 현지 예비조사 참석 (2020년 미얀마 내부 상황으로 사업 중단)

○ ('20.2.) 코로나19 발생으로 ODA 현지 사업 중단('22년 하반기 재개)

○ ('23.7.) 몽골 출입국 담당 공무원 방한연수 강의 제공

○ ('23.9.) DR콩고 출입국 담당 공무원 온라인연수 강의 제공

2. '23년도 추진 실적

□ 'KOICA 정부부처제안사업'에 법무부 사업 2건 예비선정, 페루 및 파라과이 출입국현대화 ODA 현지 예비조사 실시 ('23 10~11월)

○ 페루 이민청 이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 페루 이민청의 이민행정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바이오정보 데이터 표준화

○ 파라과이 이민청 마스터플랜 수립 및 이민행정 현대화 사업

- 파라과이 이민청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종이 기반 행정작업의 디지털화

3. '24년도 추진계획

□ ODA 사업 선정

○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선정 심사 통과 시 페루·파라과이 현지 상세 조사 실시('25 ~ '29년까지 현지 ODA 본사업 진행)

※ 추후 심사결과 및 중간 평가 결과 등을 분석, ODA 대상 국가 확대 논의

□ 현행 사업 지원

○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몽골 이민청 포괄적 출입국관리 역량 강화('23 ~ '25) 사업'에 연수 강사 파견 등 출입국분야 협력

※ 2025년 사업 종료 후 다른 ODA 중점협력국 대상으로 추가 진행 예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출입국분야 우수 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페루·파라과이 ODA 사업 추진	예비조사 시행	1건	2건	사업기획서
'24	출입국분야 우수 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ODA 사업 협력	ODA 진행 사업 출입국분야 지원	1회		강의,현장투어 제공 등
			페루·파라과이 사업 진행 (선정시)	1건		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09
담 당 자	5급 박지원	이 메 일	jiwon093@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행정안전부

목 차

Ⅰ. 2024년 시행계획 총괄 ····· 365

Ⅱ. 2024년 시행계획 개요 ····· 366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367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368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3.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1-3-3-①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 기회 확대 ····· 368

1-3-3-④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 370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4-1-1-③ 재난·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 372

행 정 안 전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3	100%	35	34	△2.9%
1. 경 제	2	66.7%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1	33.3%	35	34	△2.9%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재난·재해 상황에서 외국인주민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

주요 사업내용

- 지방자치단체별「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에 외국인주민을 위촉하여 외국인주민의 정책 참여활동 기회 확대
  - 지자체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및 외국인주민 위원 위촉·운영 현황 조사
- 지자체 공무원의 외국인정책 전문성 제고 및 사회통합적 외국인주민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주관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추진
- 국민재난안전포털 영문 홈페이지(eng.safekorea.go.kr) 운영
  - 외국인 대상 국민행동요령, 대사관 정보, 시설물 정보 등 제공
- 재난안전 정보 제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Emergency Ready App)의 다국어 재난문자 서비스 확대, 외국인 이용자의 편의성 확대

Ⅰ. 2024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3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2)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합계	3개	35	34	△2.9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2개)				
1-3-1-4	행정기구 설치 시 외국인주민 현황 반영				'23년 종료
1-3-3-1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 기회 확대				비예산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비예산
소계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1개)	35	34	△2.9	
4-1-1-3	재난·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35	34	△2.9	

Ⅱ.‘24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2년 11월 기준 226만명으로 장기적 증가세

- 총인구 대비 4.4%로 2006년 외국인주민 수 조사 이래 최대 규모

※ (’15) 171만명→(’17) 186만명→(’19) 222만명→(’22) 226만명

○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주민으로서 자립 등을 위한 정책 여건 필요

2. ‘23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3년 주요과제 성과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자체 중심의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정책 사례 발굴·확산(경진대회 개최, 사례집 제작)

-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지역별·유형별 등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를 작성하여 지자체 시책수립 기초자료로 제공(‘23.11.)

- (지자체 역량강화) 지자체 외국인주민 담당자 설명회(워크숍)를 통해 시책사업, 통계 등 업무안내 및 중앙-지방 교류 활성화(권역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국인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착 지원 및 내국인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외국인주민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정책개발 역량 제고 및 맞춤형 정책 확산·공유 지원

3. ‘24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

○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등 외국인주민이 참여하는 참여기구 운영 지원

○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외국인 업무 지침서 제작·발간

○ 재난·재해 상황에서 외국인주민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3-3-1	외국인주민 지여사회 정책 참여활동 기회 확대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현황 분석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외국인 업무 지침서 제작·발간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3-3-1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 기회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의 제도개선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결정 시, 외국인주민 참여기회 확대

□ 과제 내용

○ 지방자치단체별「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에 외국인주민을 위촉하여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활동 기회 확대

- 지역 내 자조모임, 나라별 모임 등의 대표들을 위촉하여 외국인주민의 의견 정책 반영

□ 과제 추진 연혁

○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운영 활성화계획 수립·통보 : ’13. 6.

○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및 자문회의 구축·운영 현황 조사 : 매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 시도 및 시군구

○ 추진절차 : 운영지침 마련 → 자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23년도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및 자문회의 운영현황 파악(’23. 3.)

- 188개 지자체에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구성, 외국인주민을 위원*으로 위촉·운영

* 지원협의회 총 위원 2,193명 중 외국인주민 284명(12.9%) 참여, 자문회의 총 위원 154명 중 외국인주민 66명(42.8%) 참여('22.12.31. 기준)

- 조례에 근거한 지원협의회, 자문회의 외에도 대표자회의, 자율방범대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주민 참여기구 구성·운영

3. '24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및 자문회의 운영현황 파악('25. 3.)

- 지자체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및 외국인주민 위원 위촉·운영 현황 조사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활동 기회 확대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확대	외국인주민 위원 비율	14%		현황조사
'24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활동 기회 확대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확대	외국인주민 위원 비율	14%		현황조사

5. 담당자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사회통합지원과	전화번호	044-205-3254
담 당 자	6급 최유정	이 메 일	youth2030@korea.kr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자체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

□ 과제 내용

○ 지자체 공무원의 외국인정책 전문성 제고 및 사회통합적 외국인주민 시책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행정안전부

○ 추진절차 : 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주최 → 지방자치단체 참여

2. '23년도 추진 실적

□ 추진 실적

○ 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주관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추진(총 3회, 252명)

3. '24년도 추진계획

□ 추진 계획

○ 지자체 공무원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가이드북인 '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 지침서' 제작·발간

□ 소요 예산: 비예산

※ 법무부 예산 소요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공무원 외국인정책 이해도 제고	공무원 지침서 제작	제작		책자 발간

5. 담당자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사회통합지원과	전화번호	044-205-3254
담 당 자	6급 최유정	이 메 일	youth2030@korea.kr

4-1-1-3	재난 · 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재난안전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문 홈페이지 및 영문 앱(Emergency Ready App) 운영

☐ 과제 내용

○ 외국인 대상 국민행동요령, 대사관 정보, 시설물 정보 등 77종의 영문 홈페이지(eng.safekorea.go.kr) 운영

○ Emergency Ready App을 통해 재난문자(영어·중국어), 대사관, 대피시설 등 36종의 재난안전 정보를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제공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Emergency Ready App(영어) 서비스 개시('14.3월)

○ Emergency Ready App(중국어) 서비스 추가('17.1월)

○ Emergency Ready App에 재난문자 영어, 중국어 제공('18.1월)

○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영문 서비스 실시('20.8월)

○ Emergency Ready App(일본어) 서비스 개시('22.8.10)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유지관리업체(유큐브)

○ 추진절차 : 사업발주 및 재난정보제공 → 유지관리 사업 관리 → 정보시스템 관리 및 재난정보 현행화

2. ‘23년도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시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시스템 개선 : ’23. 7월

- (앱) DB 2대의 CPU 증설(AltiBase 8→16 core), L4 장비 옵션 조정 등 3건

- (포털) DB 증설(Tibero 20→24 core), WAS 메모리 값 설정 등 3건

○ Emergency Ready App 자료 현행화 : ’23. 1. ~ 9월

- 대피시설, 의료시설응급 시설의 전화번호 및 주소 등(2,335건)

3. ‘24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Emergency Ready App 다국어 재난문자 서비스 확대

○ 외국인 이용자의 편의성 확대

- 위치기반 원스톱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소요예산 : **총 34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35	34	△2.9	
-국 비	▪ 일반회계	35	34	△2.9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국민재난안전포털(영문) 유지관리 : 금33,996,000천원

- 309,055,000*10%*1.1=33,996,000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재난·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Emergency Ready App 이용 확대	연간 앱 설치 건수 (최근 5년 평균)	12,100건		앱 다운로드
'24	재난·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Emergency Ready App 이용 확대	연간 앱 설치 건수 전년대비 2% 증가	12,342건		앱 다운로드

5. 담당자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정보센터 재난정보통신과	전화번호	044-205-5388
담 당 자	6급 차진호	이 메 일	cjh1288@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2024년 시행계획 총괄 ····· 378

Ⅱ. 2024년 시행계획 개요 ····· 379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384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387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4.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1-4-1-① K-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 발굴 ····· 387

1-4-1-② 크루즈 관광 활성화 ····· 390

1-4-1-⑤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393

1-4-2-③ 외국인 유치 활성화 ····· 395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2.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3-2-2-①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 398

3-2-2-②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400

3-2-2-③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 403

3-3-1-③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 ····· 406

문화체육관광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8	100%	26,074	28,530	9.4%
1. 경 제	4	50%	24,801	27,090	9.2%
2. 안 전					
3. 통 합	4	50%	1,273	1,440	13.5%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K-컬처 융합형 한국관광프로그램 발굴 및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 **지속 가능한 크루즈관광 성장 기반 구축**
-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배경 다양화에 따른 타 문화 이해 증진 및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주요 사업내용

- K-컬처와 K-관광을 융합하여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
  - 케이팝 콘서트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한류 테마 대표코스 지속 발굴,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연계 방한상품 개발·판촉 강화, K-뷰티·패션·의료 융합 대규모 페스티벌 개최
- 의료·웰니스관광 활성화 및 지역별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거점 구축
- 크루즈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크루즈 관광산업 기반 조성 및 크루즈 상품 개발
  - 크루즈 거점 지사를 활용한 해외 통합 마케팅, 해외 크루즈박람회 참가를 통한 외국 선사 등 대상 세일즈콜 실시,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 마트 등 행사 개최
- 문화다양성의 날(5.21.), 문화다양성 주간(5.21.~27.) 운영 및 기념행사 개최 등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매개체로서의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Ⅰ. 2024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8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4)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4)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합계	8개	26,074	28,530	9.4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4)	24,801	27,090	9.2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 발굴	8,000	11,000	37.5	
1-4-1-2	크루즈 관광 활성화	570	570	-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	-	비예산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16,231	15,520	△4.4	
소계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4)	1,273	1,440	13.1	
3-2-2-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200	150	△25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504	500	0.8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500	620	24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	69	170	146.3	

Ⅱ. '24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23년 말까지 세계관광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의 약 90%까지 회복 전망(UNWTO, '23), 국제관광시장 내 주도권 경쟁 치열

○ K-컬처에 대한 호감을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개별관광·체험형으로 변화된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필요

※ 한국방문 선택 시 고려요인 '패션·유행 등 세련된 현대문화 체험' 15.8%(2022 외래관광객조사)

※ 2022년 기준 해외 한류동호회 회원 수 1억 7,883만 명(한국국제교류재단)

□ 크루즈관광 산업 전략적 육성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필요

○ 대만, 일본, 구미주 등 수요시장별 맞춤형 기항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유치마케팅 추진 필요

○ 국내·외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동 및 기타 대내외 회의 개최·참가를 통한 크루즈 방한 유치 기반 강화

□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 등 새 정부 국정과제 핵심과제 신속 추진을 통한 관광산업 재도약 및 방안시장 조기 회복 지원

□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성장 규모 및 펜데믹 이후 건강한 여행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른 의료·웰니스관광 사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지역별 의료·웰니스관광 융복합 거점 조성 필요

○ 성장가능성이 높은 의료·웰니스관광을 한국관광 대표 콘텐츠화하며, 지자체 연계한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마케팅 등 성장 지원 필요

※ ('19) 1,050 → ('20) 710 → ('21) 820 → ('23) 1,200 → ('25) 1,820억 달러로, '23년부터 연평균 49% 성장 전망 * 한국경제TV('23)

□ 이주배경주민 증가 및 고령화 등 인구구성 다변화로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제고하여 타문화 이해도·포용도 증진 필요

○ 체류외국인 증가('22년 225만명, 전체 인구의 4.37%), 저출생·고령화 심화('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22년 합계출산율 0.78로 역대 최저치), 국제이주 증가 등으로 인구구성이 급변하면서 구성원의 문화적 배경이 점차 다양화

○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회 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기반 강화 필요

□ 전 세계적인 생산 인구 감소,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급증(116만명('08) → 300만명 초과 예상('30), 158% 증가) 등 국내외적 인구 환경 변화 지속

○ 체류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 체계를 적시에 수립하여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는 사회통합 추진

- 사회통합 1차 과제인 의사소통 해결을 통하여 통합촉진 기반 마련

2. '23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3년 주요과제 성과

○ K-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 발굴

- K-팝 연계 방한 관광상품화 지원 통해 외래객 유치(2.6만 명), K-드라마·영화 등 한류 테마 대표코스 개발(91건) 및 상품운영(1,500여 명)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선정('23.1월) 및 상품개발·모객(87건, 총 1,444명)

- K-관광 주요 쇼핑 테마인 'K-뷰티'를 중심으로 여름 성수기 관광축제 '코리아서머뷰티세일' 개최(187개 기업 참가, 외래객 6,500여 명 참여)

○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 크루즈 거점지사 활용 시장별 차별화된 방한 크루즈 유치 마케팅 기반 마련(뉴욕, 타이베이, 프랑크푸르트, 도쿄, 베이징, 상하이)

· 해외 크루즈박람회 참가*를 통한 국내 크루즈업계 판로 개척

* Seatrade Cruise Global('23.4월), Taipei International Travel Fair('23.11월)

· 2023 한국테마관광박람회 연계 크루즈박람회 개최(10.11, 서울)

- 지자체·선사·전문여행사 협력으로 5대 기항지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 관계 부처, 지자체 등 협력 크루즈발전협의회 개최 및 크루즈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22.12.12) 및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관련 관광업계 간담회 개최('23.3.2)

○ 의료·웰니스관광 활성화 및 지역별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거점 구축

- 지역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신규 선정 및 지원(6개 지역) 및 웰니스관광 콘텐츠 확대 선정('22년 58개 → '23년 64개)

- 한국의료관광대전(해외 3회) 및 웰니스관광페스타(국내 1회) 등 적극적인 의료·웰니스 홍보마케팅 실시 및 의료관광 유치업체 공모전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10개) 등

○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행사 프로그램 추진 확대

-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21.) 기념 전국 단위 주간행사 개최

-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대상 연수 운영(4종) 및 문화다양성 교과서 활용학교 지원(4개교)

○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매개체로서의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 한국어 표준교육과정(문체부 고시, '20.11.) 기반, 취업・한국어문화 통합 교육과정(총론, 내용 체제,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 활용 등) 및 교재・학습 콘텐츠 등 개발 전략계획 수립 포함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없음

3. ‘24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K-컬처와 K-관광을 융합하는 공세적 전략으로 K-컬처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

○ 케이팝 콘서트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한류테마 대표코스 지속 발굴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연계 방한상품 개발·판촉 강화

○ K-뷰티·패션·의료 융합 대규모 페스티벌 개최

□ 지속 가능한 크루즈관광 성장 기반 구축

○ 맞춤형 기항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크루즈 관광기반 조성

○ 글로벌 크루즈 선사·업계 방한 초청 확대, 해외 크루즈 박람회 참가 및 한국크루즈관광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 크루즈업계 판로 개척

□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관광수출산업의 무기인 K-컬처 활용으로 성공적인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으로 K-컬처 관광대국 실현을 위한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운영 (‘23.5.8~/훈령 시행일로부터 2년(한시조직))

□ 의료·웰니스관광 활성화 및 지역별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거점 구축

○ 경쟁국 대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선제적 홍보마케팅 강화

○ 국내외 의료·웰니스관광박람회 개최 및 의료관광 유치업체 육성지원

○ 웰니스·의료관광의 연계성을 강화한 융복합 클러스터 운영 지원

□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배경 다양화에 따른 타 문화 이해 증진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 문화다양성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추진,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5.21.~27.) 및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운영

□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매개체로서의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 ’23년 1차 연도 결과물(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과정)의 현장 검증 및 수정·보완(교재 개발 요구 조사 및 대표 표본 단원 만족도 조사 포함)

- 입문, 기초의 단계별 교재 개발 및 자문·감수 진행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8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 K-팝 지원대상 콘서트 선정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재선정	문체부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크루즈 거점 지사를 활용한 해외 통합마케팅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운영	문체부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중간평가·지원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3-2-2-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시 계획 수립	문체부 문화정책과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 행사 및 홍보계획 수립	문체부 문화정책과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 전문인력 양성 온/오프라인 과정 개발 계획 수립 ▪ 교육과정 연계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지원계획 수립	문체부 문화정책과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8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 한류관광 상품화 지원 설명회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관광상품화 및 해외 홍보 마케팅 실시 ▪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	문체부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크루즈 유관기관 협력 및 크루즈 박람회 개최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운영	문체부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의료·웰니스관광행사 개최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3-2-2-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시	문체부 문화정책과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 행사 및 홍보계획 수립	문체부 문화정책과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 전문인력 양성 온/오프라인 과정 개발 ▪ 교육과정 연계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지원 추진	문체부 문화정책과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8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 K-팝 콘서트 연계 상품화 및 홍보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관광상품 모객추진 및 해외 홍보마케팅	문체부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크루즈관광 상품개발 및 기항지 홍보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운영	문체부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의료·웰니스관광 기반조성 및 홍보마케팅 전개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3-2-2-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시	문체부 문화정책과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 행사 및 홍보계획 수립	문체부 문화정책과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 전문인력 양성 온/오프라인 과정 개발 ▪ 교육과정 연계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지원 추진	문체부 문화정책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8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 한류관광 성과 정리 및 개선 방안 도출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관광상품 모객추진 및 해외 홍보마케팅	문체부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크루즈관광 상품개발 및 기항지 홍보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운영	문체부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의료·웰니스관광 기반조성 및 홍보마케팅 전개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3-2-2-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조사 보완계획 수립	문체부 문화정책과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 행사 및 홍보계획 수립	문체부 문화정책과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 전문인력 양성 온/오프라인 과정 운영 ▪ 교육과정 연계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지원 결과 환류	문체부 문화정책과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 발굴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K-컬처와 관광의 융합으로 한국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콘텐츠 확충

○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 특별하고 희소한 경험 발굴

□ 과제 내용

○ (K-팝 콘서트 연계) 지자체·민간 주최 K-팝 콘서트 지원(2~5억원/공모 등 통해 5개 내외 선정), 콘서트 연계 방한상품화 및 한국관광 홍보

○ (한류테마 대표관광코스) K-콘텐츠를 활용한 글로벌 한류 팬 맞춤형 대표코스 추가 발굴 및 여행 상품화

- 가이드북 발간 및 해외 현지 배포, 여행업계 설명회 개최 및 온라인 여행사(OTA) 프로모션 협의 등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재선정 및 방한 상품 개발, 해외현지 홍보('24.1월~)

※ 연중 상시 K-컬처를 즐길 수 있는 현장체험형 국내 개최 이벤트

○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민간협력형 뷰티 이벤트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24.6월 예정)

- 외래객 대상 헤어, 뷰티, 패션 등 K-뷰티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대규모 프로모션·이벤트 진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22.12.12)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K-팝 등 연계 한류관광 활성화) 문체부→한국관광공사→(지자체)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문체부→한국관광공사(해외지사)
-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문체부→(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 추진절차

- (K-팝 등 연계 한류관광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 수행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직접 수행
- (코리아뷰티페스티벌)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K-팝 콘서트(5개) 및 연계 방한관광 상품화 지원(2.6만 명 유치)

○ 한류테마대표코스 개발(91건) 및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한 여행상품 운영

※ 19개 여행사, 49개 상품 운영, 총 1,500명 정도(실적 취합 중)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연계 상품 개발·운영(87건, 총 1,444명)

○ 여름 성수기 관광축제 '코리아서머뷰티세일' 개최(7.20~8.20)

※ 뷰티업계 등 187개 기업 참가, 방한 외래객 총 6,500여 명 참여

3. '24년도 추진계획

□ 사업별 추진일정

○ (K-팝 콘서트) 지원대상 콘서트 선정(~3월), 상품화 및 홍보(5~11월)

○ (한류테마 대표관광코스) 사업설명회 개최(~4월) 및 운영지원(3~4분기)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100선 재선정(1월 초), 상품개발 및 홍보(2~4분기)

○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분야별(메이크업, 헤어, 패션) 민간 연계 체험·할인 프로모션 구성, 권역별 뷰티 거점 공간 조성 등(~6월)

☐ 소요예산 : **총 11,00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8,000	11,000	37.5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8,000	11,000	37.5	문체부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한류관광 활성화: K-팝 관광활성화(7,000백만원×1식), K-드라마 관광활성화(4,000백만원×1식)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K-팝 공연 연계 외래객 유치	K-팝 공연 연계 외래객 유치 인원수(명)	20,000	21,240	실적보고서 결과 취합
'24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K-팝 공연 연계 외래객 유치	K-팝 공연 연계 외래객 유치 인원수(명)	22,000	-	실적보고서 결과 취합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한류지원협력과	전화번호	044-203-3338 044-203-3337
담 당 자	주무관 류덕호 사무관 김영은	이 메 일	gaon38@korea.kr minor10@korea.kr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전화번호	044-203-2783 044-203-2782
담 당 자	주무관 김기강 사무관 김규영	이 메 일	nefu0220@korea.kr kgy0328@korea.kr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해운·관광·레저가 결합되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크루즈관광산업 육성으로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과제 내용

○ 항만·관광·출입국 인프라 개선 및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 강화

- 항만 인근 복합관광시설·안내센터·대중교통 및 스마트 관광인프라 지원으로 크루즈 관광객 편의 제고

- 크루즈 개별관광 수요 대응을 위한 수용여건 개선 및 한국형 테마상품 개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크루즈발전협의회 해수부 공동 추진·개최(2016년~)

○ 크루즈 거점 지사 운영(2018년~, 4개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 추진절차 : 사업계획 확정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크루즈 외래관광객 유치 및 크루즈관광산업 기반조성

○ 국내 크루즈 주요 사업 및 주요 크루즈 선사 운항 계획 공유, 크루즈 관광 재개 후속 현안 논의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5.9, 7.12)

○ 2023 한국테마관광박람회 연계 크루즈박람회 개최(10.11, 서울)

- 33개 기관·업체 참가(국내 16개, 해외 17개사), B2B상담 156건, 참가기관 예상매출액 약 27.5억,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4.54/5점(전년대비 0.07점 증)

○ 크루즈 거점지사 6개소 운영을 통한 해외 현지 마케팅 강화(뉴욕, 타이베이, 프랑크푸르트, 도쿄, 베이징, 상하이)

○ 국내 크루즈 기항지 관광 통합 자료집 제작

3. '24년도 추진계획

□ (연중) 크루즈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 크루즈 거점 지사를 활용한 해외 통합 마케팅(연중)

□ (1분기) 크루즈 관광산업 기반조성

○ 해외 크루즈박람회 참가를 통한 외국 선사 등 대상 세일즈콜 실시

□ (2분기) 크루즈 관광산업 기반조성

○ 크루즈발전협의회 개최(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제11회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 마트 등 행사 개최

□ (3,4분기) 크루즈 상품개발

○ 크루즈관광 상품개발 및 기항지 홍보

□ 소요예산 : **총 57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570	570	0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570	570	0	문체부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크루즈 외래관광객 유치 470백만원

○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80백만원

○ 크루즈 관광산업 기반조성 2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크루즈 관광 활성화	크루즈 관광객 수 증가	크루즈 관광객 입국자 수 증가율(%) (당해년도 크루즈 관광객수-전년도 크루즈 관광객수) / 전년도 체류자수	5	집계중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크루즈통계
'24	크루즈 관광 활성화	크루즈 관광객 수 증가	크루즈 관광객 입국자 수 증가율(%) (당해년도 크루즈 관광객수-전년도 크루즈 관광객수) / 전년도 체류자수	5	-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크루즈통계

* 코로나 기간 이후 크루즈관광객 실태조사 미실시, '23년부터 성과목표 기준 재설정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전화번호	044-203-2873 044-203-2885
담 당 자	주무관 정다희 사무관 노학래	이 메 일	dada6008@korea.kr rhl0095@korea.kr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방문을 촉진함으로써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관광수출산업의 무기인 K-컬처 활용으로 성공적인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으로 K-컬처 관광대국 실현을 위한 전담 추진부서 필요

☐ 과제 내용

○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신설 및 운영

- (소속 및 직제) 문체부 관광정책국 내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신설
- (직제 성격 및 근거) 별도정원 조직으로 운영, 국무총리 훈령 ‘관광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근거 마련
- (규정 제정) ’관광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5.8)
- (기간) 훈령 시행일(5.8)로부터 2년(한시조직, 별도정원)

* 총리훈령 제정 시행일로부터 조직 운영 시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22.12.12)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관련 관광업계 간담회 개최(’23.3.2)

☐ 추진체계

○ 해당없음

2. ‘23년도 추진 실적

○ ‘관광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23.5.8)

○ K-관광협력단 출범(‘23.5.23)

3. ‘24년도 추진계획

○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운영(‘23.5.8~)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화,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 등

☐ 소요예산 : 해당없음(비예산)

☐ 산출내역 : 해당없음(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신설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신설 및 운영(회)	1	1	-
’24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신설 및 운영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신설 및 운영(회)	1	-	-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전화번호	044-203-2783 044-203-2782
담 당 자	주무관 김기강 사무관 김규영	이 메 일	nefu0220@korea.kr kgy0328@korea.kr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의료·웰니스 관광산업의 육성 및 홍보마케팅,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외국인 환자 및 보호자 대상 관광 경험 제공,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 과제 내용

○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적 해외 홍보·마케팅 실시 및 국내 수용여건 개선, 유치업체 육성 등

○ 웰니스관광 기반조성 및 콘텐츠 발굴 확대, 웰니스관광 체험지원 등

○ 지역별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운영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09.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법적 근거 마련(관광진흥법 제12조의2)

○ 2010. 의료관광 육성 사업 추진, 2017. 웰니스관광 육성 사업 추진

○ 2014. 의료관광 클러스터 지원, 2018.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 추진절차 : 사업계획 확정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의료·웰니스관광 활성화 및 지역별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거점 구축

○ 지역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신규 선정 및 지원(6개 지역) 및 웰니스관광 콘텐츠 확대 선정('22년 58개 → '23년 64개)

○ 한국의료관광대전(해외 3회) 및 웰니스관광페스타(국내 1회) 등 적극적인 의료·웰니스 홍보마케팅 실시 및 의료관광 유치업체 공모전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10개) 등

3. ‘24년도 추진계획

□ (연중)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 의료관광 주요 거점 지사를 활용한 해외 통합 마케팅(연중)

□ (1분기) 의료 및 웰니스관광 기반조성

○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1차년도 중간평가 및 운영지원

○ 우수 웰니스관광지 발굴 및 선정

□ (2분기) 의료·웰니스관광 행사 개최

○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의료·웰니스) 개최 및 연계 마케팅 추진

□ (3분기) 의료·웰니스관광 기반조성 및 홍보마케팅 전개

○ 웰니스관광 협의체 운영 및 해외 한국의료웰니스관광대전 개최

□ (4분기) 의료·웰니스관광 기반조성 및 홍보마케팅 전개

○ 웰니스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해외 한국의료관광대전 개최

□ 소요예산 : **총 15,52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6,231	15,520	△4.4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3,000	100	문체부
	▪ 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13,231	9,520	△28	문체부
-지방비	▪ 광역시·도비	3,000	3,000	0	광역지자체6개소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의료관광 육성 5,360백만원

○ 웰니스관광 육성 4,160백만원

○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운영 지원 6,00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의료관광 육성	의료관광 확대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 (만명)	27만명	(집계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집계
'24	의료관광 육성	의료관광 확대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 (만명)	29만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집계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전화번호	044-203-2887 044-203-3480
담 당 자	주무관 이예은 사무관 노학래	이 메 일	yenerge20@korea.kr rhl0095@korea.kr

3-2-2-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 기반 마련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10년) 및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14년)에 따라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

□ 과제 내용

○ 문화다양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년 주기로 문화다양성에 관한 국민의식, 문화향유 및 창조의 실태에 관한 조사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3년)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실시

○ ('15년)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실시

○ ('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시범실시

○ ('18년) 정책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연구 실시

○ ('20년) 2020 문화다양성 시범조사 실시

○ ('22년) 2022 문화다양성 시범조사 실시

○ ('23년) 2023 문화다양성 시범조사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전문연구기관

○ 추진절차 : 조달청 공공입찰 통한 용역기관 선정 → 계약체결 및 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2022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체계 보완 및 유사통계 분석 등 시범조사 실시

3. ‘24년도 추진계획

□ (1분기) ‘24년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 국가통계 승인신청을 위한 유사 조사·통계 분석 등 조사방향 수립

□ (2-4분기) 조사 추진 및 결과 분석

○ 202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체계 보완 및 국가통계 승인신청, 실태조사 추진

□ 소요예산 : **총 15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00	150	△25.0	
-국 비	▪ 일반회계	200	150	△25.0	문체부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150백만원(1식×15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실태조사 추진	실태조사 추진	1	1	연구결과
‘24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실태조사 추진	실태조사 추진	1	-	연구결과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515 044-203-2516
담 당 자	주무관 이다현 사무관 양성미	이 메 일	dahyun123@korea.kr mymariah20@korea.kr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정 문화다양성 주간(5.21.~5.27.) 행사를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사회통합,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정책 공감대 형성

□ 과제 내용

○ 국제연합(UN) 지정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21.) 기념 문화다양성 주간(5.21.~5.27.) 행사 개최(1회)

-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해 공연, 전시, 강연, 포럼, 참여형 캠페인 등 다양한 기획프로그램 운영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정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지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14.11.29.) 이후 매년 추진(~'15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60호)

○ 추진절차 : 위탁계약 체결(문체부·예술위) → 용역기관 선정(예술위) → 주간행사 추진(주최: 문체부, 주관: 예술위) →대금 지급 및 결과보고(예술위) →감사(문체부)

2. '23년도 추진 실적

□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21.) 기념 전국 12개 지역에서 주간행사 개최(5.21.~5.27.)

○ 2023 문화다양성 주간 정책포럼*, 문화다양성 큐레이션전(展)**, 음악회 및 강연·토크콘서트, 참여형 캠페인 및 미디어 협업프로그램 등 운영 (52만여명 참여)

* 대학다양성협의회 발족식 연계 민-관 합동 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정책 거버넌스 확대

** 저명인사 10인이 추천하는 문화다양성 도서·음악·영화 추천 온라인 전시

3. '24년도 추진계획

☐ (1분기)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및 홍보계획 수립

☐ (2분기)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개최

☐ (3~4분기) 문화다양성 정책 홍보 추진

☐ 소요예산 : **총 50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504	500	△0.8	
-국 비	▪ 일반회계	504	500	△0.8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문화다양성 주간 대국민 캠페인 추진 50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 지원 및 캠페인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개최 횟수	1	1	실적보고서
'24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 지원 및 캠페인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개최 횟수	1	-	실적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523 044-203-2516
담 당 자	주무관 손지은 사무관 양성미	이 메 일	sjn912@korea.kr mymariah20@korea.kr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대상별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제고

□ 과제 내용

○ (교과연구 지원) 중·고교 문화다양성 교과서 활용지원 등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한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활동 지원

○ (전문인력 양성) 교원·문화기관종사자·콘텐츠제작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5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지침서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 ('16년~'17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1기, 4개교),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18년~'19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2기, 4개교),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20년~'21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3기, 3개교), 교사연구회 1개교 지원,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22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4기, 2개교), 교사연구회 1개교 지원,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23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5기, 4개교),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추진절차 : 위탁계약 체결(문체부·예술위) → 용역기관 선정(예술위) → 교육 운영 → 대금 지급 및 결과보고(예술위) →감사(문체부)

2. ‘23년도 추진 실적

□ 교과연구 지원(4개교)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4종) 운영에 3,768명 참여

○ (교과연구 지원) 교과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중·고등 각 2개교)

○ (전문인력 양성) 교원・문화기관종사자(지역문화재단 등)・문화콘텐츠 제작자(감독·작가 등) 대상 직무연관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교육과정 개발·운영(온·오프라인 연수), 성인 대상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2회)

3. ‘24년도 추진계획

□ (1분기) 교과 지원(교과서 개정 추가)*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추진계획 수립

※ <문화다양성의 이해> 교과서 개정(중·고교 각 1종, ‘22년도 교과과정 반영)

□ (2-3분기) 旣 개발 교육과정 운영 및 개정교과서 집필

□ (4분기) 운영 결과 환류 및 개정교과서 인정 추진

□ 소요예산 : **총 62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500	620	24	
-국 비	▪ 일반회계	500	620	24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 460백만원

○ 교육과정 연계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지원 40백만원

○ 교과서 개정 연구 12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교육참가자 문화다양성 인식제고정도(점)	83.4	83.6	실적보고서
'24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교육참가자 문화다양성 인식제고정도(점)	84	-	실적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515 044-203-2516
담 당 자	주무관 이다현 사무관 양성미	이 메 일	dahyun123@korea.kr mymariah20@korea.kr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 교육 체계 수립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속 증가, 구성 다변화에 따라 사회통합 1차 과제인 의사소통 해결을 통하여 통합촉진 기반* 마련

※ 한국어 취약층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보호를 통하여 사회통합 연착륙을 도모

□ 과제 내용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 한국어 표준교육과정(문체부 고시, '20.11.) 기반, 취업· 한국어문화 통합 교육과정(총론, 내용 체제,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 활용 등) 및 교재·학습 콘텐츠 등 개발 전략계획 수립

- 입국 전후별·체류 외국인 체류 경로 및 생애 주기 등 이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장기체류 목적의 사회통합 한국어 교육 내용 체계 구축

○ 외국인 근로자 교재 개발

- '23년 1차 연도 결과물(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과정)의 현장 검증 및 수정·보완(교재 개발 요구 조사 및 대표 표본 단원 만족도 조사 포함)

- 입문, 기초, 심화의 단계별 교재 개발 및 자문·감수 진행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 추진계획(안)

1차 연도('24년)	2차 연도('25년)	3차 연도('26년)
•기초 연구, 만족도·요구 조사 등 •교재 모형 및 교수요목 설계 •대표 단원 제작 및 현장 적용 •입문, 기초1 단계 집필	•1차 연도 집필 결과물의 현장 검증 및 수정·보완 •기초2 단계, 심화1 단계 교재 집필 •입문, 기초1 단계 교재의 부속 자료 집필	•2차 연도 집필 결과물의 현장 검증 및 수정·보완 •심화2 단계 집필 및 기초2, 심화 단계 부속 자료 집필
※ 입문, 기초1 단계 가본 제작	**※ 입문·기초 1단계 교재 편집·제작, 기초 2단계와 심화 1단계의 교재 가본, 입문·기초 1단계 부속 자료 제작**	**※ 2~3차 연도 집필 결과물의 편집·제작 완료**

□ 과제추진 연혁(경과)

○ 2023.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수록

○ 2023. 12.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 추진체계

○ 추진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법무부(협업)→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 추진 절차: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쓰일 교재 개발을 고려하여 구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구성(안)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단계</th></tr>
<tr><td colspan="2">입문</td><td colspan="2">입국 준비 단계</td></tr>
<tr><td rowspan="2">기초(초급)</td><td>기초 1</td><td rowspan="2">입국 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단계</td><td>생활 한국어 학습 단계</td></tr>
<tr><td>기초 2</td><td>근로 현장 한국어 학습 단계</td></tr>
<tr><td rowspan="2">심화(중급)</td><td>심화 1</td><td rowspan="2">정착 이후 장기
체류를 위한 단계</td><td>직군별 의사소통 능력 함양 단계</td></tr>
<tr><td>심화 2</td><td>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 단계</td></tr>
</table>

3. ‘24년도 추진계획

□ 분기별 계획

○ 1/4분기: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 계획 수립

○ 2/4분기: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 착수

○ 3/4분기: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 추진

○ 4/4분기: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 완료

☐ 소요 예산 : 총 17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69	170	146.3	
-국 비	▪ 일반회계	69	170	146.3	문체부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 내역

○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재 개발 1×170,000,000원

- 입문, 초급 1단계 교재 개발 등 포함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 근거
’2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 교육 체계 수립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건수(종)	1	1	결과보고서
’24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 교육 체계 수립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건수(종)	1	-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전화번호	02-2669-9742
담당자	연구관 구지민	이메일	gujm@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Ⅰ. 2024년 시행계획 총괄 ····· 412

Ⅱ. 2024년 시행계획 개요 ····· 413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416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419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1-2-2-②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 419

1-2-3-② 농어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 421

1-2-3-③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423

1-3.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1-3-1-③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425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3.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3-3-1-② 결혼이민자 영농정착 강화 ····· 427

5.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5-1.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5-1-2-①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 430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6	100%	1,951	4,147	112.6%
1. 경 제	4	66.7%	618	3,430	455.5%
2. 안 전					
3. 통 합	1	16.7%	1,333	717	△46.2%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1	16.7%			

추진 방향

- **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한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영농 후계인력으로 육성 및 지역 통합을 위한 결혼이민여성 역량 강화**

주요 사업내용

- 농촌지역 단기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

  * '23년 19개소, 990명 → '24년 70개소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허용 분야 확대 및 계절근로자 운영상황 점검, 개선안 발굴

- 결혼이민여성의 요구 및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단계별 농업교육’, ‘1:1 맞춤형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영농정착지원’ 운영

  - 결혼이민여성 대상 농업교육으로 후계 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가족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한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부처 추천제 운영 및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고용주 대상 숙련기능인력제도 홍보

  - 농업분야 외국인력 장기체류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Ⅰ. 2024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6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4)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1)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1)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합계	6개	1,950.5	4,147	112.6	'-'의 경우 '△'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4)	617.5	3,430	455.5	-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	-	-	비예산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	-	-	비예산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	-	비예산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617.5	3,430	455.5	-
소계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1)	1,333	717	△46.2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1,333	717	△46.2	계속사업
	5.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	-	-	비예산

Ⅱ.'24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농업분야 숙련기능 인력 부처 추천제 운영 효율화 및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고용주 대상 숙련기능인력제도 홍보 강화

○ 농업분야 외국인력의 안정적 취업 및 장기체류를 위해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숙련기능인력 제도개선 추진 정책 마련 필요

□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자녀세대의 성장에 따라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영역의 확대 필요성이 증대

○ 영농의지가 있는 농촌 결혼이민여성 대상 농업교육으로 후계 농업인력 육성 지원 정책 수립필요

* 국제결혼 비율(전국/농림어업종사자 남성) : ('20) 5.2%/13.3% →('22) 6.3%/16.7%

○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지역 내 이해도 증진을 통한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 정책 수립 필요

*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구수/비율 : ('20) 39,658/22.9 →('21) 39,725/22.8 →('21) 38,513/21.9

2. '23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22년 5개(시범사업) → '23년 19개(본사업)

○ 1개월 미만의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서도 최소 '日'단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형 계절근로' 마련 및 본사업 추진

* '22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3년에는 공공형 계절근로 개소수 및 도입인원을 대폭 확대('22: 5개소, 190명→ '23년 19개소, 990명)하여 추진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통해 단기인력이 필요 농가는 필요한 기간만큼 인력 공급, 근로자는 공동 숙소에서 지내며 통역·건강보험 등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자 활동 현황>



<공공형 계절근로자 교육>



<공공형 계절근로자 문화체험 행사>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과정 운영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 결혼이민여성의 정착단계 및 영농지식 수준에 따라 농업교육을 단계별(기초-심화과정)로 세분화하여 운영

- 농업종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과 전문여성농업인을 연계하여 맞춤형 1:1 농업교육 및 생활상담 등을 통해 후계 농업인력 육성에 기여

○ 다문화가족 영농정착 지원 과정 운영

-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가족구성원 간 이해도 향상, 지역주민과의 교류확대 및 농업농촌 가치 이해교육 운영

- 청소년 전문교육기관(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과 협력하여 청년농업인과의 대화, 농업분야 진로탐색 과정 등을 운영하여 농업농촌 차세대 주역 양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없음

3. ‘24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단기인력 수요에 대응한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23: 19개소 → ’24: 70)

☐ 영농후계인력으로 육성 및 지역통합을 위한 결혼이민여성 역량강화

○ 결혼이민여성의 요구 및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단계별 농업교육’ 및 ‘1:1 맞춤형 농업교육’ 운영

- 재배작물의 종류확대 및 실습교육 확대 등 영농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교육과정 개발·확대 추진

-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수준을 고려하여 교재 내 어려운 용어 변경, 한국생활에 대한 내용 및 양성평등·다문화 정책 내용추가 등 교재개편

- 결혼이민여성 및 멘토의 교류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정착지원, 역량 강화 추진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강화 및 청소년의 농업농촌 정착지원 등을 위한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운영

- 청소년과정 운영을 통해 진로상담 및 교류확대 지원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6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협조)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제도 운영방안 수립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협조)	▪ 농업분야 외국인력 장기체류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2-3-3	단순노무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24년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시범사업 홍보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주관)	▪ '24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시행지침 마련('24.1월~) ▪ '24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24.1월~) ▪ '24년 사업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24.1월)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교육계획 수립 및 사업 승인(~24.2월) ▪ 교육 운영 기관 선정 및 교육 대상자 모집(~23.3월)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협조)	▪ '24년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 심사협의회('23.12월) ▪ '24년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연중)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연중)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6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협조)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제도 운영 및 홍보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협조)	▪ 농업분야 외국인력 장기체류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2-3-3	단순노무분야 외국인력 허용	▪ '24년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농식품부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확대	(E-9) 고용허용 신청 접수	식품외식산업과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주관)	▪ '24년 상반기 현장점검('24.6월)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지역별 업무 담당자 및 멘토 사전교육(~'24.4월) ▪ 농업 및 정착지원 교육과정 진행('24.4~10월)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협조)	▪ '24년 하반기 계절근로 배정 심사협의회('24.上)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6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협조)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제도 운영 및 홍보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협조)	▪ 농업분야 외국인력 장기체류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2-3-3	단순노무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24년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시범사업 평가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주관)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연중)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교육 현장 점검('23.6~9월) ▪ 교육 만족도 조사('23.9~10월)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협조)	▪ '24년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연중)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6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협조)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제도 운영 및 홍보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협조)	▪ 농업분야 외국인력 장기체류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3-3	단순노무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24년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시범사업 평가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주관)	▪ '24년 하반기 현장점검('24.11월)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교육완료 및 워크숍('24.11월) ▪ 교육결과 및 정산보고('24.12월)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협조)	▪ '24년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연중)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협조)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숙련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E-9, H-2 등)를 점수제로 평가하여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고, 국내 정주유도

□ 과제 내용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부처추천제 운영 및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고용주 대상 숙련기능인력제도 홍보 등

* 구인난이 심한 산업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E-7-4) 공급을 위해 농업·어업·제조업·뿌리산업·건설업·조선업 등 산업별 별도 쿼터 운영 중(법무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숙련기능인력 제도시행('17년)

○ 농업분야 별도 쿼터 운영('19년)

* 농업쿼터 : ('19) 50명 → ('20) 50 → ('21) 50 → ('22) 150 → ('23) 1,600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24.1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주관), 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 등(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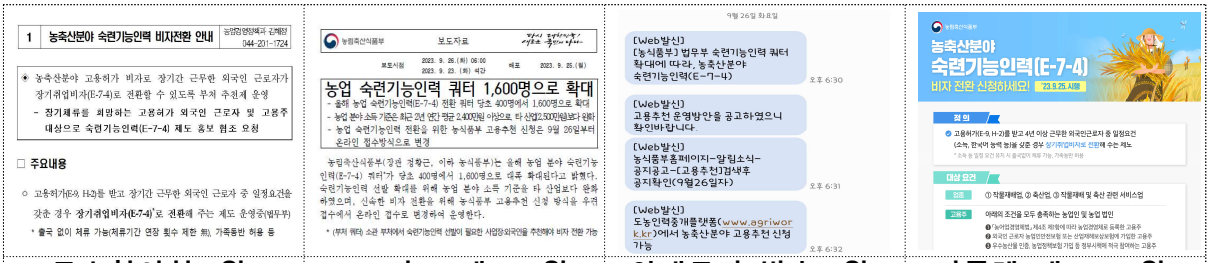
○ 추진절차 : 쿼터배정(법무부) → 부처추천제 운영(각 부처)

2. ‘23년도 추진 실적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제 운영(‘23년 실적 : 257명)

○ 보도자료 배포(9월) 및 안내문자 발송(9월, 상담실적 있는 농업인 100여명), 지자체(9월, 300여명), 소속·유관기관 홍보(10월)

<주요 홍보 실적>



군수협의회(7월)	보도자료 배포(9월)	안내문자 발송(9월)	리플렛 배포(7,9월)

3. ‘24년도 추진계획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E-7-4) 부처추천제 운영 및 제도 홍보

○ ‘24년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운영방안 수립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주 대상 숙련기능인력 제도 홍보

- 근로소득 신고 방법 등 안내 리플렛 배포, 홍보 문자발송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제도 운영	숙련기능인력 온라인 추천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구축완료 (100%)	구축완료 (100%)	-
’24		숙련기능인력 제도 홍보	홍보실적(건)	4회 (분기별1회)	-	-

5. 담당자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경영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724
담 당 자	5급 김혜정	이 메 일	aramaro@korea.kr

1-2-3-2	농 · 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협조)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숙련근로자를 양성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과제 내용

○ 농업분야 외국인력의 안정적 취업 및 장기체류 지원 강화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기준 완화, 계절근로자 경력 연계, 고용허가 대상국가 확대 등을 통한 장기체류 유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숙련기능인력 제도시행('17년)

○ 농업분야 별도 쿼터 운영('19년)

* 농업쿼터 : ('19) 50명 → ('20) 50 → ('21) 50 → ('22) 150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24.1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주관), 농식품부 및 해수부(협조)

○ 추진절차 : 개선방안 검토(각 부처) → 체류제도 총괄(법무부)

2. '23년도 추진 실적

☐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장기체류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숙련기능인력 제도개선 논의

○ 정부·학계·전문가 등 협의체 운영, 연구용역 등을 통해 농업분야 외국인 장기체류 방안 마련('23.7.)

* 계절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 연계 방안, 숙련기능인력 업종별 요건 차등화 등

<장기 체류제도 개선방안('23.7.) 주요내용>

①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②농업 특성을 고려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기준 완화, 자격증(운전면허) 등 점수항목 개선**, ③계절근로자 –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연계, ④외국인력 기술교육 강화 및 숙련도 검증체계 마련, ⑤외국인 배우자 등의 농업 단순노무 허용, ⑥지역특화비자 요건에 숙련기능인력 포함 등 대상확대

○ 법무부 협의를 통해 농업 특수성을 반영한 점수제 개선*,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9월)

* 농업 분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반영한 **소득기준 완화**, 자격증 가점 항목에 운전면허 포함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23년 400명 → 1,600), 소득기준 완화 및 사업장별 허용기준 확대 등 제도 개선 반영

* 농업 분야 비자 전환 소득기준: 연 2,600만원 → 2년 평균 2,400만원

3. '24년도 추진계획

□ 농업분야 외국인력 장기체류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 지속 논의

* 계절근로-고용허가-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연계, 고용허가제 국가 확대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농업분야 외국인력의 안정적 취업 및 장기체류를 위한 제도개선	농업분야 외국인 장기체류 방안 마련	장기체류 방안 마련	100%	100%	-
'24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전환 확대	전년 대비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전환 인원 증가율	20%	-	농업 숙련기능인력 '24년 전환인원/ '23년 전환인원

5. 담당자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경영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724
담 당 자	5급 김혜정	이 메 일	aramaro@korea.kr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에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으로 인력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

□ 과제 내용

○ '24년 고용허가제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시범사업 추진

* (업종) 한식업, (지역) 전국 100개 지역, (직종) 주방보조원
(업력)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5년 이상, ▲5인 미만7년 이상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시범사업 추진 결정(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3.11.27.)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주관),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추진절차 : 개선방안 검토(부처합동) → 차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수립(외국인력정책위원회)

2. '23년도 추진 실적

□ 해당없음('24년 신규과제)

3. '24년도 추진계획

□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농식품부, 고용부 합동)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용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마련	-	-

5. 담당자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외식산업과	전화번호	044-201-2170
담 당 자	5급 이혜주	이 메 일	hihj1004@korea.kr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주관)

1. 과제 개요

☐ 목적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과제 내용

○ 1개월 미만의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가 '日'단위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23: 19개소→ '24: 70)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년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5개소),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 본사업 추진(15개소), 202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2024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70개소), 202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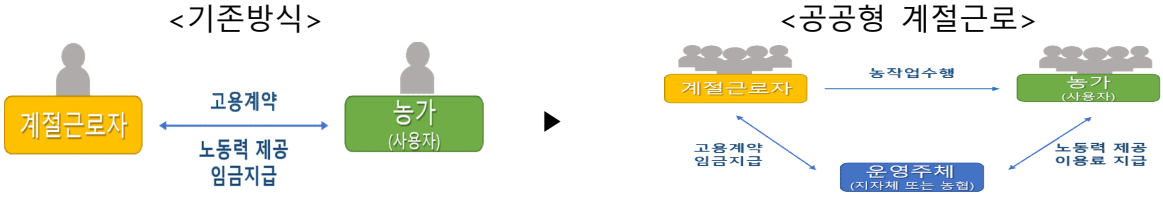
○ 추진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협업)→ 지자체, 농협중앙회

○ 추진절차 : 사업계획수립→ 사업 신청→ 사업 선정→ 사업 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법무부와 협업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가 '日'단위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23: 19개소, 990명)

<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요 >



3. ‘24년도 추진계획

□ ‘24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시행지침 마련(’24.1월~) → ‘24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24,1월~) → ‘24년 사업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24.1월) → ‘24년 상반기 현장점검(’24.6월) → ‘24년 하반기 현장점검(’24.11월)

□ 소요예산 : **총 6,860백만원**

구 분		’23년도	’24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235	6,860	455.5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농특회계)	617.5	3,430	455.5	농림축산식품부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617.5	3,430	455.5	
-기 타					

□ 산출내역

○ (공공형 계절근로) 70개소×개소당 90~110백만원×국비 50%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개소수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개소수(개소)	19개소	19개소	지자체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현황
’24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개소수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개소수(개소)	70개소	70개소	지자체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현황

5. 담당자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721
담 당 자	4급 김동일	이 메 일	mymy@korea.kr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1. 과제 개요

□ 목적

○ 농촌 내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 농업교육 지원을 통한 후계 농업인력육성 및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

□ 과제 내용

○ 단계별 농업교육('10~)

- 농업종사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단계별 영종교육, 농기계사용법, 현장실습, 농촌역사·문화 등을 교육

○ 1:1 맞춤형 농업교육('09~)

- 영농정착 의지가 강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여성 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하여 작물재배 실습 등 1:1 맞춤형 농업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 영농정착지원('09~)

-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배우자, 시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농촌·농업의 이해과정,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현장견학 프로그램 등을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09. 1. 과제 추진

○ 2010. 1. 예산 및 교육인원 확대

○ 2019. 1. 청소년 과정 신규 운영

○ 2020. 1. 단계별 농업교육 세분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농식품부 → 농협중앙회 → 지역본부 및 지역농협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교육대상자 선정 → 교육 추진

2. ‘23년도 추진 실적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영농정착 지원

○ 기초농업교육, 농기계 사용법,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식품 교육, 가공 실습 등 6차 산업교육 등을 통해 영농후계인력으로 육성(579명)

○ 결혼이민여성과 전문여성농업인을 1:1로 연계하여 작물재배 전과정, 마케팅 및 선진 재배농법 견학 등을 통해 전문 농업교육 제공(565명)

○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관계, 지역 내 이해증진 프로그램 및 농촌·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탐색·체험 교육(767명)

3. ‘24년도 추진계획

☐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과정 운영(930명)

○ 결혼이민여성 대상 농업교육으로 후계 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 가족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한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총 717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333	717	△46.2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1,333	717	△46.2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930명 교육 × 771천원 × 국비 100%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교육 인원	교육수료 인원(명)	930	-	농협중앙회 사업결과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전화번호	044-201-1568
담 당 자	5급 김문석	이 메 일	kms4492@korea.kr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협조)

1. 과제 개요

□ 목적

○ 농업 경영 형태는 규모화되는 반면,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는 지속되어 농업분야 근로인력 부족 문제 심화

- 농업분야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계절근로(C-4, E-8)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필요

□ 과제 내용

○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 간 협력 강화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허용 분야 확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운영성황 점검, 개선안 발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매년), 2023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수록, 2024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농식품부, 지자체

○ 추진절차 : (법무부) 계절근로자 제도 지침 마련 등 운영 총괄, (농식품부)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협의, 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자체) 계절근로자 도입, 교육, 관리 등 운영 추진

2. ‘23년도 추진 실적

□ ‘23년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대(’22: 16,924명→ ‘23: 34,614명), 단기 인력 수요 대응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23년 19개소)

3. ‘24년도 추진계획

□ ‘24년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23.12월) → ‘24년 계절근로자 도입 및 제도개선 추진(연중) → ’24년 하반기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24.上)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연중)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강화	계절근로 배정인원 확대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34,614	34,614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현황
’24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강화	계절근로 배정인원 확대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45,631	45,631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현황

5. 담당자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721
담 당 자	4급 김동일	이 메 일	mymy@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Ⅰ. 2024년 시행계획 총괄 ····· 435

Ⅱ. 2024년 시행계획 개요 ····· 436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438

Ⅳ. 과제별 시행계획 ····· 439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1-2-[2]-④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439

1-2-[4]-②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442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2	100%	190	190	0%
1. 경 제	2	100%	190	190	0%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뿌리산업 양성대학 현장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운영**
- **해외 전문인력 유치·지원업무 체계화**

주요 사업내용

-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국내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 '23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 구인기업 97개사, 구직자 2,377명 참가

- 뿌리산업에 숙련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양성

  -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운영계획 협약 체결
  - 뿌리산업 양성대학 점검
  -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 학생 대상 기량 검증* 실시

  * 면접·실습 평가를 통해 전공 뿌리기술 분야의 전문성, 숙련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가치관·품성 등 평가

Ⅰ. 2024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02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2)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합계	2개	190	190	0	'-'의 경우 '△'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2개)	190	190	0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비예산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190	190	0	

Ⅱ.‘24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생산연령인구 감소·고령화에 따라 제조업 인력난 확산

○ 생산연령인구(15~64세) ’30년 3,381만명(2020년 대비 357만명 감소) → ’40년 2,852만명(2020대비 886만 명 감소)

○ 1인 이상 사업체 부족인원 54만명, 이 중 제조업 부족인원 13.7만명 (고용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2023.10월 기준)

□ 신산업·기술 발달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전문·숙련 기술 분야의 인력수요도 증가

2. ‘23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3년 주요과제 성과

○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뿌리산업 기술인력의 안정적·체계적 공급을 위해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뿌리산업 관련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확대

- 기술수준, 학업, 어학, 품성 등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을 엄선하여 뿌리기업의 숙련 기술인력으로 활용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 국내기업 97개사, 외국인 유학생 2,377명 참가(’23.8월)

※ 300개 기업 대상 200명 해외우수인력 채용지원(박람회 참가인원 포함)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없음

3. ‘24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뿌리산업 양성대학) 교육 커리큘럼 개선 및 개발 추진

○ 해당 대학 인근 지역에 위치한 기업 및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만족도 제고

□ (유학생 취업박람회)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상시 지원 시스템 검토 등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업무 체계화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0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24년도 운영계획 협약 체결 ▪ '24년도 상반기 기량검증 시행	산업부 뿌리산업팀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0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24년도 운영현황 중간점검	산업부 뿌리산업팀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0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24년도 하반기 기량검증 시행	산업부 뿌리산업팀
1-2-4-2	유학생 유치 다변화 및 성장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0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24년도 양성대학 연차평가	산업부 뿌리산업팀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뿌리기업에 숙련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외국인유학생을 선발·양성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하여 내국인 기피 업종에 인력 공급

☐ 과제 내용

○ (대학 선정・운영)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을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으로 선정・운영

○ (기술 인력 선발)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기량검증을 통해 기술인력 선발

※ 기량검증 : 면접·실습평가를 통해 전공 뿌리기술 분야의 전문성, 숙련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가치관·품성 등 평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4. 10. 양성대학 3개(계명문화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대학 선정

○ 2015. 10. 양성대학 5개(거제대, 군장대, 아주자동차대, 인하공전, 전주비전대) 대학 추가 선정

○ 2016. 9. 뿌리산업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지표 개발

- NCS 세분류,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 활용

○ 2017. 1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추가 선정

○ 2018. 1. 양성대학 2개(조선대, 인하공전) 선정 취소

○ 2019. 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선정 취소

○ 2020. 1. 경기과학기술대학교(표면처리), 영남이공대학교 선정

○ 2022. 12. 선정평가위원회(경기과학기술대학교(금형, 용접), 서정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 2023. 12. 양성대학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추진절차

- (양성대학) 양성대학 선정 → 협약 체결 → 양성대학 운영

- (기량검증) 기량검증 공고 → 외국인유학생 신청 → 기량검증 실시 → 기량검증확인서 발급

2. '23년도 추진 실적

□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4개교 대상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뿌리산업 6대 분야의 균형적인 기술인력 배출을 위하여 추가선정 공고를 통하여 뿌리산업 업종 특화 대학 모집(동원과학기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등 접수)

□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유학생 양성

○ 졸업생 218명, 기량검증 합격자 수 146명

□ 외국인 유학생 기량검증 실시(2회)

○ 2023년 2월 졸업자 대상 6개교(거제대, 계명문화대, 군장대, 아주자동차대, 조선대, 인하공전) 기량검증 실시

○ 2023년 8월 졸업자 대상 7개교(거제대, 계명문화대, 군장대, 전주비전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기량검증 실시

3. ‘24년도 추진계획

□ 2024년도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운영계획 협약 체결(1분기)

○ 2023년말 연차평가 결과(입학 정원 등)를 바탕으로 협약 체결

□ 2024년 2월 졸업자 대상 기량검증 실시(1분기)

□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 운영 대학 중간점검(2분기)

□ 2024년 8월 졸업자 대상 기량검증 실시(3분기)

□ 2024년도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연차평가(4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뿌리산업의 외국인유학생 숙련인력 공급	양성대학(학과) 추가선정	1	2	선정대학 협약
’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뿌리산업의 외국인유학생 숙련인력 공급	양성대학(학과) 추가선정	1	-	선정대학 협약

5. 담당자

소관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뿌리산업팀)	전화번호	044-203-4906 044-203-4907
담 당 자	5급 이미진 6급 정서란	이 메 일	mijin8@korea.kr rani123@korea.kr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채용수요 대응 및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기업 채용 연계를 통한 경제 활성화

□ 과제 내용

○ 사업내용 :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국내기업 채용박람회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추진 경위

- 2009.1.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목적), 제10조(사업)에 해외 전문인력 유치사업 명시, 추진근거 마련
- 2009.11.20. : Global Talent KOREA(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 2023.8.21.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15회차 개최

□ 추진체계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 주관 : KOTRA,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국제교육원, 서울특별시, KOITA, 금융감독원

2. '23년도 추진 실적

□ 2023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 일자/장소 : 2023.8.21(월)~22(화) / COEX C홀

○ 결과 : 구인기업 97개사, 구직자 약 2,377명 참가

○ 채용 : 64명(2022년~2023년 참가기업 중 23年內 실적)

3. ‘24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3분기)

○ 일자/장소 : 2024.8.27.(화)~8.28.(수)

○ 장소 : 서울, COEX D홀

○ 주요 프로그램 : 개막식, 1:1 면접/상담, JOB 콘서트(취업 특강&기업 채용 설명회), 1:1 취업 컨설팅 등

○ 규모 : 구인기업 100개사 및 구직자 약 2,000명

□ 소요예산 : **총 190백만원**

구 분		’23년도	’24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90	190	0	
-국 비	▪일반회계	190	190	0	
	▪특별회계				
	▪기 금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장치, 운영비 등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개최횟수	1회	1회	개최횟수
’24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개최횟수	1회	1회	개최횟수

5. 담당자

소관부서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산업일자리혁신과	전화번호	044-203-4227
담 당 자	5급 이혜숙	이 메 일	hyesook724@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목 차

Ⅰ. 2024년 시행계획 총괄 ····· 447

Ⅱ. 2024년 시행계획 개요 ····· 448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449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450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4.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1-4-[2]-③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450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2-2-[1]-③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 454

보 건 복 지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2	100%	4,864	4,354	△10.5%
1. 경 제	1	50%	4,864	4,354	△10.5%
2. 안 전	1	50%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강화**

주요 사업내용

- 외국인환자 유치 채널 확대 및 환자 권익·편의 증진 관련 정책 지속 추진
  - (유치 채널 확대) 중동 국비 환자 확대 및 해외의료인 연수 다각화
  - (유치기관 관리 강화) 4주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 활성화
  - (환자 권익·편익 증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통역지원 강화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24.4.3.시행) 개정에 따라 신설된 거주요건*을 반영하여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

  *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요건에 최소거주기간(6개월) 추가,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현행과 같이 즉시 가입

Ⅰ. 2024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2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1)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합계	4개	4,864	4,354	△10.5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2)	4,864	4,354	△10.5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4,864	4,354	△10.5	-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1)	-	-	-	
2-2-1-3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비예산

Ⅱ. '24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세계 의료관광시장의 확대·성장*에 따라, '09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를 정부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 (세계 의료관광 시장규모): ('20) 710억달러 → ('25) 1,820억달러(Glasgow Research & Consulting Report, '22)

2. '23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3년 주요과제 성과

○ (외국인환자 유치수)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진료환경 개선, 관련 전문인력양성 등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 지원을 통해 '23년 외국인환자 34만명(추정치*) 유치

* '23년 상반기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바탕으로 추계한 추정치로, '23년 실적은 '24년 상반기 발표 예정

○ (외국인 건강보험피부양자 요건 강화)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여 전세계의 의료 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요 경쟁국들은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 추진 중

- 한국 의료의 우수성 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인프라 강화

3. '24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외국인 환자 유치채널 확대 및 외국인 환자 권익·편의 증진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외국인 건강보험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여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통계 발표	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2-2-1-3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복지부 보험정책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비대면 온라인 연수과정 개발 및 운영	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2-2-1-3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제도시행	복지부 보험정책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 실시	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제8회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	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환자 유치채널 다양화 및 외국인 환자 권익·편의 증진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 과제 내용

○ (유치채널 확대) 주요국 정부 간 협력 및 외국의료인 국내 연수를 통한 환자 유치채널 발굴・확대

○ (환자 권익 및 편의 증진) 외국인환자 권익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의료통역사 등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의료통역 지원 강화 등 외국인 환자의 한국 의료 이용 편의성 제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 ('16.6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16.10월) 제1회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

○ ('17.1월) 1주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시행

○ ('18.10월) 2주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

○ ('22.3월) '제2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유치 지원 종합계획' 수립

○ ('22.6월) '2022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유치 지원 시행계획' 수립

○ ('22.12월)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 4주기 기준 마련

○ ('23. 5월) '2023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유치 지원 시행계획' 수립

○ ('23.9월) 제8회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출연금, 민간위탁),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민간위탁)

○ 추진절차 : 사업계획보고(진흥원·개발원) → 사업계획 승인(복지부) → 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하여 '22년 외국인환자 25만명 유치

○ (유치채널 확대) 해외 의료인 국내 연수 다각화를 통해 대외에 한국의료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 의료인 대상 비대면 온라인 연수과정(Medical Korea Academy e-class) 운영('23년 총 48개국 378명, 교육과정 723건 수료)

○ (유치기관 관리 강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을 인증*하여 의료 질 제고

* (인증기관) '22년 3주기 7개 기관 → '23년 4주기 13개 기관 인증

-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의 경우 법무부 우수유치기관 지정 우대

○ (환자 권익 및 편의증진)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실시*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7개 언어 총 214명 응시, 66명 최종 합격

3. '24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편의증진 관련 정책 지속 시행

○ (유치채널 확대) 중동 국비환자 확대 및 해외의료인 연수 다각화(연중, 3분기)

- 온라인 연수 플랫폼을 통한 16개 교육과정 운영(2분기)

○ (유치기관 관리 강화) 4주기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활성화(3분기)

-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의 경우 법무부 우수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 지정(심사면제)

○ (환자 권익 및 편의증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통역지원 강화(4분기)

- 2024년 제9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필기, 실기) 실시

□ 소요예산 : **총 4,354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4,864	4,354	△10.5	
-국 비	▪ 일반회계	4,864	4,354	△10.5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 2,433백만원

○ 전문인력 양성지원 : 1,753백만원

○ 사업관리 기본경비 : 168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편의증진	외국인환자 유치 수	외국인환자 유치 수(명)	27만명	34만명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표본조사 가집계 추정치
'24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편의증진	외국인환자 유치 수	외국인환자 유치 수(명)	40만명	-	외국인환자유치 실적 보고('25.상반기)

5. 담당자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전화번호	044-202-2982
담 당 자	5급 김광수	이 메 일	516kks@korea.kr

2-2-1-3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주로 외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의료이용 목적으로 국내에 일시 입국하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다시 귀국하는 악용 사례 발생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외국인의 피부양자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

□ 과제 내용

○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요건에 최소거주 기간(6개월)을 추가,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현행과 같이 즉시 가입토록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4항 제3호('24.4.3 시행) 개정에 따라 신설된 거주요건을 반영하여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 발의 →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23.9.19) 및 상임위 대안 통과('23.9.21) → 국회 본회의 통과('23.12.8) 및 공포('24.1.2)

※ 송언석의원안('21.1.28. 발의), 주호영의원안('21.12.29. 발의)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추진절차 : 국민건강보험법 및 하위법령 개정, 제도 시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23.9.19), 상임위 대안 통과('23.9.21), 국회 본회의 통과('23.12.8)

3. ‘24년도 추진계획

○ (1분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공포, 하위법령 개정 추진

○ (2분기) 건보법 하위법령 개정, 제도 시행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개정 여부	개정	개정	
’24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제도 시행	시행			

5. 담당자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706
담 당 자	5급 안정습	이 메 일	yesahn@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고용노동부

목 차

Ⅰ. 2024년 시행계획 총괄 ····· 459

Ⅱ. 2024년 시행계획 개요 ····· 460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463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465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1.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1-1-2-② 취업이민자 역량 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465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1-2-3-①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 467

1-2-3-③ 단순노무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469

1-2-3-④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 471

1-2-3-⑤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 473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2-②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477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3.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3-3-1-①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 479

3-3-2-①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 482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4-1-1-①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 485

4-1-1-② 차별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 487

고 용 노 동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10	100%	1,986	1,971	△0.8%
1. 경 제	5	50%			
2. 안 전	1	10%			
3. 통 합	2	20%	1,986	1,971	△0.8%
4. 인 권	2	20%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국내시장 상황을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
- **합리적 고용관리 및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

주요 사업내용

-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종의 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송출국 현지에서 일정 기간 훈련을 통한 외국인력 선발
  - 베트남 등 6개국 용접분야 기능인력 621명 훈련('23년)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 인력난 심화 업종 외국인력 활용 방안 지속 검토
- 신규 허용업종(음식점업 등) 대상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평가 실시
- 비자발급 시스템(법무부)과 고용허가제 EPS 시스템(고용부) 간 전산 연계 추진
-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속
- 근로계약 체결 위반·최저임금법 위반 등 근로감독관 수사 활성화 및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외국인고용관리법,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 준수 여부 점검, 주거실태 및 산업안전관계법 지도·점검
- 임금체불 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운영 내실화,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Ⅰ. 2024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0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5)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1)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2)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2)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합계	10개	1,986	1,971	△0.8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5)				-
1-1-2-2	취업이민자 역량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	-	-	비예산
1-2-3-1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	-	-	비예산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	-	비예산
1-2-3-4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	-	-	비예산
1-2-3-5	산업현장 인력 수오에 신속·탄력 대응	-	-	-	비예산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1)				
2-1-2-2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	-	비예산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2)	1,408,113	1,321,081	△6.2	
3-3-1-1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1,406,127	1,319,110	△6.2	전체예산
3-3-2-1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1,986	1,971	△0.8	-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2)				
4-1-1-1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	-	-	비예산
4-1-1-2	차별 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	-	-	비예산

Ⅱ.'24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국내 체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코로나 19 이전 체류 규모를 회복하였으나,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구인난 계속

○ 산업 전반에 걸친 외국인력 수요 확대, 체류인원 증가 추세 계속에 따른 외국인력 체류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 확대 요구 증가

2. ' 23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3년 주요과제 성과

○ 외국인력(E-9) 도입 쿼터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결정('22.10월), 연중 정책 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1만명 추가 확대**('23.9월)

*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상향,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 확대 등 고려

** E-9 쿼터(천명): '17~'20년 56 → '21년 52 → '22년 69 → '23년 110 → '23.9월 120

- 신규 고용허가서 신청·발급 일정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하여, 연초부터 외국인력의 신속 입국 지원(계속)

○ H-2 네거티브 전환*, E-9 허용업종 확대**,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신규 발급한도 폐지, 조선업 별도 쿼터 신설(~'25. 연간 5천명 수준) 등 현장 인력난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 지속

* 고용 허용업종 지정·나열방식(포지티브) →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네거티브) ('23~)

** ▲식육운송업, 폐기물 처리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석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 임업, 광업, 한식음식점업, 호텔콘도업 허용 ▲비수도권 뿌리산업 중견기업 고용허가제 적용(8.24. 규제혁신 전략회의, 9.1. 외정위)

*** ▲사업장 규모별 20~25% 상향('22.8월) ▲제조업 중 ①50인 미만 ②비수도권 소재 ③뿌리

산업 각각 20% 상향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상향(8.24. 규제혁신 전략회의, 9.1. 외정위)

○ 권리구제 제도를 강화*하고, 현장 안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확대('22년 3,000 → '23년 5,500개소)

*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2월~), 임금체불 보증보험 보증기간 연장(3년 → 4년 10개월, 9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필요, 외국인 근로자·사업주 간 분쟁 지원 요구 증가

○ (개선방안)

- 외국인력(E-9) 도입 규모 확대에 맞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규모 확대('23년 5.5천개소→'24년 8천개소)

- 외국인 근로자·사업장 대상 정보제공 강화, 노동관계 전문가(노무사)가 사업장변경 분쟁 발생 시 현장 지원

- 사업장변경 등 쟁점 사항에 대한 균형있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권익보호협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 등 개선 추진

3. '24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국내시장 상황을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

○ 경기 전망, 인력 부족률, 외국인근로자 도입 상황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 직종별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노동 시장에 적시 공급하여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가사 분야 외국인력 활용

○ 최근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 → 내국인이 기피

하는 업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 신규 허용 업종 확대

□ 합리적 고용관리 및 체류지원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 및 직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이들의 취·창업 촉진 및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공급

○ 근로계약 체결 위반·최저임금법 위반 등 근로감독관 수사 활성화 및 외국인 불법 고용 확인 시 관련 부처와의 공유 활성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근로조건, 산업안전 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노동권 확보 및 법 준수 의식 제고

○ 임금체불 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전화상담(콜센터)을 통해 신속히 고충을 해결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체류를 효과적으로 지원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5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2-2	취업이민자 역량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 현행 선발체계(업종별 선발)에서 직종별 기능훈련 및 평가요소를 추가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선발(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2-1-2-2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외국인 다수 고용업종 근로감독(연중계속)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3-3-1-1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훈련비, 훈련장려금 지원(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3-3-2-1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상담·통역 서비스 제공(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4-1-1-2	차별 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 휴먼보험금 찾아주기 지속 실시 및 홍보(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3-4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1-2-3-5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 법무부 비자 발급 시스템과 고용허가제 EPS 시스템 간 정보연계 추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4-1-1-1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상반기)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3-1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 외국인 가사관리사 선발·도입 및 사업 확대 여부 검토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관계부처·기관간 협업을 통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인력난 심화 업종의 외국인력(E-9) 활용 방안 지속 검토·추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1-2-3-5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 신규 허용 업종 대상 관계부처 (농식품부·문체부)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평가 등 실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1-1-1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하반기)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1-2-2	취업이민자 역량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직종별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노동 시장에 적시 공급하여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 과제 내용

○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종의 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송출국 현지에서 일정 기간 훈련을 통해 외국인력 선발

- 한국어 교과 및 전공 교과(용접 등)로 훈련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송출국에서 훈련을 이수한 인력을 국내 기업에 알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8) 베트남·우즈베키스탄 56명 훈련 실시

○ ('20) 베트남 23명 훈련 실시

○ ('22) 베트남·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281명 훈련 실시

○ ('23) 베트남 등 6개 국가* 621명 훈련 실시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파키스탄, 필리핀, 네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주관),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 훈련계획 수립 → 훈련생 모집 신청·선정 → 한국어능력시험 신청·접수 → 훈련대상자 확정 → 훈련 실시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 최종 합격자 선정 → 구직자명부 작성·관리 → 뿌리기업 우선 알선

2. ‘23년도 추진 실적

○ (‘23) 베트남 등 6개 국가* 용접 분야 기능인력 621명 훈련 실시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파키스탄, 필리핀, 네팔

3. ‘24년도 추진계획

□ 현행 선발체계(업종별 선발)에서 직종별 기능훈련 및 평가 요소를 추가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선발

○ 산업현장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직종별 전공 교과와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한국어 교과 과정*으로 훈련 운영

* 송출국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취업교육(45시간) 과정을 포함하여 신속 도입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송출국 현지 뿌리산업 직종 기능인력 선발	훈련 국가 및 훈련 인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 기능인력 훈련 국가 및 훈련 인원	3개 국가 300명 이상 훈련 실시	3개 국가, 281명 실시	내부 자료
’23	송출국 현지 뿌리산업 직종 기능인력 선발	훈련 국가 및 훈련 인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 기능인력 훈련 국가 및 훈련 인원	3개 국가 400명 이상 훈련 실시	확인중	내부 자료
’24	송출국 현지 뿌리산업 직종 기능인력 선발	훈련 국가 및 훈련 인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 기능인력 훈련 국가 및 훈련 인원	3개 국가 400명 이상 훈련 실시	-	내부 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TF	전화번호	044-202-7223
담 당 자	5급 이정석	이 메 일	matrix93@korea.kr

1-2-3-1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가사 분야 외국인력 활용

☐ 과제 내용

○ 「가사근로자법」상 정부인증기관이 가사관리사(E-9)를 고용하여, 가정에 출퇴근 방식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12.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시 외국인력의 활용방식 다양화 검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주관),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인증기관 선정 → 시범사업 수행 → 사업 평가 및 본사업 추진 여부 검토

2. '23년도 추진 실적

☐ 의견수렴, 해외사례 분석 및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계획 마련

○ 이해관계자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견 청취 및 도입 필요성 설명

* ('23.5.25) 고용부 주최 토론회, (6.8)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실천단 주최 토론회, (6.16) 윤미향 의원실,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공동주최 토론회, (7.19) 서울시 주최 토론회, (7.31) 고용부 주최 시범사업 계획안 설명 공청회, (11.8) 서울시의회 주최 토론회

○ 일본 · 싱가포르 등 해외사례 파악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계획 의결(9.1,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사업 참여자 선정 및 세부 사업 추진방안 협의

○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2개소) 및 고용부-서울시-제공기관 간 협의 진행

3. '24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가사관리사 선발 · 도입 및 사업 확대 여부 검토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추진 검토	사업 추진 계획 발표	사업추진 발표 여부	발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12.29)
'23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사업계획 수립 및 참여자 선정	계획 수립 및 참여자 선정 여부	계획 수립 및 참여 기업 선정	내부자료
'24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	가사관리사 사업 시행	가사관리사 도입 및 확대 여부 검토	도입 및 확대 여부 검토	-	내부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2-7145
담 당 자	4급 이재인	이 메 일	urgeelee@korea.kr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최근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 →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 신규 허용 업종 확대

□ 과제 내용

○ 음식점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외국인력(E-9) 신규 허용방안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 항공·육상화물취급업(식육운반 업체) 등 H-2 허용

○ ('21) 광업 및 물류터미널운영업 등 H-2 허용

○ ('22) 항공·육상화물취급업(택배업) 등 H-2 허용

○ ('23) 인력난 심화 업종 대상 E-9 고용 확대 및 H-2 네거티브 허용 방식 전환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주관), 신규 허용 업·직종 관련 주무부처(협업)

○ 추진절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상정·의결 → 외국인력 선발·도입

2. '23년도 추진 실적

□ 인력난 심화 업종* 대상 비전문취업(E-9) 고용 허용 확대

* (E-9) ▲('23.1월) 폐기물 처리업 등 상·하차 직종 ▲('23.9월)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 ▲('23.11월) 한식점업, 임업, 광업 ▲('23.12월) 호텔·콘도업

(H-2) 서비스업의 경우 제외업종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전환 ('23.1월~)

3. ‘24년도 추진계획

□ (기본 방향)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을 통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인력난 심화 업종의 외국인력(E-9) 활용 방안 지속 검토·추진

□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작년 신규 허용 업종 대상 관계부처 (농식품부·문체부)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평가 등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현장 인력난 심화 업종에 외국인력 허용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분야	허용 업종 확대 여부	H-2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공고문
’23	현장 인력난 심화 업종에 외국인력 허용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분야	허용 업종 확대 여부	E-9 7개 신규 업종 허용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공고문
’24	현장 인력난 심화 업종에 외국인력 허용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분야	허용 업종 확대 여부	-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공고문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TF	전화번호	044-202-7223
담 당 자	5급 이정석	이 메 일	matrix93@korea.kr

1-2-3-4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1. 과제의 개요

□ 목적

○ E-9 근로자 해외 도입 방식 외에 국내 체류 중인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외국인근로자로 활용하여 뿌리기업 등 현장의 인력난 해소

□ 과제 내용

○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E-9으로 전환하여 인력 활용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12.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시 유학생 특례 신설 검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주관),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 「외국인고용법」 개정 → 사업계획 마련 → 사업 추진

2. '23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발의(9.18,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3. '24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활용 방안 마련	개편방안 마련 시 포함	유학생 활용 계획 발표	계획 발표	내부자료
’23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법 개정 추진	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 발의 여부	발의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9.18)
‘24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법 개정 추진	법 개정	개정안 공포	-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2-7145
담 당 자	4급 이재인	이 메 일	urgeelee@korea.kr

1-2-3-5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E-9 신규 허용 업종 확대

□ 과제 내용

○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직종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 (주무부처 협업) 등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 방안 모색

□ 과제 추진 연혁

○ ('20) 항공·육상화물취급업(식육운반 업체) 등 H-2 허용

○ ('21) 광업 및 물류터미널운영업 등 H-2 허용

○ ('22) 항공·육상화물취급업(택배업) 등 H-2 허용

○ ('23) 인력난 심화 업종 대상 E-9 고용 확대 및 H-2 네거티브 허용 방식 전환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주관), 신규 허용 업·직종 관련 주무부처(협업)

○ 추진절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상정·의결 → 외국인력 선발·도입

2. '23년도 추진 실적

□ 비수도권 뿌리산업 중견기업까지 확대('23.9월~) 및 인력난을 겪는 일부 서비스업 외국인력 고용 허용('23.11~12월)*

* **(E-9)** ▲('23.1월) 폐기물 처리업 등 상·하차 직종 ▲('23.9월)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 ▲('23.11월) 한식점업, 임업, 광업 ▲('23.12월) 호텔·콘도업

(H-2) 서비스업의 경우 제외업종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전환('23.1월~)

3. ‘24년도 추진계획

□ (기본 방향)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을 통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인력난 심화 업종의 외국인력(E-9) 활용 방안 지속 검토·추진

□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작년 신규 허용 업종 대상 관계부처 (농식품부·문체부)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평가 등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현장 인력난 심화 업종에 외국인력 허용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확대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발표	허용 업종 확대 여부	발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12.29)
’23	현장 인력난 심화 업종에 외국인력 허용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분야	허용 업종 확대 여부	E-9 7개 신규 업종 허용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공고문
’24	현장 인력난 심화 업종에 외국인력 허용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분야	허용 업종 확대 여부	-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공고문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TF	전화번호	044-202-7223
담 당 자	5급 이정석	이 메 일	matrix93@korea.kr

1-2-3-5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부처(법무부·고용노동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업주에게 외국인력의 입국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주 만족도 제고

☐ 과제 내용

○ 사업현장의 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 비자 발급 시스템과 고용허가제 EPS 시스템간 추가 정보 연계를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비자 발급 시스템 연계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

○ 추진절차 : 고용노동부(정책 결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사업 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법무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진행

3. '24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법무부 비자 발급 시스템과 고용노동부 EPS 시스템 간 전산 연계 추진

○ 관계부처(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간 지속적인 협의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전산 연계 추진	시스템 점검	시스템 점검	분기 1회		내부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2-7152
담 당 자	5급 안성수	이 메 일	power827@korea.kr

2-1-2-2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근무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근로감독 및 현장 지도·점검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추진

□ 과제 내용

○ 근로계약 체결 위반·최저임금법 위반 등 근로감독관 수사 활성화 및 외국인 불법 고용 확인 시 관련 부처와의 공유 활성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1. 과제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본부·지방관서)

○ 추진절차 : 근로감독 필요 사업장을 선정하여 관할 관서별로 감독

2. ‘23년도 추진 실적

□ 취약 분야 근로감독 및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9월)하여 외국인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 감독 실시

3. ‘24년도 추진계획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 업종

□ (세부 추진내용)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 ① 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 최저임금 준수 ④ 임금체불 예방

○ (기초노동질서 준수)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 분기 특정 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48개소)에서 동시에 4대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 사업주에 충분한 사전 계도기간 부여하여 사업주 자율적인 개선 유도를 통해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

○ (수사 활성화) 균등처우, 강제근로 등 근로조건 관련 위반 사항 발생시 시정 명령 및 수사 활성화 통해 외국인 권리구제 지원

□ (추진일정) 연중 실시

○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수립(1월) → 근로감독 추진(~12월)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외국인 다수 고용업종 근로감독 강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1회	1회	
'24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외국인 다수 고용업종 근로감독 강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1회	-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528
담 당 자	5급 최충운	이 메 일	choi1974@korea.kr

3-3-1-1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 및 직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이들의 취·창업 촉진 및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공급

☐ 과제 내용

○ 결혼이민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 적합훈련과정 수강 시 훈련비의 45%~85% 지원(5년간 300~500만원 한도) 및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천원)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저소득층 참여 시 훈련비 전액 지원(단, 취업률 40%미만 직종은 80% 지원)하고,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시 한도를 초과하여 훈련비 전액지원(1회는 자부담 면제, 2회부터는 자부담 부과)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8. 1. 과제 추진

○ 2018. 6.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 계속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추진절차 : ①구직신청(훈련생, 고용센터) ⇨ ②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고용센터) ⇨ ③훈련상담(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고용센터) ⇨ ④훈련과정 수강(훈련생, 훈련기관) ⇨ ⑤훈련비 등 지급(고용센터)

2. ‘23년도 추진 실적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등 574명에게 훈련비, 훈련장려금 지원('22.12월말 기준)

○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여 참여 독려

3. ‘24년도 추진계획

○ (산업구조변화대응등 특화훈련) 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등의 이·전직 등과 인력양성이 필요한 산업계의 인력수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훈련 수시 공급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 (평생크레딧)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초역량 개발 및 심층 경력설계 지원

□ 소요예산 : **총 1,319,11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406,127	1,319,110	△6.2	
-국 비	▪ 일반회계	518,815	584,906	12.7	고용노동부
	▪ 특별회계				
	▪ 기금(고용보험)	887,312	734,204	△17.3	고용노동부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국민내일배움카드제」사업의 경우 결혼이민자 등 대상자별 예산이 별도 책정되어 있지 않아 전체 예산으로 작성

□ 주요 산출내역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일반회계>

- 473,188백만원(훈련비·훈련장려금 40,000명×11,343천원 등)

○ 일반고특화훈련(비진학 일반고3 대상 훈련)<일반회계>

- 49,230백만원(훈련비·훈련장려금 5,600명×8,791천원)

○ 평생크레딧(K-디지털 기초역량 개발 훈련)<일반회계>

- 25,000백만원(K-디지털 크레딧 83,400명×300천원)

○ 일반직종훈련(실업자, 재직자 등 훈련)<고용보험기금>

- 331,239백만원(실업자 199,000명×899천원×1.3개 과정/인, 재직자 187,000명 ×406천원×1.3개 과정/인)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중요 산업분야 인력 양성 훈련)<고용보험기금>

- 325,960백만원(50,000명×6,519천원)

○ 산업구조변화대응등 특화훈련(지역고용위기산업 대응 훈련)<고용보험기금>

- 75,960백만원(훈련비 20,000명×3,220천원 등)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취업지원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인원	400명	470명	전년수준
'23	취업지원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인원	400명	574명	전년수준
'24	취업지원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인원	400명		전년수준
'25	취업지원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인원	400명		전년수준
'26	취업지원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인원	400명		전년수준

※ 「국민내일배움카드제」는 참여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결혼 이민자 및 이주청소년의 참여실적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목표 및 실적에서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인원으로 목표 및 실적 산정)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44-202-7318/7320
담 당 자	5급 김신영, 6급 강윤주	이 메 일	newmodel@korea.kr, 6256dbswn@korea.kr

3-3-2-1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전화상담(콜센터)을 통해 신속히 고충을 해결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체류를 효과적으로 지원

☐ 과제 내용

○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 증가에 대비하여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강화

☐ 과제 추진 연혁

○ '11.7월, 경기 안산시에 외국인력상담센터 개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

○ 추진절차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책 수립 ○ 사업 목표 설정 및 예산 계획 승인		○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2. '23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실적

○ 코로나19 완화에도 지속적인 비대면 선호 추세로 내방상담 감소 추세 지속, 반면 3자 통화 및 번역지원 상담은 증가 추세

(단위 : 건)

구 분	계	전화상담	3자통화	내방상담	번역지원
2023년	**406,443**	**353,618**	**39,572**	**11,180**	**2,073**
2022년	**365,524**	**316,833**	**33,881**	**13,696**	**1,114**

3. ‘24년도 추진계획

☐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내방·전화상담 및 3자통역 서비스 제공(계속)

☐ 소요예산 : **총 1,971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1,986	1,971	△0.75	
-국 비	▪ 일반회계	1,986	1,971	△0.75	일반운영비 감액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상담센터 인건비

- 현지원상담원(52명*2,388,703원*12월)
- 분야별 전문상담원(5명*2,507,380원*12월)
- 시스템 및 통계관리원(2명*2,507,380원*12월)

○ 상담센터 운영비

- 건물관리비(7,000,000원*12월)
- 상담시스템 유지보수(6,000,000원*12월)
- 공공요금(5,000,000원*12월)

- 물품구입(750,000원*12월)

- 안내사업(100원*200,000장)

- 고용허가제 등 실태조사(20,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상담·통역 서비스 제공	상담실적(건)	38만회	40만회	전년 대비 5% 증가 (내부 자료)
'24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상담·통역 서비스 제공	상담실적(건)	42만건	-	전년 대비 5% 증가 (내부 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2-7149
담 당 자	5급 이동현	이 메 일	ldh1996@korea.kr

4-1-1-1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 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노동권 확보 및 법 준수 의식 제고

□ 과제 내용

○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고용관리법, 출입국관리법 등 소관 법령 준수 여부 점검 및 숙소 실태조사

○ 산업안전부서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 수칙 위반 여부 등 산업안전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4.8.부터 과제 추진 (매년 상·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본부·지방관서)

○ 추진절차 :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지방관서 별로 점검 실시

※ 계획수립- 자가진단(점검 대상 3배수) - 현장점검 - 위반사항 조치

2. '23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고용사업장 총 3,005개소 점검

※ 점검사업장 3,005개소 중 1,466개소 위반업체 적발

3. ‘24년도 추진계획

□ (대상) 외국인 근로자(E-9,H-2) 고용한 사업장 3,000개소

□ (추진내용) 외고법 및 주거 실태, 산업안전관계법 지도·점검

○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취약한 농축산·어업을 집중점검(점검 물량의 40% 배정)

○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 및 고용허가제·기숙사 기준 위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조치 이행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 점검

○ 주거 실태조사 병행 실시 → 주거시설 형태(가설건축물, 사업장 건물 등), 법령상 주거시설 인정 여부 등 확인

※ 「’21년 주거환경 개선 지침」 등에 따라 주거시설 제공 여부 등 실태조사

□ (추진일정) 상·하반기

○ ’24년 지도점검 종합계획 수립(2월) → 지도점검 추진(3월~12월)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사업장 지도·점검 사업장 수	3,000개소	3,005개소	점검 결과
’24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사업장 지도·점검 사업장 수	3,000개소	-	점검 결과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739
담 당 자	5급 이동희	이 메 일	lovemin1222@korea.kr

4-1-1-2	차별 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임금체불 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 과제 내용

○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경우 민원인 편의 제고 및 근로자 권익 보호 위해 재고용 시 별도 절차 없이 갱신되도록 자동 갱신 방안 추진

○ 출국만기보험의 경우 미지급 보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전 등록된 계좌로 보험금을 송부하는 자동 환급제 내실화

○ 휴면보험금의 경우 송출국 현지에서 EPS 센터를 통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도 실시

※ ('19) 베트남, 캄보디아 → ('20)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키르키스스탄,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동티모르, 몽골 → ('21) 네팔, 중국, 필리핀 → ('22) 중국 방문동포(H-2)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

○ 추진절차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보험사업자

2. '23년도 추진 실적

○ '23년 임금체불 보증보험 자동갱신제 도입(9.1. 가입건부터 추진)

○ ‘23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실적: 2,701건(1,930백만원)

○ ‘23.12월 네이버 등 포털에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및 전용보험 홍보

○ ‘22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실적: 2,024건(1,342백만원)

3. ‘24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자동환급 동의율 제고 위해 신규 입국 외국인 근로자 대상 출국만기 보험 자동환급제도 홍보 지속 실시

○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실시 및 홍보 확대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임금체불 보증보험 자동 갱신제 도입	자동 갱신제 도입	자동 갱신제 도입 여부	자동 갱신제 도입	도입	내부자료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도 실시	자동환급 동의율 제고	자동 환급 동의율	70%	76.7%	내부자료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실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 제고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건수)	전년도 대비 20% 향상	전년도 대비 20% 향상	내부자료
‘24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도 실시	자동환급 동의율 제고	자동 환급 동의율	70%	-	내부자료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실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 제고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건수)	전년도 대비 20% 향상	-	내부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2-7152
담 당 자	5급 안성수	이 메 일	power827@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목 차

Ⅰ. 2024년 시행계획 총괄 ····· 492

Ⅱ. 2024년 시행계획 개요 ····· 493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494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495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2.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증진

3-2-[1]-①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 493

3-3-[1]-②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497

3-3-[3]-③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500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4-2-[2]- 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 504

여 성 가 족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4	100%	113,057	130,850	15.7%
1. 경 제					
2. 안 전					
3. 통 합	3	75%	100,278	117,621	17.3%
4. 인 권	1	25%	12,779	13,229	3.5%
5. 협 력 / 인프라					

※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을 통합 지원하는 가족센터 운영 예산 포함

추진 방향

-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자립 지원**

주요 사업내용

- 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
  -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인력풀 구축,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시스템(다누리 배움터) 운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전국 가족센터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영유아기 언어발달, 취학 전후 기초학습 및 청소년기 상담, 진로설계 지원, 이중언어 역량강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에게 상담·보호 및 의료·법률지원, 주거 제공,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33개소), 상담소(9개소) 운영

Ⅰ. 2024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4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합계	5개	113,057	130,850	15.7	
소계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3)	100,278	117,621	17.3	
3-2-1-1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비예산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68,027	71,529	5.1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32,251	46,092	42.9	
소계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1)	12,779	13,229	3.5	
4-2-2-1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12,779	13,229	3.5	

Ⅱ. ‘24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다문화 가구원 수는 ‘22년 기준 115만여 명에 이르며 지속 증가 추세

- 특히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학습・진로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 필요

※ 다문화가족 자녀 수: (‘20) 266,321명 → (‘21) 289,529명 → (‘22) 299,440명

2. ‘23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3년 주요과제 성과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 입국 전 현지 사전교육 및 입국 초기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다국어 상담, 가족센터의 통번역, 사례관리, 한국어교육, 자립 지원 등 종합적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 생활지도 및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추진

- 다문화 아동・청소년 취학 전・후 기초학습, 청소년기 진로설계 지원 확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

3. ‘24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 초기 적응뿐 아니라 장기 정착기 직업훈련 등 지원 강화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영유아기 언어발달, 취학 전・후 기초학습, 청소년기 진로설계, 이중언어 역량강화 등 맞춤형 지원 강화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2-1-1	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	▪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여가부 다문화가족과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가족센터 등을 통해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	여가부 다문화가족과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언어발달, 기초학습, 진로설계, 이중언어 역량강화 지원	여가부 다문화가족과
4-2-2-1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운영 지원	여가부 권익구조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3-2-1-1	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 확산 및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 대상 이해교육 실시

□ 과제 내용

○ 다누리배움터를 통한 연령별 맞춤형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제공 및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연계

○ 이해교육 홍보 및 전문강사 관리, 효과성 조사 및 성과관리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1년부터 지속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주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수행

○ 추진절차

이해교육 홍보 및 수요처 발굴 ≫ 이해교육 신청·접수 ≫ 강사연계 ≫ 강의제공 ≫ 결과보고 및 환류

2. ‘23년도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온·오프라인 가족다양성 이해교육 실시(357,189명)

- 결혼이민자 등을 전문 강사로 채용하여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다문화 이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 다누리배움터(www.danurischool.kr)에서 10개 과정 운영(일반, 교육자, 시설종사자, 직장인, 유·아동, 청소년, 경찰, 군인, 공직자, 전문강사)

- 기관 연계 등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3. '24년도 추진계획

□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인력풀(DB) 구축

○ 전문강사 양성 과정 운영(기본·전문·심화 과정) 및 강사풀 구축

□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시스템(다누리배움터 www.danurischool.kr) 운영

○ 시설종사자, 교육자, 직장인, 청소년 등 대상별 교육과정 운영

○ 다문화인식개선 관련 자료 및 콘텐츠 게시 등

□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소요예산 : 해당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확산	다문화 이해교육 수료자 수 (단위:천명)	321		전년(23년) 실적대비 3% 증가

5. 담당자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과	전화번호	02-2100-6372,
담 당 자	5급 최선우	이 메 일	seonwoochoi@korea.kr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 가족상담, 결혼이민자 자립지원패키지 등을 제공

□ 과제 내용

○ 전국 가족센터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초기 적응과 안정적 가족생활, 자립 지원 등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 : 21개소('06)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 ('07)38개소→('08)80개소→('09)100개소→('10)159개소→('11)200개소→('12)200개소→('14~)218개소→('20~)228개소→('22)230개소→ ('23)231개소 → ('24~)231개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가족센터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사업지침) → 지자체(사업시행)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시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 지원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 62,576명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 656,800명

3. ‘2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및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지침 교부(1월)

○ 사업추진 실적 주기적 점검(매월)

□ 추진일정

○ 가족사업안내 지침 교부(1월)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및 역량강화지원 사업 실적 점검(매월)

○ 사업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24. 하반기

□ 소요예산 : **총 71,529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68,027	71,529	5.1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양평기금)	32,690	34,125	4.4	
-지방비	▪ 광역시·도비	35,337	37,404	5.8	
	▪ 시·군·구비				
-기 타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자립지원패키지는 가족센터 기본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위 예산은 가족센터 운영 총 예산액임

□ 산출내역

○ 가족센터 운영 : 71,529백만원

※ 211개소×339백만원=71,529백만원

○ 재원형태(국고보조율 등)

- 국비보조율 : 30~70%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이용자수 확대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이용자 수 (연인원)	60,951명	62,576명	전년 실적 대비 3% 증가
'24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이용자수 확대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이용자 수 (연인원)	62,779명		전년 실적 대비 3% 증가

5. 담당자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전화번호	02-2100-6369
담 당 자	5급 전병길	이 메 일	pass7102@korea.kr

3-3-3-3	학업 · 진로 · 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글로벌 미래 인재로 육성

□ 과제 내용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영유아기 언어발달, 취학 전후 기초학습 및 청소년기 상담, 진로설계 지원, 이중언어 역량강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진로 컨설팅 및 대학생을 활용한 한국어・기초학습 및 진로・진학 상담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년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 기초학습 지원 시작(78개소, 90개소)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실행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14.7월~)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시범사업 실시(’09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가족센터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사업지침) → 지자체(사업시행)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시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사업 확대 운영

-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 ('22) 78개소 → ('23) 113개소
- 취학준비 학습지원 : ('22) 90개소 → ('23) 138개소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누적연인원 : 139,040명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누적 연인원 : 169,272명

3. '24년도 추진계획

□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 (언어발달) 언어발달 치료 전문기관 이용 및 외부 언어발달지도사 활용 등 확대

- 센터 내 언어교육, 치료 전문기관 이용, 외부 언어발달지도사 활용 등

○ (이중언어) 지역별 결혼이민자 출신국 분포와 이중언어 강사 활용 여건에 따라 언어권별·수준별 교육 지원

- 부모·가족 코칭 지원, 이중언어 강사 활용 직접교육 신규 지원

○ (기초학습) 취학전·초등 전학년 대상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을 지원하고 초등 고학년 대상 독서토론, 국어 등 학습지원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기초학력 향상 및 진로설계 등을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

○ (진로설계) 비다문화 청소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멘토링 활용 등 프로그램 다양화

-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제공,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등

□ 추진일정

○ 세부 운영계획 수립, 예산 교부 : '24. 1월 중

○ 홍보 및 참여자 발굴, 세부사업 추진 : '24. 2 ~ 연중

○ 사업설명회, 월별 실적 및 현장점검 : 연중

○ 사업결과(정산) 보고서 작성, 보고 : ~ '25. 2월

☐ 소요예산 : 총 38,91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32,251	46,092	43.6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양평기금)	15,382	22,087	42.3	
-지방비	▪ 광역시·도비	16,869	24,005	42.9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6,397백만원

- 330명×40,590천원×30~70% = 6,397백만원

○ 이중언어 학습 지원 : 5,650백만원

- 이중언어 부모코칭 : 210명×36,655천원×30~70% = 3,629백만원

- 이중언어 직접학습 : 130개소×31,090천원×50% = 2,021백만원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26,863백만원

- 진로설계 지원 : 143개소×46.7백만원×30~50%=3,383백만원

- 기초학습 지원 : (저학년) 168개소×44.2백만원×30~50%=4,658백만원

(고학년) 100개소×33.1백만원×30~50%=1,999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기초학습 지원 이용자수 확대	기초학습 지원 이용자 수(명)	145,371명	145,371명	
'24	"	"	"	254,399명		전년 실적대비 75% 상향

5. 담당자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전화번호	02-2100-6369 02-2100-6374
담 당 자	5급 전병길 5급 송재언	이 메 일	pass7102@korea.kr sartzche@korea.kr

4-2-2-1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에게 상담·보호 및 의료·법률 지원, 주거 제공,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폭력피해자 인권보호 및 자립 지원

□ 과제 내용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운영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04.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시작(2개소)

○ 2009.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별도 사업 분리(복권기금 지원), 이주여성 쉼터 18개소, 이주여성 그룹홈 1개소 지원

○ 2010.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신설(1개소)

○ 2013.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4개소 확대

○ 2014.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3개소 확대(쉼터2, 그룹홈1)

○ 2015.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1개소 확대

○ 2017.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2개소 확대(쉼터1, 그룹홈1)

○ 2018.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2개소 확대

○ 2019.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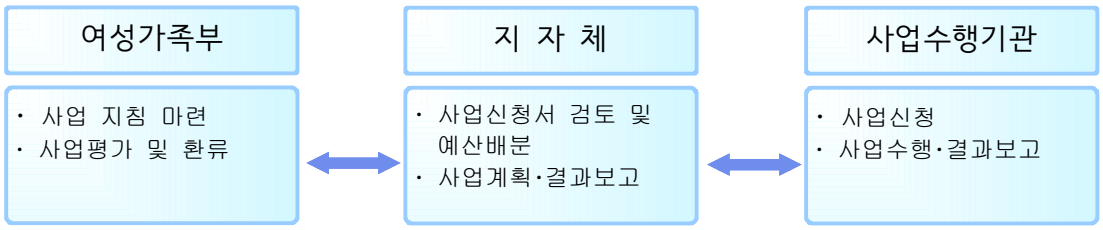
○ 2020.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4개소 확대

○ 2021.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1개소 확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 추진절차



2. '23년도 추진 실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33개소) 및 상담소(9개소) 운영

○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숙식제공 등 서비스 지원 지속 확대

* 보호시설 : ('22) 91,494건 → ('23) 94,972건(잠정치)

상 담 소 : ('22) 67,123건 → ('23) 67,450건(잠정치)

○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등 주거 지원을 위해 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인당 5백만원) 지급

○ 이주여성, 외국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공감이 가는 내용의 홍보 콘텐츠(13개 언어)를 제작·배포하여 폭력피해 예방 및 사업 인지도 제고

3. '24년도 추진계획

☐ 폭력피해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을 통한 보호·상담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연중)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만족도 조사(3/4분기)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현장점검(4/4분기)

☐ 소요예산 : 총 7,609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7,350	7,609	3.5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양평기금)	7,350	7,609	3.5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 6,230백만원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 1,379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지원 실적(건)	160,000	160,000 (추정치)	실적보고서
’24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지원 실적(건)	165,968		실적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	전화번호	02-2100-6582/6455
담 당 자	5급 한송이 6급 현승환	이 메 일	flowertoto@korea.kr 0731hsh@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국토교통부

목 차

Ⅰ. 2024년 시행계획 총괄 ····· 510

Ⅱ. 2024년 시행계획 개요 ····· 511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513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514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2]-⑤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514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2-2-[2]-①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516

국 토 교 통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2	100%	비예산	비예산	
1. 경 제					
2. 안 전	2	100%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주요 사업내용

- 건설업 외국인력 정책 설명회 개최, 합법 외국인력 고용 유도 및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
  - 외국인 고용절차,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및 건설업 숙련기능인력 도입에 따른 제도 안내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지속 실시
  -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상시 단속 및 추가 기획조사 실시, 토지·비(非)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동향분석 및 기획조사 병행 추진

※ ('23년) 외국인 토지거래 중 이상거래(920건) 조사결과 위법 의심행위 437건 적발, 非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472건) 조사결과 위법 의심행위 423건 적발

Ⅰ. 2024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2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 정책목표별 과제가 없는 경우 정책목표를 예산총괄표에서 완전 삭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합계	2개	-	-	00.0	
소계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2)	-	-	00.0	
2-1-2-5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	00.0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	00.0	

Ⅱ. '24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①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건설업 특성과 맞지 않는 외국인력 규제*로 인하여 불법인력이 양산

* 과도한 잔여공기 규제, 이동제한 규제, 재입국특례 미적용 등 → 개선 완료('22년~'23년)

○ 규제 개선 등 합법 외국인력 활용 여건은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낮거나, 단계적으로 합법 외국인력으로 교체 중인 상황으로 과도기 상태

⇨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 설명회를 통해 합법 외국인력 고용 유도 및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 추진

②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통한 국민의 거주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기행위 적발 필요

- 110대 국정과제 중 7번 과제(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회복을 위한 주거안정 실현)에 외국인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 포함*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 등 실시

2. '23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3년 주요과제 성과

①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건설업 외국인력 정책 설명회 개최('23.11.14)

②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외국인 토지거래('17~'22년, 14,938건) 중 이상거래(920건) 조사 결과를 발표('23.7월)

○ 非주택 中 오피스텔('18.1월~'23.6월, 7,520건) 및 주택('22.6월~'23.5월, 7,005건) 거래 중 이상거래(472건)를 선별하여 기획 조사한 결과를 발표('23.12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없음

3. '24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①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설명회를 통해 외국인 고용절차,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및 건설업 숙련기능인력 도입에 따른 제도 안내

②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지속 실시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5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건설업 외국인력 정책 설명회 개최	국토부 건설산업과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외국인 불법성, 투기성 거래 조사 계획	국토부 부동산소비자 보호기획단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주택 이상거래 기획 조사	국토부 부동산소비자 보호기획단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非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부 부동산소비자 보호기획단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2-1-2-5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 설명회를 통한 합법 외국인력 고용 유도 및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

□ 과제 내용

○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건설사에 외국인 고용 절차, 규정 등 안내

-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전문건설사의 담당자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 개선 : '22년 하반기 ~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전문건설협회

○ 추진절차 : 전문건설협회 16개 시·도회 수요조사 → 설명회 일정 조율 및 계획수립 → 지역별 설명회 개최

2. '23년도 추진 실적

○ 건설업 외국인력 정책 설명회 개최('23.11.14)

3. '24년도 추진계획

□ 설명회 개최

○ 건설업 외국인력 정책 설명회('24.2분기)

- 외국인 고용절차,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및 건설업 숙련기능인력 도입에 따른 제도 안내

☞ 전문건설업체 담당자의 이해도 제고를 통한 합법 외국인력 고용 유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업체 담당자 이해도 제고	설명회 개최	1회	1회	설명회 개최 횟수
'24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업체 담당자 이해도 제고	설명회 개최	5회	-	설명회 개최 횟수
'25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업체 담당자 이해도 제고	설명회 개최	5회	-	설명회 개최 횟수
'26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업체 담당자 이해도 제고	설명회 개최	5회	-	설명회 개최 횟수
'27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업체 담당자 이해도 제고	설명회 개최	5회	-	설명회 개최 횟수

5. 담당자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전화번호	044-201-3539
담 당 자	5급 윤석진	이 메 일	ysj0321@korea.kr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거주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실시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과제 내용

○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상시 단속 및 추가 기획조사 실시, 토지·비(非)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동향분석 및 기획조사 병행 추진

○ 외국인 기획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외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실거주지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 '23.8.22 시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5. 과제 추진, '23.12.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토교통부, 법무부, 관세청 등(협업) → 한국부동산원

○ 추진절차 : 조사대상(부동산거래 신고 中 이상거래건) 선정 → 한국부동산원·국토부 기획조사 후 위반 혐의 건 관계기관* 조사의뢰 → 관계기관*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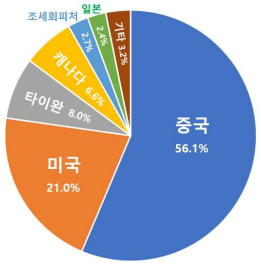
* (관계기관)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2. '23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외국인 토지거래('17~'22년, 14,938건) 중 이상거래(920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23.7월),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인, 미국인, 대만인 順)

【국적별 분포】



【중국인의 위법의심행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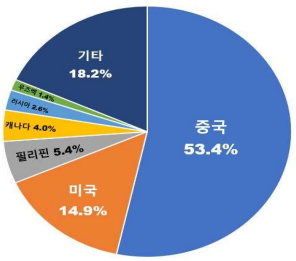
계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②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③ 편법증여 등 (국세청 통보)	④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⑤ 편법대출 등 (금융위 등 통보)
211	26	208	27	2	3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

○ 非주택 中 오피스텔('18.1월~'23.6월, 7,520건) 및 주택('22.6월~'23.5월, 7,005건) 거래 중 이상거래(472건)를 선별하여 기획 조사한 결과를 발표('23.12월)

-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으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23건의 국적은 중국인이 226건(53.4%),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順

【국적별 분포】



【중국인의 위법의심행위 유형】

계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② 거짓신고 등	③ 탈세 의심	④ 명의신탁 등	⑤ 편법 대출	⑥ 무자격 임대업
226	22	142	45	0	5	12

① 관세청 통보 ② 지자체 통보 ③ 국세청 통보
④ 경찰청 통보 ⑤ 금융위 통보 ⑥ 법무부 통보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

○ 외국인 기획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완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23.8.22. 개정·시행)

- 매수인(외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실거주지 확인서류(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3. ‘24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외국인 불법성·투기성 거래 조사 계획 수립 및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3분기), 非주택(오피스텔 등)·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4분기)

□ 소요예산 : 해당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외국인 부동산 투지 조사	-	-	-	-	-
’23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외국인 부동산 투기성 거래 조사 실시	외국인 주택 거래조사 1회, 외국인 비주택 거래조사 1회	2회	2회	메모보고 또는 보도자료
’24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외국인 부동산 투기성 거래 조사 실시	외국인 주택 거래조사 1회, 외국인 비주택 거래조사 1회	2회		

5. 담당자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전화번호	044-201-3590
담 당 자	5급 이석유	이 메 일	stoneoil@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해양수산부

목 차

Ⅰ. 2024년 시행계획 총괄 ····· 522

Ⅱ. 2024년 시행계획 개요 ····· 523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525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526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4.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성장

1-4-1-② 크루즈관광 활성화 ····· 526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2-①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530

2-3.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3-2-②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 533

해 양 수 산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3	100%	8,630	7,816	△9.4%
1. 경 제	1	33.3%	1,140	1,098	△3.7%
2. 안 전	2	66.7%	7,490	6,718	△10.3%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활동,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 사업 등 추진**
- **테러 예방 등을 위한 항만보안 시설·장비 및 항만보안 인력 확보**
-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주요 사업내용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활동 및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 사업 추진
  - 관계기관 공동 Port Sales(일본), 제주 국제크루즈 포럼 개최, 아시아크루즈 협의체 (ACC) 연례회의 개최, 크루즈 체험단 운영 등
- 항만을 통한 외국인 선원 등의 밀입국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보안 시설 · 장비 확충
  -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추진, 테러 예방 등을 위한 항만보안 시설·장비 및 항만보안인력 확보, 전국항만 합동보안 세미나 개최, 관계부처 합동 항만분야 점검 실시
-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추진
  -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조사 추진(근로계약 체결현황, 인권침해 여부 등)
  - 외국인 인권개선 이탈·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 발굴
  - 외국인선원 고충상담 및 해결 지원

Ⅰ. 2024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3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합계	0개	8,630	7,816	△9.4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1)	1,140	1,098	△3.7	
1-4-1-2	크루즈 관광 활성화	1,140	1,098	△3.7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2)	7,490	6,718	△10.3	
2-1-2-1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비예산
2-3-2-2	항만국경관리 선진화	7,490	6,718	△10.3	

Ⅱ.'24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중국발 크루즈선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크루즈 운항이 본격 재개

- 내수경기 활성화, 여행수지 개선 등을 위한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활동,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사업 등 추진 필요

○ 테러 예방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운영 필요

- 테러위협 및 무단이탈 사고 등에 따른 항만시설 보안 확보를 위하여 보안 시설장비 및 인력 확충 필요

- 항만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강화

○ 외국인선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선원 노동시장이 국제화 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수요 증가

* (고용현황) ('19년) 26,331명, ('20년) 26,775명 ('21년) 27,333명 ('22년) 28,281명

-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위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및 이탈·불법체류 예방 필요

2. '23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3년 주요과제 성과

○ 항만·관광인프라 등 입항 전 사전점검, 출입국 제도 개선, 적극적인 유치활동 등을 통해 204항차, 27.4만명의 크루즈 관광객 방한

○ 항만 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출입 등 항만보안 취약점 개선을 위해 출입 절차 강화, 실태조사 실시 및 항만출입규정 개정 등 계획 수립

○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3.12.)

- 항만 출입 시 인정되는 신분증 범위 명확화, 외국인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 등 항만 출입 관리 상 문제점 및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 검역관련 의무 위반선박에 대한 선박입출항 허가(금지)제 적용(연중)

*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8개 관계기관 합동 제정)에 따른 조치 시행

○ 노·사·정 합동 근해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조사(2회) 및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확인(4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 없음

3. '24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내수경기 활성화, 여행수지 개선 등을 위한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활동,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사업 등 추진

□ 테러 예방 등을 위한 항만보안 시설·장비 및 항만보안인력 확보

□ 전국항만 합동보안 세미나 개최로 항만보안 최신 정보 공유 및 인력·시설·장비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도모

□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조사 실시로 근로여건 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2024년도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시행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2-1-2-1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정기 및 수시 근로감독 실시	해수부 선원정책과
2-3-2-2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 국제선박항만보안법 하위법령 개정	해수부 항만운영과
2-3-2-2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 항만보안인력 증원	해수부 항만운영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 확대를 위한 Port-Sales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2-1-2-1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정기 및 수시 근로감독 실시	해수부 선원정책과
2-3-2-2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 관계부처 합동 항만분야점검	해수부 항만운영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제11회 제주 국제크루즈 포럼 개최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2-1-2-1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정기 및 수시 근로감독 실시	해수부 선원정책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 확대를 위한 Port-Sales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2-1-2-1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정기 및 수시 근로감독 실시	해수부 선원정책과
2-3-2-2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 전국항만 합동보안 세미나 개최	해수부 항만운영과
2-3-2-2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 관계부처 합동 항만분야점검	해수부 항만운영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확대 및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경기 활성화, 여행수지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도모

□ 과제 내용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 등 산업 활성화를 통해 크루즈산업을 미래 해양산업 아이콘으로 육성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타권역 선사미팅, 관계기관 공동 현지 포트세일즈, 국제행사 개최 및 지역협의체 활동 등

- (국내 수요 확대) 크루즈체험단 운영 및 방송·유튜브 등 매체 홍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5. 8.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16. 3.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 2023. 1. 제2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 2023. 7. 제10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기항지(지자체, 항만공사, 관광공사 등)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크루즈 운항 재개를 위한 노력 및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활동,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사업 등 추진

○ (크루즈 운항 재개) 입항 재개 전 인프라 사전점검(1분기) 및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연중)

※ 크루즈 관광객 K-ETA 적용 배제, 초대형선 전출항지 출장 입국심사 등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타권역 선사미팅, 관계기관 공동 현지 포트세일즈, 국제행사 개최·참석 및 지역협의체 활동 등 추진

※ (선사미팅) 일본지역 선사미팅('23,4) 유럽지역 선사미팅('23.11)

(관계기관 공동 포트세일즈) 대만지역 포트세일즈('23.5), 중국지역 포트세일즈('23.11)

(국제행사 개최·참석) 제10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23.7), Seatrade Cruise Asia-Pacific 참석('23.10)

(지역협의체 활동) 국제행사 간 ACC 회원을 중심으로 공동발전 방안 논의

○ (국내 크루즈 수요확대) 국제크루즈 체험단 운영(150명, ‘23.6)

3. ‘24년도 추진계획

□ 내수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활동,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사업 등 추진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타권역 선사미팅, 관계기관 공동 현지 포트세일즈, 국제행사 개최 및 지역협의체 활동 등 추진(연중)

※ (선사미팅) 중국('24.下, 잠정) / (관계기관 공동 포트세일즈) 일본('24.2분기)

(국제행사 개최) 제10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24.7)

(지역협의체 활동) 아시아크루즈협의체(ACC) 연례회의 개최('24.下, 잠정)

○ (국내 크루즈 수요확대) 국제크루즈 체험단 운영('24. 잠정) 및 유튜브 등 매체 홍보 진행(연중)

☐ 소요예산 : **총1,098백만원**

구 분		'23년도	'24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140	1,098	△3.7	
-국 비	▪ 일반회계	840	798	△5.0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300	300	0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해양수산부 예산>

○ 외국적 크루즈 유치(포트세일즈) : 400백만원

- 57.1백만원(행사장 임대, 홍보물 제작, 통역 등 행사진행비)×7개 지역= 400백만원

○ 국내 저변 확대 : 248백만원

- 체험단(1인 2백만원×50%×148명) + 매체홍보(100백만원×1편)

○ 국제크루즈 행사지원 : 150백만원

-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1식×150백만원(행사장 임차·조성 등)

<제주특별자치도 도비>

○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300백만원

-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1식×300백만원(연사 초청, 컨퍼런스 운영 등 운영비)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크루즈관광 활성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행사 개최	3회	6회	해외 Port-Sales 추진 횟수
'24	크루즈관광 활성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행사 개최	3회		해외 Port-Sales 추진 횟수

5. 담당자

소관부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전화번호	044-200-5277
담 당 자	5급 황인성	이 메 일	rhoads80@korea.kr

2-1-2-1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근해어선 승선 외국인 어선원은 연근해 어선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97년부터 승선이 허용되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97)86명 → ('04)1,058명 → ('16)8,314명 → ('18) 9,733명 → ('19)10,032명 → ('22)9,242명

□ 과제 내용

○ 외국인 선원 권익보호를 위한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20.6월) 및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20.12월)"의 이행 확인

* 외국인 선원 도입체계 공공성 강화, 외국인 선원 인권보호, 근로환경 및 조건 개선, 인신매매·이탈 방지 등 관리강화, 한국어 및 근로고충 등 교육체계 개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연근해어선 승선 외국인선원 권익보호를 위해 노사정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및 인권 개선대책"('13.7월)을 마련

○ 동 개선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노사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완대책 수립 시행('14.5, '15.6, '16.4, '17.4, '18.4, '19.4, '20.6, '20.12)

○ 외국인선원이 임금체불, 폭행 등 고충사항을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도록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외국인콜센터' 및 수협중앙회 '외국인 고충상담센터' 운영(인도네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13.1월~)

○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침해 및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20.6월)" 수립 시행

○ 원양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20.12월)" 수립, 시행

○ 외국인 어선원의 송출입 공공화를 위한 한-인니 근해어선원 고용노동 협력 MoU 체결('21.5.31)

○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하고 선장에게 선내 사망자의 시신인도 의무를 규정한 선원법 개정안 시행('21.7.16)

○ 외국인선원의 권리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 교육 의무화('23.1~)

○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선원법 개정안 시행('24.1.25)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 선원노조, 수협중앙회 → 선주

○ 추진절차 : 조사계획 수립(해양수산부) → 조사반 편성(해양수산부) → 실태조사(노사정 합동) → 평가 및 보완(해양수산부)

2. '23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선원 근로감독 실시 및 인권 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

○ 노사정 합동점검반이 이행상황을 주기적 점검하여 외국인 노동인권과 근로환경을 개선(근해 연2회*, 원양 연4회**)

* (상반기) 3.20.~4.7. / (하반기) 10.23.~12.15.

** '22년 4차(1.27), '23년 1차(4.19), 2차(7.18.~9.15), 3차(10.30.) 노사정 합동점검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휴식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 명절 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선사의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 상환을 독려하여, 선원의 생계를 보장

* (설 명절) '22.12.21~'23.1.13. / (추석 명절) '23.8.21~9.21

3. '24년도 추진계획

□ 2024년도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추진

○ (조사내용) 근로계약체결 현황, 임금지급 수준 및 체불여부, 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이행여부 등 조사

□ 외국인선원 인권개선, 이탈·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발굴

□ 외국인선원 고충상담 및 해결 지원(계속)

○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수협중앙회) 운영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실시	2회	6회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24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실시	2회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0-5743
담 당 자	5급 김행숙	이 메 일	ysbada22@korea.kr

2-3-2-2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IS 테러 위협, 항만보안 사고 증가 등에 따라 국경관리 차원에서 항만을 통한 외국인 밀입국 방지 도모

□ 과제 내용

○ 항만을 통한 외국인 선원 등의 밀입국 방지를 위하여 항만보안 시설 · 장비 확충,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출입허가(금지)제도 정착 등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6. 2.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등)와 합동으로 '항만보안 강화방안' 수립

○ 2016. 1~12. CCTV, 보안울타리 등 항만보안 시설 · 장비 확충

○ 2016. 11.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시행

○ 2017. 1~12. CCTV, 보안울타리 등 항만보안 시설 · 장비 확충 및 보안 시설 · 장비 기준 등 보완

○ 2017. 1~12. 무단이탈 사고 선박에 대하여 입항 금지 등 제재조치* 이행

* 무단이탈 1회 선박은 6개월 / 2회는 1년 / 3회는 영구 입항금지('16.11.10~)

○ 2017. 10. 제주항 무사증 이탈자 방지를 위한 차량형 X-Ray 검색기 도입(3대)

○ 2018. 5. 제2차 국가항만보안계획 수립 · 시행

○ 2019. 4.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정

○ 2020.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

*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보안감독관 운영 근거 마련 등

○ 2022. 2.「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등 제정(3건)

* 검색장비 성능인증, 시험기관, 운영 및 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 등

○ 2022. 8.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개정

* 보안사고 조치결과에 따른 출입허가 및 입항금지 대상 선박 지정 근거 마련

○ 2023. 12.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개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해수부, 해경청

○ 추진절차 : 부처별 협업을 통한 업무 추진

2. '23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항만 출입 관리 강화 방안 마련('23.7.)

○ 항만 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출입 등 항만보안 취약점 개선을 위해 출입절차 강화, 실태조사 실시 및 항만출입규정 개정 등 계획 수립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하위 행정규칙 개정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23.12.)

- 항만 출입 시 인정되는 신분증 범위 명확화, 외국인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 등 항만 출입 관리 상 문제점 및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 '23년도 항만보안 예산(74.9억원*) 및 차년도 예산(67.2억원) 확보 추진

※ 출입관리시스템 고도화·연계확대 1,818백만원, 보안시설장비 유지보수 5,402백만원, 항만보안 합동보안훈련 등 270백만원

□ 검역관련 의무 위반선박에 대한 선박입출항 허가(금지)제 적용(연중)

*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8개 관계기관 합동 제정)에 따른 조치 시행

3. ‘24년도 추진계획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상반기)

○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추진('24.上)

-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유예, 항만시설 촬영 결과물을 항만시설 보안책임자의 허가없이 발간·복제·배포하는 행위 금지 및 항만시설 내 비행승인 없이 드론 비행 금지 등에 관한 기준 마련

□ 테러 예방 등을 위한 항만보안 시설·장비 및 항만보안인력 확보(1분기)

-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출입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이전 항만 경비초소 신축 등 항만시설 보안장비·시설 신설(49.6억원)

- 보안구역 확대운영 등을 위한 항만보안인력 증원

□ 전국항만 합동보안 세미나 개최(4분기)

-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전국 항만시설(213개)의 보안책임자 및 보안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보안세미나 개최로 항만보안 최신 정보의 공유 및 인력·시설·장비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 개별 항만시설소유자의 합동훈련 준비·시행 부담 경감 및 항만보안관계기관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항만보안 현장과 정책·제도의 상호 개선 기대

□ 관계부처 합동 항만분야 점검 실시(2분기, 4분기)

* 항만시설, 여객선 등에 대한 테러대응태세 점검 및 취약요소 발굴·개선을 위한 관계부처(법무부, 국정원, 국방부, 경찰, 해경, 관세청 등) 합동점검 지속 실시(반기별)

□ 소요예산 : **총 6,718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7,490	6,718	△10.3	
-국 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교통시설)	7,490	6,718	△10.3	
	▪기금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항만보안시설·장비 신설: 4,228백만원

-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3,246백만원

- (출입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92백만원

- (항만 경비초소 신축) 690백만원

○ 항만보안시설·장비 유지보수: 2,440백만원

- (출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861백만원

- (항만보안 시설장비 유지보수) 1,515백만원

- (항만보안리스크 평가 프로그램) 64백만원

○ 항만보안 역량강화: 50백만원

- (전국항만 합동보안세미나 개최) 30백만원

- (청원경찰 통합채용 필기시험 출제 운영) 2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항만국경관리 선진화	외국인 밀입국 방지	합동보안훈련(세미나) 실시	1회	1회	'23년 예산 확보
'24	항만국경관리 선진화	외국인 밀입국 방지	합동보안훈련(세미나) 실시	1회		'24년 정부 예산안

5. 담당자

소관부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전화번호	044-200-5777
담 당 자	4급 김채균	이 메 일	nobakim@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중소벤처기업부

목 차

Ⅰ. 2024년 시행계획 총괄 ····· 540

Ⅱ. 2024년 시행계획 개요 ····· 541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543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544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2.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성장

1-2-[1]-⑤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 544

1-2-[5]-①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 547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2	100%	6,000	9,700	61.7%
1. 경 제	2	100%	6,000	9,700	61.7%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외국인 창업자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
- **해외 소프트웨어(SW)인력의 스타트업으로 유입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주요 사업내용

- 외국인 창업자의 발굴부터 국내 안착까지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성장을 위해 분야별 전문 엑셀러레이팅 제공 후 우수팀 선발 및 후속 지원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우수 해외 인재의 창·취업 지원 및 핵심 네트워크 거점(플랫폼) 마련
  - (K-스카우터) 한국 및 아시아 시장진출 의지와 안착 가능성이 높은 창업 기업 발굴 및 멘토링
- 베트남 현지 대학생 등 대상으로 스타트업 취업을 위한 소프트웨어(SW) 실무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국내 및 현지 진출 스타트업으로 취업 매칭 지원
  - 업체 선정·참여자 모집 → SW 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 → 취업매칭 → 비자연계 및 후속관리 절차로 추진

※ 중소기업 75.4%가 SW전문인력 채용 및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며, 향후 외국인 SW 인력 채용 의사를 피력한 기업은 54.5%('23.7, 중기부 조사)

Ⅰ. 2024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2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2)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합계	2개	6,000	9,700	61.7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2개)	6,000	9,700	61.7	
1-2-1-5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	1,600	-	‘24년 신규
1-2-5-1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인바운드 창업지원체계 구축)	6,000	8,100	35	

Ⅱ.'24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 외국인 창업비자 취득요건 완화, 외국인 창업자의 발굴부터 국내 안착까지 지원하는 종합지원 체계 및 여건 조성

○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매칭 지원

- SW 개발인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에 해외 SW분야 인력 공급 필요

2. '23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3년 주요과제 성과

○ 유망 외국 스타트업 발굴 및 국내 유치

-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국인 기술창업팀을 발굴하여, 국내에서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공간 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국내 기업과 협력 등을 지원하여 국내 사업화 및 정착 지원

○ 기술창업비자 취득 및 국내 기술창업 지원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참여 외국인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기술창업비자 취득 지원(관계부처 협업)

- 데모데이 및 정착도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스타트업이 국내법인 설립, 투자유치, 국내 기업과의 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참여팀들에 대한 후속지원을 위한 사업화 자금 도입

- 국내 창업 생태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멘토링, 투자,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여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협업 지원 강화 필요

3. '24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외국인 창업자의 발굴부터 국내 안착까지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화

□ 해외 SW 인력의 스타트업으로 유입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1-5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 업체 선정 및 참여자 모집	중기부 청년정책과
1-2-5-1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추진계획 수립	중기부 글로벌창업팀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1-5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 SW 실무교육 및 한국 스타트업 직무 적응 지원	중기부 청년정책과
1-2-5-1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창업팀 모집공고 및 홍보 ▪ 외국인 창업팀 모집	중기부 글로벌창업팀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5-1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 외국인 창업팀 선정 ▪ 외국인 창업팀 보육 지원	중기부 글로벌창업팀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1-5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 온·오프라인 일자리 매칭	중기부 청년정책과
1-2-5-1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 개최 ▪ 외국인 우수 창업팀 시상 및 후속 지원	중기부 글로벌창업팀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2-1-5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스타트업의 구인난 해소 및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의 우수 인력이 한국 스타트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

☐ 과제 내용

○ 베트남 현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취업을 위한 SW 실무교육 등을 제공하고 국내 및 현지 진출 스타트업으로 취업매칭 지원

- 국내 취업을 위한 한국어·한국 기업 문화·포트폴리오 작성 등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6월, 사업추진을 위해 베트남 과기부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인력교류를 위한 협력의향서」 체결

○ '23.8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신규과제로 포함

○ '23.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로 포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법무부, 교육부(한국교육원)

○ 추진절차

① K-tech college 교육생 선정 : SW 상식시험 및 심층면접 평가

교육생 모집 ⇨ **평가전형** ⇨ **교육생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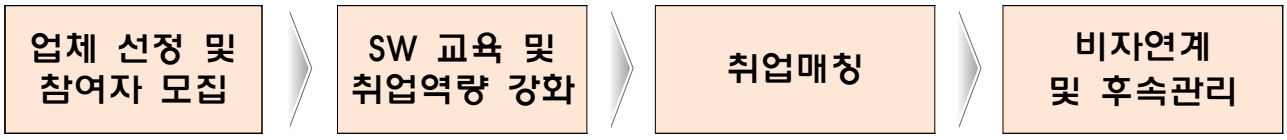
② 교육·보육 프로그램 : 패키지로 동시 지원

교육생 선정 ⇩ **SW 교육** ⇦ **프로젝트 및 인턴십** ⇦ **취업 교육** ⇩ **취업매칭·데모데이** ⇨ **일자리 연계** ⇨ **비자발급 및 사후관리**

2. ’23년도 추진 실적 : 해당없음 (’24년 신규 추진과제)

3. ’24년도 추진계획

☐ 업체 선정·참여자 모집 → SW 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 → 취업매칭 → 비자연계 및 후속관리 절차로 추진



○ (업체선정 및 참여자 모집) SW 분야 실무교육·취업매칭을 수행할업체 공모 및 현지 대학생 등 참여자를 발굴하고 평가를 통해 선발(‘24.1분기)

○ (실무교육) 스타트업 수요에 맞춘 SW 실무교육과 함께 한국기업 취업을 위한 비즈니스 교육 등 한국 스타트업 직무 적응 지원(‘24.2~3분기)

- 한국어교육 : 집중교육 대상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등 호시민시한국교육원(교육부) 연계 과정 제공

○ (취업매칭) 우수성 입증자료 구성을 지원하고 국내·외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구인·구직 Pool을 구성하여 온·오프라인 일자리 매칭(‘24.4분기)

○ (비자연계) 기관 추천을 통해 E-7 비자 발급을 연계 지원(법무부)

☐ 소요예산 : 총 1,600 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1,600	100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중진기금)	0	1,600	100	신규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산출내역

○ 1,600백만원 = (물량) 200명 × (단가) 8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스타트업 취업 교육 수료율	수료율 (%) = 수료인원 / 선발인원	70%	-	국내 유사사업의 교육수료율 기준으로 목표 설정(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23년 수료율 72%)

5. 담당자

소관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청년정책과	전화번호	044-204-7952
담 당 자	5급 이기택	이 메 일	dlrlxor135@korea.kr

1-2-5-1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인바운드 창업지원체계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유입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

□ 과제 내용

○ 외국인 창업자의 발굴부터 국내 안착까지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성장을 위해 분야별 전문 액셀러레이팅 제공 후 우수팀 선발 및 후속지원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우수 해외 인재의 창·취업 지원 및 핵심 네트워크 거점(플랫폼) 마련
- (K-스카우터') 한국 및 아시아 시장진출 의지와 안착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발굴 하고 멘토링하는 한국형 GEP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16년~),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K-스카우터('24~)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 추진절차 : 모집공고 → 평가·선정 → 보육 → 데모데이 → 후속지원

2. '23년도 추진 실적

□ 국내 AC의 보육을 받은 외국인 창업팀(44개팀) 대상 데모데이를 열어 후속지원 20개팀 선발 및 상위 5개팀 시상(최대1.5억원)

3. ’24년도 추진계획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 (’24. 1/4분기)

- ‘24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참가팀 모집 공고 및 홍보(4월~)

○ (’24. 2/4분기)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참가팀 신청·접수(4월~5월)

○ (’24. 3/4분기~4/4분기)

- 서류평가, 해외오디션 등 통해 지원 기업 선정(6월~7월)

- 국내 입국한 창업기업 대상 액셀러레이팅(8월~12월)

- 참가팀 정착도 평가 및 데모데이 통해 Top20 선정(12월)

○ (’25. 1/4분기~2/4분기)

- ‘24년 참가팀 후속지원 실시(~5월)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 ‘24년 7월 개소 예정

□ K-스카우터 : K-스카우터 공모(상반기 내) → 프로그램 운영(~12월)

□ 소요예산 : **총 8,10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6,000	8,100	35	
-국 비	▪ 일반회계	6,000	8,100	35	중소벤처기업부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81억원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 1.5억원×40개사) + (K-스카우터 : 1.5억원× 4개사) + (글로벌스타트업센터 : 15억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20	외국인기업 국내 법인 설립	20	25	법인 설립 수

5. 담당자

소관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 창업정책관- 글로벌창업팀	전화번호	044-204-7682
담 당 자	5급 김택선	이 메 일	1025kts@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Ⅰ. 2024년 시행계획 총괄 ····· 553

Ⅱ. 2024년 시행계획 개요 ····· 554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556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558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3.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3-3-[2]-②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558

3-3-[2]-③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 561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4-1-[1]-④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564

방송통신위원회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3	100%	1,775	1,775	0%
1. 경 제					
2. 안 전					
3. 통 합	2	66.7%	1,775	1,775	0%
4. 인 권	1	33.3%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외국인을 위한 통신서비스 지원 환경 개선**
-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지속 추진**
- **방송사 자체 심의 기능 강화 유도 지속 추진**

주요 사업내용

- 외국인을 위한 통신서비스 지원 환경 개선
  -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강사단 선발 및 육성, 다국어 교육 콘텐츠 제작, 주한 외국인 대상 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 FM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내 거주·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생활·재난 정보 등 제공
  - 시사/보도 프로그램, 교양/정보 프로그램, 음악/오락 프로그램, 제주 특화 프로그램 등
- 방송사 자체심의 기능 강화 유도 지속 추진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를 통해 차별적 방송 관련 심의규정 안내, 위반사례 공유

Ⅰ. 2024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2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2)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합계	2개	1,775	1,775	00.0	'-'의 경우 '△'
소계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2)	1,775	1,775	00.0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	-	비예산
3-3-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1,775	1,775	0.00	
소계	4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1)				
4-1-1-4	편견 · 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	-	비예산

Ⅱ.‘24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결혼이민자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통신서비스 활용·피해 예방 교육 및 상담 지원 필요

○ 결혼이민자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90.2%로 전년(90.6%) 대비 0.4%p 하락하였으며, 여전히 일반 국민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

- 새로운 유형의 통신서비스 금융사기에 취약한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서비스 추진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3.03.

□ 국내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뉴스와 날씨 등 각종 생활정보, 관광정보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 제고 필요

□ 편견, 차별 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필요

2. ‘23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실시

○ 결혼이민자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1,691명, 41회)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가입방법,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 피해예방법 등 정보제공을 위한 다국어(6종, 한·중·영·일·베·러) 콘텐츠 제작·보급

- 다국어 책자 및 전자책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

○ 생활정보 및 현장정보(관광정보, 재난속보 등) 뿐만 아니라 ‘K-Pop / K-Culture’, ‘시사·보도’ 등의 프로그램 4,317편 제작·방송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28회)를 통한 방송사 자체심의 기능 강화

3. ‘24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지속 추진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대학생 등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지속 실시

□ 외국인을 위한 통신서비스 지원 환경 개선

○ 외국인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신종 금융사기 피해사례 업데이트 및 다양한 언어로 교육 콘텐츠 제작

□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지속 추진

○ FM라디오 방송(정규 프로그램, 특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거주,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생활·재난 정보 등을 제공

□ 방송사 자체심의 기능 강화 유도 지속 추진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를 통해 차별적 방송 관련 심의규정 안내 및 위반사례 발생시 공유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계획 수립 및 강사단 육성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
3-3-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
4-1-1-4	편견·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국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다국어 교육책자 제작·보급 ▪ 주한외국인 대상 피해예방 교육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
3-3-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
4-1-1-4	편견·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국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주한외국인 대상 피해예방 교육	방통위 디지털이용자 기반과
3-3-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통위 지상파방송 정책과
4-1-1-4	편견 · 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국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주한외국인 대상 피해예방 교육	방통위 디지털이용자 기반과
3-3-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통위 지상파방송 정책과
4-1-1-4	편견 · 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국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도 제고 및 불편·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예방 교육 및 이용환경 개선

□ 과제 내용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외국인을 위한 통신서비스 지원 환경 개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3년 : 주한외국인 대상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및 이동 상담 실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글로벌센터 연계)

○ 2014년 : 방송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전용 매장 확대 유도

○ 2015년 : 방송통신사업자 고객센터 외국어 상담원 확대 유도

○ 2016년 :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국어 e-learning 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

○ 2017년 : 다문화가정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다국어 책자 제작·보급

○ 2018년 : 다문화 이주여성 및 아이를 대상으로 '방송통신 이용자 도전 골든벨' 개최

○ 2019년 :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국어 e-learning 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

○ 2020년 :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2021년 : 주한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교육 교재 및 전자책 개발·보급

○ 2022년 : 주한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교육 교재 및 전자책 개발·보급

○ 2023년 : 다문화가정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대면 교육 확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추진절차 : 계획 수립(방통위)→ 추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 '23년도 추진 실적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실시

○ 결혼이민자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1,691명, 41회)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가입방법,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 피해예방법 등 정보제공을 위한 다국어(한·중·영·일·베·러) 콘텐츠 제작·보급

- 다국어 책자 및 전자책 등 다양한 교보재 활용 및 보급

3. '24년도 추진계획

□ (1분기)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계획 수립

○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강사단 선발 및 육성(집체교육, 강사단 발대식 등)

○ 주한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교육 콘텐츠 제작

□ (2~4분기) 주한외국인 대상 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유관단체 및 외국인 대학생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주한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단체에 교육 콘텐츠 보급

○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외국인 대상 교육 운영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명)	실적	산출근거
’18	외국인을 위한 통신서비스 확대 유도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교육제공	통신서비스 교육대상자	500	502	o 교육 수료 인원
’19				500	508	
’20				1,100	1,275	
’21				1,600	1,565	
’22				1,600	1,792	
’23				1,300	1,691	
’24				1,300	-	

5. 담당자

소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전화번호	02-2110-1528
담 당 자	6급 김남희	이 메 일	namhee42@korea.kr

3-3-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방송권역 내 거주 및 방문 외국인을 주 청취 대상으로 뉴스와 날씨 등 각종 생활정보, 관광정보 및 한국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등을 제공함으로써 방송권역 해당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 제고

○ 국민의 세계화와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 과제 내용

○ FM라디오 방송(정규 프로그램, 특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거주,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생활·재난 정보 등을 제공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국무조정실 주재 「영어 라디오방송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02년 11월) 결과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운영주체로 확정하고 '03년 제주에서 FM영어방송을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방송통신위원회(예산 지원), 국제방송교류재단(과제 수행주체)

○ 추진절차 : 사업자(국제방송교류재단) 예산 교부 → 사업수행

2. '23년도 추진 실적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

○ 생활정보 및 현장정보(관광정보, 재난속보 등) 뿐만 아니라 'K-Pop / K-Culture', '시사・보도' 등의 프로그램 4,317편 제작・방송

3. ‘24년도 추진계획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계속)

○ 시사/보도 프로그램, 교양/정보 프로그램, 음악/오락 프로그램, 제주 특화 프로그램, 특집프로그램 등 총 4,317편을 제작·방송하여 1일 24시간 방송

< 아리랑국제라디오방송(영어FM) 분기별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 >

[단위 : 편]

추진시기	시사/보도	교양/정보	음악/오락	제주 특화	특집	비고
1분기	258	183	546	90		24시간 방송
2분기	258	183	546	91		
3분기	258	183	547	92	1	
4분기	259	183	547	92		
연간 전체	1,033	732	2,186	365	1	4,317

□ 소요예산 : 총 1,775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775	1,775	0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1,775	1,775	0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정규 프로그램 제작 : 1,526백만원

- 시사/보도 프로그램 578백만원(560천원×1,033편)

- 교양/정보 프로그램 200백만원(273천원×732편)

- 음악/오락 프로그램 596백만원(273천원×2,186편)

- 제주 특화 프로그램 152백만원(416천원×365편)

○ 특집 프로그램 제작 : 70백만원(70백만원×1편)

○ 제작지원비 : 179백만원(저작권료, 음반자료 구입, 청취행태조사 등)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제주영어FM 방송 청취자 만족도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자 만족도 조사	75.9%	75.3	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	4,346	4,346	프로그램 제작실적
'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제주영어FM 방송 청취자 만족도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자 만족도 조사	75.9%	75.8%	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	4,317	4,317	프로그램 제작실적
'24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제주영어FM 방송 청취자 만족도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자 만족도 조사	75.7%	조사중	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	4,317	조사중	프로그램 제작실적

5. 담당자

소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전화번호	02-2110-1421
담 당 자	5급 왕경희	이 메 일	jaerm@korea.kr

4-1-1-4	편견·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 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과제 내용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를 통한 방송사 자체심의 기능 강화 적극 유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동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의 방송심의 기능 수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추진절차 : 방송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추진

2. '23년도 추진 실적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 심의책임자·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관련 심의규정 및 현안 등 설명 및 논의(28회)

3. '24년도 추진계획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계속)

○ 차별적 방송 관련 심의규정 안내 및 위반사례 발생시 적시 공유 등을 통해 방송사 자체심의 기능 강화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편견·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25회	28회	지상파사업자 5회 종편보도PP사업자 5회 SO, 등록PP사업자 5회 방송광고사업자 5회 상품판매방송사업자5회
'24				25회	-	

5. 담당자

소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전화번호	02-2110-1265
담 당 자	이형희 사무관	이 메 일	hhlee73@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통계청

목 차

Ⅰ. 2024년 시행계획 총괄 ····· 569

Ⅱ. 2024년 시행계획 개요 ····· 570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572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573

5.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5-3.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5-3-2-②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573

통 계 청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1	100%	2,533	2,589	2.2%
1. 경 제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1	100%	2,533	2,589	2.2%

추진 방향

외국인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통계 생산 및 제공 강화

주요 사업내용

- 국내 상주 외국인 규모, 인구학적 특성, 지역분포 등에 관한 통계작성 및 공표
  - 2023년 기준 국내거주 외국인 규모 및 특성 등 인구총조사 결과 공표
- 이민자의 고용, 체류사항, 한국어 능력, 보건, 한국생활, 주거 및 생활환경, 자녀교육 등 한국에서의 고용 상태 및 사회통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작성 및 공표
  - 2024년「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실시('24.5.~6.) 및 결과 공표
- 외국인 국제이동 규모 및 특성에 관한 통계, 다문화 인구의 인구동태(혼인, 이혼, 출생, 사망) 통계 및 장래인구추계 작성 및 공표
  - 2023년「국제인구이동통계」결과 공표
  - 2023년「다문화 인구동태통계」결과 공표
  - 2022년 기준「내·외국인 인구 전망」및「시·도별 장래인구추계」작성 및 공표

Ⅰ. 2024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1)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5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1)	2,533	2,590	2.3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2,533	2,590	2.3	

Ⅱ.'24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증가와 구성 다양화

-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60년만인 2007년 100만명, 2016년 200만명, 2019년 250만명을 돌파하였음

- 코로나19로 국내 체류외국인이 2020년부터 감소하다가 증가하여 2023년은 약 251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9%를 차지함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단기, 유학·일반연수, 취업, 결혼이민·영주, 재외동포 등) 및 국적(중국, 동남아, 미국 등)의 다양화 및 다변화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현황>

	'07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체류외국인 (만명)	106.6	126.1	139.5	144.5	157.6	179.8	190.0	204.9	218.0	236.8	252.5	203.6	195.7	224.6	250.8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	2.2	2.5	2.7	2.8	3.1	3.5	3.7	4.0	4.2	4.6	4.9	3.9	3.8	4.4	4.9

주) 자료출처: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법무부), * 주민등록인구(각 연도 1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인구 대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관련 통계 수요 증가

2. '23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3년 주요과제 성과

○ 국제이동 규모 및 이동자 특성 파악을 위한 국제인구이동통계 공표('23.7.)

○ 국내거주 외국인 규모 및 특성 파악을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총조사 공표('23.7.)

- 상주 외국인에 대한 통계 작성 및 모집단 정보 제공

○ 외국인과 귀화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혼인·이혼·출생·사망에 관한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결과 공표(’23.11.)

○ 2022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상주인구를 전망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결과 공표(’23.12.)

○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의 체류실태 및 고용현황 파악을 위해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실시(’23.5.~6.) 및 결과 공표(’23.12.)

3. ’24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외국인 정책수립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통계 생산 및 제공 강화

○ 전국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시도 장래인구추계 및 내·외국인 인구전망 작성 및 공표

○ 행정자료 활용 인구총조사를 통해 국내 상주외국인(체류기간 3개월 이상) 통계 및 모집단 매년 제공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실시 및 공표

○ 국제인구이동통계 및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생산 및 공표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준비(1~3월)	통계청 고용통계과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기획보도 실시(3월)	통계청 고용통계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내·외국인 인구전망 공표(4월)	통계청 인구동향과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시도 장래인구추계 공표(5월)	통계청 인구동향과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실시(5~6월)	통계청 고용통계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공표(7월)	통계청 인구동향과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 결과공표(7월)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내검 및 집계(7~11월)	통계청 고용통계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2023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공표(11월)	통계청 인구동향과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 고용조사 결과 공표(12월)	통계청 고용통계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상주외국인 규모 및 특성에 관한 통계, 외국인 고용통계, 국제인구이동통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장래인구추계 등을 생산하여 외국인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법무부, 대법원,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관련 외국인 통계의 지속적인 개선·개발 추진 및 통계의 정확성·활용도 제고

□ 과제 내용

○ 국내 상주 외국인 규모, 인구학적 특성, 지역분포 등에 관한 통계작성 및 공표

○ 이민자의 고용, 체류사항, 한국어 능력, 보건, 한국생활, 주거 및 생활환경, 자녀교육 등 한국에서의 고용 상태 및 사회통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작성 및 공표

※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의미

○ 외국인 국제이동 규모 및 특성에 관한 통계, 다문화인구의 인구동태(혼인, 이혼, 출생, 사망) 통계 및 장래인구추계 작성 및 공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인구주택총조사(상주 외국인 통계 관련) >

○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 검토('08.12.)

○ 2010년 기준 등록센서스 방식의 총조사 결과 시산('12.12.)

○ 2015년 등록센서스 도입방법 및 제공항목 결정('13.12.)

○ 2011~2013년 등록센서스 시산 및 품질점검('14.10.)

○ 등록센서스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매년 11월) 및 결과공표(익년 8월)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 외국인 고용조사를 외국인 종합통계로 확대 발전 가능성 검토('14.2.~15.4.)

○ 법무부·통계청 공동 실시 협의('15.6.~'16.1.)

○ 조사항목 개발, 표본 추출 등 시험조사 준비('16.2~8.)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시험조사 실시('16.9.)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본계획 수립('16.12.)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실시(매년 5~6월) 및 결과 공표(매년 12월)

< 국제인구이동통계 >

○ 출입국심사 및 출입국신고서 자료를 기초로 국제인구이동통계 최초 작성('00년)

○ 국가통계 승인('04년)(승인번호 제101064호)

○ 국제인구이동통계 공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13년)

○ 국제인구이동통계 연간 공표(매년 7월)

< 장래인구추계 >

○ 국가통계 승인('94년)(승인번호 제101033호)

○ 전국 장래인구추계 보고서 최초 발간('96년)

○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보고서 최초 발간('98년)

○ 다문화인구추계 작성방법 개발('18년)

○ 전국 장래인구추계 작성 및 공표('96년 이후 매5년 → '23년 이후 매2~3년)

○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작성 및 공표('98년 이후 매5년)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개발 추진('10~'11년)

○ '08~'10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혼인, 이혼, 출생, 사망) 최초 공표('11.11.)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신고서 외국어 견본 제작 배부('13.8.)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연간으로 공표(매년 11월)

□ 추진체계

< 인구주택총조사(상주 외국인 통계 관련) >

○ 추진주체 : 통계청

○ 추진절차 : 총조사 실시계획 수립 → 행정자료 입수방안 협의(통계청 및 자료제공기관) → 행정자료(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입수 → 자료처리 및 결과집계 → 결과분석 및 공표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 추진주체 : 통계청(법무부 공동)

○ 추진절차 : 조사계획 수립 및 준비(통계청) → 조사지침 교육(통계청) → 현장조사 실시(지방통계청, 사무소) → 자료처리 및 결과 집계(통계청) → 결과분석 및 공표(통계청, 보도자료)

< 국제인구이동통계 >

○ 추진주체 : 개인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통계청

○ 추진절차 : 출입국 심사(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자료전송(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정보유통시스템) → 자료처리 및 결과집계(통계청) → 결과분석 및 공표(통계청, 보도자료)

< 장래인구추계 >

○ 추진주체 : 개인 → 지자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통계청

○ 추진절차 : 자료수집(통계청) → 자료분석 및 추계모형 적용(통계청) → 추계(통계청) → 결과분석 및 공표(통계청, 보도자료)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

○ 추진주체 : 개인 → 지자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통계청

○ 추진절차 : 조사계획 수립 및 준비(통계청) → 조사지침 교육(통계청) → 신고서 접수 및 자료 입력(지자체) → 가족관계등록 정보입수(대법원) → 자료처리 및 결과집계(통계청) → 결과분석 및 공표(통계청, 보도자료)

2. '23년도 추진 실적

< 인구주택총조사(상주 외국인 통계 관련) >

□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공표('23.7.)

○ 국내거주 외국인 규모 및 특성 파악을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총조사 결과 공표 및 모집단 제공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공표('23.12.)

○ 국내 상주 외국인과 귀화허가자(5년 이내)의 고용, 체류사항, 한국어 능력, 구직경험, 교육, 소득과 소비, 비전문취업 및 유학생 등에 대한 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 국제인구이동통계 >

□ 2022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공표('23.7.)

○ 외국인 입·출국자의 이동 규모 파악, 입국자 성·연령·국적·체류자격별 특성 분석

< 장래인구추계 >

□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결과 공표('23.12.)

○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를 2072년까지 전망한 결과 공표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

□ 2022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결과 공표('23.11.)

○ 다문화 인구의 혼인, 이혼, 출생, 사망 통계 작성 및 공표

3. '24년도 추진계획

< 인구주택총조사(상주 외국인 통계 관련) >

□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공표('24.7.)

○ 2023년 기준 국내거주 외국인 규모 및 특성 등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공표('24.7.)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기획보도 실시('24.3.)

○ (기획보도) '23년 조사 결과 중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부문을 선정하여 이민자의 체류 및 고용실태 등에 대한 기획보도 추진

□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실시('24.5.~6.) 및 결과 공표('24.12.)

○ (조사부문) 고용, 보건, 한국생활, 주거 및 생활환경, 자녀교육, 체류사항, 한국어능력, 영주·귀화허가자 및 재외동포 등

< 국제인구이동통계 >

□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공표

○ 2023년 월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제공(매월)

○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공표('24.7.)

< 장래인구추계 >

□ 2022년 기준 내·외국인 인구전망 작성 및 공표('24.4.)

○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인구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세분화한 결과 작성 및 공표

□ 2022년 기준 시도 장래인구추계 작성 및 공표('24.5.)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

□ 2023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결과 공표('24.11.)

□ 소요예산 : **총 2,590백만원**

< 인구주택총조사(상주 외국인 통계 관련) >

구 분		'23년도	'24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832	852	2.3	
-국 비	▪일반회계	832	852	2.3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구 분		'23년도	'24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689	1,726	2.2	
-국 비	▪일반회계	1,689	1,726	2.2	

< 국제인구이동통계 >

구 분		'23년도	'24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3	3	0.0	
-국 비	▪일반회계	3	3	0.0	

< 장래인구추계 >

구 분		'23년도	'24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8	8	0.0	
-국 비	▪일반회계	8	8	0.0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

구 분		'23년도	'24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	1	0.0	
-국 비	▪일반회계	1	1	0.0	

□ 산출내역

< 인구주택총조사 >

○ 인건비 : 689백만원

○ 운영비 : 78백만원

○ 여비 : 2백만원

○ 업무추진비 : 6백만원

○ 민간이전 : 77백만원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 일용임금 : 336백만원

○ 운영비 : 1,305백만원

○ 국내여비 : 40백만원

○ 사업추진비 : 8백만원

○ 민간이전 : 37백만원

< 국제인구이동통계 >

○ 운영비 : 3백만원

< 장래인구추계 >

○ 운영비 : 8백만원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

○ 운영비 : 1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인구주택총조사	이민자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공표	1회		보도자료
'24	이민자체류실태및 고용조사	이민자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 고용조사 결과 공표	1회		보도자료
'24	국제인구이동통계	외국인 국제이동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공표	1회		보도자료
'24	장래인구추계	외국인 관련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내·외국인 인구전망 결과 공표	1회		보도자료
			시도 장래인구추계 결과 공표	1회		보도자료
'24	다문화인구동태통계	다문화사회 지원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2023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결과 공표	1회		보도자료

5. 담당자

< 인구주택총조사 >

소관부서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전화번호	042-481-3756
담 당 자	5급 김민주	이 메 일	minju1101@korea.kr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소관부서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전화번호	042-481-2339
담 당 자	5급 김성규	이 메 일	daan755@korea.kr

< 국제인구이동통계, 장래인구추계 >

소관부서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전화번호	042-481-2261
담 당 자	5급 전민엽	이 메 일	mathjeon11@korea.kr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

소관부서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전화번호	042-481-2258
담 당 자	4급 온누리	이 메 일	jasminne@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경 찰 청

목 차

Ⅰ. 2024년 시행계획 총괄 ····· 584

Ⅱ. 2024년 시행계획 개요 ····· 585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588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589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2]-④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 589

2-1-[2]-⑥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592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2-2-[2]-②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전개 ····· 594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실현

4-2. 여성·아동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4-2-[1]-②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597

경 찰 청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4	100%	974	1,220	25.3%
1. 경 제					
2. 안 전	3	75%	387	387	0%
3. 통 합					
4. 인 권	1	25%	587	833	41.9%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등 활용, 외국인 밀집지역 중점 관리**
- **체류 외국인의 범법행위 단속 강화**

주요 사업내용

- 외국인 밀집지역 중점관리,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 및 대응
  - 외사안전구역(30개소)의 범죄 발생 추이, 방범시설 현황 등을 분석하여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편입하여 통합관리, 지자체와 협업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순찰활동 강화
- '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외국인 문제 해결
  - 외국인 밀집지역 내 치안 수요 파악, 유관기관 합동으로 예방·대응 모색
-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합동단속
  - 건설업, 유흥업소, 마약사범 등 법무부 주관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5개 부처) 참여
- 체류외국인 등 대상 범죄예방교실 실시,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협력 단체 운영
- 다문화가족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 다문화가족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및 위기 청소년 지원, 학교전담경찰관(SPO) 면담, 다문화가족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체제 구축

Ⅰ. 2024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4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3)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합계	4	974	1,220	25.3	
소계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2)	387	387	0.0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94	94	0.0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	-	비예산
2-2-2-2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전개	293	293	0.0	
소계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2)	587	833	41.9	
4-2-1-2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587	833	41.9	

Ⅱ. '24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 여건

○ 외국인 범죄는 10년간 증가하다가 '23년 외국인 피의자 전년 대비 4.4% 감소(34,472→32,744명) 등 안정화, 다만, 마약류 등 조직적·체계적 범죄는 지속 증가 추세

- (외국인 마약사범) '19: 1,092명 ⇨ '20: 1,466명 ⇨ '21: 1,673명 ⇨ '22: 1,757명 ⇨ '23: 2,187명
- 최근 10년간 체류 외국인 및 범죄 현황

연도	'13년	'15년	'17년	'19년	'20년	'21년	'22년	증감률
인원	1,576,034	1,899,519	2,180,498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42.5% ↑
범죄현황 (전체대비)	24,984 (1.4%)	35,443 (2.0%)	33,905 (2.0%)	36,400 (2.3%)	35,390 (2.4%)	29,450 (2.4%)	30,954 (2.5%)	23.8% ↑

○ 경찰청 조직재편으로 외국인 대상 치안활동 업무가 관련 기능별로 이관, 이에 기존 내국인 대상 범죄예방활동과의 통합 관리 필요

○ 학령기(7세~18세) 다문화가족 청소년 중 학생 비율은 91.5%* 수준으로 8.5% 가량이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 범죄·비행 노출 우려

* ('21년) △학령기 다문화가족 청소년 174,974명 △다문화학생 160,058명 <2022 청소년백서>

□ 전망

○ 체류 외국인 및 외국인 범죄는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이며, 인구 감소로 인한 정부 차원의 외국인 유입·유치정책을 고려하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특히 초등학생 연령 이하 자녀가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의 77.2% 차지하는 등 지속 증가 예상

- **(다문화가족 자녀)** 264,626명'19년 → 266,626명'20년 → 289,529명'21년 <2022, 행안부> *
  ※ ('21년) △6세이하 39.6% △7~12세 37.6% △13~15세 15.0% △16~18세 7.8%
- **(다문화학생)** 137,225명'19년 → 147,378명'20년 → 160,058명'21년 →168,645명'22년 <2022, 교육부>
  ※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 2.51%'19년 → 2.75%'20년 → 3.0%'21년 →3.2%'22년

2. ‘23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안정적 치안 관리

○ 등록외국인수・외국인 피의자수・범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사안전구역(30개소) 지정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치안활동 강화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확대 운영(26→28개서), 유관기관・지자체 등과 외국인 범죄예방정책 및 활동을 통합 추진하는 구심점 역할 수행

☐ 법무부 주관 단속에 참여하여 2만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참여 현황 >

	’18	’19	’22	’23
실시 횟수	2회	6회	1회	3회
경찰지원 인원(명)	160	865	120	360
총 적발 인원(명)	16,218	2,806	3,865	20,947

☐ 다문화 청소년 담당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중심 학교폭력 예방

○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문화 청소년 담당 SPO 지정, △청소년경찰학교* 체험 △범죄예방교실 △지원기관 연계 등 다양한 보호·지원

* 경찰관서를 리모델링하여 △범죄예방교육 △가·피해자 역할체험 △심리상담 △학교폭력 사건 조사, 과학수사 등 경찰체험 등 체험형 교육공간으로 활용

○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안산단원·상록서 등 2개署에서 담당 SPO 지정, 다문화 가족센터와 협업하여 △예방교육 △합동순찰 등 정책 추진 중

※ 안산시 다문화가족 비율은 13.2%로 전국 비율 4.1% 보다 3배 이상 높음('21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사안전구역은 ’13년 최초 운영 이후 약 10년간 거의 해제되지 않은 채 지속 증가(7→30개소), 재점검하여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

- 전체 구역의 현황을 세밀히 재점검하여 유지 필요성을 확인하고, 범죄 위험성・두려움 등이 높은 지역에 치안력 집중 투입

○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지역이 주로 농촌 등 2·3급지 경찰서 관할인 경우가 많아 SPO 인력이 署別 2~3명에 불과, 담당 SPO 지정 곤란

- 다문화학생 지원은 교육부(학교), 다문화가족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은 여가부에서 총괄하므로 SPO는 현장 중심 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에 주력

3. '24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등 활용, 외국인 밀집지역 중점 관리

○ 외사안전구역(30개소)의 ▵등록외국인 ▵범죄·112신고 ▵방범시설 ▵주민여론 등을 종합 분석하여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편입 등 재정비

○ 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활용, CPTED사업 등 지자체 협업 및 순찰 강화

□ 체류 외국인의 범법행위 단속 강화

○ 법무부 등과 협업, ▵건설업·유흥업소 ▵마약사범 ▵대규모 불법 고용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 사범 합동단속

□ 외국인 협력단체와의 협업 지속

○ 외국인 협력단체 대상 장비 지원 및 협업,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 ▵외국인 자율방범대 순찰 ▵외국인 범죄동향 및 신고 유도 등 추진

□ 여가부와 협업, 다문화가족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및 위기청소년 지원

○ 신학기·방학기간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운영 時 SPO 면담 대상에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포함하여 선제적 보호·지원

○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지역은 ▵담당 SPO 지정 ▵다문화 가족센터 등 전문기관과 서비스 연계체제 구축 등 현장 맞춤형 정책 추진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 외국인밀집지역 중점 관리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제1차 정부합동단속 참여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2-2-2-2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 활동 전개	▪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 외국인 협력단체 협업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4-2-1-2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 외국인밀집지역 중점 관리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2-2-2-2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 활동 전개	▪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 외국인 협력단체 협업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4-2-1-2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 외국인밀집지역 중점 관리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제2차 정부합동단속 참여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2-2-2-2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 활동 전개	▪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 외국인 협력단체 협업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4-2-1-2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 외국인밀집지역 중점 관리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2-2-2-2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 활동 전개	▪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 외국인 협력단체 협업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4-2-1-2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2-1-②-④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의 공동체 치안 강화·기초질서 확립·불법행위 방지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과제 내용

○ 외국인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 중 특별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별도 '범죄예방강화구역(舊 외사안전구역)'으로 설정,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 및 관리

○ 외국인 밀집지역 내 안정적인 치안 유지를 위한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하여 주요 치안 현안 논의 및 대책 마련

□ 과제 추진 경과 및 추진주체

○ (추진 경과) '13. 8월부터 운영 / '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 (추진 주체) 경찰청이 주관하고, 유관기관·외국인단체·지역주민 등과 협업

2. '23년도 추진 실적

□ 주요 성과

○ 등록외국인수·외국인 피의자수·범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사안전구역(30개소) 지정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치안활동 강화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확대 운영(26→28개서), 유관기관·지자체 등과 외국인 범죄예방정책 및 활동을 통합 추진하는 구심점 역할 수행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사안전구역은 '13년 최초 운영 이후 약 10년간 거의 해제되지 않은 채 지속 증가(7→30개소), 재점검하여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

- 전체 구역의 현황을 세밀히 재점검하여 유지 필요성을 확인하고, 범죄 위험성·두려움 등이 높은 지역에 치안력 집중 투입

3. '24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밀집지역 중점 관리,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 및 대응(연중)

○ 현재 관리중인 외사안전구역(30개소)의 △등록외국인 수 △범죄·112 신고 발생 추세 △방범시설 현황 △주민 여론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재진단

< 외사안전구역 현황 (13개청 30개소) >

<**서울**> 용산 이태원/동대문 회기/마포 서교/영등포 대림/광진 자양/금천 독산/관악 신사/구로 가리봉 / 강남 역삼 <**경기남부**> 수원 지동 / 수원 매산·고등/안산 원곡·선부/시흥 정왕/평택 신장/오산 중앙·오산/ 화성 향남/용인 중앙/김포 통진 <**경기북부**> 포천 소흘·가산 <**부산**> 남구 대연 <**인천**> 서구 석남/연수 함박 <**대구**> 달서 이곡 <**광주**> 광산 월곡 <**울산**> 울주 온산 <**충북**> 음성 대소·금왕 <**충남**> 아산 신창 <**경북**> 경주 외동·성건 <**경남**> 김해 동상 <**제주**> 연동·노형

○ 진단 결과 지속 관리가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편입하여 통합관리, △지자체와 협업하여 CPTED사업 추진 △거점근무·자율방범대 순찰 등 가시적 순찰활동 강화하는 등 예방역량 집중

* 범죄예방강화구역 : 관서별로 주민 불안이 높아 특별히 강화된 범죄예방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을 지정, 순찰인력 투입·환경개선 등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구역

□ 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외국인 문제해결(분기별)

○ 범죄예방강화구역과 연계하여 '외사치안협력위원회' 구성·운영(28개 관서), 유관기관·외국인단체·이주민대표 間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 밀집지역 내 주요 범죄동향·무질서행위 및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합동으로 예방·대응대책 모색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개요 >

❖ **구성** : 위원장(경찰서장 또는 외사기능 과장) 포함 15인 내외
- **유관기관**(지자체 · 출입국관리사무소 · 고용노동청 · 교육지원청 등)
- **내 • 외국인 주민**(외국인 협력단체장, 국적별 외국인 주민대표, 내국인 주민대표 등)

❖ **운영방식** : 분기별(年 4회) 협의회 개최, 주요 치안현안 발굴 및 대책 등 논의
- ① **유관기관 협력** ② 외국인 대상 **홍보** ③ 내·외국인 **합동행사** 및 공동체 치안활동 추진 등

☐ 소요예산 : **총 94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94	94	0.0	
-국 비	▪ 일반회계	94	94	0	외사치안협력위원회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 : 28개소×839천원×4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외사안전구역 운영	운영 개소	28	30	현재 운영개소
'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외사안전구역 운영	운영 개소	20		현재 운영개소

※ 외사안전구역 정비를 통해 순찰인력·CPTED 사업·공동체 협업 등 예방역량을 집중하고 관리 내실화 도모할 계획이기에 목표치 하향 설정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2-3150-2846
담 당 자	경감 정명준	이 메 일	jmj0804@police.go.kr

2-1-②-⑥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법무부 주관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에 적극 참여, 체류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유통 등 각종 범죄 첩보 입수 및 단속

□ 과제 내용

○ 법무부 주관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5개 부처) 참여를 통해, 유흥·마시지 업소, 배달대행 등 민생침해 분야 및 테러 혐의, 대포차 운행, 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 외국인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체류 외국인 범죄 등에 대한 합동단속

□ 과제 추진 경과

○ 신규 과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주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 추진절차 : 단속 계획수립 및 실시(법무부) → 각 부처 인력 지원 → 합동 단속

2. '23년도 추진 실적

□ 법무부 주관 단속에 참여하여 2만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참여 현황 >

	'18	'19	'22	'23
실시 횟수	2회	6회	1회	3회
경찰지원 인원(명)	160	865	120	360
총 적발 인원(명)	16,218	2,806	3,865	20,947

3. ‘24년도 추진계획

□ 제1차 정부합동단속 참여 (1/4분기)

○ △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경쟁 업종,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대규모 외국인 불법 고용 업체 △마약 사범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 사범 합동단속

□ 제2차 정부합동단속 참여 (3/4분기)

○ 제1차 단속 결과 분석 후 하반기에도 단속 참여, 체류 외국인 범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대응력 제고

□ 소요예산 :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없음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전화번호	02-3150-2043
담 당 자	경감 김태현	이 메 일	todokim@police.go.kr

2-2-②-②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전개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체류 외국인·유학생들이 언어·문화적 차이와 국내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죄에 노출된 위험이 크고, 신고 및 피해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음

- 외국인들이 쉽게 노출되는 범죄유형에 대해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방법을 교육해 국내 법질서 준수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

○ 국내 외국인 유입 증가로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치안 협력단체가 구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예방 활동 추진

※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 전국 68개 단체·1,591명 대원 활동 중

□ 과제 내용

○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법무부 등 유관기관 및 외국인 시설·기관과 협업, 외국인이 접하기 쉬운 범죄·대응법에 관한 범죄예방 교육 실시

○ (외국인 협력단체 운영)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활동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 실시

□ 과제 추진 경과 및 주체

○ (추진 경과) 그간 별도 과제 없었고, '24년에 신규 과제로 선정

○ (추진 주체) 경찰청이 주관하고, 유관기관·외국인 협력단체 등과 협업

2. '23년도 추진 실적

□ 주요 성과

○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법무부·여가부 등 관련 기관의 교육 요청에 따라 총 6,016회·488,862명 교육 실시 완료

○ (외국인 협력단체 운영) 전국 총 68개 단체·1,591명의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경찰청은 1.55억원 상당의 안전장비 등을 지원

3. '24년도 추진계획

□ 체류외국인 등 대상 범죄예방교실 실시 (연중)

○ 체류 외국인·유학생·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여가부·고용노동부와 협업해 경찰관이 출강, 범죄예방 교실 연중 실시

□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협업 지속 (연중)

○ 외국인 협력단체와 경찰관이 협업하여 지속적인 대외 활동*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활동에 필요한 장비 지원**하고,

* 외국인 밀집지역 내·외국인 합동순찰,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봉사활동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 치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안전장비 5종(모자·조끼·불봉·경적·손전등) △방한점퍼 등

- 외국인 자율방범대원과 경찰 間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외국인 범죄 발생 동향 파악 및 범죄 신고 유도자로도 적극 활용

□ 소요예산 : **총 293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93	293	0	
-국 비	▪일반회계	293	293	0	외국인범죄예방교육 외국인협력단체지원
	▪특별회계				
	▪기금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외국인 범죄예방 가이드 리플릿 제작 122백만원(230,000만부×1식) + 운영비 16백만원(30천원×259개 경찰서×2회)

○ (외국인 협력단체 지원) 활동장비 120백만원(형광조끼 50천원+신호봉20천원+전자호루라기30천원+활동모20천원×1,000개) + 교육비 10백만원(교육책자 1천원×1,000부) + 운영비 10백만원(20천원×250개×2회) + 홍보 15백만원(리플릿 제작 10백만원=10천원×1,000부 + 캠페인 5백만원=10천원×250개서×2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범죄예방교육	교육인원	2,600명		그간 평균 교육인원

○ 외국인 협력단체 운영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협력단체 활성화	단체별 평균 활동 실적	월 2회		자율방범대 월 평균 활동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2-3150-2866
담 당 자	경사 김민규	이 메 일	jeja2001@police.go.kr

4-2-1-②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보호·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교전담경찰관(SPO)를 통한 협업 지원 필요

□ 과제 내용

○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 △초·중생 대상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 △학교폭력 신고전화(117) 안내 등 학교폭력 예방·대응활동 전개 중

○ 특히,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많은 지역은 다문화 가족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업, 다문화 청소년 맞춤형 연계 및 사후관리 강화

□ 과제 추진 경과

○ (교육부·여가부) '06년부터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한국사회 정착 지원

* △언어 미숙 △가정폭력·학대 피해 등 한국사회 부적응 다문화가족 대상

○ (경찰청) '22.6월「위기청소년 집중 발굴계획」수립 時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학교 밖 청소년을 SPO 면담 대상에 포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 (교육부·여가부) → △다문화교육정책학교*(교육지원) △다문화 가족센터(가정생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교육·직업 등)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등 운영 주관

* 다문화 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에 맞춰 유치원·학교 지정 운영('15년 30개원 → '21년 162개원)

** 다문화가족·중도입국·탈북 청소년 대상 언어·진로교육 등을 지원 하는 비영리법인(20개소)

- (경찰청)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및 학교·가정밖 등 위기청소년 발견 → 경찰단계 조치 및 선도제도 운영 →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보호·지원

○ 추진절차 : 다문화 가족센터 등 전문기관 연락망 구축 → 담당 SPO 지정 → 다문화 위기청소년 발굴 → SPO와 1:1 면담 및 멘토링 → 전문기관 연계·지원

※ SPO가 청소년과 1:1 면담 시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문화 가족센터에 협조 요청

2. '23년도 추진 실적

□ 주요 성과

○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문화 청소년 담당 SPO 지정, △청소년경찰학교* 체험 △범죄예방교실 △지원기관 연계 등 다양한 보호·지원

* 경찰관서를 리모델링하여 △범죄예방교육 △가·피해자 역할체험 △심리상담 △학교폭력 사건 조사, 과학수사 등 경찰체험 등 체험형 교육공간으로 활용

○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안산단원·상록서 등 2개署에서 담당 SPO 지정, 다문화 가족센터와 협업하여 △예방교육 △합동순찰 등 정책 추진 중

※ 안산시 다문화가족 비율은 13.2%로 전국 비율 4.1% 보다 3배 이상 높음('21년)

3. '24년도 추진계획

□ 정책 여건

○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특히 초등학생 연령 이하 자녀가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의 77.2% 차지하는 등 지속 증가 예상

- **(다문화가족 자녀)** 264,626명'19년 → 266,626명'20년 → 289,529명'21년 <2022, 행안부> *
  ※ ('21년) △6세이하 39.6% △7~12세 37.6% △13~15세 15.0% △16~18세 7.8%
- **(다문화학생)** 137,225명'19년 → 147,378명'20년 → 160,058명'21년 →168,645명'22년 <2022, 교육부>
  ※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 2.51%'19년 → 2.75%'20년 → 3.0%'21년 →3.2%'22년

○ 학령기(7세~18세) 다문화가족 청소년 중 학생 비율은 91.5%* 수준으로 8.5% 가량이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 범죄·비행 노출 우려

* ('21년) △학령기 다문화가족 청소년 174,974명 △다문화학생 160,058명 <2022 청소년백서>

3. ‘24년도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총괄 부처인 여가부와 협업, 경찰 활동 중 발견한 다문화가족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및 위기청소년 지원

○ 신학기·방학기간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운영 時 SPO 면담 대상에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포함하여 선제적 보호·지원

○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지역은 △담당 SPO 지정 △다문화 가족센터 등 전문기관과 서비스 연계체제 구축 등 현장 맞춤형 정책 추진

☐ 소요예산 : **총 833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587	833	41.9	
-국 비	▪ 일반회계	587	833	41.9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 예방 525,000,000원

○ 위기청소년 선도 및 SPO 활동지원 308,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없음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	전화번호	02-3150-1385
담 당 자	경감 김 학 수	이 메 일	youthcop@police.go.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해양경찰청

목 차

Ⅰ. 2024년 시행계획 총괄 ····· 603

Ⅱ. 2024년 시행계획 개요 ····· 604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607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608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3.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2-3-2-② 항만국경관리 선진화 ····· 608

해 양 경 찰 청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1	100%	비예산	비예산	
1. 경 제					
2. 안 전	1	100%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를 위한 외국인 범죄 단속 강화**
- **대내·외 관계기관 공조 강화를 통한 외국인 범죄 적극 대응**

주요 사업내용

- 밀입국·밀수 등 해양국경 수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법무부 주관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참여
- 「테마형 국제범죄」 단속강화 계획 수립·시행으로 권역·시기에 맞는 국제범죄 유형을 분석, 주요테마를 선정하여 중점 단속
  - 상·하반기 치안수요에 따른 테마별 지방청 특별단속 시행
- 전략적 해양 경비, 밀입국 취약지 관리,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대국민 신고체계 활성화 등 세부전략 수립 및 이행

Ⅰ. 2024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1)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합계	0개			00.0	'-'의 경우 '△'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1)			0.0	비예산
2-3-2-2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Ⅱ.'24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국제화에 따른 신안보 위협 치안수요 증가

○ 국제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교통수단 및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범죄의 수단, 목적, 방법 등 모든 단계가 하나의 국가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수개의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가 국제화 추세

- 국가 간 인적, 물적 이동이 확대되고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증가하여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세계화가 급속히 가속되고 있고 그만큼 국제범죄에 노출이 확대

□ 외국인 출입국자 및 불법체류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체류 외국인(명)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불법체류 외국인(명)	390,281	392,196	388,700	411,270
불법체류율(%)	15.5	19.3	19.8	18.3

○ 2022년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245,91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류 인원도 코로나19의 출입국 제한 해제영향으로 전년 대비 14.8%가 증가

- 다만, 체류 외국인 대비 불법체류 비율은 2021년 19.9%에서 2022년 18.3%로(총 411,270명) 다소 감소

□ 외국인 선원 국내고용 관련 문제점 쟁점화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외국인 선원 현황	26,321명	26,331명	26,775명	27,333명	28,281명

○ 국내 외국인 선원은 2022년 말 기준 28,281명으로 전년(27,333명) 대비 948명(3%) 증가하여 외국인 선원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

○ 이처럼 국내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선원들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선원들의 불법 이탈로 수산업계가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

2. ‘23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3년 주요과제 성과

○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를 위한 외국인 범죄단속

- 범정부 차원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법무부 등 관련기관 업무협의 추진 및 정부합동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등 국경범죄 단속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합동 불법체류자 단속**(3차) 및 불법입국 목적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국제항만 치안 상황 점검** 확대 등 **국가안보 확립 기여**

√ 5개 권역별 **단속전담반(28명) 구성,** 불법체류 등 **출입국문란사범 총 69건 195명 검거**

√ ’23.9.19.~26. 인천·평택·군산·제주·서귀포항 등 9개 선사 10개 항로 현장치안 점검




▲ 불법체류자 정부합동 특별단속




▲ 국제여객터미널 치안상황 점검

▌**빈틈없는 대비태세 구축**으로 **밀입국시도자 전원 검거**

√ ’23.8월 **인천 수상오토바이 밀입국자**(中 **1명**)의 신속한 **현장 검거**·조사 및 **구속 송치**

√ ’23.10월 **보령 밀입국자**(中 **22명**) 및 **국제공조**를 통한 **도주선박**·**공모자**(中 7명) 등 **검거**





▲ 인천 수상오토바이 밀입국자 검거





▲ 보령 대규모 해상 밀입국자 전원 검거

▌농무기 등 해상 **밀입국**·**밀항 행위 취약시기**(5~6월) 범죄발생의 사전대비를 위한 **5개 권역별 특성화** 民·官·軍 **상황대응 합동 훈련** 실시, **해양국경 치안질서 확립**

√ 중부·서해 소형보트 밀입국, 동해 러시아 요트 입항, 제주 무사증 도외이탈, 남해 밀항







▲ 밀입국·밀항 상황대응 합동 훈련

❍ **외국인범죄에 효과적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공조강화**

- 해상 밀입국·밀항범죄 등 국경침해 행위 합동대응 체계 구축 및 해경-軍 부대 간 밀입국 취약지 교차점검·분석 등 총 123회 실시

▌외사 **취약지 책임 관리제** 운영, **지역 특성화 밀입국 대응**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해양 **감시자산 정보공유**, **해역별 전략감시** 체계 확립 등 **완벽한 해양주권 수호**

√ 밀입국 **위기대응 수준** 설정, 해안선 외사 **취약지** 선정(535개소), **軍 부대 합동점검(123회)**



▲ 軍 부대 외사 취약지 합동점검·교차분석

▌**국민**과 **직접 소통**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1회 국제범죄 포스터 공모전**' 개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제범죄 등 항만국경관리를 위한 특별단속(원산지·마약·밀항·밀입국 등) 시 현장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 발생

- 지역별·테마별 다양한 국제범죄·항만국경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 합동단속 등 협업으로 국제범죄에 대응 필요

3. '24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를 위한 외국인 범죄 단속 강화

❍ 소형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등 신종 밀입국·밀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단속활동 추진

❍ 항만을 통한 밀입국 등 범죄단속 및 첩보수집 강화 및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시

□ 대내·외 관계기관 공조강화를 통한 외국인 범죄 적극 대응

○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적극 협력

○ 국제범죄 연관성이 높은 주변국(中·日등) 범죄정보 공유 강화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공조 활성화를 통해 범죄예방 및 대응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2-2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	▪ 상반기 불법체류자 합동 단속	외사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2-2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	▪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외사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2-2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	▪ 하반기 불법체류자 합동 단속	외사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2-2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	▪ 하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외사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2-3-2-2	항만국경관리 선진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해상국경 침해는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외국인 범죄 발생 증가 등 사회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

□ 과제 내용

○ 밀입국·밀수 등 해양국경 수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 「테마형 국제범죄」 단속강화 계획 수립·시행으로 권역·시기에 맞는 국제범죄 유형을 분석, 주요테마를 선정하여 중점 단속

○ 전략적 해양 경비, 밀입국 취약지 관리,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대국민 신고체계 활성화 등 세부전략 수립 및 이행

➠ 최근 수상오토바이(인천, 1명), 고속모터보트(보령, 22명)를 이용한 밀입국 사건 발생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을 통한 밀입국* 사건 연속 발생**

* **①출국금지된 사람, ②입국제한**된 사람이 대부분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밀입국

➠ 불법취업 목적외에도 마약류 반입 등 범죄는 물론, **안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강화된 대응책**과 **경비·감시체계 고도화***가 요구됨

□ 과제 추진 연혁: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지속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 추진절차 : 직접수행

2. ’24년도 추진계획

□ 밀입국·밀수 등 해양국경 수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 상·하반기 치안수요에 따른 테마별 지방청 특별단속 시행: 반기 1회

○ 법무부 주관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참여(수시)

□ 소요예산 : 비예산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항만국경관리 선진화	해양국경수호	지방청 별 외국인(대상) 범죄 특별단속 횟수(회)	8회	10회	실적 보고서 및 시행 공문
’24	항만국경관리 선진화	해양국경수호	지방청 별 외국인(대상) 범죄 특별단속 횟수(회)	8회		

5. 담당자

소관부서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 외사과	전화번호	032-835-2269
담 당 자	경사 신민섭	이 메 일	backsb37@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국세청

목 차

Ⅰ. 2024년 시행계획 총괄 ····· 613

Ⅱ. 2024년 시행계획 개요 ····· 614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616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617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2-1-[2]-③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감독 및 정보 공유 ····· 617

2-2-[1]-②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시스템 마련 ····· 619

국 세 청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2	100%	비예산	비예산	
1. 경 제					
2. 안 전	2	100%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 **외국인 체납자의 출국규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추진**

주요 사업내용

-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및 정보 공유

※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신고 시 세무관서에 제출한 자료를 법무부에서 [1]요구 법적근거, [2]자료종류 및 범위, [3]활용 목적 등을 갖추어 사전협의 후 과세정보 제공 요청 시 제공 여부 적극 검토

- 출국 규제 제도의 강화를 통한 징수권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 추진

- 외국인 체납자를 출국 규제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금액 하향 등 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제출

- 출국 규제 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

Ⅰ. 2024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합계	2개				
소계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2)				
2-1-2-3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감독 및 정보공유				비예산
2-2-1-2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시스템 마련				비예산

Ⅱ.‘24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체류관리 강화 요구 증대

○ (불법체류자 수 증가) 단속인력 부족, 제한적인 집행수단 등으로 불법체류자 증가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2022.12월 기준 그 수가 41만 명에 도달(체류외국인 전체의 20%)

○ (체류질서 강화 요청) 반이민정서와 함께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청이 증가

□ 외국인의 세금 체납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 마련 필요

○ 외국인의 국내 발생 소득 및 재산에 대해 세금이 발생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으나 출국할 경우 재입국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징수가 어려우므로,

- 외국인이 체납한 세금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출국규제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23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전산시스템 연계를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 추진

○ 체납 세금이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즉각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마련을 협의하기 위해 상설협의체 구성을 추진

- 국세청·법무부 회의 결과 현재 전산시스템상 전산연계는 곤란하며, 새로운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여 전산연계가 곤란함을 확인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산연계 곤란) 현재 사용 중인 전산시스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전산연계가 곤란함을 확인

- (현행유지) 새로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간·예산·인력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방식(행정정보공동이용망·온나라 공문 이용) 유지

○ (국세체납징수 곤란) 세금 체납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기준금액이 고액이고, 출국정지 기간이 짧아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가 어려움

- (제도개선) 국세징수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규제 관련 법령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의 세금체납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제징수권 확보

3. '24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이민 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 우리 청은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신고 시 세무관서에 제출한 자료를 법무부에서 [1]요구 법적근거, [2]자료종류 및 범위, [3]활용목적 등을 갖추어 사전협의 후 과세정보 제공 요청 시 제공 여부 적극 검토

□ 외국인 체납자의 출국규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추진

○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금액을 하향(5천만원→3천만원)하고 출국정지 기간을 확대(3개월→6개월)함으로써 출국규제 제도 강화 추진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1-2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 시스템 마련	법령개정안 제출 (국세징수법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국세청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1-2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 시스템 마련	출입국관리법 법령개정 건의	국세청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3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및 정보공유	▪ 법무부와 업무협의 계획	국세청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0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2-1-2-3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및 정보 공유)

1. 과제의 개요

단속인력 부족, 제한적인 집행수단 등으로 불법체류자 증가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반이민정서와 함께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청이 증가

□ 목적

○ 불법체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사회질서 위해(危害) 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해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및 질서 있고 정교한 체류관리 체계 구축으로 불법체류 환경억제

□ 과제 내용

○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및 정보 공유

- 외국인의 불법체류 정보수집 체계화

□ 과제 추진 연혁

○ 2022년 과제 설정, 2023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세청(원천세과)

○ 추진절차 : 추후 법무부와 업무협의 추진 예정

2. ‘23년도 추진 실적

□ 추진 실적 없음

3. ‘24년도 추진계획

□ 우리 청은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신고 시 세무관서에 제출한 자료를 법무부에서 [1]요구 법적근거, [2]자료종류 및 범위, [3]활용 목적 등을 갖추어 사전협의 후 과세정보 제공 요청 시 제공 여부 적극 검토 예정

○ 그러나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경우 고용주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국세청에 없으며 고용주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거짓 비용 계상,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등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법에 따라 관련 세무조사 등을 통한 국세 부과를 할 수 있음

- (24.3분기) 따라서 단순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한 신고 자료를 국세청과 법무부가 공유하는 것만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익은 추후 법무부와 국세청 소관부서의 업무협의를 통해 그 여부를 확인 후 추진 예정

□ 소요예산 : 비예산

□ 산출내역

○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가 아님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해당없음

5. 담당자

소관부서	국세청 원천세과 1팀	전화번호	044-204-3342
담 당 자	5급 전정영	이 메 일	

2-2-1-2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시스템 마련 (외국인 체납 세금의 효율적인 관리)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은 체납 발생 후 출국할 경우 사실상 강제징수 절차 진행이 불가하므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과제 내용

○ 적시에 출국정지 등을 실시하여 외국인 체납자가 출국으로 체납에 대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년 과제 생성, 2023년 전산연계시스템 개발 검토(곤란), 2024년 제도 개선을 통한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시스템 마련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세청 → 기획재정부 · 법무부(법령개정 등 요청)

○ 추진절차 : 법령개정안 제출(기획재정부), 법령개정 건의안(법무부) 제출

2. '23년도 추진 실적

☐ 전산시스템 연계를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 추진(실현 곤란)

○ 체납 세금이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즉각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마련을 협의하기 위해 상설협의체 구성을 추진

- 국세청·법무부 회의 결과 현재 전산시스템상 전산연계는 곤란하며, 새로운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여 전산연계가 곤란함을 확인

3. ‘24년도 추진계획

□ 출국규제 제도의 강화를 통한 징수권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 추진

○ (1분기) 외국인 체납자를 출국 규제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금액 및 출국정지 기간 확대를 위해 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

○ (2분기)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출국규제 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법률개정 건의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 시스템 마련	유관기관 상설 협의체 구성	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의 개최 실적	1회	1회	회의 보고서
’24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 시스템 마련	법령개정 추진	법령개정안 제출 및 법령개정 건의	각 1회		

5. 담당자

소관부서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징세4팀	전화번호	044-204-3027
담 당 자	5급 성기원	이 메 일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질병관리청

목 차

Ⅰ. 2024년 시행계획 총괄 ····· 624

Ⅱ. 2024년 시행계획 개요 ····· 624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626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627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3-1. 국경안전 대응체계 구축

2-3-[1]-④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 627

질 병 관 리 청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1	100%	비예산	비예산	
1. 경 제					
2. 안 전	1	100%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입국심사와 검역절차의 유기적 연계로 국경을 통한 감염병 유입 사전 차단

주요 사업내용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최소화를 위한 공항만 입국자 관리 협조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입국자 정보 제공
- 검역단계 격리 대상 의심환자 발생 시 대리 입국심사 등 업무 협조
- 주기적 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를 통한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 공유, 협의 사항 논의 등

Ⅰ. 2024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1)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 예산 해당사항 없음

Ⅱ.'24년 시행계획 개요

☐ 정책여건

○ 현재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 후 대유행 간기(InterPandemic)로 미지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 예방·대비 필요

< WHO의 대유행(Pandemic) - 대유행 간기(Inter-Pandemic) 개요 >

시기	간기	발생·초기	지역사회 전파	사회·국가 전파	상황 안정화	간기
활동	예방·대비	대응 (준비, 차단)	대응 (감염관리 및 유행완화)		회복 (유행 최소화)	예방·대비
기초	위험평가(지방정부, 국가, 권역국가, 전세계)					
	회복력 있는 사회 / 다분야 시스템 / 위기대응 핵심 역량					

- 기후변화와 함께 해외 여행 증가 등 국제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상시적 감시 및 대응 준비 필요

2. ’23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3년 주요과제 성과

○ 유기적 협조를 통한 중국 發 코로나19 확산 위험 안정적 관리

-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대응하여 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 운영, 단기비자 제한, 출입국 정보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입국자 사후관리, 지역사회 전파 최소화

· (입국자 양성률) (1월1주) 18.4% → (1월3주) 2.9% → (2월4주) 0.5%

3. ’24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질병관리청, 법무부 협업체계 지속 운영을 통한 안전한 이민사회 구현 도모

○ 연계 시스템 및 회의체 등을 활용한 안전한 국경관리 정책 추진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 입국자 정보 연계 ▪ 격리 대상자 입국심사 협조 ▪ 회의체 참여	질병청 검역정책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 입국자 정보 연계 ▪ 격리 대상자 입국심사 협조 ▪ 회의체 참여	질병청 검역정책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 입국자 정보 연계 ▪ 격리 대상자 입국심사 협조 ▪ 회의체 참여	질병청 검역정책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 입국자 정보 연계 ▪ 격리 대상자 입국심사 협조 ▪ 회의체 참여	질병청 검역정책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입국심사와 검역절차의 유기적 연계로 국경을 통한 감염병 유입 사전 차단

□ 과제 내용

○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최소화를 위한 공항만 국경관리 효율성 강화

- 검역 대상 입국자 관련 정보(외국인등록번호 등) 제공 등을 통한 검역 관리 협조

- 검역단계 격리 대상 의심환자 발생 시 입국심사 협조

- 비상시 신속한 협업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 참여)

<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 개요>

○ **(배경)** 상시적 코로나19 **국가별 발생 및 국내 유입 상황과 추이를 평가**하고 그에 상응한 **국가별 방역조치** 등을 **정례적으로 검토**하는 **추진체계 필요**

○ **(목적)** 해외유입 확진자 수 및 변화 추이 등을 기초로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조치 검토

○ (**체계**) 방대본에서 **해외 위험도 분석자료**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매주 관계부처 공유**, 매 2주마다 **관계부처 상황평가 및 대책회의 개최**(필요시 긴급회의)

○ **(경과)** '20.7.2. 제1차 회의 이후 '23.11.1.까지 **총 123회 회의 개최**

* (주기) **코로나19** 감염병등급 **4급 전환('23.8.31.) 이후 (정기) 격월 개최 중**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0.4.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입국절차 시행 관련 법무부의 방역 행정 응원 시행(격리통지서 교부 및 주소지 입력 등)

○ 2020.7.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체 운영 시작(진행 중)

○ 2022.4. 특별입국절차 시행 관련 법무부의 방역 행정응원 종료

○ 2023.12.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내 세부추진과제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질병관리청,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검역법」제29조의5,「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 등에 따른 협조 요청

2. '23년도 추진 실적

□ 유기적 협조를 통한 중국 發 코로나19 확산 위험 안정적 관리

○ (단기비자 제한) 중국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제한 조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 경로 조기 차단 및 국내 대응 시간 확보

○ (정보 연계) 출입국 정보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통해 입국 후 PCR검사 실시 등 입국자 사후 관리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

· (입국자 양성률) (1월1주) 18.4% → (1월3주) 2.9% → (2월4주) 0.5%

○ (회의체 운영) 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를 통한 적시 방역조치 검토 및 적용(13회 개최)

3. '24년도 추진계획

○ (정보 연계)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입국자 정보 제공

○ (업무 협조) 검역단계 격리 대상 의심환자 발생 시 대리 입국심사 등 업무 협조

○ (회의체 운영) 주기적 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를 통한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 공유, 협의할 사항 논의 등

☐ 소요예산 : 해당 없음

☐ 산출내역 : 해당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유기적 협력체계 운영 강화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참여율 (법무부 회의 참여 횟수 /질병청 주관 회의 횟수 *100, %)	100%	100%	해외유입상황평가 법무부 참여율 (13회 전수 참여)
'2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유기적 협력체계 운영 강화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참여율 (법무부 회의 참여 횟수 /질병청 주관 회의 횟수 *100, %)	100%		해외유입상황평가 법무부 참여율

5. 담당자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검역정책과	전화번호	043-719-9210
담 당 자	연구관 전형일	이 메 일	ilcheun@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재외동포청

목 차

Ⅰ. 2024년 시행계획 총괄 ····· 633

Ⅱ. 2024년 시행계획 개요 ····· 634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636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638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2-2-[1]-⑥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 638

2-2-[1]-⑦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 640

2-2-[1]-⑧ 재외동포 관련 복수국적 제도 개선 추진 ····· 641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4.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3-4-[2]-③-가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
(교과서 수록 등 인식개선) ····· 642

3-4-[2]-③-나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 645

3-4-[2]-④ 모국 귀환 동포 토탈케어시스템 ····· 648

재 외 동 포 청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6	100%	-	207	100%
1. 경 제					
2. 안 전	3	50.0%			
3. 통 합	3	50.0%	-	207	100%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주요 사업내용

-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 관계부처 공동 국적·병역제도 설명회 개최 및 재외공관에 국적·병역제도 홍보 강화 요청
-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
  - 국내 교과서 내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을 위한 방안 연구, 필요성에 대한 이해확산 추진 등
  - 차기 개정 교육과정 및 학습 성취기준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을 위해 관련 전문가, 교육부 관계자 지속 협의 및 설명회 등 개최
  - 국내 대학 및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들 대상으로 재외동포 관련 주제 강의 시행
- 모국 귀환 동포들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토탈 케어시스템 마련
  - 영주귀국 정착 안내서 제작 및 배포

Ⅰ. 2024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6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3)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합계	6개		207	순증	
소계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3)		-		
2-2-1-6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		신규/비예산
2-2-1-7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신규/비예산
2-2-1-8	재외동포 관련 복수국적 제도 개선 추진				신규/비예산
소계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3)		207	순증	
3-4-2-3-가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 (교과서 수록 등 인식개선)		173	순증	신규
3-4-2-3-나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34	순증	
3-4-2-4	모국 귀환 동포들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토탈 케어시스템 추진		-		신규/비예산

Ⅱ. '24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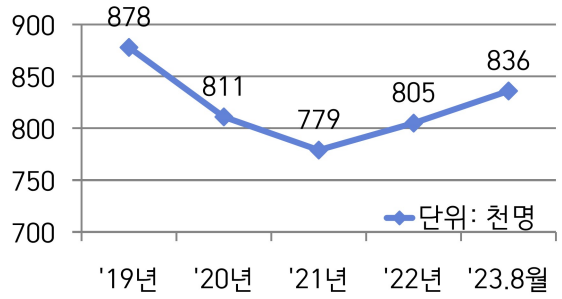
※ 과제 3-1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관련 사항을 위주로 기술

□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정주화 및 고령화

○ 한국의 선진국 진입, 의료 여건 개선 등으로 귀환 이주 증가

-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중 60세 이상 비율 : 37.4%(23.6월)

[연도별 국내 외국국적동포 현황('19~23년)]



[국적별 국내 외국국적동포 현황('23.12월)]

순위	국가	인원(명, %)
1	중국*	656,142 (77.3%)
2	미국	48,837 (5.8%)
3	우즈베키스탄	43,320 (5.1%)
4	러시아	38,369 (4.5%)
5	카자흐스탄	22,426 (2.6%)
6	캐나다	17,923 (2.1%)

[출처: 법무부]

□ 우리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과 호감도는 높지 않은 수준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결과('22년)]

구 분	긍 정	보 통	부 정
재외동포에 대한 호감도	29.4% ('17년 31.7%)	57.8% ('17년 50.9%)	12.8% ('17년 17.4%)
재외동포에 대한 친근감	33.5%	50.5%	16.0%
중국동포(조선족)에 대한 인식	14.9%	30.9%	54.2%

2. '23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 재외동포의 국적·병역 제도 이해 제고를 위한 현지 설명회 개최

- 일본 오사카('23.11.7.), 미국 시카고('23.11.16.)

- 재외동포의 주요 관심 사항인 국적(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등) 및 병역(국외여행허가, 재외국민 2세 등) 관련 제도 전반 설명

○ 재외공관에 제도 관련 자료 배포

- 「국외 병역의무자 병역이행 안내」 책자 배부 및 e-book자료 누리집 게시 협조 ('23.7.5.)

- 국적 및 병역제도 관련 재외공관 대상 설명자료 배포('23.8.2.~8.9.)

□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

○ 총 대학 3개교, 5회 실시

- 종합 만족도: 91.86점(강사만족도 91.74점, 강의만족도 91.99점)

※ 청 설립 및 사업이관 등으로 사업 시행이 연기되어 교육 가능한 대학교만 시행

□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실) '재외동포 통합민원실'을 통해 다수 부처 통합 서비스 제공

○ (콜센터)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5개 국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서비스 제공

○ (온라인) '영사민원 24' 사이트 운영을 통해 재외국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제공

3. '24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 국내 고려인 동포, 사할린 동포, 다문화 동포 등의 생활 현장을 찾아 소외 동포들을 꼼꼼히 살피고 따뜻하게 보듬는 민생우선 정책 시현

□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정교한 설득 논리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동포사회와 국민의 지지 확보

○ 재외동포 이주의 역사적 배경 및 모국 발전에 대한 기여를 널리 알림으로써 재외동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1-7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 국적심의위원회 참석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3-4-2-3-가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교과서 수록 등 인식개선)	▪ 재외동포 관련 내용 교과서 수록 필요성에 대한 이해 확산 추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3-4-2-3-나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 상반기 수요조사 실시 및 교육 일정 수립	재외동포청 미주유럽동포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7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1-6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 국적·병역 설명회 개최(4월)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2-2-1-6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 국적·병역 설명회 개최(5월)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2-2-1-7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 국적심의위원회 참석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2-2-1-8	재외동포 관련 복수국적 제도 개선 추진	▪ 제도 개선 관련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3-4-2-3-가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교과서 수록 등 인식개선)	▪ 재외동포정책 학술 포럼 또는 전문가 간담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3-4-2-3-가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교과서 수록 등 인식개선)	▪ 재외동포 관련 내용 교과서 수록 필요성에 대한 이해 확산 추진 및 수록 노력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3-4-2-3-나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 상반기 이해교육 실시 및 하반기 수요조사 실시	재외동포청 미주유럽동포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1-7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 국적심의위원회 참석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3-4-2-3-가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교과서 수록 등 인식개선)	▪ 홍보 및 콘텐츠 개발 (SNS 홍보 등)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3-4-2-3-가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교과서 수록 등 인식개선)	▪ 재외동포 관련 내용 교과서 수록 필요성에 대한 이해 확산 추진 및 수록 노력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3-4-2-3-나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 하반기 교육 일정 수립 및 이해교육 실시	재외동포청 미주유럽동포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7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1-6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 국적 · 병역 설명회 개최(10월)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2-2-1-7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 국적심의위원회 참석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2-2-1-8	재외동포 관련 복수국적 제도 개선 추진	▪ 제도 개선 관련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3-4-2-3-가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교과서 수록 등 인식개선)	▪ 재외동포정책 만족도 조사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3-4-2-3-가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교과서 수록 등 인식개선)	▪ 재외동포 관련 내용 교과서 수록 필요성에 대한 이해 확산 추진 및 수록 노력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3-4-2-3-나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 이해교육 전문가 업무협의 및 결과 보고 실시	재외동포청 미주유럽동포과
3-4-2-4	모국 귀환 동포들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토탈 케어시스템 추진	▪ 영주귀국 정착 안내서 제작 및 배포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2-2-1-6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재외동포 관련 복수국적제도 이해 제고를 통한 재외동포 피해 최소화

□ 과제 내용

○ 관계기관 합동 국적·병역 설명회 개최

○ 제도 안내서 배포, 재외공관 교육 등 복수국적제도 홍보 활동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재외동포청,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 재외동포청 → 재외공관을 통한 홍보 및 설명회

2. '23년도 추진 실적

○ 국적·병역 제도 관련 현지 설명회 개최 ('23.11월, 미주/일본)

○ 재외공관에 제도 관련 자료 배포

- 「국외 병역의무자 병역이행 안내」 책자 배부 및 e-book자료 누리집 게시 협조 ('23.7.5.)

- 국적 및 병역제도 관련 재외공관 대상 설명자료 배포 ('23.8.2.~8.9.)

3. '24년도 추진계획

○ 관계부처 공동 국적·병역 설명회 개최(3회)

- 상반기(미주, 유럽지역), 하반기(아주지역)

○ 재외공관에 국적·병역제도 홍보 강화 요청(4회)

- 국적·병역 안내서 등 관련 자료 배포 및 영사 교육

- 순회영사 활동 시 국적·병역 제도 안내 독려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이해 제고를 통한 피해 방지	국적·병역 설명회 개최	3회		관련 문서 (공문 등)
			국적·병역 제도 안내서 배포 등 재외공관 홍보 독려	4회		관련 문서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동포지원제도과	전화번호	032-585-3180
담 당 자	5급 장경호	이 메 일	elysion@korea.kr

2-2-1-7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불가피한 사유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재외동포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지원

□ 과제 내용

○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를 심의하는 국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외동포청 참석을 추진하여 의견 적극 개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재외동포청

○ 추진절차 : 재외동포청, 법무부 협의

2. '23년도 추진 실적 : 신규과제

3. '24년도 추진계획

○ 국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외동포청 참석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불가피한 사유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재외동포 구제	국적심의위원회 참석	4회		관련 문서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동포지원제도과	전화번호	032-585-3180
담 당 자	5급 장경호	이 메 일	elysion@korea.kr

2-2-1-8	재외동포 관련 복수국적 제도 개선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향상 및 피해 최소화

□ 과제 내용

○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관계부처(법무부)와 협업을 통한 복수국적제도 개선방안 모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재외동포청,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 제도 개선 검토

2. '23년도 추진 실적 : 신규과제

3. '24년도 추진계획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재외동포 관련 국내 인식 개선

○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재외동포 관련 복수국적 제도 개선 추진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향상 및 피해 최소화	제도 개선 관련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	2회		관련 문서 (회의결과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동포지원제도과	전화번호	032-585-3180
담 당 자	5급 장경호	이 메 일	elysion@korea.kr

3-4-2-3-가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 (교과서 수록 등 인식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국민과의 유대감 및 사회 통합 제고

○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내국민의 지지 확보

□ 과제내용

○ 재외동포 관련 내용 국내 교과서 수록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 확산 추진

- 재외동포 관련 내용 교과서 수록 타당성 및 수록 방안 등 연구용역 실시

- 개정 교육과정 내 재외동포 관련 내용 교과서 수록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세미나 등 실시

- 교과서 관계기관, 출판사, 집필진 대상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교육 및 설명회 등 추진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재외동포 학술포럼 또는 간담회 개최 등

○ 홍보 콘텐츠 개발 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년 개청 이후, 신규 과제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재외동포청, 교육부(협업)

2. '23년도 추진 실적 : 신규과제

3. ‘24년도 추진계획

□ 연중 추진

○ (연중추진) △국내 교과서내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을 위한 방안 연구, 필요성에 대한 이해확산 추진 등 △차기 개정 교육과정 및 학습 성취기준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을 위해 관련 전문가, 교육부 관계자 지속 협의 및 설명회 등 개최

○ (1분기) 국내 교과서 내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교과서 수록 내용 교육부에 제시

○ (2분기) △교과서 관계기관, 출판사 등 관련 전문가 대상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교육 및 설명회 등 추진 △재외동포정책 학술 포럼 또는 전문가 간담회

○ (3분기) 재외동포정책 등 홍보 콘텐츠 개발

○ (4분기) 재외동포정책 만족도 조사 시행

□ 소요예산 : **<u>총 1억7천3백 만원</u>**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173	100	
-국 비	▪ 일반회계		173	100	신규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재외동포정책 학술 포럼 및 전문가 간담회 1.23(억원) / 홍보 콘텐츠 개발 0.4(억원) / 재외동포 정책만족도 조사 0.1(억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	재외동포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또는 간담회 개최	1회		개최공문
			홍보 및 콘텐츠 개발	1회		내부공문
			재외동포 정책만족도 조사	1회		실시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재외동포정책과	전화번호	032-585-3155
담 당 자	4급 오현영	이 메 일	ohy5hy@korea.kr

3-4-2-3-나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개선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학생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환경 및 재외동포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기반 마련

□ 과제 내용

○ 국내 대학 및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들 대상으로 재외동포 관련 주제 강의 시행

- (교육시기) 상반기 3~8월, 하반기 9월~내년 2월
- (교육방법) 재외동포 관련 전문강사 파견 및 특강 시행
- (강사선정) 청 강사 풀에서 선정 또는 대학 측 추천강사 섭외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재외동포청 미주유럽동포과

○ 추진절차 : 수요조사 실시 → 파견 강사 주선 및 일정 수립 → 이해교육 및 이해교육 전문가 업무협의 실시 → 결과 보고

2. '23년도 추진 실적

□ 총 대학 3개교, 5회

○ 청 설립 및 사업 이관 등으로 사업 시행이 연기되어 교육 가능한 대학교만 시행

3. '24년도 추진계획

□ 1/4분기 추진 계획

○ 상반기 수요조사 실시 및 교육일정 수립

- (수요조사 기간) 2024.2.1.(목) - 2.22.(목)

- (수요조사 대상) 국내 대학 및 지자체 산하 초·중·고등학교

□ 2/4분기 추진 계획

○ 상반기 이해교육 실시 및 하반기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기간) 2024.6.24.(월) - 7.22.(월)

- (수요조사 대상) 국내 대학 및 지자체 산하 초·중·고등학교

- (교육시기) 3~8월(학기중, 하계방학 포함)

□ 3/4분기 추진 계획

○ 하반기 교육일정 수립 및 이해교육 실시

- (교육시기) 9월~내년 2월(학기중, 동계방학 포함)

□ 4/4분기 추진 계획

○ 이해교육 전문가 업무협의 및 결과보고 실시

- (이해교육 전문가 업무협의) 재외동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향후 이해교육 발전 방향 모색

- (결과보고) 매 교육마다 실시되는 강의 및 강사 만족도 조사 등을 토대로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 소요예산 : **총 3천4백 만원**

구 분		'23년	'24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34	100	
-국 비	▪ 일반회계		34	10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강사 출장비 및 전문가 업무협의 3천4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환경 및 재외동포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기반 마련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실적(회)	20회		실시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미주유럽동포과	전화번호	032-585-3170
담 당 자	7급 이혜수	이 메 일	hlee23@korea.kr

3-4-2-4	모국 귀환 동포들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토탈 케어시스템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우리나라로 영주귀국을 희망하거나 영주귀국한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 과제 내용

○ 모국 귀환 동포들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토탈 케어시스템 마련

- (사전안내) 국내정착 관련 재외동포의 수요를 파악하여 영주귀국 정착 안내서 마련 및 재외공관 통해 배포 및 홍보

- (귀국직후) 영주귀국 관련 온 · 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검토

- (사후지원)'귀환 동포 정착 상담센터'운영 검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재외동포청

○ 추진절차 : 자료수집 → 안내서 제작

2. '23년도 추진 실적 : 신규과제

3. '24년도 추진계획

□ 영주귀국 정착 안내서 제작 및 배포 ('24년 중)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모국 귀환 동포들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토탈 케어시스템 추진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	영주귀국 정착 안내서 제작, 배포	1회		내부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동포지원제도과	전화번호	032-585-3180
담 당 자	5급 장경호	이 메 일	elysion@korea.kr